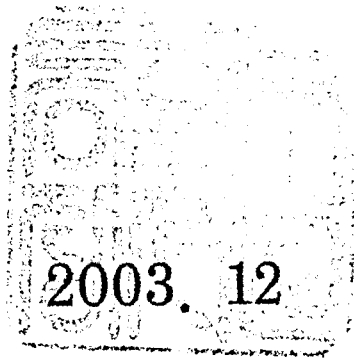


# 2003년 연구용역과제 모음집



통 일 부  
(정보분석국)

본 자료는 북한연구 참고를 위해 2003년도 통일부 정보분석국에서 사계전문가들에 위촉한 연구용역결과들을 모은 것으로 반드시 통일부의 공식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목 차 〉

1.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동향 및 향후전망(김연철) ..... 1
2. 북한의 민족공조론과 대남전략(김갑식) ..... 93
3.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주민의 의식구조  
변화 실태(서재진) ..... 133
4. 최근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중문화 다양화  
실상 및 전개방향(이우영) ..... 193
5. 2000년 이후 북한의 국제체육 활성화 추이(박영옥) ..... 251
6.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보도 특성과 대응론 연구(유동렬) ..... 3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동향  
및 향후전망

2003. 8

연구책임자 : 김 연 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 요약 〉

### 1. 남북정상회담과 북한변화의 관계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변화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북한 변화론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는 변화에 대한 행위자의 의지와 변화를 제약하는 환경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치 사상적 변화와 경제적 변화는 선후차가 있다. 남북관계는 북한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후 북한의 변화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경제협력의 확대는 대남 관계의 긴장완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발전이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가져왔다. 남북 정상의 포용은 거대한 냉전의 벽을 허물기에 충분했고, 대화와 협력만이 민족의 살길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켜주었다.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 상호입장과 생각을 명확히 교환한 바탕 위에서, 평화와 화해·협력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 실천사항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규범력을 갖게 된 것이다.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효용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 평가할 필요가 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남북한의 화해협력 정책이 북한의 정치, 경제, 외교, 분야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 왔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과 대북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북한의 변화 지표를 개발하여, 북한 변화의 수준 및 향후 변화전망을 분석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2. 북한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법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이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체제, 다원적 사회체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남북한 당국간 접촉과 교류협력 과정은 이러한 변화를 유도하는 데 있다.

<표> 북한의 변화에서 남북관계의 역할

구분	전통적 북한체제	<과도기>	변화해야할 목표
정치	수령제	교류협력 과정 ↓ 북한의 변화 과정	민주주의
경제	계획경제		지속가능한 발전체제
사회	동원체제		다원체제

북한식 정치체제의 변화는 외부적 압력에 의해 이루어 지기 어렵다. 다만 교류협력 과정을 통해 김정일 체제의 정책결정 방향을 개방 및 온건노선으로 유도하고, 온건세력의 입지를 강화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인권문제는 교류협력과정을 통해 북한경제력(특히 식량난)의 회복을 유도하는 거시 안정정책과 국제적 압력을 통한 점진적 개선정책이 가능할 수 있다.

정치체제의 변화와는 달리, 경제정책의 변화에서 남북관계의 역할은 중요하다. 북한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체제의 정립은 한반도에서의 냉전 해체를 위한 핵심적 과제다.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화해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기술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적절한 공정분업 협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협력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상호의존도를 높이고, 북한의 인프라 지원 등 기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남북한이 공동으로 국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산업분업체제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경제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단계적 이행 시간은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북한의 경제 개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평가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공식 이데올로기와 거시 경제적 현실을 구분해야 한다. 동시에 변화를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 향후 북한의 경제 조정체제는 현실경제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해갈 것이다.

따라서 현실보다 늦는 공식 이데올로기의 논리와 의도하지 않은 변화에 소극적인 북한 당국의 의지를 주목하기 보다는 정책과 현실의 긴장 관계에 주목하면서,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가능성을 전망할 필요가 있다.

### 3. 정상회담이후 분야별 변화 현황

#### ① 정치·사상 분야

정치·사상 분야에서의 변화는 제한적이다. 1980년 6차 대회 이후 당 대회는 열리지 않고 있으며, 당의 기능 역시 제한적이다. 이에 비해 이른바 선군 정치가 북한의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실용주의적 정책기조와 이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 ② 경제분야

2002년 7월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 조치는 북한 경제사에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특징은 분권화, 가격현실화, 그리고 화폐 임금제의 실시로 볼 수 있다.

7.1조치는 경제개혁을 위한 잠정적 조치였다. 애초에 북한 당국은 7.1조치를 취하면서, 대외관계 개선을 통해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각했지만, 핵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구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경제정책 변화를 확대하고, 경제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주목할 만 하다.

북한의 경제개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정책 조정은 불가피하다. 우선적인 과제는 일시적으로 현실화한 행정 가격의 탄력성을 제고해야 하며, 환율 현실화역시 불가피하고, 재정개혁도 필요하다.

북한은 국내경제개혁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개방에 나서고 있다. 북한의 개방전략은 현재 4개의 개방 거점 지역의 선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부축에서는 신의주, 남부축에서는 개성, 동부축에서는 금강산, 북부축에서는 나진선봉이 그것이다.

#### ③ 사회 분야

정상회담이후 북한의 사회 분야의 변화는 대남 인식의 변화, 자본주의 가치관의 유입, 과학 실용주의 경향의 증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④ 대외관계

북한은 제네바합의 이후 형성된 미국과의 대화국면에서 최대의 정치외교적, 경제적 실리와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여 나갔다. 동시에 북한은 그런 조건을 활용하여 소원해진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과 EU를 비롯한 서방외교, 한마디로 전방위 외교를 전개하였다. 북한의 대일 수교회담 역시 북-미 대화국면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전방위외교는 단지 미국과의 대화국면이라는 외적 조건만이 아니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이후 일련의 남북관계의 활성화와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더욱이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이해관계가 없는 EU국가들의 대북 외교관계 수립은 시기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로 편입하려는 김대중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외교관계를 수립·복원하고자 하는 상대국들이 북한과 갖는 전략적 이해의 공통분모에 한국정부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 4.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남 관계 변화

남북 정상회담이후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물론 국제 환경과 쟁점현안에 대한 협상과정에서 우려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6.15 공동선언에 대한 실천 의지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남북간 다방면의 화해협력의 지속되고 있는 것은 남북 쌍방, 특히 북한의 대남 인식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9.11테러 이후 한국의 대미 테러공조로 북한은 일시적으로 반발하였지만 정상회담 이후 시작된 남북 화해협력 구도를 폐쇄하지 않았다. 북한은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과정에서 표명한 북한 관련 발언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이후의 대남관계의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이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이끈 객관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을 전후로 대남 인식에서 뚜렷한 변화를 나타냈다. 북한은 이후 '민족공조'라는 이름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인식 변화는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한 남북관계 변화, 즉 남북 화해협력의 증대를 설명해주는 동시에,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전망을 밝게 해주는 근거로도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이 '민족공조'를 '외세와의 공조'와 갈등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남한은 이 둘이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에 보완적임을 북한에 설득할 필요가 있다.

## 5. 북한 개혁지수 및 향후 전망

### ① 북한의 개혁지수

북한의 현재 경제정책 변화수준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앞으로 북한이 선택할 경제정책 변화의 방향이다. 중국식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기 어렵다. 북한과 중국은 경제개혁의 초기조건이 다르며, 현재의 수령체제와 정치사상체제를 장기 지속하면서 정책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다르다. 국제환경에서도 중국이 내수시장을 효과적인 매력으로 활용하면서 자본을 조달하고, 수출산업 육성을 통해 국제시장경제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 북한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로 자본조달과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

현재 북한의 경제개혁은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가? 7.1조치이후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변화는 전통체제로부터의 변화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개혁 수준을 중심으로, 정치, 외교, 사회적 변수를 반영하여 북한의 개혁지표를 구성해 볼 수 있다. 전통체제를 1로 보고, 발전된 시장개혁 체제를 5로 보았을 때, 중요한 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표> 개혁지표 구성

분야		1(전통체제)	2(부분개혁1)	3(부분개혁2)	4(시장개혁)	5(민주적 시장경제)
정치	정책결정	전체주의	정책결정 일부 분권화	정치/행정분 리	중간 엘리트 경쟁	민주화/(다 당제)
경제	시장화	계획경제.	계획대상 축소	소비재 시장 허용	생산재시장 허용	시장화
	소유제	집체소유	청부제(일부 처분권)	일부 개인소유	개인소유화 대	
	가격	독점가격	변동행정가격 (한도가격)	일부시장가 격	시장가격 확대	가격자유화
	노동시장	계획분배	하청생산	일부 노동시장	노동시장 확대	직업선택의 자유
	대외개방	자립	일부 특구	특구확대	개방 확대	전면 개방
외교	외교관계	고립	일부 관계개선	관계개선 확대	적대관계 종식	외교관계정 상화
이념 및 사회	문화적 다양성	획일	부분 유입	외부문화 일부 허용	개방 확대	문화개방
	이념	통제	사상역할축소	해석 분권화	사상개방	반체제 세력 허용

정치적으로는 정책결정구조의 변화수준을 중심으로 구분했고, 경제적으로는 시장화 수준, 소유제 변화, 가격체계, 노동시장, 대외개방 수준을 중심으로 각각 단계별 변화 지표들을 구성하였다. 이밖에 외교관계나 이념 및 사회적 다원성 역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지표를 토대로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정상회담이후 북한의 개혁지표 변화

분야		정상회담 이전	7.1조치(2002)	2003
정치	정책결정	1(집권화)	2(일부 분권화)	2(일부 분권화)
경제	시장화	1.5(계획중심, 일부 허용)	2.5(계획축소, 일부 소비시장 허용)	3.(소비재시장 허용)
	소유제	1(집체소유)	2.5(처분권 인정, 점유 확대)	2.5((처분권 인정, 점유 확대)
	가격체계	1(계획가격)	2.5(한도가격, 일부 시장가격)	2.5(한도가격, 일부 시장가격)
	노동시장	1(계획분배)	2(일부 하청계약)	2(일부 하청계약)
	대외개방	2(일부 특구)	3(특구 확대)	3.5(특구 제도화)
외교	외교관계	1.5(남북관계 일부 협력)	3.5(남북관계정상화, 북일 북중 북러 관계)	3(북미, 북일 관계 악화)
이념 및 문화	문화개방	2(부분유입)	2(부분유입)	2.5(일부 외부문화 확대)
	이념	2(사상역할 축소)	2(사상역할 축소)	2.5(경제개혁 단어사용)
합계		13	22	23

북한의 개혁지표를 50점 기준으로 구성해 보면, 정상회담 이전에는 약 13점 정도로 추정되며, 7.1조치 직후에는 22점, 2003년 기준으로는 23점 정도로 추정된다. 총괄적으로 북한의 개혁지표는 2003년 현재 부분개혁 1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외교관계 정상화에 따른 정치 사회적 변화가 진행되어야 부분개혁 2단계와 시장개혁단계로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② 시나리오에 따른 북한 변화 전망

북한지도부의 변화 의지와 국제사회의 북한시장 참여수준이라는 시나리오 작성축에 따라 북한의 경제개혁을 전망할 수 있다. 현실적인 가능성을 보면, 북한의 경제정책은 부분개혁에서 전면개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정세 악화시 전시동원형 통제경제로의 후퇴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국제환경의 점진적 개선을 고려한다면, 점차적으로 시장개혁으로 단계적으로 진화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표> 시나리오별 비교

	조건	개요	주요 조치	예상 효과
전시동원형 통제경제	· 변화의지 후퇴 · 봉쇄적 대외관계	· 긴장고조 · 공급부족 · 전시형 통제	· 식량난 대응 · 선행부문 중시 · 가격 통제 · 중·러 의존	· 탄복주민 증대 · 동요 발생 가능
개방 없는 부분개혁	· 소극적 변화의지 · 봉쇄적 대외관계	· 외교관계 교착 · 체제안정 · 군부 중심 운영	· 부분적 제도개선 · 중앙통제 약화 · 이윤 도입 · 물질적 자극체제 · 프로젝트중심 투자	· 과도적 성과 · 장기적 한계
개혁 없는 부분개방	· 변화의지 후퇴 · 소극적 대외개방	· 제한적 관계 개선 · 내부 개혁 부재 · 특구중심 개방	· 국제금융기구 활용 도모 · 경제특구 활용 · 위탁가공교역 중시 · 중공업우선정책 유지	· 대외관계 정체 · 제한적 외자유치 · 특구의 투자환경 미비 · 남한기업 대북투자 정체 · 체제유지 위한 통제강화
부분 개혁·개방	· 소극적 변화의지 · 소극적 대외개방	· 내부 개혁 추진 · 남북관계 중시 개방 · 제한적 북미관계 개선	· 공유재산 하 시장 도입 · 중앙계획 하 분권화 · 경제효율성 중시 · 경공업 중시 · 연성계약 하 기업자율	· 사회주의담론 유지 · 강온파 정책 대립 · 개인주의 경향 확대
전면개방 하 부분개혁	· 소극적 변화의지 · 적극적 대외개방	· 개혁보다 개방 중시 · 개혁 지체가 개방 억제	· 거시지표 중심 통제 · 주요 상품 통제 유지 · 경공업중시정책 시작 · 적극적 대외개방정책	· 공식 시장 확대 · 암시작의 공식화 · 개혁 요구 증대
시장개혁	· 적극적 변화의지 · 적극적 대외개방	· 북한 개방 · 북미관계 개선 · 남북경협 활성화	· 북한 발전전략 수정 · 세계경제 편입 · 개혁·개방 동시 추진 · 사유화, 시장화 추진	· 사회통합원리 조정 · 주민 의식 변화 · 권력지형도 변화 · 불평등 발생 · 점진적 체제전환

특히 북한의 선택에서 주목되는 것은 한미일 3국과 북한이 벌이고 있는 대북 포괄적 협상의 결과이다. 협상이 성공되면, 시장경제형 개혁으로 나갈 것이며, 실패하면 중앙집권적 계획강화로 후퇴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장기적으로 협상 교착이 지속되면, 부분개혁 유지가 나타날 것이다.



# 〈 목 차 〉

I. 서론: 남북 정상회담과 북한변화의 관계	15
1. 남북관계와 북한 변화론	15
2. 남북정상회담의 의미	17
3.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0
II. 북한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법	21
1. 북한 변화에서 남북관계의 역할	21
1) 정치체제 변화의 한계	21
2) 경제정책 변화에서 남북관계의 역할	22
3) 북한의 대남 정책 변화에서 남북관계의 의미	24
2. 북한 경제개혁 해석의 방법론	26
1) 계획 정상화와 생산정상화의 양립 불가능성	26
2) 합리적인 변화 기준의 설정	28
3) 과정으로서의 경제개혁:개괄형 개혁(Open-ended Reform)	29
III. 정상회담이후 분야별 변화 현황	32
1. 정치·사상 분야	32
1) 선군 정치론의 현황과 의미	32
2) 새로운 사고와 실리 위주 정책	36
2. 경제 분야	38
1) 경제정책 변화의 배경	38
2) 경제개혁: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확대	41
3) 경제개방	47
3. 사회분야	51
4. 대외관계	53
1) 대미 관계의 전개와 특징	54

2) 대일관계의 전개과정과 특징 .....	58
3) 대중관계의 전개과정과 특징 .....	60
4) 대러 관계의 전개과정과 특징 .....	62
5) EU 등 대서방관계 .....	64
6) 소결:남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대외 관계에 미친 영향 .....	67
IV.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남 관계 변화 .....	68
1. 정치 군사적 신뢰 구축 .....	68
2. 남북 경제협력의 활성화.....	71
3. 사회 문화 분야의 활성화.....	74
4. 정상회담이후 대남인식의 변화 .....	77
V. 북한 개혁지수 및 향후 전망 .....	79
1. 북한의 개혁지수 .....	79
1) 북한 개혁의 특수성:비교 사회주의적 평가.....	79
2) 북한 개혁지수 .....	82
2. 시나리오에 따른 북한 변화 전망.....	84
1) 주요 변수 설정.....	84
2) 시나리오 축의 내용 .....	85
3) 시나리오에 따른 변화 전망 .....	87

## 〈표 차례〉

〈표Ⅱ-1〉 북한의 변화에서 남북관계의 역할 .....	21
〈표Ⅱ-2〉 북한의 재정 지출 및 항목별 구성 .....	27
〈표Ⅲ-1〉 북한의 가격 및 임금인상 주요내용.....	42
〈표Ⅲ-2〉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내용 .....	48
〈표Ⅳ-1〉 김대중정부 시기 남북회담 개최 현황(2003. 1.31 현재).....	69
〈표Ⅳ-2〉 남한주민들의 연도별 북한 방문 현황 .....	75
〈표Ⅳ-3〉 북한주민들의 연도별 남한 방문 현황 .....	76
〈표Ⅴ-1〉 개혁지표 구성 .....	82
〈표Ⅴ-2〉 정상회담이후 북한의 개혁지표 변화.....	83
〈표Ⅴ-3〉 북한의 개혁·개방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 .....	84
〈표Ⅴ-4〉 북한 경제개혁의 유형 구분.....	87
〈표Ⅴ-5〉 시나리오별 비교 .....	88



# I. 서론: 남북 정상회담과 북한변화의 관계

## 1. 남북관계와 북한 변화론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변화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북한 불변론'은 대북 봉쇄정책의 근거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화해협력 정책의 비판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 불변론'은 경험적 현실과 거리가 있는 냉전적 믿음에 다름 아니다. 북한의 변화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변화하는 현실 자체를 무시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변화의 수준과 방향에 대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물론 북한 변화론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는 변화에 대한 행위자의 의지와 변화를 제약하는 환경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같은 소규모의 국가능력과 냉전적 국제환경을 고려할 때, 정책 선택에 있어 대외적 환경이 중요한 변수다. 대외적 환경의 개선과 북한 지도부의 상호 관계에서 변화의 수준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둘째, 정치 사상적 변화와 경제적 변화는 선후차가 있다. 북한은 체제보장을 전제로 경제적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경험에서도 보듯, 정치사상적 측면의 변화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은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향후 변화의 폭과 속도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 경제의 변화는 주목할 만 하다. 우선적으로 북한의 대외 의존도 증가로 대외개방이 불가피하다. 그동안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론'을 경제발전 전략으로 주장해 왔지만, 북한과 같이 자원 보유 능력에 한계가 있는 소규모 국가는 일반적으로 자력갱생이 불가능하다. 자기 완결적 재생산 구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북한은 50년대부터 자력갱생을 주장해 왔지만, 원유, 식량, 각종 산업 기술에 이르기까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국가에 대한 의존도는 무시할 수 없다.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무역의 축소가 투입감소로 인한 산출 감소로 이어진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90년대 중반이후 서방권에 대한 의존도는 이러한 공백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다. 외부공급이 주로 정치적 원조의 형태로 북한에 제공되었음을 고려할 때, 경제적 대외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북경협이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북한은 외교정책에서 대남관계의 비중을 과소 평가 할 수 없다. 북미, 북일 관계의 정상화 시간이 필요하고, 미국, 일본의 자본이 북한시장에 대한 투자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경협은 과도기의 북한 입장에서 체제유지 및 발전전략 수립의 유일한 원천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변화과정에서 대남정책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북한의 대남정책은 국제적으로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며, 냉전형 발전전략에서 탈냉전적 발전전략으로의 전환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징표가 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우리 사회내부에서 북한의 대남 정책은 북한 변화가능성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과연 북한의 대남 정책은 변화하고 있는가?

북한의 대남 정책은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고, 향후에도 변화할 것이다. 현재까지 북한의 대남 정책은 남북한의 역량 관계에 따라 세 국면으로 변화해 왔다. 냉전적 체제경쟁기(1945-80년대 중반), 현상유지적 세력균형기<sup>1)</sup>(80년대 중반-90년대 초반), 생존을 위한 관계 변화기(90년대 초반이후)가 그것이다.

특히 90년대 들어 경제 위기가 심화 되면서, 북한은 현상유지전략에서 생존을 위한 관계 변화를 모색해왔다. 북한이 북미회담, 남북 회담 등 다양한 협상테이블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국가운영의 대외적 민감도가 높기 때문이다. 북한이 여전히 군사 우선 노선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 또한 생존을 위한 협상 전략적 차원으로 그 의미가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남북관계는 북한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후 북한의 변화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경제협력의 확대는 대남 관계의 긴장완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발전이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1) 현상 유지적 세력균형의 추구는 북한의 위기와 남북한의 역량격차가 벌어지면서 선택되었다. 고려민주연방제안의 변화(90년대 초 제시된 느슨한 연방제)가 수세적인 국면을 반영한 것이며, 유엔 동시 가입도 마찬가지다. 연방제의 수정을 통해 북한은 공존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유엔가입은 한소수교와 한중관계의 진전 상황에서 북한의 수세적 선택이었다.



## 2. 남북정상회담의 의미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은 분단이후 최초의 최고위급 회담이었다. 정상회담은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국면을 의미한다. 냉전시대에서 탈냉전으로의 실질적인 첫 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물론 과거 냉전시대에도 대화는 있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통일원칙을 합의했고, 91~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부속합의서를 통해 대부분의 현안문제 해결의 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역사적 합의들은 지속되지 못했다. 정치적 신뢰가 부족했고, 군사적 긴장이 존재했으며, 주변환경도 냉전적 대결상태가 지속되었다.

2000년 6월은 과거의 대화 환경과 달랐다. 김일성 주석 사망으로 무산된 1994년 정상회담과 비교해 보아도 그렇다. 당시 북한은 핵문제로 인한 위기 국면을 회피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선택했다. 남한은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성사된 정상회담을 거부할 수 없었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정리된 청사진은 없었다. 정책기조의 혼란은 그 이후 조문논쟁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2000년 6월의 대화 환경은 94년과 매우 다르다. 일단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외부 자본의 유치가 필요하고, 미국, 일본, EU국가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외교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남한은 어떤가? 김대중 정부는 대화와 접촉만이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포용정책의 기초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 왔고 2년여동안 교류협력과 주변국 외교를 펼쳐왔다. 국제적으로도 북미, 북일 대화가 지속되고 있고, 북한의 외교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대화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정상회담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가져왔다. 남북 정상의 포용은 거대한 냉전의 벽을 허물기에 충분했고, 대화와 협력만이 민족의 살길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켜주었다.

정상회담에서는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지만, 공동선언문은 포괄적으로 발표되었다. 통일문제 해결의 원칙 표명과 실현 가능한 협력 사업을 우선 합의하고, 실무협회가 필요한 부분은 후속대화를 통해 풀어간다는 것이 공동선언의 내용이다. 이후 공동 선언문의 정신에 따라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 남

북장관급 회담, 적십자 회담, 국방장관회담, 경제실무접촉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큰 틀은 마련되었지만, 화해협력 시대에 걸맞는 제도적, 심리적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하다. 정상회담은 남북관계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제는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한계를 전제하더라도 남북관계에서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는 크다.

6.15 공동선언문은 5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둘째, 상호 통일방안 존중(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과 남측의 연합제), 셋째, 이산가족 문제 해결(8.15 시범상봉 및 비전향 장기수 문제해결), 넷째, 민족경제 균형 발전과 사회, 문화, 체육 등 제반분야 교류협력 활성화, 다섯째, 합의사항 실천을 위한 당국간 대화 개최 및 김정일 위원장 답방 등이다.<sup>2)</sup>

공동선언은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나온 남북 정상간 합의라고 볼 수 있다. 남북한 정치체제의 특성상 쌍방 정상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북한은 수령제 정치체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각과 결정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 상호입장과 생각을 명확히 교환한 바탕 위에서, 평화와 화해·협력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 실천사항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규범력을 갖게 된 것이다.

첫째, 통일문제에서의 자주적 원칙이다.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원칙에 대해 다양한 논란이 있다. 물론 북한이 생각하는 자주가 있다. 주한미군 철수 등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정치적 공세이다. 남한은 물론 자주라는 단어를 달리 해석해 왔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 및 통일문제는 그 주인인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국제사회는 이제까지 당사자 해결원칙을 지지해 왔다. 남북한은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당사자 해결 원칙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자주란 개념을 북한과 남한이 각기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좁혀야 하는 과제가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서 통일문제의 당사자 관계 개선이 주변국의 대북 관계 개선의 핵심 전제라고 볼 수 있다.

---

2) 6.15 공동선언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평가에 대해서는 통일부, '평화와 협력을 위하여' 남북 정상회담 2주년 해설 자료(2002.5), 민주평통 사무처, '6.15 남북공동선언 2주년 성과와 향후과제', 민주평통 정책연구자료 제32호, (2002.6) 참조.

둘째, 통일방안의 상호존중이다. 공동선언 2항에서 남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과 연합제 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향후 협의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남북한은 단계적으로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쌍방의 통일 방안 중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러한 방향에서 당국간 협의를 통해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셋째,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의지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다. 이제 고향과 부모, 형제를 그리워 하는 이산 1세대들은 70~80대의 고령이다. 많은 분들이 아픈 사연을 가슴에 묻고 그리운 가족을 눈앞에 떠올리며 세상을 떠났다. 정부는 시급성을 요하는 이산가족 문제를 98년 이후 최우선 과제로 제기해 왔다. 정상회담에서 100명의 이산가족을 서로 교환 방문하는 데 합의한 것은 이러한 정책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호혜적인 경제협력 활성화 의지다. 남북정상은 제반 분야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 민족전체의 발전과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다섯째는 후속대화와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다. 남북 정상이 상호 방문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과 신뢰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합의사항의 이행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3.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효용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 평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정상회담이후 대남정책과 경제정책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남북 관계 정상화가 대일, 대중러 외교관계에서도 보다 실용주의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핵 문제로 인한 교착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북한의 변화 수준은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정치적 실용주의, 경제적 실리주의, 외교적 협력노선으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남북한의 화해협력 정책이 북한의 정치, 경제, 외교, 분야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 왔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과 대북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북한의 변화 지표를 개발하여, 북한 변화의 수준 및 향후 변화전망을 분석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대외관계 각 분야의 변화 수준을 구분하고, 각 분야별 주요 항목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개혁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연구 내용으로는 첫째, 북한 변화에 대한 기본인식 및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1990년대 중후반 이후 북한의 경제 및 대외관계 상황을 통해 북한이 변화할 수 밖에 없는 기본 구조를 살펴보고, 정상회담이라는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의 변화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북한의 변화 수준에 대한 다양한 논란을 고려할 때,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북한의 개혁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북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대외관계에서 중요항목을 선정하고,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현재의 변화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고,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 II. 북한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법

### 1. 북한 변화에서 남북관계의 역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이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체제, 다원적 사회체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남북한 당국간 접촉과 교류협력 과정은 이러한 변화를 유도하는 데 있다.

<표II-1> 북한의 변화에서 남북관계의 역할

구분	전통적 북한체제	<과도기>	변화해야할 목표
정치	수령제	교류협력 과정 ↓ 북한의 변화 과정	민주주의
경제	계획경제		지속가능한 발전체제
사회	동원체제		다원체제

#### 1) 정치체제 변화의 한계

전통적인 북한체제는 최고지도자에 정책 결정 권한이 집중된 수령제(The Leader System), 엄격한 배급제를 특징으로 하는 전시 공산주의적 계획경제, 동원적 사회 체제로 구성 되어 있다. 세 가지 하위체제들은 인과의 고리들로 결합되어 있으며, 선택적 친화력이 있다.

북한식 정치체제인 수령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점에서 사회주의의 전통적 당국가체제와 구분된다. 첫째, 수령제에서 최고지도자(수령, The Leader)는 당 국가 체제와 상대적 자립성을 가진 또 하나의 제도로 기능 하며, 수령의 지시나 현지지도는 어떠한 관료적 정책결정보다 우선 한다. 이른바 권력 행사의 자의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둘째, 수령제에서 권력관계는 가부장적 특성을 갖으며, 지도자에 대한 개인

승배와 가부장적 권위 관계,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진다. 이런 점에서 수령제는 전통적 지배관계의 일종이다.

셋째, 일가 사회주의적(Socialism in one family) 특성을 갖으며, 권력행사와 후계체제는 당내 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족간에 이루어 지는 특징이 있다. 수령제 정치현상은 스탈린체제와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문화혁명 초기의 모택동 체제에서 일부(권력 행사의 자의성과 가부장적 권위)나 나타나기도 했지만, 전형적인 형태는 북한, 루마니아, 알바니아, 쿠바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북한식 정치체제의 변화는 외부적 압력에 의해 이루어 지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권위주의 정부의 성격 변화를 경제체제, 외교적 압력, 군사적 경고 등으로 이룬 사례는 거의 없다. 오히려 이러한 강압정책은 권위주의 지배를 정당화 해주는 명분을 제공해 왔다. 한반도 정세의 평화적 관리를 위해 봉쇄(containment policy) 및 북침(rollback)의 가능성을 배제할 때, 북한식 정치체제의 변화가능성은 북한 체제 스스로가 선택할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교류협력 과정을 통해 김정일 체제의 정책결정 방향을 개방 및 온건 노선으로 유도하고, 온건세력의 입지를 강화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인권문제는 교류협력과정을 통해 북한경제력(특히 식량난)의 회복을 유도하는 거시안정정책과 국제적 압력을 통한 점진적 개선정책이 가능할 수 있다.

## 2) 경제정책 변화에서 남북관계의 역할

정치체제의 변화와는 달리, 경제정책의 변화에서 남북관계의 역할은 중요하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국제 경제체제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북한의 개방노력은 1970년대 초반의 유럽(프랑스 등)과 일본 등으로부터의 플랜트 도입, 1984년 합영법 채택(joint venture law), 1991년 나진선봉 (자유)경제지역(free)(economic zone) 선포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개방 과정은 개방시도-성공-개방확산의 방식이 아니라, 개방시도-실패-개방시도 등으로 단절적이며, 제한적으로 추진되었다.

북한의 경제개방이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냉전적 산업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현재의 군수경제 위주의 중공업 발전전략은 국제경제체제

로의 편입에 불리하다. 남북경협을 포함한 외자유치는 북한과 주요 투자자의 분업구조를 고려할 때, 당분간 노동집약산업 위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냉전적 자립경제모델에서 탈냉전적 수출지향 산업화로의 변화는 한반도의 냉전체제 극복과 군비경쟁의 악순환이 중단되어야 가능하다.

둘째, 계획경제 고수로 북한의 비교우위 생산요소인 노동 부문의 경쟁력이 발휘될 수 없었다.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환율정책으로 저임금의 매력이 없고, 노동시장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기업이 노동자를 선택할 수 없으며, 동시에 개인 인센티브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북한이 시장 지향적 개혁에 소극적인 이유는 정치체제의 경직성, 남북분단, 대외관계의 불투명성 때문이다. 체제의 안전보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당면한 식량난을 해소하고, 외화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개방 노력을 선택적으로 추구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02년 이후 보다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경제와 동북아 경제협력의 차원에서도 북한의 경제개혁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북한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체제의 정립은 이 지역에서의 냉전 해체를 위한 핵심적 과제다. 당분간 북한은 동아시아의 경제분업구조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다. 과거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이나, 중국의 부상 가능성이 가능했던 국면의 성격이 다르다.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은 국제적 생산주기를 활용하여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특히 한국과 대만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일본으로부터 사양 섬유산업과 소비용 전자산업을 이전 받아 초기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다. 또한 1970년대 후반 동아시아 NICs가 통화절상, 임금상승, 선진공업국간의 무역 마찰문제로 산업구조의 재편국면을 맞이했을 때, 중국이 경제개방 정책을 본격화한 것은 적절한 선택이었다. 중국은 저임금 생산기지로서의 비교우위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시점에 국제분업구조에 참여한 것이다.

현재의 국면은 북한이 저임금 생산기지로 비교우위를 발휘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중국의 지역별 불균등 발전을 고려할 때,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의 공존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 동부연안 도시들의 첨단산업화에도 불구하고, 중부 내륙지역의 저임금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

다.

북한은 매력적인 투자 대상 국가는 아니지만,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완성을 위해서는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북한이 중계 거점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다. 북한은 대륙과 해양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철도와 도로)과 에너지(가스관 연결 등) 분야 등을 중심으로 북한 지역에 대한 공적 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화해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기술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적절한 공정분업 협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협력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상호의존도를 높이고, 북한의 인프라 지원 등 기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남북한이 공동으로 국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산업분업체제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경제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단계적 이행 시간은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완화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 3) 북한의 대남 정책 변화에서 남북관계의 의미

북한의 변화과정에서 대남정책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북한의 대남정책은 국제적으로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며, 냉전형 발전전략에서 탈냉전적 발전전략으로의 전환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징표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남 정책 결정의 주요변수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는 국제환경이다. 북한은 체제 위협 수준이라고 판단될 경우 대화보다 내부결속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

대남 관계에서도 체제 위협에 대한 수세적 인식이 주요변수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남측 정부 역시 민족공조보다는 한미공조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대남 대화가 체제고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대남정책에서 보여지는 북한의 정책 혼선은 북한식 정치체제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은 당과 내각의 관료적 결정보다 최고 지도



자의 정책결정이 우선하는 수령제적 정책결정 구조를 갖고 있으며, 특징은 ① 정책결정의 자의성 ② 실무관료의 권한 미흡 ③ 부처별 권위확보 경쟁 등이다.

최고지도자에게로의 과도한 권한 집중은 정책결정의 자의성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다. 정책효과에 대한 실무적 검토 없이 내려진 김정일의 즉흥적 결정은 이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반복되기도 한다. 외교정책(대남정책을 포함) 결정과정에서 실무관료들의 결정권한은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행정관료(주로 내각이나 경제부서)들의 권한은 정치관료(아태나 조평통)들에 비해 극히 제한적이며, 행정 관료들의 경우 독자적으로 정책판단을 해본 경험이 없고, 상위정책결정기구를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남북협상에서 쟁점이 발생할 경우 결정할 권한이 거의 없다. 부처별로 김정일의 권위를 확보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김정일의 중복결정이 이루어 지는 경향도 정책 혼선의 원인이다. 김정일은 해당부처의 의견을 검토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 승인을 하지만, 이 승인되는 정책 자체가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외교정책에서의 전략적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의 위반이나 결정 번복이 빈번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지만 북한이 처한 상황의 어려움으로 대남 관계가 갖는 의미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북한은 1990년 후반이후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식량을 포함한 경제력 유지를 위해서는 남측의 지원이 필수적이고, 중국 정치지도자의 세대교체와 WTO가입에 따른 글로벌화의 가속화로 북중 관계의 중기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유지 및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 2. 북한 경제개혁 해석의 방법론

2002년 북한의 7월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통해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수준과 방향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란이 있어 왔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시각과 분석 방법을 정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sup>3)</sup>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크게 보면, 시장지향형 개혁으로 보는 입장과 체제내적 계획효율화 조치로 보는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지향형 개혁으로 평가하는 입장<sup>4)</sup>은 가격 현실화를 통한 (암)시장 가격의 간접인정, 계획 및 가격제정의 분권화, 생산재 유통시장의 허용, 현물경제에서 화폐 경제로의 변화 등에 주목한다. 이에 비해 계획 효율화, 혹은 유도형 계획경제로의 변화로 보는 시각<sup>5)</sup>은 북한 당국의 계획정상화에 대한 의지, 소유권 및 가격정책의 제한성 등을 주목한다.

물론 시장지향형 개혁으로 보는 입장들이 현재 변화수준의 제한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논자들이 수요-공급을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 가격의 비탄력성과 농산물 시장을 비롯한 사적 영역의 불인정 등을 지적하면서, 시장개혁으로 단정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과거 전통적 경제체제와의 차이를 강조하고, 계획 기반이 약화된 거시 경제적 구조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시장지향형으로의 변화 방향을 지적하는 것이다.

### 1) 계획 정상화와 생산정상화의 양립 불가능성

이런 점에서 계획효율화 조치로 보는 시각은 몇 가지 논리적 오류를 포함

---

3) 아래의 내용은 김연철, “북한 신경제 전략의 성공조건: 시장제도 형성과 탈냉전 발전 전략” 『국가전략』 제8권 4호 2002년 겨울(통권 제22호) 참조.

4) 약간의 분석 초점의 차이는 있지만, 시장경제 지향으로 평가하는 주요 논자들은 김연철 “북한 경제관리 개혁의 성격과 전망,” 김연철·박순성 편, 『북한 경제개혁 연구』(후마니타스, 2002), 박석삼, “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의미와 향후 전망”, 한국은행, (2002.8.22) 윤덕룡·이형근(2002), “북한의 물가인상 및 배급제 폐지의 의미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 연구소, 2002, 7.23)를 들 수 있다.

5) 조동호(2002) “계획경제 시스템의 정상화: 최근 북한 경제 조치의 분석 및 평가”(한국개발연구원, 2002, 7.30) 연하청, “최근 북한의 경제개혁 현황과 전망”, 명지대 경제경영연구소, 『북한과 중국의 경제특구』(2002.10.21 세미나 발표문).

하고 있다. 생산정상화를 통해 계획 체계를 정상화할 것이라는 가정은 논리적 모순이다. 북한이 계획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북한의 공장가동률이 30%대로 떨어지고, 이른바 중간재와 최종재의 분업구조 자체가 약화되면서 사실상 계획경제라고 부르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1993년에 3차 7개년 계획이 실패로 끝난 이후, 10년 동안 중장기 경제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 예산의 규모가 1994년의 50%수준이며 연속 적자 재정을 기록하고 있다.<sup>6)</sup>

<표II-2> 북한의 재정 지출 및 항목별 구성

	1991	1994	1998	1999	2000	2001
세출 총액	36.9	41.5	20.0	20.3	20.9	21.6
인민경제비	25.0(67.9)	28.1(67.8)			8.4(40.1)	9.1(42.3)
인민적 시책비 (사회문화비)	6.9(18.8)	7.8(19.0)			8.0(38.2)	8.2(38.1)
군사비	4.4(12.1)	4.8(11.6)	2.9(14.6)	2.9(14.5)	3.0(14.3)	3.1(14.4)
관리비	4.6(1.3)	6.7(1.6)			1.5(7.4)	1.2(5.2)

\* 1994년은 예산 기준이며, 2000년부터 그동안 사회문화비로 발표되던 항목이 인민적 시책비로 변경되었음

\* 자료: 최고인민회의 각년도 예결산 발표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북한의 계획 정상화는 어렵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계획을 정상화하는 것과 생산을 정상화하는 것은 양립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생산을 정상화하는 과정은 곧 탈계획화 과정을 의미한다. 노동자 차원에서 차등 임금제와 성과급 제도를 확대<sup>7)</sup>하는 것은 과거 계획경제의 평균주의를 극복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sup>8)</sup> 기업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과

6) 북한의 예·결산 규모는 '95~'98년 기간 동안 중단되었다가 '99년부터 재개되기 시작하였다.

7) 조선중앙통신(10, 16)은 '누진생활비' 제도로 단광근로자들의 생활비(임금)가 크게 올랐다고 보도하였다. 월평균 생활비(임금)가 경제조치 이전의 370원에서 30,000원으로 81배, 북한당국이 책정한 기본임금 6,000원보다는 5배로 대폭 상승하였다고 한다. 이는 누진도급제의 누진을 변화 때문이다. 종전에는 계획의 100%를 달성해야 기본생활비 전액을 지급하고 120% 달성시에도 누진생활비는 2배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7월 이후에는 계획의 70%만 달성해도 기본생활비 전액을 지급하고 120% 이상을 수행하면 5배의 누진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나아가 계획의 300%를 달성할 경우에는 기본생활비 6,000원과 약 2~3만원의 누진생활비를 지급한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간북한동향(제613호): 2002.10.11~2002.10.17 참조.

8) 물론 과거 계획경제에서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평균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누진제를 비롯한 도급제를 노동보수제도로 채택해 왔다. 그러나 배급제와 같은 현물 임금제에서 화폐임금의 차이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어려웠다. 특히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 이후 북한 원의 가치가 떨어지고, 암시장이 확산되면서 도급임금제도는 무의미 해졌다. 과거 북한의 전통적 경제체제에

거에는 수직적 관계, 즉 상급 기관으로부터 보다 많은 노동력과 원자재를 확보하려 했다면, 이제는 수평적 관계, 즉 상품 판매와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에서의 원자재 수급을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 결국 개인 차원이나 기업 차원에서 생산 정상화는 시장화를 의미한다.

## 2) 합리적인 변화 기준의 설정

우선적으로 북한의 공식 이데올로기와 거시 경제적 현실을 구분해야 한다. 노동신문이나 경제연구 등 북한의 공식 매체들은 분권화 개혁이나 시장화 개혁을 수정주의로 비판하면서, 여전히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데올로기의 변화는 언제나 현실 변화보다 늦으며,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1978년 중국의 11기 3중 전회가 열리고 덩소평의 개혁실험이 출발했던 당시의 이데올로기는 실사구시였다.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이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10년이 지난 1987년이었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점진적 경제개혁은 개괄형 개혁(Open-ended Reform)의 성격을 갖는다.<sup>9)</sup> 따라서 현재 북한에서 보여지고 있는 사회주의 원칙이나, 사회주의 노동보수제, 집단주의의 우월성 등과 같은 보수적 담론은 북한 당국의 의지라기 보다는 정책변화를 기존의 담론 재해석을 통해 완충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정당화에 다름 아니다. 문제는 북한의 공식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정책변화의 내용과 기능이다.

또한 변화를 보는 기준과 시각도 중요하다. 구조조정, 시장 자유화, 재산권의 사유화,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가 없는 경제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는 신

---

서의 도급제의 종류와 작동과정에 대해서는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역사비평가, 2001) 참조.

9) 노튼(Barry Naughton)은 중국의 개혁을 '자신의 방식대로 그림을 그릴 수 없었던, 제한된 능력을 가진 정치 지도부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개혁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Barry Naughton, *Gr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참조. 화이트(Gordon White)가 현실 사회주의의 시장개혁을 '호랑이 등에 올라타기'로 비유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것은 선택할 수 있지만, 일단 호랑이가 달리기 시작하면,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다. 시장개혁도 마찬가지다. 계획경제에서 시장 메카니즘의 도입은 자연발생적인 확산효과가 있다. 부분 개혁조치는 연관 분야에 파급효과를 미치면서, 시장개혁으로 진화하는 경향이 있다. Gordon White, *Riding the Tiger: The Politics of Economic Reform in Post-Mao China*(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참조. 필자가 북한의 경제개혁을 '호랑이 등에 올라타기'로 비유한 것은 바로 과정으로서의 시장개혁, 즉 '개괄형 개혁'의 일반적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연철(2002) 앞의 논문, 참조.

고전파의 근본적 가정<sup>10)</sup>은 문제가 있다. 반드시 그렇지 않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개혁은 주류경제학의 기본가정에 대한 반증사례라고 볼 수 있다. 소련과 동유럽의 급진주의와 대비되는 점진주의 개혁은 두 개의 국면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국면은 계획체계의 개혁이고, 두 번째 국면은 시장 개혁이다. 여기서 문제는 첫 번째 국면에서 자유화와 재산권 제도의 변화 없이 계획체계를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 수 있는가 이다. 이점이 중국과 동유럽(특히 헝가리 등)의 결정적 차이라고 할 수 있다.

### 3) 과정으로서의 경제개혁: 개괄형 개혁(Open-ended Reform)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점진적 경제개혁을, 시장제도의 누적적 확산 과정으로 본다면, 북한경제관리 개선 조치는 과도기적 정책이다. 왜 과도기적 조치인가? 북한 당국의 의도는 국영 및 협동상점의 상품 공급 확대를 통해 비공식 부문(암시장)을 축소하고, 식량·공공서비스의 보조금 철폐로 재정적자를 완화하며, 기업 및 노동의 성과급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장기 지속할 수 없다. 첫째, 거시경제안정의 핵심과제인 공급 확대를 지속하기 어렵다. 북한은 식량의 경우 국제사회의 정치성 원조를 기대하고 있으며, 소비재는 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식량계획(WFP)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규모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외환 부족으로 소비재 수입능력도 한계가 있고, 소비재의 생산이 정상화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만간 공급 불안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공급 불안이 나타날 경우, 현재 임금과 물가의 균형체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 초기개혁의 일반적 경험과 달리, 식량 및 소비재의 가격보조금을 폐지하였다.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공급이 불안정해질 경우 인플레이션과 실질임금하락으로 도시주

10) 신고전파의 기본가정은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IMF 등의 전환기 경제학 보고서의 기본가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북한 경제개혁 평가에서 대부분의 주류 경제학자들의 비판적 평가의 기본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의 논리는 계획체계와 부분적 자유화의 결합은 자원재분배의 왜곡을 가져오고, 부패의 근원을 제공하며, 사유화를 비롯한 재산권의 인정 없이는 진정한 시장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다고 본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에 대한 신고전파적 가정을 집약한 보고서로는 World Bank, From Plan to Market: World Development Report 1996(World Bank, 1996) 참조.

민들의 소비생활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sup>11)</sup>

셋째, 가격탄력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왜곡할 수 있다. 현재 주요 품목의 가격은 국가 가격 제정국에서 결정하고, 지방공업이나 소비재는 해당 기관이나 기업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가격현실화에도 불구하고, 고정가격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비재 가격 역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행정당국의 지도를 받는 한도가격(상한, 하한)이다. 따라서 행정가격(고정가격과 한도가격)이 암시장의 가격결정법칙(수요-공급)을 반영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부족은 또 다시 가격 구조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sup>12)</sup> 행정가격의 가격 탄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 경제개혁은 시작단계에 불과하고, 외환을 비롯한 가용한 정책 자원을 동원하여 새로운 거시 경제적 균형을 추구했다. 1990년대 중반이후 북한이 경험한 공식경제의 붕괴와 이에 따른 비공식 부문의 팽창이 가져온 불균형 구조를 어느 정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거시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거시 경제적 안정을 회복하기도 전에 제한적 개혁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가시화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노동자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지도부의 정책변화 의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임금과 물가의 가격균형 체계가 무너지고, 실질임금이 하락하며, 암시장의 물가가 급등할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예상보다 빨리 보다 시장 지향적인 후속 개혁으로 이행해 가야 한다. 다시 말해서 관료적 조정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책당국의 의지와 공급 불안이 가져올 현실 경제의 불균형 성향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향후 북한의 경제 조정체계는 현실경제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

따라서 현실보다 늦는 공식 이데올로기의 논리와 의도하지 않은 변화에 소

---

11) 베트남은 1980년초 국가가 구매하는 농업제품과 공업제품의 가격은 자유시장에 연동하여 인상하고, 국영기업에 대한 생산재 판매가격과 도시주민에 대한 배급가격은 고정가격을 유지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가격보조금이 급팽창했고, 재정적자가 증대했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통화발행을 증대시킴으로써 악성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였다. 베트남의 1979년부터 1986년 사이에 실시한 신경제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白石品也, 베트남: 革命と建設のはざま(東京:東京大學出版會, 1993), pp.151~166 참조.

12)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도 필요하다. 수매가격을 현실화시켜 농산물의 불법적 거래를 정책적으로 제한하고 점차 계획외 가격이 적용되는 농산품 수를 확대하고 협의 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

극적인 북한 당국의 의지를 주목하기 보다는 정책과 현실의 긴장 관계에 주목하면서,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가능성을 전망할 필요가 있다.

### III. 정상회담이후 분야별 변화 현황

#### 1. 정치·사상 분야

정치·사상 분야에서의 변화는 제한적이다. 1980년 6차 대회 이후 당 대회는 열리지 않고 있으며, 당의 기능 역시 제한적이다. 이에 비해 이른바 선군 정치가 북한의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실용주의적 정책 기조와 이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 1) 선군 정치론의 현황과 의미

###### (1) 선군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점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 모든 정치활동에서 군을 앞세운다는 '선군정치' 개념이 구체화되면서 주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의 당군 관계에 대한 논쟁<sup>13)</sup>의 핵심은 전통적인 당·국가체제에서 군사국가로의 이행여부이다. 이러한 논쟁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첫째, 제도로서의 당과 당의 영도원칙이 구분되지 않고 있다. 당의 영도원칙은 북한이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한 지속될 수 밖에 없는 공식담론이다. 문제는 제도로서의 당이다. 정책결정과정에서 당의 제도로서의 기능(당 대회, 당 전원회의, 비서국 등)은 마비 되었고, 기간조직으로서의 당 조직의 기능(지방당, 기관별 당위원회)역시 199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이후 약화되었다. 따라서 당의 영도원칙이 지속되기 때문에 당 우위라는 주장은 제도로서의 당의 기능약화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당, 국가(행정조직), 군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수령(The Leader)의 역할이다. 북한에서 수령은 중요한 제도이며, 하부 정치조직(비서국이든, 국방위원회든 전통적 제도적 구분과 무관한 최고지도자의 정

13) 북한의 당군 관계에 대한 리뷰로는 류길재, "예외국가의 제도화: 군사국가화 경향과 군의 역할 확대," 최완규 엮음,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예외국가의 공고화』 (한울 아카데미, 2001) 참조.



책결정 기구)과 독자적인 경제 조직(35호실, 39호실 등)을 갖고 있다. 김일성의 수령제와 김정일의 수령제의 차이는 김정일이 정책결정의 집행단위로 당보다는 군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당군관계에 대한 해석은 김정일 수령제의 정책결정 특성을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군사국가화의 대표적 연구자인 와다 하루끼의 유격대 국가 모델역시 문제가 있다. 와다가 '군사 국가화'를 주장하는 다른 연구와 다른 점은 유격대 국가모델을 국가사회주의라는 기본 모델위에 중첩된 복합모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국가사회주의라는 기본모델과 유격대 모델의 결합 방식이다. 와다는 분명 복합모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관계의 성격은 분명치 않다.<sup>14)</sup> 북한의 군사적 국가운영 방식이 유격대 경험으로부터 재생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국가사회주의 자체가 군사적 문화를 재생산하는 방식을 주목해야 한다. 일찍이 코르나이(J. Kornai)가 지적한 바 있지만, 고전적 사회주의(Classical Socialism)에서 가부장적 권력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군사문화는 상호간에 선택적 친화력이 있다.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기반은 중요하다. 하지만 유격대 경험의 이데올로기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필요로 하는 사회구성, 즉 와다가 기본 모델이라는 국가사회주의 체계의 특성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

---

14) 한편, 와다는 선군 정치를 통해 북한이 유격대 국가에서 정규군 국가로 전환했다고 주장한다. 와다의 정규군 국가 주장은 군 우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인지, 아니면 유격대 국가에서 정상국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 하다. 두 부분 모두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두 가지 설명방식이 서로 상충적이라는 사실이다. 선군 정치는 정상국가의 형태라기 보다는 예외국가의 유형에 가깝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와다 하루끼 지음, 서동만·남기정 옮김, 『북조선:유격대 국가에서 정규군 국가로』 (서울:돌베개, 2002) 참조.

## (2) 선군 정치론의 등장 배경

‘선군 정치’가 북한에서 개념화된 것은 1997년 10월 7일 ‘중앙방송’정론을 통해 김정일이 경제사정이 아무리 부담이 크더라도 ‘선군후로하라’고 한 발언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1998년 5월 26일자 정론을 통해 공식매체에 처음으로 선군정치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나아가 1998년 헌법을 통해 주석직을 폐지하고,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되면서 제도적 형태로 나타났다.<sup>15)</sup>

남북 정상 회담이후의 정세 변화속에서도 선군정치는 북한의 가장 중요한 정치이념으로, 정책기조로 강조되고 있다. 선군 정치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당의 기능 약화와 관련되어 있다.

1990년대 중반이후 제도로서 조선노동당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1980년 6차 당 대회 이후 20년 이상이 흘렀지만, 7차 당 대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 또한 6개월에 한번씩 열리게 되어 있는 당 전원회의는 1993년 12월의 6기 21차 전원회의가 끝이었다. 1998년 헌법개정을 계기로 입법과 행정부문이 정상화되었지만, 당의 정상화는 여전히 유보되고 있다. 당의 기능이 약화된 이유는 우선적으로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의 체제전환으로 외교활동에서 당의 역할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개선하는 데, 당의 역할은 제한되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외교는 외교부가 맡고 있다. 1998년 개정 헌법에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외교적으로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한 이유도 달라진 외교환경을 반영한다.

한편 국내적으로 1990년대 중반이후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 위기상황도 당의 기능약화의 원인이 되었다. 배급제의 위기로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했고, 지방 당 조직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북한에서 군을 앞세우는 선군정치가 주장되고, 군을 따라 배우라는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 때문이다. 위기 상황에서 과거의 당 조직보다 군 조직을 정책집행 단위로 더 선호하게 되었다.

---

15) 최진욱, “북한 선군정치의 정치적 함의” 현대북한연구, 4권 2호(2001) p.12.

### (3) 선군 정치와 경제정책 변화와의 관계

김정일은 2002년 9월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선군시대의 경제건설 방향>을 제시하였다.<sup>16)</sup>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서 국방 공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국방공업 우선론은 향후 경제정책 변화에서 상충될 수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군수경제 위주의 중공업 발전전략은 북한의 개방전략과 상충될 수 있다. 북한이 수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북한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당분간 저기술 노동집약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가져야 하는 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품 산업의 육성 등이 필요하다. 공정분업의 경우 북한내 관련부품 산업이 발달하지 않으면, 투자기업들은 부품조달에 애로를 겪게 되고, 원부자재 일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물류비 부담이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의 경제력과 군사무기의 수준을 고려할 때, 군비경쟁 구도를 따라잡기 힘들다. 한미 양국의 첨단 군사 무기 수준을 고려할 때, 북한의 재래식 무기경쟁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2003년 6월 들어 북한이 경제건설을 위해 핵 억지력을 갖겠다는 주장은 재래식 군비경쟁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며, 핵문제가 해결시 경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 경제개혁 과정에서 군부가 보수적 입장을 취하나, 반드시 군부의 입장과 경제개혁이 상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쿠바의 경제개방에서도 나타났듯이 중요한 것은 군부가 개방의 득을 보게 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쿠바에서는 초기 관광 개방과정에서 관광합영회사를 군부에게 맡김으로써 군부가 개방의 효과를 보도록 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군부가 개방의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적절한 개방 전략을 추진할 경우, 군부가 개방에 보수적이라는 일반적 예측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

16) 「조선신보」 2003.4.11.

## 2) 새로운 사고와 실리 위주 정책

남북 정상회담이후 북한의 변화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고 있는 개념이 신사고와 실리우선이라는 것이다.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당 사업 및 경제관리 노선을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입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새로운 사고로 대표되는 변화의 필요성이다. 남북 정상회담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전면적인 대외관계 개선 노력을 추진했다. 2000, 2001년 중국 방문 및 2002년 러시아 방문, 그리고 북일 정상회담 추진 등 주변국과의 관계 정상화는 남북정상회담이후 북한이 보여준 외교적 변화를 나타내 주고 있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2001년 상하이 방문이나, 2002년 8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한 러시아 방문은 북한 체제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개혁개방의 성공적인 모델인 상하이나, 체제전환이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러시아의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북한 체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보다 깊이 있는 정책 변화를 위해 국가 부문 엘리트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2001년초 부터 북한에서 강조되고 있는 새로운 사고론은 인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2001년 “새시대에 맞게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높이에서 풀어나갈 것”<sup>17)</sup> 혹은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일본새와 생활기풍을 근본적으로 일신할 것”<sup>18)</sup> 등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당 사업이나 행정에서 발전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사업방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sup>19)</sup>

둘째, 이념의 강조보다, 실리를 우선하는 실용주의다. 2001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모든 부분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할 것”을 역설했으며, 2002년 신년공동사설에서도 실리 획득을 위한 경제관리의 개선, 정보산업 육성, 첨단과학기술 인재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실리보장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으로 나타났다.

셋째, 행정의 제도화를 위한 법제화 노력이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각종 법

---

17) 2001년 신년공동사설.

18) 2001년 1월 14일자 노동신문.

19) 예를 들어 “발전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자신의 실력을 부단히 높여 나감으로써 실력으로 당의 방침을 관철해 나가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표현이 대표적이다. 민주조선, 2002.5.29 참조.

률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1년에도 가공무역법·갑문법·저작권법('01.4)을 채택한 바 있고, 2002년 4월의 국토계획법, 2003년에는 회계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법제화 노력은 그동안 당 중심의 정치우위 현상을 약화시키고, 제도화를 통한 행정 관료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실무 관료들의 자본주의 교육을 통해 새로운 개방시대에 걸 맞는 엘리트를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기구의 협력으로 경제관료·전문가들을 중국·호주·EU·미국 등에 파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sup>20)</sup> 2002년에는 경제시찰단을 남측에 파견하기도 했다.

---

20) 파견 교육인력의 수는 1999년 130여명(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6개국), 2000년 170여명(영국, 호주 등 11개국), 2001년 500여명(미국, 중국 등 20개국 및 국제기구) 등으로 추산되고 있다.

## 2. 경제 분야

### 1) 경제정책 변화의 배경

2002년 7월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 조치는 북한 경제사에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북한 경제 역사에서 변화의 노력은 세 국면으로 구분된다. 첫째 국면은 1972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로 무역확대와 제한적 외자유치 단계였다.<sup>21)</sup> 북한은 1972년부터 미·중 관계 개선 및 일·중 경제협력이라는 국제환경 변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기계·설비 수요 때문에 유럽(프랑스 등)과 일본 등으로부터 기계·설비를 적극 도입했다. 그러나 1973년 오일쇼크와 북한의 비철금속 가격 하락으로 무역대금을 결제하지 못함으로써 무역 확대 정책은 실패했다. 그 결과로 북한은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했다.<sup>22)</sup> 이후 북한은 1984년 합영법을 채택하여, 조총련과의 조조 합영이 추진되었으나,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두 번째 국면은 제한적 경제특구 단계이다. 북한은 1991년 12월 나진·선봉지역 621km<sup>2</sup>(1993년 9월 746km<sup>2</sup>로 확대)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정무원 결정 제74호)한 이래,<sup>23)</sup> 이 지대를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계무역 요충지, 수출 가공기지, 국제금융·관광기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었다. 또 1997년 6월에는 이 지대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 지역 내의 화폐개혁, 자유시장 개설, 자영업 허용 등 경제개혁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1997년 말까지 실행기준 77건, 5,792만 달러에 불과하여 2010년까지의 목표치인 47억 3,300만 달러에 크게 미달되고 있는 실정으로, 제조업부문의 투자유치는 인프라정비 지연으로 극히 부진한 상태에 있다. <sup>24)</sup>

21) 일반적으로 1970년대초반의 무역확대정책 국면과 1984년 합영법 채택시기를 구분할 수 있지만, 필자는 정책의 제한성과 국제시장구조의 연속성 측면에서 동일한 단계로 평가한다.

22) 북한의 외채는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서방권 국가들에 49.2억불,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체코 등 구사회주의 국가들에 75.4억불 등 총 124.6억불로 평가(2000년 기준)되고 있다. 구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50년대 말 전후복구 시기에 중국, 구소련 등으로부터 받은 차관과 이들 국가들과의 무역적자분을 상환하지 못해 누적되어 온 것이며, 서방권 국가들에 대해서는 71년-76년간의 이른바 6개년 경제계획기간 중에 후불조건으로 도입한 광산 장비, 석유화학설비 등의 원금과 이자가 누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3) 1998년 4월경부터 북한은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경제무역지대'로 규정하고 있다.

2기까지의 경제정책 변화 과정은 주로 국내경제체제는 그대로 두고, 경제 개방을 제한적으로 시도한 것이다. 북한의 경제특구는 내부체제와 격리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2기까지의 개방시도가 결과적으로 실패한 이유는 첫째, 산업구조 재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북한이 경공업위주의 수출산업 중심으로 개편해야 됨을 의미한다. 특히 공정분업의 경우 북한내 관련부품 산업이 발달하지 않으면, 투자기업들은 부품조달에 애로를 겪게 되고, 원부자재 일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물류비 부담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수익성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위탁가공이나, 직접투자가 수익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출산업 육성으로의 산업정책 재편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 개혁이 병행추진 되지 못했다. 남북한 경제협력이 단순조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탁가공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유일하게 직접투자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경수로 건설 현장에서 북한인력을 축소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sup>25)</sup>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은 지대당국 차원의 임금 책정이나, 임금의 간접지급 방식은 북측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인센티브 효과가 없다.<sup>26)</sup>

2002년 경제관리 개선 조치는 과거의 변화 시도와 질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추진되고 있다. 첫째, 국가의 거시경제운영 능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이후의 경제위기가 가져온 현실적 변화를 북한 당국이 수용한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정책적 양보의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1994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는 북한의 거시경제 환경을 질적으로 변화시켰다. 식량난과 공장 가동률 하락으로 배급제 및 소비품 공급체계가 마비되었다. 국영 상점이나 협동상점에 상품이 없고, 배급량이 줄고 배급간격도 지켜지지 않았다. 국가유통망의 공백을 대체한 것이 암시장이다. 암시장에서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국정가격과 암시장가격은 물론 엄청난 격차를 보였다. 노동자들은 한달 월급으로 쌀 1Kg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공장에 출근할 이유가 사라졌다. 농민과 농업관리들은 될 수

24) 김연철(2001) pp.398~400.

25) 북한은 2000년 4월부터 월 110달러로 책정된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600달러로 인상해 달라며 근로자 200여명중 100여명을 철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KEDO는 2001년 3월부터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6) 자세한 내용은 김연철, '북한의 탈냉전 발전 전략' [창작과 비평] 2002년 봄호 참조.

있으면 식량을 암시장으로 유출함으로써 국가의 공급능력을 약화시켰다. 1999년부터 북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계획 가능한 영역은 제한된 산업분야와 품목에 한정되어 있다. 거시경제 운영능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추진되는 정책변화는 그만큼 긴장도가 높고, 변화의 연관 효과 역시 크다.

둘째, 변화의 시도는 과거와 달리 개방보다 개혁이 우선 추진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개방과 개혁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나, 개혁은 국내적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개방보다 어려운 정책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의 개방 시도가 국내적 개혁 부진 때문에 미흡했다면, 현재의 개혁조치는 보다 성과 있는 개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셋째, 달라진 국제시장환경에서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 붕괴이후 사회주의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북한이 1990년대 들어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은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사회주의 시장의 붕괴 때문이었다. 북한은 동구상호원조회의(COMECON) 회원국은 아니지만, 그동안 우호무역 형태로 국제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식량 및 에너지 등을 도입한 바 있다. 사회주의 국제 무역시장의 부재는 북한이 자본주의 세계시장구조에 어떤 형태로든 편입되어야 함을 의미한다.<sup>27)</sup> 자본주의 세계경제권 내에서의 비교우위 및 경쟁력 있는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

27) 베트남에서 1980년대 후반 도이모이 정책의 본격적 추진과 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 노선에 따른 우호무역 및 차관감소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쿠바 역시 1980년대 후반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은 것은 소련과 동유럽의 체제전환 때문이었다. 북한의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정책 대응은 1991년 나진선봉 경제지대 지정으로 나타난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2002년 경제정책 변화는 초기대응의 실패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볼 수 있다.



## 2) 경제개혁: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확대

### (1)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주요 내용

2002년 북한 경제관리 개선은 세 번째의 변화 국면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바로 시장개혁의 국면이다. 이번 조치의 특징은 분권화, 가격현실화, 그리고 화폐 임금제의 실시로 볼 수 있다.

첫째, 계획의 분권화이다. 분권화는 계획작성, 가격제정, 자재공급 전반에 걸쳐있다. 우선적으로 계획 작성은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지표는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계획하지만, 나머지는 해당 기관 기업소에서 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 경제 부문은 공업총생산액이나 기본건설 투자액등 중요지표를 제외한 세부 지표들은 도·시·군·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하도록 했다. 가격제정에서도 지방공업 생산품(주로 소비재)은 상급기관의 감독아래 공장자체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재공급체계에서도 생산물의 일부분을 자재용 물자교류에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허용했다.<sup>28)</sup> 공식담론으로 유지해 왔던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조치가 변화되었다.<sup>29)</sup> 계획작성 체계가 변화되었으며, 경제부문간 균형과 생산적 연계의 조정방식이 변화되었다.

둘째, 시장 신호를 반영한 가격현실화이다. 쌀 가격이 기준가격이다. 과거에 북한은 쌀 1kg를 80전에 수매하여 8전으로 공급했다. 이번에는 40원으로 수매해서 44원으로 판매한다. 어느 정도 암시장의 가격을 반영한 것이다. 임금도 현실화되었다. 생산노동자들의 경우 110원이던 기본임금이 2000원으로 인상되었다. 탄광노동자들의 경우에는 6000원까지 인상되었다. 전기·연료·교통비도 현실화되었다.

---

28) 계획의 분권화는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핵심적 내용이다. 자세한 정책방향은 김정일,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2001년 10월, 중앙일보, 2002년 8월 2일자 참조. 다만 구체적인 시행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29) 계획의 일원화란 "국가계획기관들과 성, 중앙기관, 도급기관들, 공장 기업소들의 계획부서들이 하나의 계획화 체계를 이루고 국가계획위원회의 통일적 지도밑에 계획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세부화란, "국가계획기관들이 당의 정책과 객관적 현실에 맞게 전반적 경제발전과 각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을 연결시키며, 모든 단위들의 계획을 구체화하여 모든 지표들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맞물릴 수 있게 하는 계획화 방법"을 지칭한다. 리기성(1992, pp. 385~387) 참조.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의 구체적인 작동 현실에 대해서는 김연철(2001) pp. 291~299 참조.

<표III-1> 북한의 가격 및 임금인상 주요내용

(북한원)

구분	품목/계층	단위	국정가격 조정			시장가격과의 격차		
			조정전 (A)	조정후 (B)	인상폭 (B/A,배)	농민시장가격 <sup>1)</sup> (C)	조정전 (C/A,배)	조정후 (C/B,배)
가격	쌀	1kg	0.08	44	550	49	612.5	1.1
	옥수수알(수매가격)	1kg	0.49	20	40.82	33.6	480	1.0
	디젤油	1kl	1	38	38			
	전력	1kWh	0.035	2.1	60			
	전차요금	1회	0.1	1	10			
	지하철요금	1구간	0.1	2	20			
	침대차요금	평성(평북)~남양(함북)구간	50	3,000	60			
	유원지 입장료	송도해수욕장	3	50	17			
	집세	평양지역 기준	수입의 0.03%	1m <sup>2</sup> 당 월 2원	-			
임금	생산노동자	월	110	2,000	18			
	탄부	월	..	6,000	-			

주: 1) 2001년말 전국평균 기준  
 자료: 박석삼, 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의미와 향후 전망, 한국은행(2002.8.21), 강일천, '7.1경제관리 개선조치, 1년 평가와 재해석' 고려대 북한 연구소 제4회 국제학술대회(2003.6.26) 참조하여 작성

셋째, 현물 경제에서 화폐가 주요 역할을 하는 경제운영체제로 전환했다. 먼저 임금지급 방식에서 과거 배급제는 일종의 현물임금 방식이었다. 국가가 재정 보조금으로 수매가격 보다 낮은 배급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국가의 가격보조 정책은 폐지되었다. 화폐 임금제로 전환한 것이다. 동시에 모든 소비품과 중간재의 가격이 현실화됨으로써, 경제운영의 기본 원리가 물적 균형에서 화폐를 매개로 한 균형체제로 전환되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계획체계, 대안의 사업체계, 배급제의 측면에서 과거와 단절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의미 있는 제도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공식 경제관리 체계인 대안의 사업체계의 기본 운영기조가 변화되었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핵심적 내용은 공장당위원회를 최고지도기관으로 하는 집단지도체계, 통일적 집중적 생산지도체계, 중앙집중적 자재공급체계와 후방공급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생산지도체계는 분권화되었으며, 중앙 집중적 자재공급체계의 원칙은 물자교류시장의 실시로 폐지되었고, 후

방공급체계는 화폐임금제로 전환되면서 의미를 상실했다.

셋째, 배급제의 변화 역시 주목할 만 하다. 지금까지 배급제는 단순한 식량 분배 제도를 넘어서는 정치경제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화폐임금제로의 변화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적으로 독립채산제를 비롯한 인센티브 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 현물임금 방식은 기업의 생산비용 계산을 어렵게 했다. 임금을 개별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현물 형태로 지급해 왔기 때문이다. 당연히 기업의 이윤계산은 불가능해지고, 엄격한 독립채산제를 적용하기 어려워진다. 공장단위에서의 인센티브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현물 임금제에서도 급제를 비롯한 임금 차등은 인센티브 효과가 거의 없었다. 화폐의 기능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폐임금제로의 전환은 정치 사상적 자극에서 물질적 자극으로의 중심이동을 의미한다. 나아가 조직적 주민통제와 노동이동의 제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던 배급제의 통제적 기능 역시 변화가 불가피 하다. 물론 식량 구입과정에서 매점 매석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행정력(판매량의 제한 조치 등 판매과정에 대한 개입과 가격관리 정책)이 동원되겠지만, 대부분의 소비품은 자유판매제로 변화되었다.

## (2) 7·1조치이후 경제 개혁으로의 확대

7.1조치는 경제개혁을 위한 잠정적 조치였다. 애초에 북한 당국은 7.1조치를 취하면서, 대외관계 개선을 통해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각했지만, 핵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구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 2002년 10월 캘리특사 방북이후 시작된 이른바 북한의 2차 핵위기는 대외협력을 통해 초기 국면에서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했던 재정 확충 구상의 차질을 갖고 왔다. 북한은 북일 관계, 남북협력을 통해 경험자금을 유입하여, 이를 토대로 경제정책 변화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거시 경제적 불안을 최소화 하고자 했다. 소비재 공급의 경우, 인센티브 정책의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없다는 점에서 재정을 통한 소비재를 구입하고자 하는 계획은 재정악화로 지속될 수 없었다. 원자재의 대외 구매도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장 가동을 역시 제고되기 어려워 졌다.

외환 부족으로 소비재 수입능력이 한계가 있고, 소비재의 생산이 정상화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급 불안이 가시화되었으며, 도시주민들의 생활난 악화될 수 밖에 없었다. 가격체계 역시 불안정해졌다. 가격탄력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7.1조치에서 주요 품목의 가격은 국가 가격 제정국에서 결정하고, 지방공업이나 소비재는 해당 기관이나 기업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sup>30)</sup> 행정가격(고정가격과 한도가격)이 암시장의 가격결정법칙(수요-공급)을 반영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부족은 또 다시 가격 구조의 왜곡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7.1조치가 실시된 이후 악화된 국제환경은 거시경제의 위기로 발전했다. 북한은 어떤 대응을 했는가? 북한이 경제정책 변화를 확대하고, 경제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sup>31)</sup>한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상황악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경제개혁을 확대한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로 추정 된다. 첫째는 대외적 변화 의지 표명이다. 경제개혁 논평이 핵문제와 미국의 봉쇄정책 비판이라는 논지에서 표명됨으로써 대외적으로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7.1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개혁 확대의 의미를 가진다. 북한은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의 허용이 실질적으로 종합시장의 운영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동시에 누진 도급제를 비롯한 차등임금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기업의 독립채산제를 실질화 하고 있다.

북한에서 경제개혁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정치·심리적 소극성을 완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된다. 북한은 지금까지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과 구분되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라는 측면에서 거부해 왔다. 물론 대외용으로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향후 국내적으로도 개혁이라는 단어를 공공연히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정치적 금지선을 허물어 뜨렸다고 볼 수 있다.

30) 아마도 지방공업의 가격은 자유가격이라기 보다 상한가격이나 하한가격을 규정하는 이른바 '한도가격'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됨.

31)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2003년 6월 10일자 논평에서 "공화국 정부는 내각결정 제32호, 제128호, 제129호를 비롯한 결정에서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인상하도록 했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여러 기회에 걸쳐 경제개혁을 추진시켜 왔다"고 밝혔다. 북한의 공식매체에서 경제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처음이라고 볼 수 있다. 연합뉴스, 6. 10일자 참조.

한편 분야별로 살펴보면, 북한의 경제개혁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첫째는 산업정책의 변화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강조가 주목된다. 북한은 정보기술(IT)산업을 경제회복의 '단번도약'을 위한 성장전략산업으로 설정<sup>32)</sup>하고 남한·일본·중국 등의 10여개 업체와 S/W 합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모든 산업체를 폐기·개선확장·신규건설 대상으로 분류하고 조직개편 사업을 추진하여 생산정상화 기반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sup>33)</sup>나아가 무역상사, 공장·기업소 등을 통폐합하고 경영구조를 전문화하고 있다.

둘째, 독립채산제의 확대 실시다. 기관·기업소에 실시하던 독립채산제를 성·관리국에까지 확대하고 부분적이거나 자체 자금조성과 자율경영을 허용하고 있다. 누진도급제의 적용을 통해 개별 노동자에게 '물질적 인센티브'도 강화되었다.

셋째, 재정부문에서는 경제부문 성·관리국이 자체 책임하에 공장·기업소들의 생산활동을 직접 지도, 통제할 수 있도록 재정관리 권한을 부여하였다. 예산 수납체계를 종래 기업소 중심의 '지역별 수납체계'에서 성·관리국 중심의 '부문별 수납체계'로 변경된 것도 주목된다.

### (3) 경제개혁의 과제

북한의 경제개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정책 조정은 불가피하다. 우선적인 과제는 일시적으로 현실화한 행정 가격의 탄력성을 제고해야 한다.<sup>34)</sup> (행정)가격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신호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다시금 소비재 유통망의 주도권은 암시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만성적인 재정적자

---

32) 북한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강조는 "21세기는 정보산업의 시대"('01.5.19 중방 정론), "우리는 과학기술을 국력의 기초로 삼고 있으며, 사회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사로 간주하고 있다"('02.5.21 노동신문 사설)등을 참조.

33) 남포유리공장 등 구형화·노후화된 공장들이 폐쇄되었으며, 자강도 포도주공장·신의주 화장품공장 등이 개선확장되었고, 기초식품공장·양어장 등이 신규 건설되었다. ('02.1.14 조선신보) 참조.

34) 경제관리 개선이후 북한의 가격체계는 고정가격(쌀), 한도가격(소비재 및 중간재), 시장가격(암시장 가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 대부분의 소비재는 생산비용과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도시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 상한을 정부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 과거처럼 식량과 핵심 소비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가격보조금 정책을 재 도입하기도 어렵다. 신축적인 가격정책(생산가격 및 요소가격)을 통해 암시장에서의 상품유통을 공적영역으로 흡수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환율 현실화역시 불가피하다. 북한원의 평가절하가 단행된 현실에서 달러화의 교환비율 역시 재조정되어야 한다. 이미 국내적으로 환율 현실화가 시행중이지만, 문제는 대외무역 환율이다. (상업적 차원의)대의 의존도가 낮은 북한 현실에서 무역 환율정책의 변화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현재 공식환율과 실제환율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격차를 줄이는 것이 북한 당국의 과제이다. 과도기적 환율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남북교역 및 경험에서 상당한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재정개혁도 필요하다. 북한 당국은 임금 및 가격 현실화를 단행했지만, 정부 보조금 폐지와 전력, 통신 운수, 주거 부분의 사용료 인상으로 재정균형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문제는 공급이 불안정해질 경우, 도시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이다. 동시에 원할한 국가수매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매가격의 시장탄력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수매의 활성화와 도시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가격보조의 필요성이 있다. 재정균형을 추구하고 있지만,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다. 좀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재정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공식 부문을 합법화하고, 소득세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 3) 경제개방

북한의 개혁 확대를 위한 핵심변수는 대외환경의 개선이다. 한반도의 냉전 체제가 지속되는 한 북한은 군수공업을 위해 중공업 우선 노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 소비재 생산의 정상화나 외부 지향적 경제정책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관계를 필두로 북일, 북러, 북중, 북미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동시에 북한은 국내경제개혁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개방에 나서고 있다. 북한의 개방전략은 현재 4개의 개방 거점 지역의 선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부축에서는 신의주, 남부축에서는 개성, 동부축에서는 금강산, 북부축에서는 나진선봉이 그것이다.

#### (1) 신의주 개방의 과제

북한은 9.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지정했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평안북도 신의주시를 중심으로 의주군, 염주군, 철산군의 일부를 관할하며, 특수행정단위로서 중앙에 직할되었다. 또한 북한은 ①정치 ②경제 ③문화 ④주민의 권리·의무 ⑤기구 ⑥구장·구기(區章·區旗) 등 총6장 101조로 구성된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을 발표하였다.

신의주 특구는 장관으로 임명된 양빈 문제로 애초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북한 당국의 의도는 주목할 만 하다. 북한은 신의주의 개발과 운영권을 화교자본에 위임했다. 마치 싱가포르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싱가포르 대기업이 컨소지엄을 구성하여 개발과 분양을 전담한 중국의 쑤저우 공업원구를 보는 듯 하다. 북한의 제한된 사회간접자본 투자능력과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불확실한 신의주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아예 투자자에게 직접 운영을 맡긴 것이다. 신의주를 북한 영토내의 또 다른 국가로 인정한 것이다.

신의주 경제특구의 운영체제는 비교사례가 없을 정도로 전향적이며, 개방적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치참여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향후 경제특구의 발전에 필요한 법과 제도는 투자자들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

하여 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표Ⅲ-2>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내용

구분	내용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는 행정구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부여</li> <li>- 향후 50년간 행정구 법률제도 불변</li> <li>- 중앙은 외교사업을 제외한 특별행정구 사업에 불관여</li> <li>- 행정구 명의로 대외사업, 여권 발급 가능</li> </ul>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는 행정구에 토지 개발·이용·관리권 부여</li> <li>- 국제 금융, 무역, 상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로 개발</li> <li>- 행정구 토지 임대기간을 2052년 12월 말까지</li> <li>- 국가는 행정구에 유리한 투자 환경과 경제활동 조건 보장</li> <li>- 행정구내 기업은 북한의 노동력을 채용</li> </ul>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는 문화분야의 시책을 실시하여 행정구 주민의 창조적 노력과 문화정서적 요구를 충족</li> <li>- 첨단 과학기술 수용, 새로운 과학기술분야 개척</li> </ul>
주민권리·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은 성별, 국적, 민족, 인종, 언어, 재산·지식정도, 정견, 신앙에 따라 차별 없음</li> <li>- 외국인도 주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 부여</li> <li>- 다른지역 및 외국으로의 이주, 여행은 행정구에 위임</li> </ul>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법회의가 입법권 가짐</li> <li>- 입법회의 의원은 주민권을 가진 외국인도 포함</li> <li>- 입법회의 의장, 부의장은 입법회의에서 선거</li> <li>- 장관은 행정부의 책임자이자 대표</li> <li>- 장관은 행정부 및 구검찰소장 인사권 가짐</li> <li>- 검찰은 구검찰소, 지구검찰소 관할</li> <li>- 재판은 구재판소, 지구재판소 관할</li> </ul>
구장, 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구는 국가의 상징물 외에 독자적인 구장, 구기 사용</li> <li>- 행정구에는 공화국 국적,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영해, 영공, 국가안전에 관한 법규 밖의 다른 법규를 적용치 않음</li> </ul>

자료: 통일부, '신의주 특별행정구 지정 관련 설명자료'(2002.9) 참조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중국을 겨냥한 개방도시다. 단둥과 신의주는 경쟁적 보완 관계다. 당분간 제조업 중심의 외국인 투자측면에서 단둥의 압도적 우세가 예상된다. 1992년 변경경제합작구를 설치한 단둥에는 이미 516개의 외국기업이 진출해 있다. 인천시가 개발한 '인천 단둥 산업공단'은 이미 46개



업체가 참여하여 분양을 마쳤다. 항만과 공항이 있고, 전력, 용수, 통신 등 인프라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 분양 가격 역시 평당 5만원대로 중국의 다른 지역보다 저렴하다. 단둥과 신의주의 유치업종은 노동집약 산업으로 중복된다. 제도적 환경은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의지가 있으면, 단둥보다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사회간접자본 환경을 정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소비 시장이 없다는 것이다. 남한시장은 개성공단이 맡을 것이며, 당분간 미국의 경제제재로 수출도 어렵다. 주요 소비 시장인 요녕성을 비롯한 동북 3성과 가격 경쟁을 하기에는 벅차다.

따라서 신의주는 초기에는 상업·유통 및 관광 서비스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와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중국횡단철도(TCR)의 연결이 되면, 북방 진출의 중계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2) 개성공단의 추진

공단입지로서 개성지역<sup>35)</sup>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공단후보지역으로서의 개성은 물론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장점으로서는 첫째, 남한과의 지리적 인접성을 들 수 있다. 도로 교통은 판문점에서 8km 떨어져 있어 남한에서 가장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다. 따라서 남측 전력을 이용할 수 있고, 남측의 수도권을 배후도시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개성은 철도교통상의 요충지이다. 개성은 경의선을 통해 사리원-평양-신의주와 연결되어 있고 나아가 중국(TCR) 및 러시아(TSR)를 통해 유럽대륙까지 연결되어 있다. 또한 평산-세포청년간의 청년이천선을 통해 동해안으로도 연결되어 있다. 물론 대부분이 단선으로 운행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복선화 공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비해 단점으로는 첫째, 산업 기반 시설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열악하다. 개성지역은 농업 및 관광산업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휴전선에 인접한 입지적 이유로 전반적인 공업발달이 정체되어 있다. 전력은 북

35) 개성은 판문점에서 8km정도 떨어진 국경도시며 문화도시 개성의 면적은 1,308.6km<sup>2</sup>이며, 인구는 38만, 연평균 기온은 10.3℃ (1월 평균 : -5.9℃, 8월 평균 : 24.7℃), 연평균 강우량은 1,300mm ~ 1,400mm이다. 유적지로는 3개의 토성과 고려 3대왕 정종릉을 비롯한 9개의 왕능이 있다. 지질 기반암은 화강암, 고회암, 석회암, 모래암, 편암등이며, 토양은 산림적 갈색 토양이다.

한에서 자체적인 발전 능력이 가장 취약한 지역이며, 통신인프라 등도 새롭게 건설해야 된다. 교통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인프라를 새롭게 조성해야 된다는 뜻이다.

둘째, 배후 인구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개성의 인구는 38만명이며, 해주와 사리원의 인구를 합해도 100만명이다. 이는 평양·남포권(450만명), 함흥·원산권(265만)과 비교해 상당히 적은 규모이다. 특히 평양중심의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 인력의 교육 및 기술 수준에서 단점을 갖고 있다. 설령 수도권으로부터 해당인력들을 이주시킨다고 하더라도 노동력 관리 등에서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개성 공업지구법」(2002.11.20) 채택은 개성공단 건설의 제도적 측면에서 중요한 계기를 갖지만, 임금규정, 노동시장 등 제도적 측면과 토지사용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개성공단은 향후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수준과 국제환경 개선 수준에 따라 점차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개성공단이 대규모 산업 공단으로 개발되기 어려운 이유는 첫째,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로 수출 기지로서의 효과가 당분간 발휘되기 어렵고 둘째, 북한의 개혁확대에도 불구하고 직접투자 환경(특히 노동시장)이 어느 수준까지 제시될지 분명치 않고 셋째, 공단의 경제효과를 명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의 경제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경의선 연결이후 개성지역에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문화재 개보수를 위한 공동조사 및 개선) 및 관광 편의사업(숙박 등)을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환경 친화적 산업을 중심으로 소규모 공동연구단지 및 위탁가공 협력을 추진하며 북한의 IT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단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3. 사회분야<sup>36)</sup>

정상회담이후 북한의 사회 분야의 변화는 대남 인식의 변화, 자본주의 가치관의 유입, 과학 실용주의 경향의 증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대남 적대인식의 완화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 및 사회 문화교류의 증가로 많은 남측 주민들이 방북을 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접촉의 증가는 북한 주민들의 전통적인 대남 적대인식의 완화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김연자, 이미자 등 대표적인 남측의 대중가수들 공연에 대해 북측 주민들은 높은 호응을 보여 주기도 했다. 나아가 남측의 인도적 지원사업 역시 북측 주민들의 대남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정상회담이후 남측의 TV등은 대부분 남측 상표를 그대로 부착한 채 북측에 제공되고 있다.<sup>37)</sup> 또한 쌀과 비료 지원시에도 남측이 제공했음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역시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 주민들의 대남 인식 변화는 북한의 공식 매체들이 대남 비방을 축소하는 조치와 연결되어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후 북한의 공식 매체들은 남측 전체를 대상으로 삼기 보다는 '일부 반통일 세력'등 비난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둘째, 외부문화 유입이 증가하고, 자본주의 가치관이 확산되었다. 국내의 방북자 증가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접경지역의 무역 활성화는 북한에 외부 사조가 유입되는 통로가 되고 있다. 특히 북중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한 탈북자의 증가는 북한의 식량난이 시작된 1990년대 중반이후의 일반적 현상으로 증가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단순 생계형 탈북자의 경우 80~90%가 식량 등을 구하면, 다시금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이 구전으로 전하는 중국의 발전상은 북한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2년 7.1조치이후에는 무역 분권화로 무역업자들의 출입도 빈번해 지고 있다. 나아가 1998년 시작된 금강산 관광에서 50만여명이상의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남측 문화가 북한에 유입되는 중요한 통

36) 아래의 내용은 통일부, "남북 정상회담이후 북한변화 동향" (2002.6.17) 참조.

37) 2000년 7월에는 대동강 텔레비전 공장에 삼성전자의 수리 센타(AS센타)가 생길 정도로 남측 TV가 많으며, 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공시설에 삼성전자의 프로젝션 TV가 전시되고 있다.

로가 되고 있다.

한편 농민시장의 확산으로 자본주의 가치관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암시장의 확산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결정 메카니즘은 초보적인 자본주의 거래관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2년 7.1조치 등이 시행되면서, 실리추구, '번 수입에 의한 분배'등의 원칙은 공동체적 가치보다는 개인적 가치관 확산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대중문화가 다양해 지고 있다. 대외접촉의 증가와 새로운 문화 유입은 북한의 대중 문화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TV 등 문화매체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대중화 추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주민계몽을 위한 과학상식, 컴퓨터 사용법, 체육, 건강, 위생, 여가 등 생활정보 관련내용이 증가하고 있다. 드라마, 영화, 만화 등 오락적 성격의 프로그램 방영비중도 '98년 3.8%에서 2002년에는 8.4%로 증가했다. 드라마·영화의 소재도 월남자 가족의 생활상, 이혼문제 등 개인이나 사회적 갈등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sup>38)</sup>

넷째, '실리교육' 및 과학기술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신사고 및 과학기술 중시 요구에 맞게 '실제 써먹을 수 있는 산지식'을 교육하기 위해 실용적 요소들이 채택되고 있다. 2001년 4월부터 전국의 고등중학교에서 지역별(도시, 농·어촌) 특성에 맞는 「선택과목」(예 : 경공업, 농·어업관련 과목별 특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정보기술분야의 각종 교육체계 정비가 이루어 지고 있다.<sup>39)</sup>

---

38) 드라마 「수평선」('01.8)과 영화 「우물집 여인」('02.4)은 월남자 가족의 생활상을 그리고 있고, 드라마 「가정」('01.9)은 이혼문제를 소재로 다루고 있다.

39) 전국만 교육성 부상은 경제학회 2차회의(2001년 8월)에서 '정보기술과 정보산업 기술인재들을 키우기 위해 많은 대학들에 학과들이 신설되고 교과서, 참고서들이 집필되었으며 교원양성 대책들을 수립하였음'을 밝히고 있고,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과학 기술 교육사업 강화 결의가 이루어 지기도 했다. ('02년) 한편 IT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기관이 신설되었다. 만경 대학생소년궁전 등에 컴퓨터 수재 양성기지('01.1), 「김책공대」내 「정보과학기술대학」 및 「기계과학기술대학」('01.11), 과학원내 「정보기술학교」('02.1) 등이다. 통일부, 「남북 정상회담이후 북한변화 동향」(2002.6.17) 참조.

#### 4. 대외관계

탈냉전기 들어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는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동맹 약화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확산 압력, 그리고 대내 경제적 여건의 악화와 김일성의 사망 등이 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동맹외교에서 적대국과의 관계개선으로 외교정책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는 북한에게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의 외교정책 원칙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북한은 '자주, 평화, 친선'의 3대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8년 9월 개정 헌법은 자주, 평화, 친선을 기본이념이자 대외활동의 기본원칙으로 표방하고 있다.<sup>40)</sup> 또한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평등과 자주성,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을 국가관계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sup>41)</sup>

북한은 이런 외교정책 원칙과 기본방향 속에서 변화된 정세를 반영하여 체제생존을 위한 실리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2001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이라면 그 어떤 나라든지 대외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라는 언급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외교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대미관계 혹은 미국의 대북정책이다. 이는 탈냉전기 북한의 외교정책 목표가 대미관계에 일차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은 미국과 제네바 핵합의를 도출한 이후 대미 관계개선을 추구하였으나 북한의 협상관성과 미국의 대내정치적 제약 등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대북 강경정책을 천명한 부시행정부 들어 북-미관계는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과거 동맹국이었던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을 통해 열악한 전략적 환경을 만회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대서방외교를 강화하는 등 실리위주의 전방위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남북관계 변수도 북한의 외교정책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국제사회의 대북 인식을 부분적으로 개선시킴으

40) 1980.10. 제6차 당대회총화보고와 1997.6.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에서도 자주·평화·친선을 외교의 기본이념으로 제시,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41) 북한헌법 제172조 (1998년).

로 북한의 대서방외교 등 전방위외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1) 대미 관계의 전개와 특징

### (1) 전개과정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은 미사일 재발사 유예 발표를 통해 대북 식량지원 및 경제 제재의 부분 해제를 획득하고, 고위급접촉을 통해 대미 관계 개선의 돌파구 마련에 주력하여 사상 처음으로 북-미 외무장관회담(7.8)을 가진 바 있다. 북한 지도부의 입장에서 남북정상회담은 김영삼정부 시기부터 중단돼 있던 남북대화를 재개함으로써 경제지원 및 통일담론 활성화를 통해 정치적 안정화를 기하고 열세에 놓인 남북관계를 만회하는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북한의 대외적 측면에서는 당시 소강상태에 놓인 북-미관계 개선을 촉진하고 대서방외교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효과를 갖게 되었다.

실제로 북한은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진행하고 있던 제반 현안을 일괄타결하기 위한 파격적 외교를 전개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명록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특사로 미국에 파견하여(10.8-12) 양국 현안의 일괄타결을 시도하였으며 같은 취지에서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을 초청하여 직접 회담을 주관하였다(10.23-25). 조명록 특사의 방북에서 북-미 양국은 공동꼬뮤니케 발표를 통해 당시 양국 사이의 최대 현안이던 미사일문제를 비롯하여 북한경제 인정, 테러, 경제제재 등에 대한 공동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미 대선 의 혼란으로 인해 클린턴대통령의 방북은 무산되었다.

2001년 1월 출범한 부시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클린턴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향후 대북정책을 투명성, 검증가능성,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부시대통령은 6월 6일 대북정책 요강을 밝히면서 ① 핵합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네바합의의 이행 개선, ② 북한 미사일 개발에 대한 검증가능한 규제 및 수출금지, ③ 재래식 군비 태세 축소 등을 제시하였다. 부시행정부는 이후 북한에 조건없는 대화를 제

의하였으나 대화 유도를 위해 북한에 어떤 유인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달 13일 리형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표와 잭 프리처드 미 한반도 평화회담 담당특사간의 뉴욕접촉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화재개 제의를 함에 따라 양국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부시행정부 등장 초기 북한은 부시행정부의 대북협상 자세가 최소한 클린턴행정부 집권 말기에 취했던 수준에 이를 때에 가서야 북-미대화의 재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sup>42)</sup>

그러나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테러 대참사와 10월 7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계기로 미국은 대외정책의 기초를 반테러 협력에 둘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여 북한은 11월 3일, 3개의 반테러 국제협약에 추가 가입하면서 미국의 구체적인 강경정책 가능성을 차단하고 대화를 이어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부시정부의 반테러정책은 강도높게 지속되면서 북한의 그런 반응은 부시정부에게 불만족스러웠다. 이때 남북관계도 주춤거리는 양상을 나타냈다.

미국이 반테러정책을 중동으로 확산하려는 가운데 추진된 미 국무성 켈리 차관보의 방북(2002.10.3-5)은 북핵문제를 국제적 쟁점으로 다시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때 북한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계획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핵 개발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 미국은 북한이 새로운 핵개발 계획을 먼저 포기한 후에야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중유지원을 12월부터 중단한다는 방침을 주도하면서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여나갔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에게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포기를 요구하면서 북·미간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면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양국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는 현재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03년 1월 북한은 핵동결을 해제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을 추방하며, 핵비확산조약에도 탈퇴하는 등 강경한 자세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핵시설 동결여부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그런 가운데 4월 23-24일 중국의 중재로 열린 3자회담이 열렸으나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가

---

42) 허문영, 「북한외교의 특징과 변화가능성」, 2001, 통일연구원. p. 66.

운데 확대된 추가 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 (2) 대미 외교의 특징

북한의 대미외교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바, 하나는 북-미관계가 대화국면에 있을 때 북한은 최대의 실리를 획득하기 위하여 다양한 실용주의적 협상전술을 구사한다는 점이다. 제네바합의 이후 북한은 미국과 경수로 공급협상, 미군유해송환협상, 미사일회담, 4자회담, 고위급회담 등을 진행하면서 지연·분할·벼랑끝전술을 사용한 바 있다. 북한은 각각의 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 정치적 명분과 식량지원 등 물질적 이익을 부분적으로 획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은 그와 같은 다양한 협상을 전체적인 목표 속에서 통제하고 미국의 대내적 여건을 고려하며 관계정상화로 수렴하려 했는지는 의문이다.

둘째, 북한은 북-미관계가 경색국면일 때는 체제의 자주성과 생존권 옹호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대화를 촉구하는 원칙적 자세를 보여왔다. 부시정부 등장 이후 북한은 “미국은 언제 한번 우리의 사상, 제도, 독립과 주권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자주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관계개선이라는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2002년 10월 핵개발 시인 파문 이후 북-미 불가침조약을 제의하면서도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sup>43)</sup>

클린턴정부 집권 2기 말에 들어 북한이 대미관계 정상화를 추구한 것은 다음과 같은 동기와 목적으로 볼 수 있다.<sup>44)</sup> 첫째, 핵과 미사일 카드를 이용하여 미국으로부터 그들 체제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의 대한 방위정책의 유명무실화 내지 폐기, 특히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장비·무기 및 기술 등의 지원 중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미국과의 관계 발전을 통한 그들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다른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넷째, 북한은 제네바합의를 통하여 46억 달러 상당의 경수로와 연50만 톤의 중유를 10년 동안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경제·기술지원을 획득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다섯째, 미국과의 핵과 미사일 교섭의 성공과 미·북 관계 개선 등을

43) 『평양방송』, 2002. 10. 3; 『조선중앙통신』, 2002. 10. 25.

44) 전정환, “북한 외교의 변화 양상,” 『계간 외교』 제54호(2000. 7), pp. 14-15.



통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통성과 영도력을 과시하려는 것 등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 북한의 대외관계가 미국에만 집중된 것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제네바합의까지 나타난 북한의 대외정책과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과거 동맹국과의 관계 복원과 대서방외교의 추진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부분적으로 개선된 서방의 북한 및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이미지와 공화당 주도 미 의회의 대북강경 정책 성향 및 미사일방어망 구축과 연계된 북한위협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또 클린턴행정부의 유고 공습을 보면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에 회의감을 가졌는지도 모른다. 북한은 미국의 유고 공습을 “미국의 오만성과 횡포성, 침략적 체질과 생리를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미국에 대한 인식,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견해를 똑똑히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45)</sup>

---

45) “유고사태와 그 의미,” 『민민전 방송』; 『연합뉴스』, 1999. 4. 26에서 재인용.

## 2) 대일관계의 전개과정과 특징

### (1) 전개과정

북한 외무상 백남순은 2000년 7월 26일 아세안지역포럼(ARF)가 열린 방콕에서 일본의 고노 요헤인 외상과 북-일 외무상 회담을 갖고 과거청산 및 새로운 선린우호관계 수립 등 네 가지 항에 합의하였다. 또 북한 적십자사는 2명의 일본인 행방불명자를 확인했다고 하면서, 이같은 조치가 북-일 적십자 회담의 합의에 따른 것임을 덧붙이며 관계개선의 촉매제로 활용하였다.<sup>46)</sup> 이와 같은 일련의 북-일 수교회담은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한 남북관계 개선이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이후 한-미-일 3국은 6월 27-28일 호놀룰루에서 대북정책 조정회의를 가지면서 북-일간의 관계 정상화를 촉구하였다.<sup>47)</sup>

그러나 이같은 북-일 대화에도 불구하고 수교회담은 일본의 과거사 사죄 및 보상을 우선시하는 북한의 입장과 납치 및 미사일 문제의 병행 해결을 우선 요구하는 일본의 입장 차이로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또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기술과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우경화 움직임과 일본 자위대가 2003년부터 중국과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남방편성 전략수립(2001.8) 등 안보정책 변화로 인해 북-일관계는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은 북-일간 일련의 대화와 긍정적 주변 환경의 조성은 북-일관계 개선 움직임을 가속화시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말 미국과의 수교 노력에 보인 파격적 외교행보를 일본에 적용하려 하였는지도 모른다. 2002년 4월 북·일 적십자회담과 외무성국장급 회담을 거쳐 9월 17일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최초의 북·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일 평양선언'에서 북한측은 일본인 납치사건에 대해 시인·사과하였고 일본측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경제협방식에 의한 대북경제지원 용의를 표명함으로써 북·일간 관계 개선은 순조로워 보였다.

46) 「조선중앙통신」, 2000. 7. 28.

47) 「오마이뉴스」, 2000. 7. 2.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의 일본인 납치 시인은 일본 여론의 반발과 그에 따른 고이즈미 총리의 대북 강경입장으로의 선회 등 북한에 부메랑효과를 초래하였다. 그 영향이 2002년 10월에 개최된 제12차 북일 수교협상에 그대로 나타났다. 회담은 양국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또한 2002년 11월에 개최하기로 하였던 '안보협의회'마저 불발되면서 북-일관계는 다시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일본은 미 부시행정부가 전개하는 반테러전쟁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미-일 군사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자연스럽게 북-일관계는 중단되어 버렸다. 미국과 일본은 2002년 10월 북한의 소위 핵개발 시인 이후 전개되고 있는 북핵 갈등으로 대북 지원도 중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근 일본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 강화 및 유사법제의 국회 통과, 미-일 군사협력 증대 등에 대한 비난을 반복하고 있다.

## (2) 대일 외교의 특징

앞으로의 북-일 관계는 일본의 과거사 청산문제, 북한의 일본인 납치의혹 문제 해결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수교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일본과의 관계 발전과 수교를 추구하고 있는 동기와 목표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일본으로부터 식민통치 배상이나 전후보상을 받고 경제·기술협력을 진전시킴으로써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하려는 것이다.<sup>48)</sup> 둘째, 남북대결에서 일본을 중립화함으로써 핵문제나 미사일 문제 등과 관련하여 한-일간 및 한-미-일간의 공조체제를 방해·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일본내의 친북 조직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한편,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대일정책 양상은 이중적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은 모두 대미정책과 연동되어 추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제네바 합의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 분위기에 편승하여 일본과의 관계개선에도 나섰다. 물론 이때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활성화가 촉진요인으로

48) 북한은 40년 간의 식민통치와 종전 후 50년 간 대북 적대정책으로 인한 100년 간의 정신적·물질적 고통과 피해 보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이 일본과 수교시 약 1백억 달러 내외의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작용하였다. 이와 달리 부시정부 들어서도 북한은 2002년까지 북-일정상회담을 비롯하여 관계개선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는 일본이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과 연계되는 것을 저지하고 경제지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노력은 미-일 동맹관계에 크게 제약받고 있다. 현재 북한은 미국, 일본과의 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 (3) 대중관계의 전개과정과 특징

북한은 1998년 9월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둔 것으로 보인다. 1999년 6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방중에 이어 2000년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방문하여 장쩌민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회담한 바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1년 1월 15-20일 다시 중국을 방문하였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상하이 푸둥 지구의 첨단 산업기지, 금융 및 상업시설 등을 시찰한 다음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를 높이 평가한 점은 북한의 향후 대내외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김 위원장이 상하이 방문에서 '천지개벽,' '상상을 초월하는 변모' 등 극찬을 아끼지 않은 것은 북한이 2001년 1월 4일 『로동신문』 정론에서 주장하는 '신사고'와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장쩌민 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당정책이 옳았다"고 평가함으로써 중국식 개혁개방정책의 수용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였다.<sup>49)</sup>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이후 중국은 당 조직부장 쟁칭홍의 방북(2001.3)을 통하여 장쩌민주석의 2001년 공식 친선방북에 합의하고 경유 15,000톤을 무상지원하였다. 그에 따라 2001년 9월 3-5일 장쩌민 주석이 방북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1992년 8월 한-중수교 이후 소원해졌던 양국관계를 완전하게 회복하였다. 장쩌민 국가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북·중 우호관계 강화와 쌀, 석유, 비료 등 지원과 대북협력을

49) 허문영, 앞의책, p. 68.

약속하고, 중국은 북한이 남북한 대화와 남·북, 북·미, 북유럽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권유함으로써 양국이 당적 유대의 강화를 통해 정치적 관계 발전을 모색하였다.<sup>50)</sup> 또한 장 주석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은 부시 미 행정부의 미사일방어망(MD) 계획에 대응하여 중-러정상회담(2001.7), 북-러정상회담(2001.8)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신북방삼각관계의 형성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현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과 관련하여 미국이 중국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중국의 중재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남북한 등거리외교로 한반도 비핵화 및 현상유지 등 우호적 주변환경을 통해 안정적인 현대화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중 관계가 예전과 같은 정치군사적 동맹관계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중국은 자국의 핵심적 국가전략인 지속적인 경제 건설을 도모하기 위해 남한과의 관계 강화를 꾀하는 등 현실적 필요에 따라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중국과의 기존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배경과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산당 일당체제를 유지하고 사회주의국가임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간에 제한된 의미에서나마 이데올로기적 동질성과 유대가 지속되고 있고,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은 현재 식량, 원유 등 전략물자의 공급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sup>51)</sup> 셋째, 중국은 북한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효과적인 외교적 지지·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넷째, 한·미·일 3국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불신과 공동 안보의식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탈냉전 이후 북한과 중국의 관계 회복은 2000년대에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일 위원장의 비공식 방문은 남북관계에서 중국의 위상을 말해주는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과 북-중관계 개선이 긴밀한 연관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는 남북정상

50)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555호(2001.9.1~9.7).

51) 중국의 대외경제원조 총액의 1/3이 북한에 제공되고 있다. 「연합뉴스」, 1999. 10. 14.

회담 이전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을 때 북-중관계 역시 중국의 대북 지원을 제외하면 소원한 상태였다는 사실과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 현재 북핵문제를 계기로 미국과 일본이 모색하는 대북 제재 혹은 봉쇄 움직임을 고려할 때, 북한은 남북관계와 북-중관계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두 양자관계에 비중을 높일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북한의 대러관계 역시 이런 맥락에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4) 대러 관계의 전개과정과 특징

소련의 해체이후 과거 군사적 동맹관계의 소멸에 따라 북-러관계는 경제협력의 파트너로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1996년 4월 평양에서 열린 제1차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1차 회의가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첫 사례이다. 회담에서 양국은 부총리급을 수석대표로 외무, 대외경제, 농업, 철도, 경공업, 임업 등 경제 각 분야에서의 협력방법을 모색했는데 그 결과 이 회의를 연례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이 회의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1996년 11월 러시아의 나진·선봉지대 투자확대와 대북 원유제공, 금속공업 제품교환 등을 통한 양국간 무역확대를 목표로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대러시아 관계 재조정은 1996년 11월 투자 장려 및 호상 보호협정 체결, 1997년 4월 과학기술협력의정서, 11월 이종과세 방지협정 체결 등과 함께 농업·어업·과학기술 협조에서 나타나듯이 경제협력 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sup>52)</sup>

북한과 러시아는 2000년 2월 9일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을 체결하고, 구소련 및 러시아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푸틴 대통령이 방북하여 '조-러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2000.7.19) 양국관계는 정상화되었다. 공동선언은 우선 2000년 2월 9일 체결된 '조선·러시아간 우호·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이 양국 간의 전통적인 친선관계와 선린, 상호 신뢰, 다방면적인 협조를 강화하며 동북아시아와 국제무대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협조를 발전시키려는 서로의 염원을 표시했다고 강조했다. 공동선언은 이어 양국이 모든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고 군축과 세계안정 및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52) 김승채,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와 중·러관계," 『계간 외교』 제54호(2000. 7), p. 57.

의향을 표명했으며 특히 “각자 양국에 침략 위협이 조성되거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정황이 조성돼 협의와 상호 협력을 필요로 할 때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했다”고 밝혔다.<sup>53)</sup>

여기에 미 부시행정부의 일방주의적 외교안보정책은 양국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북-러 정상회담(2001.8.4, 8)을 두 차례 개최하고 ‘조-러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양국은 공동선언에서 ‘국제관계와 쌍무관계 문제에 대한 합의’를 발표하였으나, 자국 고유의 이해관계도 각각 추구하였다. 북한의 경우 ‘강성대국’ 건설과 대미협상 기반 강화를 위하여 정치적으로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정통성을 강화하는 한편, 대미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정치강국’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경제적으로는 경제 확대와 기업소 재건 등을 통해 ‘경제강국’ 건설을 도모하고, 군사적으로는 미사일 개발의 평화적 목적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제기하여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응하고, 러시아 군사 무기 구매와 부품의 확보를 통해 ‘군사강국’ 강화를 추진하였다.<sup>54)</sup> 특히, 양국정상이 발표한 ‘북·러 모스크바 선언’(2001.8.4)에는 양국간의 협력관계 복원, 한반도 종단철도(TKR)과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연결사업, 미국에 대한 공동보조,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합의를 담고 있다.<sup>55)</sup> 이와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2년 8월 20-24일 러시아 극동지역을 방문함으로써 모스크바 공동선언과 관련하여 이 지역에서 양국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기존 관계 회복에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무기체계, 자원, 기술 등 여러 면에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으로서는 한·러간의 관계 발전을 저지하거나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북-러관계를 증진하고자 한다. 셋째, 적극화되고 있는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을 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기존관계의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국간 관계가 군사동맹관계로 되돌아갈 수 없음은 물론, 이전과 같은 긴밀한 우호·

53) 연합뉴스, 「2002 북한연감」, p. 927.

54) 허문영, 앞의 책, pp. 70-71.

55)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553호(2001.8.18~8.24).

협력관계의 회복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공산체제를 고수하는 한, 러시아와 북한은 이데올로기적으로 그리고 대내외정책 기조에서 근본적으로 이질적이고 상이할 것이기 때문이다.<sup>56)</sup> 또한 경제 이익을 비롯한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러시아는 북한보다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의 발전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안보정책이 지속되어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되고 그것이 양국의 이익에 위협을 준다고 판단할 경우, 단순한 우호관계를 넘어 군사적 협력을 재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아는 TSR과 극동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제건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북한은 미국의 강경정책을 약화시키고 체제안정 및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는데 중국과 함께 러시아와의 공조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미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일본, 한국, 대만 등과 미사일방어망 계획을 본격화할 경우 북-중-러 신북방삼각관계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5) EU 등 대서방관계

북한의 실리추구, 전방위 외교활동은 대유럽연합(EU) 외교활동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2000년 이후 EU 국가와의 외교관계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현재 총 15개 성원국 중 프랑스 및 아일랜드를 제외한 13개국과 수교하였다. 특히 북한은 EU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제지원 획득 및 경험추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체제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유럽국가들과의 친선유대 및 협력증진을 모색해왔다. 북한은 1998년 후반기부터 EU와의 정치대화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문제, 식량 및 인권문제, 남북대화 문제와 함께 상호연락사무소 설치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EU,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의회의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였고, 북한도 유럽을 방문하여 상호 교류확대와 식량지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북한은 유럽국가들과의 교류확대 차원에

56) 최근 러시아에서 좌파세력이 강화되었으나 공산당이 재집권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러시아의 개혁·개방 정책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 1999년 9월 제54차 유엔총회를 앞두고 영국 등 대부분의 EU회원국들에 사상 처음으로 외무장관 회담을 제의하는 등 유럽과의 관계개선 속도를 높였다.

북한은 2000년 1월 4일 EU 회원국이자 서방 선진7개국(G-7)의 하나인 이탈리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해 서방접근의 발판을 확고히 하고, 같은 해 9월 EU 15개국 회원국 중 수교가 없는 7개국을 대상으로 수교를 제의했다. EU도 한반도 내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위해 북한을 포용하기 시작하여 2000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계기로 영국, 독일, 스페인 등이 대북 수교방향을 천명하면서 북한과 EU의 관계는 전반적인 개선의 길로 들어섰다.

ASEM 직후 영국과 네덜란드, 벨기에 등이 북한과 잇따라 수교하고, 2001년 5월 EU 의장국 대표인 요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의 방북이 성사되면서 EU회원국 가운데는 프랑스와 아일랜드 등 두 나라를 제외한 13개국이 북한과 수교하였다. EU 집행위원회도 대북 수교를 결정함으로써 북한과 EU의 관계는 완전 정상화 국면에 진입했다.

한편, 북한의 동유럽 관계와 관련, 북한은 1980년대 말 동유럽 제국이 개혁과 민주를 추진하고 1989년 2월 헝가리를 필두로 1990년 이후에는 모든 동구국가가 한국과 수교하자, 이 지역에서 북한이 누려온 외교적 독점은 사라졌고 관계도 소원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몰아닥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과 개방으로 인한 관계소원에만 머물지 않고 이들 국가와의 정치 이념적 동맹관계 대신 경제 및 과학, 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관계 발전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sup>57)</sup>

북한이 이와 같이 유럽국가들과의 수교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경제 재건에 필요한 협력을 얻기 위함이 주된 이유이며, EU국가들은 한반도의 평화·화해 분위기에 동참해 한반도 문제에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한편, 북한은 동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강화에도 주력하기 시작하였는데, 여기에는 국제적 고립 탈피는 물론 경제협력, 대미관계 개선에 대한 회의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57) 연합뉴스, 『2002 북한연감』, pp. 937-938.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2001년 7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방문한 데 이어, 2002년 3월에는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순방한 바 있다. 또 북한은 식량 및 자원부국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노력하였다. 북한은 홍콩 영사관 개설, 필리핀과의 수교, 남아공화국과의 수교, 동남아국가연합 지역포럼(ARF)·비동맹외상회의·개도국 정상회의 참가 등을 통하여 아세아·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유대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북한이 경제적 여건상 해외공관을 대폭 감축(1997년 69개에서 1999년 51개)하면서도 대외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전방위외교'를 전개하고, 대미 일변도에서 벗어나 중국, 러시아 등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균형외교'를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대EU외교가 2000-2001년에 집중된 것은 EU 회원국들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에 크게 민감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2000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은 베를린선언을 함으로써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북한의 국제사회로의 편입을 위한 한국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이것이 EU 국가들의 대북관계 개선에 촉매작용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ASEM에서 EU국가 정상들에게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요청하였고, 이 자리에서 영국, 독일, 스페인 등은 대북 수교 의사를 천명하기도 하였다. ASEM 개최 직전까지 대북 수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독일과 영국은 "유럽연합 등 우방들이 북한과 접촉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북한의 개혁·개방과 국제사회로의 편입을 촉진할 것이라는 게 나의 일관된 생각"이라는 김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북한과의 수교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후 북한은 2000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기간내에 영국, 독일, 벨기에, 스페인,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리스 등 7개 EU 주요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sup>58)</sup>

한편, EU는 최근 북한의 핵개발이 국제적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대북 지원 중단 의사를 밝히면서 북한의 핵개발 포기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는 EU의 대북 외교가 남북관계 변수와 함께 북한 자체의 국제적 규범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58) 정성장, "김정일시대 북한과 유럽연합: 새로운 관계의 모색," 세종정책연구 2002-14(세종연구소, 2002), pp. 21-22.

## 6) 소결: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대외 관계에 미친 영향

북한은 제네바합의 이후 형성된 미국과의 대화국면에서 최대의 정치외교적, 경제적 실리와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여 나갔다. 동시에 북한은 그런 조건을 활용하여 소원해진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과 EU를 비롯한 서방외교, 한마디로 전방위외교를 전개하였다. 북한의 대일 수교회담 역시 북-미 대화국면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전방위외교는 단지 미국과의 대화국면이라는 외적 조건만이 아니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이후 일련의 남북관계의 활성화와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예를 들어 북-미 공동궤담니케와 조-로 공동선언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일련의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지원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1990년대 초 한국과 수교를 맺고 남한 편중의 대한반도정책을 유지해온 중국과 러시아는 남북관계 개선 없이 남북한 등거리외교로 전환할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더욱이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이해관계가 없는 EU국가들의 대북 외교관계 수립은 시기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로 편입하려는 김대중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물론 북한의 전방위외교는 북한과 상대국의 상호 전략적 이해의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이 외교관계를 수립·복원하고자 하는 상대국들이 북한과 갖는 전략적 이해의 공통분모에 한국정부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 IV.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남 관계 변화

남북 정상회담이후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물론 국제환경과 쟁점현안에 대한 협상과정에서 우려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6.15 공동선언에 대한 실천 의지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59)</sup>

### 1.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첫 사건이라는 상징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결정적 돌파구가 되었으며 향후 남북 평화·통일과정에서 최고정책결정자의 의지와 판단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회담은 그 회수와 범위에 있어서 이전의 어느 역대 정부에 비할 바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게 확대되었다. 또 정상회담 이전 김대중정부와 북한 사이의 당국회담(4건)에 비해서도 크게 증가하였다.

정상회담 이후 증대한 각종 남북회담과 활발해진 화해협력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남북 당국회담이 지속화, 정례화 됨으로써 다방면의 화해협력을 촉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전략적 차원에서 당국회담을 단발적으로 진행한 과거의 사례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남북 최고지도자의 결단과 후속 당국회담은 남북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제반 경제협력과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는 구체적인 노력으로 이어졌다. 이산가족 상봉 및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계획과 다양한 경제적 협력이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간 제반 합의는 민간교류 및 경제협력을 제도화하는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오랜 기간 남북한의 화해협력 의지가 정상회담과 당국간 신뢰 형성에 이바지하였다고 한다면, 정상회담과 다양한 당국회담은 다시 민간차원의 활발한 화해협력을 촉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

59) 아래의 남북관계 전개 양상은 「국민의 정부 5년 평화와 협력의 실천」, 통일부, 2003을 참조하였음.

<표IV-1> 김대중정부 시기 남북회담 개최 현황(2003. 1. 31 현재)

구 분		합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1
합 계		76회	2회	2회	26회	8회	38회
남북정상회담 및 관련 회담 (12회)	남북정상회담	1회			1회		
	남북특사접촉	3회			3회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5회			5회		
	통신·보도 실무접촉	2회			2회		
	의전·경호 실무접촉	1회			1회		
남북장관급회담(9회) 및 실무접촉(1회)		10회			4회	2회	4회
남북 군사분야 회담(17회)	남북국방장관회담	1회			1회		
	남북군사실무회담 및 접촉	9회			3회	2회	4회
	남북군사실무접촉	7회					7회
남북 경제분야 회담(21회)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3회			1회		2회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	2회			2회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회담	2회				1회	1회
	남북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2회					2회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3회					3회
	임남댐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접촉	1회					1회
	개성공단건설 실무협의회	1회					1회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1회					1회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실무협의회	2회				1회	1회
	남북전력협력 실무협의회	1회				1회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2회					2회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1회					1회
남북적십자회담 (7회)	남북적십자회담	4회			2회	1회	1회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3회					3회
남북 체육분야 회담(2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북측 참가를 위한 실무회담	2회					2회
남북특사회담(3회)		3회			1회		2회
정상회담 이전 남북회담(4회)	남북당국대표회담	1회	1회				
	대북구호물자 전달을 위한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1회	1회				
	남북차관급 당국회담	2회		2회			

\* 출처: 「국민의 정부 5년 평화와 협력의 실천」, 통일부, 2003.

남북정상회담 이후 위와 같은 다방면의 화해협력이 물론 모든 부문에서 같은 속도로 전개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정상회담 이후의 활발한 화해협력은 주로 경제, 민간교류, 인도주의 등의 부문에서 두드러진 반면 군사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배경으로 하는 바, 첫째 한반도 안보문제가 민족내부의 성격과 국제적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는 점과 둘째, 북한과 미국이 각각 자국의 입장에서 남북한 간의 군사회담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부시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의 여파는 남북장관급 제5차 회담의 연기나 제6차 회담의 결렬 및 이후 9개월간 남북대화의 중단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 2002년 12월로 예정되었던 개성공단 착공식은 비무장지대 통행에 따른 군사적 보장문제를 둘러싸고 유엔사령부와의 마찰로 지연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다양한 화해협력 과정은 그것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에 파급효과를 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남북한은 특사 방문을 통해, 9.11테러 이후 미국의 반테러전과 2002년 10월 소위 북한의 핵개발 시인 파문 등 한반도 주변정세의 악화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북한은 핵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2002년 9월 말-10월 초 열린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 312명과 응원단 280명 등 총 673명을 참여시켰다. 가장 중요한 점은 남북간 경제협력과정에서 남북 군당국간 접촉과 협력 기회가 증대되어 상호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군사적 신뢰구축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이다. 2003년 6월 7-9일 개성에서 열린 제5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이 출퇴근으로 이루어진 것은 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류협력과 그에 따른 남북간 신뢰의 발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2. 남북 경제협력의 활성화

### 1)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7월에 개최된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과 8월에 열린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서울~신의주) 및 도로(문산~개성)를 연결키로 합의함으로써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2002년 4월 대통령 특사 방북시에는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에도 합의하여 2002년 9월 18일 비무장지대내 경의선 철도·도로와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착공식을 거치고, 2003년 6월 15일 현재 남북방 군사분계선에서 철도 연결이 이루어졌다.

철도의 연결은 단기적으로 남북경협에서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었던 물류비를 인하할 수 있고, 북한을 중계거점으로 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남북한 철도 연결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sup>60)</sup>, 장기적으로 보면, 철도 연결은 남북한 단절구간 연결, 북측 구간 개량과 복선전철화, 대륙횡단 철도와의 연계의 순서로 진행 될 것이다.

### 2) 개성공단 건설 추진

2000년 8월 현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간에 개성지역 공업단지 조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이후 현지 측량 및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2002년 8월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및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개성공단건설의 금년내 착공'에 합의함으로써 개성공단 건설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002년 말로 예정된 공단 착공식은 비무장지대 통행을 둘러싼 유엔사령부와의 마찰로 지연되어 왔다. 남북 쌍방은 2002년 12월 8일 열린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에서는 2002년 12월 26-30일 중 공단 건설을 착공키로 합의하였으나, 비무장지대 통행에 따른 군사적 보장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착공

60) 경의선의 남측 구간은 총사업비가 1,804억원으로 철도:712억원, 도로 761억원, 국방부 331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명식, "남북철도 연결현황",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기술 및 정책 방향』 (2002.4) 참조.

식이 연기되었다. 현재 이 문제는 남북한과 유엔사령부와의 잠정적 타협에 의해 봉합되어 있으나 향후 다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sup>61)</sup>

개성공단이 건설될 경우 지리적으로 남한과 인접해 있는 개성시를 배후로 하고 있어 남북을 연결하는 '물류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남쪽의 기술력과 자본, 북쪽의 노동력이 결합된 제품이 생산되어 국제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도 개성공단 건설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11월 13일 「개성공업지구」를 새로 지정하고 11월 20일 「개성공업지구법」을 채택한 바 있다.<sup>62)</sup> 개성공단 착공식은 2003년 6월 말이 있을 것으로 알려져있다.

### 3)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

금강산 사업은 1998년 현대 3사<sup>63)</sup>가 추진하여 북한과 「금강산관광사업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하고 그해 11월 18일 첫 출항을 하였으나, 1999년 6월 21일 민영미씨 억류사건 등 불안정하게 출발하였다.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선이 첫 출항한 이후 2002년 12월말까지 총 1,057항차 514,243명이 금강산을 관광하였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사업이 관광객의 격감 등으로 인해 한때 중단위기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3월 28일 「금강산관광객에 대한 경비지원지침」을 제정하여 2002년 4월부터 초·중·고등학생에게는 70%, 이산가족, 대학생,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는 60%의 관광경비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남북은 2002년 9월 금강산에서 개최된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자회담에서 2002년 12월초 육로관광을 시작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2003년 1월 27일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임시도로 통행에 대한 군사 보장합의서를 타결하였다. 현재 남북은 동해선 임시도로를 이용한 금강산 육로관광을 앞두고 있다.

한편, 북측은 2002년 10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금강

61) 2002년 말 한국과 유엔사령부는 판문점 통과절차를 동해선 임시도로에만 한정해 간소화하기로 하여 앞으로 동해선 철도와 경의선 구간에 대해서는 다시 협상해야 한다.

62) 동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관리, 기업 창설·운영, 분쟁 해결 등을 5장 46조와 부칙 3개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평양방송」, 2002. 11. 27.

63) 현대상선·현대건설·금강개발을 말한다.



산관광지구」를 지정하고, 11월 13일 정령으로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채택하였다.<sup>64)</sup>

#### 4) 남북 교역의 증대

1998년부터 2002년 말까지 5년간 남북간 물자교역액은 20억2,522만달러(연평균 4억 504만달러)에 이른다. 이는 1989년부터 1997년까지 9년간 연평균 교역액 1억7,174만달러의 약 2.4배 수준이다.

남북간 물자교역은 1997년 경수로건설사업 시작 등으로 3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한 후 1998년 다소 감소하였으나 1999년 다시 3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이어 2000년에는 대북 비료지원, 위탁가공교역 확대 등에 따라 4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2002년에는 거래성 교역의 꾸준한 증가세와 비거래성 교역인 대북 식량차관, 철도·도로 연결공사 관련 자재·장비 지원 등으로 6억 4천만 달러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

64) 이 법은 금강산관광지구의 운영체계, 개발업자의 권리, 출입절차, 분쟁 해결절차 등을 장·절 구분 없이 29조와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평양방송」, 2002. 11.25.

### 3. 사회 문화 분야의 활성화

#### 1) 이산가족 상봉의 확대

1998년 3월부터 2002년 말까지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총 1,835건(연평균 약 380건)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이는 1990년-1998년 2월까지 나타난 연평균 20건에 비하여 약 19배 증가한 수치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남북정상 회담 이후 5차례의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통해 5,400여명(1,004건)의 가족과 친척들이 상봉하였다.

민간차원에서는 831건(연평균 172건)의 상봉이 이루어졌으며, 과거 연평균 20건에 비해 8.6배가 증가하였다.

노무현정부 들어서도 이산가족 상봉은 적극 추진되고 있는바, 제6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6월 말 혹은 7월 초에 있을 예정이다. 남북 적십자사는 6월 12일 상봉 후보 200명의 생사확인 통보서를 교환하고 상봉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1998년 3월부터 2002년 말까지 총 3,356건의 이산가족 생사 및 주소 확인이 이루어졌다. 정부차원에서는 5차례의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2차례의 생사·주소확인을 통해 1,669건을 확인하였으며, 민간교류추진단체 등 민간차원에서는 1,687건(연평균 349건)을 확인하였다. 이는 과거 연평균 127건에 비해 약 2.7배 증가한 수치이다. 또 1998년 3월부터 2002년 말까지 총 4,190건의 이산가족 서신교환이 이루어졌다. 정부차원에서는 1998년 이후 671건이 성사되었으며, 민간차원에서는 3,519건(연평균 728건)이 성사되었다. 이는 과거 연평균 506건에 비해 약 1.4배 증가한 규모이다.

이상과 같은 이산가족 상봉과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등에 힘입어 이산가족 상봉을 제도화하기 위해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남측 정부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적십자회담,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북측에 이산가족면회소 설치를 제의하여 왔다. 그동안 면회소 설치 장소문제를 놓고 남북간에 이견이 있었으나 2002년 9월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마침내 면회소 설치에 합의하였다. 동부지역에는 금강산지역에 설치하고 서부지역에는 경의선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추가로 설치키로 하였다. 남북은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월까지 3차례의 적십자 실무접촉을 통해 금강산

지역 면회소 부지 선정, 규모, 착공식, 면회소 설치를 위한 건설단 구성 등에 합의하였다.

## 2)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방문 활성화

남북간 화해협력으로 인한 민간교류 결과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주민들의 활발한 상호방문이 이루어졌다. 먼저, 남한주민은 1998년부터 2002년 말까지 총 37,572명(연평균 약 7,514명)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이는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시행으로 방북이 허용된 이후 1997년까지 9년간 방북인원 2,405명의 약 15.6배(연평균 267명의 약 28배)에 달한 수치이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한주민들의 북한 방문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연 방문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 한편, 1998년 11월 18일 시작된 금강산 관광 인원은 2002년 말까지 총 1,057항차 514,243명(외국인 등 1,802명 포함)에 이르고 있다.

<표IV-2> 남한주민들의 연도별 북한 방문 현황

(단위 : 명)

연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계
인원	1	183	237	257	18	12	536	146	1,015	3,317	5,599	7,280	8,551	12,825	39,977

\* 금강산 관광객은 제외

\* 출처: 「국민의 정부 5년 평화와 협력의 실천」, 통일부, 2003.

또 북한주민들의 남한 방문도 이전시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1998년부터 2002년 말까지 2,011명(연평균 약 402명)의 북한주민이 남한을 방문하였는데, 이는 1989년부터 1997년까지 9년간 남한방문 인원 575명의 약3.5배(연평균 64명의 약 6.3배)에 해당한다.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1994년부터 1998년까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1999년 통일농구대회를 계기로 62명이 남한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어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평양학생소년예술단 등의 서울공연, 남북장관급회담 등 각종 회담, 이산가족교환방문 등 706명으로 증가한 후 2001년에는 남북관계의 침체로 인해 191명으로 감소하

였다. 그러나 2002년 8월에 열린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활성화됨에 따라 각종 회담, 통일축구경기,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한경제시찰단 등 1,052명으로 급증하였다. 북한주민들의 남한 방문 역시 정상회담 이후에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표IV-3> 북한주민들의 연도별 남한 방문 현황

(단위 : 명)

연도	89	90	91	92	93	94~98	99	00	01	02	계
인원	0	291	175	103	6	0	62	706	191	1,052	2,586

\* 출처: 「국민의 정부 5년 평화와 협력의 실천」, 통일부, 2003.

#### 4. 정상회담이후 대남인식의 변화

남북간 다방면의 화해협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남북 쌍방, 특히 북한의 대남 인식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9.11테러 이후 한국의 대미 테러공조로 북한은 일시적으로 반발하였지만 정상회담 이후 시작된 남북 화해협력 구도를 폐쇄하지 않았다. 이는 1994년 김일성 주석 조문문제를 둘러싸고 나타난 남북간 대화 중단이 김영삼정부 임기 말까지 계속된 사실과 뚜렷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같은 의미에서 북한은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과정에서 표명한 북한 관련 발언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이후의 대남관계의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단지 북한의 대남 인식의 변화로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이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이끈 객관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북한은 대남 인식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바, 이것은 정상회담을 전후한 남북관계 양상과 일치하고 있다.

1998년 벽두 북한은 '문민정권'을 "식민지파쇼 정권"이라고 비난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대중을 겨냥하여 "단순히 '정권'이나 교체되고 '대통령'이나 바뀌어서는 남조선에서 변화될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그러면서 북한은 등장할 김대중정부에게 "금후태도를 지켜볼 것"이라는 태도를 나타냈다.<sup>65)</sup>

그러나 북한은 6.15 공동선언을 전후로 대남 인식에서 뚜렷한 변화를 나타냈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을 "조선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민족사의 새 시대를 개척해 나갈 것을 밝힌 민족자주선언"이라고 평가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전개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경이적인 성과"로 평가하였다.<sup>66)</sup> 북한은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민족공조'라는 이름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북한의 긍정적인 대남 인식은 2003년에 들어서도 유지되고 있다. 북한은 노무현정부 등장이 임박한 2003년 신년사에서 김대중정부 등장을 앞둔 1998

65) 신년 공동사설, 「조선중앙통신」, 1998. 1. 1.

66) 「로동신문」, 2001. 1. 4.

년 신년사와 달리,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적론을 제기하지 않고 '민족공조'를 더욱 강조한 바 있다.<sup>67)</sup> 북한은 노무현정부 등장 이후 처음 가진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정세 변화와 관계없이 6.15공동선언의 근본정신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sup>68)</sup> 6.15 공동선언 3주년을 맞아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주도적 역할을 한 김용순 노동당 비서도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다각적으로 이루어진 남북대화와 교류를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위대한 사변들"이라고 평가하였다.<sup>69)</sup>

이상과 같은 북한의 대남 인식 변화는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한 남북관계 변화, 즉 남북 화해협력의 증대를 설명해주는 동시에,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전망을 밝게 해주는 근거로도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이 '민족공조'를 '외세와의 공조'와 갈등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남한은 이 둘이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에 보완적임을 북한에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67) 신년 공동사설, 『조선중앙통신』, 2003. 1. 1.

68) 『중앙방송』, 2003. 4. 30.

69) 『중앙방송』, 2003. 6. 13.

## V. 북한 개혁지수 및 향후 전망

### 1. 북한의 개혁지수

#### 1) 북한 개혁의 특수성: 비교 사회주의적 평가

북한의 현재 경제정책 변화수준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앞으로 북한이 선택할 경제정책 변화의 방향이다. 개혁이란 '혁명'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점진적이며 완만하고, 지속적이거나 진화론적 변화"를 의미한다. 코르나이(J. Kornai)는 사회주의 체제의 개혁을 다음과 같은 두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① 공식적 지배이데올로기 또는 공산당 지배에 의한 권력구조 ② 국가소유체제 ③ 관료적 조정메카니즘, 이 세가지 중에서 한가지 이상에 변화가 발생하고, 둘째, 그 변화는 사회주의 체제를 변혁시킬 만큼 급격하지는 않으면서 약간 급격한 혹은 완만한 수준이어야 한다. 70)

경제개혁의 수준과 관련하여 부문 개혁과 전면개혁으로 나눌 수 있다. 부문 개혁은 1960년대이후 동유럽과 1980년대초반 중국 베트남 등에서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부문 개혁 체제는 가격체계의 혼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등으로 많은 문제를 가져 왔다. 국가가 규정한 국정가격이 희소가치를 반영하지 않으면, 경제개혁의 확산 효과는 한계에 이르게 된다. 71) 특히 이중가격체계는 반합법 내지는 비합법 채널을 통해 자원이 사적 영역으로 이동함으로써 부패 등을 조장했다.

전통적 계획경제의 체제내적 개혁은 1950년대 후반 동유럽에서의 스탈린주의 비판으로 시작되어 1960년대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1950년대 이후의 유고72),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 1950년대 후반 구소련의 흐루시초프 개혁과

70) Já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92) p. 361, p.388.

71) 중국의 개혁 국면에서 이중가격 체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Nicholas R.Lardy, 'Dilemmas in the Pattern of Resource Allocation in China, 1978-1985' Victor Nee & David Stark [Remaking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Socialism in China and Eastern Europe](California:Stanford Univ.Press, 1989) 참조.

72) 유고는 이미 1950-1년에 급진적 제도변화를 시도하였다. 중앙계획의 범위 축소, 노동자 자주

1965년 코시킨 개혁, 1968년 헝가리의 신경제 메카니즘(New Economic Mechanism)등이 대표적인 체제내적 개혁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 개혁은 1970년대 후반 시작되었다. 개혁의 출발은 농촌개혁이다. 중국의 경우 인민공사화운동의 실패이후 나타났던 '농가생산 책임제'형태가 오랜기간 지방에서 변형된 형태로 남아 있었고, 이것이 문화혁명의 열기가 식어가는 시점에서 확산되었다. 농가생산책임제의 공식허용은 이미 확산되고 있었던 것을 공식적으로 추인한 것이다.

베트남 역시 마찬가지이다. 통일이후 식량생산의 증대가 무엇보다 정책의 우선 관심사였다. 이 시점에서 개인농이 발달되어 있고, 쌀 생산 중심지역인 남부지역에 대해 농업협동화를 추진할 것인지가 정책 논쟁의 대상이었다. 베트남 지도부는 통일직후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부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농업집단화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중국식 점진주의 방식은 거시경제적 안정과 산업의 구조조정이 구행정시스템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중국식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북한과 중국은 경제개혁의 초기조건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경제개혁의 초기조건으로는 ① 개혁직전의 정치 구조 ② 거시경제 환경 ③ 국제 시장과의 구조적 연계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경제개혁은 최고 집권층의 변화(지73)와 더불어 집권엘리트층에서 개혁주체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왜 그런가? 경제개혁 과정은 구조 조정을 동반하면서, 국가의 복지제도 축소와 보조금 삭감으로 나타난다. 이해관계의 차이로 정치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동시에 개혁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의 불평등과 경제적 잉여의 불법적 유출은 관료적 부패 등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전환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혁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다. 중국의 경제개혁은 1977년 문화혁명이 종

---

관리제 도입, 강제적 농업집단화 종식 등이 이러한 조치들이다. 1960년대에 유고의 개혁 조치들은 일종의 'Bargaining model'로 구체화되었으며, 1974년 헌법 도입으로 제도화되었다. 경제적으로 시장을 8개의 하부 시장으로 분할하고 세금, 환율, 투자정책, 규제 등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낭비적 투자, 규모의 경제 이익 포기, 불필요한 거래비용, 경제정책 과정에서 일종의 Bargaining 현상 증대 등의 문제를 가져 왔다. (Ellman, 1989, 55-7).

73) 1950~60년대 폴란드의 고몰카, 헝가리의 카다르 정권, 1980년대 후반 구소련의 고르바초프, 1970년대 후반 중국의 덩소평 등은 개혁을 추진한 대표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료되면서 재등장한 개혁 엘리트들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베트남의 경우에는 당내집단지도체제의 틀속에서 개혁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비해 북한은 현재의 수령체제와 정치사상체제를 장기 지속하면서 정책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이나 베트남)과 다르다.

둘째로 거시 경제적 환경도 다르다. 경제개혁은 경제적 위기에 대한 정책적 반응이다. 여기서 경제적 위기란, 상품시장의 기능 약화, 자본시장의 부재, 인프라 시설의 미비, 국제수지 악화 등을 의미한다. 북한의 경제위기 이후 암시장의 확산은 주목할만 하지만, 중국의 비국영 부문의 규모나, 역사적 경험(1960년대초 유소기 개혁당시의 농가생산책임제 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

셋째로 국제시장과의 구조적 연계성이 다르다. 개혁 정책의 선택에서 국제적 변수는 ① 국제정치적 환경 ② 인접 국가의 개혁 사례에 대한 학습효과 ③ 개혁 개방에 필요한 외부 자본 형성과 관련되어 있다.

1970년대 후반 중국 경제개혁초기의 국제환경과 북한이 처한 상황은 다르다. 대외적 환경은 개혁 개방에 필요한 자본조달과 관련되어 있다. 외자유치나 수출 확대 등을 위해서는 경제재제 등이 완화되고 개별 국가의 공적 차관 및 국제금융기구의 개발기금등이 투자될 수 있는 환경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이 내수시장을 효과적인 매력으로 활용하면서 자본을 조달하고, 수출산업 육성을 통해 국제시장경제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 현재 북한의 국제환경은 분명 중국과 다르다. 여전히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로 자본조달과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 물론 인접국가의 개혁 경험이 후발성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험은 북한의 입장에서 참조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거시경제적 조건과 개혁과정의 상이성으로 학습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 2) 북한 개혁지수

현재 북한의 경제개혁은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가? 7.1조치이후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변화는 전통체제로부터의 변화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고도의 시장개혁체제를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시장화, 사회적 다원화라고 규정할 때, 북한의 변화 수준은 어디에 해당 되는가?

여기서는 경제개혁 수준을 중심으로, 정치, 외교, 사회적 변수를 반영하여 북한의 개혁지표를 구성해 보고자 한다. 1960년대 동유럽의 개혁이나 중국, 베트남의 개혁 사례에서 보여지는 일반적 경험은 정치체제의 변화는 경제정책 보다 느리다는 점이다. 북한처럼 오랫동안 수령제적 특성을 경험한 국가는 더욱 그렇다.

전통체제를 1로 보고, 발전된 시장개혁 체제를 5로 보았을 때, 중요한 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표 V-1> 개혁지표 구성

분야		1(전통체제)	2(부분개혁1)	3(부분개혁2)	4(시장개혁)	5(민주적 시장경제)
정치	정책결정	전체주의	정책결정 일부 분권화	정치/행정분 리	중간 엘리트 경쟁	민주화/(다 당제)
경제	시장화	계획경제	계획대상 축소	소비재 시장 허용	생산재시장 허용	시장화
	소유제	집체소유	청부제(일부 처분권)	일부 개인소유	개인소유확 대	
	가격	독점가격	변동행정가격 (한도가격)	일부시장가 격	시장가격 확대	가격자유화
	노동시장	계획분배	하청생산	일부 노동시장	노동시장 확대	직업선택의 자유
	대외개방	자립	일부 특구	특구확대	개방 확대	전면 개방
외교	외교관계	고립	일부 관계개선	관계개선 확대	적대관계 종식	외교관계정 상화
이념 및 사회	문화적 다양성	획일	부분 유입	외부문화 일부 허용	개방 확대	문화개방
	이념	통제	사상역할축소	해석 분권화	사상개방	반체제 세력 허용

정치적으로는 정책결정구조의 변화수준을 중심으로 구분했고, 경제적으로는 시장화 수준, 소유제 변화, 가격체계, 노동시장, 대외개방 수준을 중심으로 각각 단계별 변화 지표들을 구성하였다. 이밖에 외교관계나 이념 및 사회적 다원성 역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지표를 토대로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2> 정상회담이후 북한의 개혁지표 변화

분야		정상회담 이전	7.1조치(2002)	2003
정치	정책결정	1(집권화)	2(일부 분권화)	2(일부 분권화)
경제	시장화	1.5(계획중심, 일부 허용)	2.5(계획축소, 일부 소비시장 허용)	3(소비재시장 허용)
	소유제	1(집체소유)	2.5(처분권 인정, 점유 확대)	2.5((처분권 인정, 점유 확대)
	가격체계	1(계획가격)	2.5(한도가격, 일부 시장가격)	2.5(한도가격, 일부 시장가격)
	노동시장	1(계획분배)	2(일부 하청계약)	2(일부 하청계약)
	대외개방	2(일부 특구)	3(특구 확대)	3.5(특구 제도화)
외교	외교관계	1.5(남북관계 일부 협력)	3.5(남북관계정상화, 북일 북중 북러 관계)	3(북미, 북일 관계 악화)
이념 및 문화	문화개방	2(부분유입)	2(부분유입)	2.5(일부 외부문화 확대)
	이념	2(사상역할 축소)	2(사상역할 축소)	2.5(경제개혁 단어사용)
합계		13	22	23

북한의 개혁지표를 50점 기준으로 구성해 보면, 정상회담 이전에는 약 13점 정도로 추정되며, 7.1조치 직후에는 22점, 2003년 기준으로는 23점 정도로 추정된다. 총괄적으로 북한의 개혁지표는 2003년 현재 부분개혁 1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외교관계 정상화에 따른 정치 사회적 변화가 진행되어야 부분개혁 2단계와 시장개혁단계로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 시나리오에 따른 북한 변화 전망

### 1) 주요 변수 설정

북한의 경제개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로는 ① 북한의 정책선택, ② 한국의 대북 정책, ③ 미국의 대북 정책이 중요 하다. 시나리오 구성축을 구성하기 위한 요인은 북한의 경제개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가변성이 높고 변동폭을 예상하기 어려운 현상들로 시나리오 구성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구성 요인들은 불확실성과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경제개혁 유형과 과정을 결정짓는 변수이다.

<표 V-3> 북한의 개혁·개방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

구분	내용
북한	① 경제 발전에 대한 지도부의 인식(perception) 수준 ② 기존 정치사상 체제의 변화 의지 ③ 남북관계 진전과 대남 경협 활성화 의지 ④ 북미 관계 개선여부
한국	①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 여부 ② 경기 활성화와 기업들의 투자여력 ③ 국민들의 여론과 대북지원 여부
미국	① 대북 포괄협상 수용 여부 ② 북미 관계 정상화와 북한의 체제 보장 여부 ③ 대북경제제재 완화여부
기타	① 북일 수교협상과 대북 배상금 지급 ②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경제개발 지원

시나리오 축을 추출키 위해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핵심적인 요인을 선택해야 된다. 우선 북한의 경제정책 선택은 북한 지도부의 변화의지에 달려 있다. 과거회귀, 소극변화, 적극변화에 따라 경제개혁의 폭과 속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북 정책, 미국의 대북정책,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지원등은 통칭

해서 '국제사회의 북한시장 참여'로 정리할 수 있으며, 참여양상은 봉쇄, 소극적 참여와 적극적 참여로 양분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개혁 유형은 북한 지도부의 변화 의지(후퇴, 소극변화·적극변화)와 국제사회의 북한 시장 참여 수준(봉쇄, 소극참여·적극참여)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 2) 시나리오 축의 내용

### (1) 북한 지도부의 변화 의지: 후퇴, 소극변화, 적극변화

북한 지도부의 변화 양상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후퇴, 소극변화, 적극변화 등이다. 먼저 과거후퇴란, 2002년 7월 부터 시작된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중단하고, 다시금 과거 통제체제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의주 개방과 개성 공단 등은 중단하지 않지만, 한반도의 긴장 상황 지속으로 답보 상태를 지속할 것이며, 대외정책에서는 벼랑끝 전술을 선택하면서, 군사적 동원을 통해 긴장상황을 준비 할 것이다.

소극변화는 대내적으로 임금 및 물가를 현실화했으나, 지속적으로 행정가 격을 통해 관료적 통제를 지속하며, 독립채산제를 확대 시행하나, 기업의 파산이나 실업을 인정하지 않으며, 농산물 시장을 비롯한 비국영 부문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남대화는 지속하지만 개성공단 등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을 허용하지 않고, 대미 관계의 악화를 방지하면서, 남북관계, 북일 관계를 통해 대외적 공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을 말한다.

적극변화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혁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개방정책의 가속화 및 인센티브 체계의 변화를 비롯한 적극적인 경제정책 변화를 시도하는 경우이다. 경제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주체사상 등 기존의 사상체계를 실용주의적으로 재해석하고, 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우위체제에서 내각 관료의 책임성이 제고된 행정우위체제로 변화할 것이며, 대량살상무기(핵·미사일)를 포기함으로써 북미 관계정상화와 미국의 대북경제 제재 완화를 유도하며,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전후배상금을 경제개발 기금으로 활용하며, 국제금융기구의 대북경제개발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 (2) 국제사회의 북한 시장 참여수준

국제사회의 북한 시장 참여수준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봉쇄, 소극참여, 적극 참여 등이다. 먼저 봉쇄란 핵문제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한미일 3국은 인도적 지원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경제협력을 중단하는 경우다. 남북 대화가 중단되고, 남북 경제 협력이 최소화하며, 북일 수교회담 역시 중단될 것이며, 북한은 에너지, 식량 등의 공급 부족 현상을 겪으며, 경제 특구 구상역시 주변국의 불참으로 실패할 것이다.

소극참여의 경우는 북한이 핵 문제 해결 의사를 밝히고, 협상 국면이 지속되지만, 북미간 의견차이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지속되고, 북한의 국제 금융기구 가입도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남북 경제협력은 북미 관계의 교착으로 투자를 최소화하고, 기존의 교역과 위탁가공 중심으로 현상을 유지할 것이다. 중국의 대북 지원이 지속되고, 일본의 인도적 대북 지원은 지속되지만, 북일 수교회담은 장기화될 것이다.

적극참여는 북미간 포괄 협상안이 타결되면서 북한은 핵·미사일을 포기하는 대신 한·미·일 3국이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과 경제개발 지원을 본격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남북 관계는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의 정상가동으로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가 보장됨으로써 다양한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대북 경제제재를 철폐하며, 일본은 대북 국교정상화를 통해 배상금(70억-100억 달러)을 유무상원조 및 공적원조 형식으로 지불할 것이고, 북한의 ADB 가입을 근거로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인프라 구축 및 경제개발원조가 본격화될 것이다.

### 3) 시나리오에 따른 변화 전망

북한지도부의 변화 의지와 국제사회의 북한시장 참여수준이라는 시나리오 작성축에 따라 가능한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 V-4> 북한 경제개혁의 유형 구분

북한지도부의 변화의지 국제사회의 북한시장 참여수준	과거 후퇴	소극 변화	적극 변화
봉쇄	① 전시형 통제경제	② 개방 없는 부분 개혁	가능성 없음
소극참여	③ 개혁 없는 부분개방	④ 부분 개혁개방	가능성 없음
적극 참여	가능성 없음	⑤ 부분 개혁/전면개방	⑥ 시장 개혁

먼저 전시형 통제경제는 한반도의 신냉전 상황을 반영하는 시나리오이다. 한미일 3국과 북한의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은 변화의 움직임을 포기하면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개방없는 부분개혁 시나리오는 북한의 변화 의지는 높으나 국제사회의 대북 참여도가 낮은 상황의 시나리오로, 일종의 현상(위기)관리형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개혁없는 부분개방은 국제사회의 대북 참여도는 높은 편이나 북한의 변화의지가 소극적인 상황의 시나리오이고, 부분 개혁개방은 북미 관계가 악화되지 않은 가운데, 남북 관계가 지속 개선되는 상황에서의 시나리오이다. 부분 개혁과 전면개방 상황은 북미 관계 개선을 포함한 국제환경의 개선으로 한미일 3국의 대북지원 및 투자가 증가하나,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가 소극적인 상황의 시나리오이다. 시장 경제형 개혁은 국제사회의 대북 참여도와 북한의 변화의지가 동시에 높은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다.

현실적인 가능성을 보면, 북한의 경제정책은 부분개혁에서 전면개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정세 악화시 전시동원형 통제경

제로의 후퇴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국제환경의 점진적 개선을 고려한다면, 점차적으로 시장개혁으로 단계적으로 진화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표 V-5> 시나리오별 비교

	조건	개요	주요 조치	예상 효과
전시동원형 통제경제	· 변화의지 후퇴 · 봉쇄적 대외관계	· 긴장고조 · 공급부족 · 전시형 통제	· 식량난 대응 · 선행부문 중시 · 가격 통제 · 중·러 의존	· 탈북주민 증대 · 동요 발생 가능
개방 없는 부분개혁	· 소극적 변화의지 · 봉쇄적 대외관계	· 외교관계 교착 · 체제안정 · 군부 중심 운영	· 부분적 제도개선 · 중앙통제 약화 · 이윤 도입 · 물질적 자극체계 · 프로젝트중심 투자	· 과도적 성과 · 장기적 한계
개혁 없는 부분개방	· 변화의지 후퇴 · 소극적 대외개방	· 제한적 관계 개선 · 내부 개혁 부재 · 특구중심 개방	· 국제금융기구 활용 도모 · 경제특구 활용 · 위탁가공교역 중시 · 중공업우선정책 유지	· 대외관계 정체 · 제한적 외자유치 · 특구의 투자환경 미비 · 남한기업 대북투자 정체 · 체제유지 위한 통제강화
부분 개혁·개방	· 소극적 변화의지 · 소극적 대외개방	· 내부 개혁 추진 · 남북관계 중시 개방 · 제한적 북미관계 개선	· 공유재산 하 시장 도입 · 중앙계획 하 분권화 · 경제효율성 중시 · 경공업 중시 · 연성제약 하 기업자유	· 사회주의담론 유지 · 강은파 정책 대립 · 개인주의 경향 확대
전면개방 하 부분개혁	· 소극적 변화의지 · 적극적 대외개방	· 개혁보다 개방 중시 · 개혁 지체가 개방 억제	· 거시지표 중심 통제 · 주요 상품 통제 유지 · 경공업중시정책 시작 · 적극적 대외개방정책	· 공식 시장 확대 · 암시장의 공식화 · 개혁 요구 증대
시장개혁	· 적극적 변화의지 · 적극적 대외개방	· 북한 개방 · 북미관계 개선 · 남북경협 활성화	· 북한 발전전략 수정 · 세계경제 편입 · 개혁·개방 동시 추진 · 사유화, 시장화 추진	· 사회통합원리 조정 · 주민 의식 변화 · 권력지형도 변화 · 불평등 발생 · 점진적 체제전환

북한의 개혁 확대를 위한 핵심변수는 대외환경의 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냉전체제가 지속되는 한 북한은 군수공업을 위해 중공업 우선 노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 소비재 생산의 정상화나 외부 지향적 경제정책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수출 지향형 경제체제로의 전환은 북한을 둘러싼 적대환경이 개선되고, 북한 당국의 체제위협의식이 약화될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선택에서 주목되는 것은 한미일 3국과 북한이 벌이고 있는 대 북 포괄적 협상의 결과이다. 협상이 성공되면, 시장경제형 개혁으로 나갈 것이며, 실패하면 중앙집권적 계획강화로 후퇴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장기적으로 협상 교착이 지속되면, 부분개혁 유지가 나타날 것이다.



## < 참고문헌 >

### - 국내자료 -

- 김승채. 2000.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와 중·러관계.” 『계간 외교』 제54호.
- 김연철. 1997. “북한의 배급제 위기와 시장개혁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연구 보고서. 1997.10.
- \_\_\_\_\_. 2001a.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역사비평사.
- \_\_\_\_\_. 2001b.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 김연철·신지호·동용승. 『남북경협 가이드 라인: 북한의 투자환경과 진출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 \_\_\_\_\_. 2002a. “북한의 탈냉전 발전 전략.” 창작과 비평사. 『창작과 비평』 2002년 봄호.
- \_\_\_\_\_. 2002b. “북한 경제관리 개혁의 성격과 전망.” 김연철·박순성 편. 『북한 경제개혁 연구』. 후마니타스.
- \_\_\_\_\_. 2002c. “북한 신경제 전략의 성공조건: 시장제도 형성과 탈냉전 발전 전략.”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제8권 4호 2002년 겨울. 통권 제22호.
- \_\_\_\_\_. 2003a. “새정부의 평화안보 정책: 적극적 평화, 호혜적 협력, 투명한 정책” 한겨레 신문사·참여 연대 토론회. 2003.1.29.
- \_\_\_\_\_. 2003b. “남북경제협력 10년의 평가: 투자 분야.” KOTRA 편.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남북경협 전략』 2003.5.
- 동용승·이정철. 2002. “북한 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2002.8.7.
- 류길재. 2001. “예외국가의 제도화: 군사국가화 경향과 군의 역할 확대.” 최완규 엮음.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예외국가의 공고화』. 한울 아카데미.
- 민주평통 사무처. 2002. “6.15 남북공동선언 2주년 성과와 향후과제.” 민주평통 정책연구자료 제32호. 2002.6.
- 박명식. 2002. “남북철도 연결현황.”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기술 및 정책 방향』 2002.4.
- 박석삼. 2002. “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의미와 향후 전망.” 한국은행 2002.8.22.
- 신지호. 2000. 『북한의 ‘개혁·개방’: 과거·현황·전망』. 한울 아카데미.
- 안병민. 2003. “동북아 지역의 교통망 구축 현황 및 협력 방안.” 통일정책 연구소.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위한 남북한 인프라 구축 방

- 안』 통일정책연구소 정책간담회 자료집. 2003.3.27.
- 연하청. “최근 북한의 경제개혁 현황과 전망.” 명지대 경제경영연구소. 『북한과 중국의 경제특구』. 세미나 발표문. 2002.10.21.
- 연합뉴스. 2002. 『2002 북한연감』.
- 와다 하루끼 지음. 2002. 『북조선:유격대 국가에서 정규군 국가로』 들베개.
- 윤덕룡·이형근. 2002. “북한의 물가인상 및 배급제 폐지의 의미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소. 2002.7.23.
- 이찬우. 2002. “북한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과 잠재적 투자분야.” ERINA 보고서. 2002.5.
- 장형수·박영곤. 2000.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 방안.” KIEP세계경제 제3권 5호. 2000.5.
- 전정환. 2000. “북한 외교의 변화 양상.” 『계간 외교』 제54호.
- 정성장. 2002. “김정일시대 북한과 유럽연합: 새로운 관계의 모색.” 세종정책연구 2002-14.
- 정우진. 2001. “에너지 산업의 대북한 진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1.10.
- 조동호. 2002. “계획경제 시스템의 정상화: 최근 북한 경제 조치의 분석 및 평가.” 한국개발연구원. 2002.7.30.
- 최진욱. 2001. “북한 선군정치에의 정치적 함의.” 『현대북한연구』 4권 2호.
- 철도청. 2002. “남북한 철도연결 사업 현황” 2002.10.
- 통일부. 2003. “참여정부의 평화번영 정책” 2003.3.
- 통일부. 2002. “남북 정상회담이후 북한변화 동향” 2002.6.17.
- 통일부. 2003. “국민의 정부 5년 평화와 협력의 실천”.
- 한국전력. 2000. “남북 전력분야 협력방안” 2000.10.
- 허문영. 2001. 『북한외교의 특징과 변화가능성』. 통일연구원.
- 오마이 뉴스.
- 연합뉴스.
- 중앙일보.

-외국자료-

- Brus Wlodzimierz. 1989. “Evolution of the Communist Economic System: Scope and Limits.” Victor Nee & David Stark, *Remaking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Socialism: China and Eastern Europe*.

-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 Chavance Bernard. 1994. *The Transformation of Communist System: Economic Reform Since the 1950s*. Boulder: Westview press.
- Darren Hawkins. 2001. "Democratization Theory and Nontransitions: Insights from Cuba." *Comparative Politics*. July.
- Kornai János. 1992.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Naughton Barry. 1995. *Gr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Cambridge and New York:Cambridge Univ. press.
- Nicholas R.Lardy. 1989. "Dilemmas in the Pattern of Resource Allocation in China, 1978-1985." Victor Nee & David Stark. *Remaking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Socialism in China and Eastern Europe*. California; Stanford Univ. Press.
- Noland Marcus. 1997. "Why North Korea Will Muddle Through." *Foreign Affairs*. Volume 76. No.4.
- Shirk Susa. 1993.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Berkeley:Univ. of California press.
- Task Force on U.S Korean Policy. 2003. "Turning Point in Korea: New Dangers and New Opportunities for the United States." 2003.2.
- White Gordon. 1993. *Riding the Tiger: The Politics of Economic Reform in Post-Mao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World Bank. 1996. "From Plan to Market: World Development Report 1996".
- 白石昌也. 1993. 『ベトナム: 革命と建設のはざま』. 東京:東京大學出版會.

-북한자료-

- 김정일. 2001.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 2001.10.
- 리기성. 1992.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1』. 평양:사회과학출판사.
- 노동신문
- 민주조선
- 조선신보
-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민족공조론과 대남전략

2003. 9

연구책임자 : 김 갑 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 요약 〉

### 1. 민족·민족주의 개념의 변화

북한에서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정의는 주체사상의 체계화,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 시기별로 변화해 왔다. 민족 개념 정의에 있어 1960년대까지는 스탈린적 정의에 따랐고 1970년대에는 이 정의에 혈통을 추가했으며 1980년대에는 연방제 통일방식의 제기와 더불어 북한식 민족 개념을 구축하였고 1990년대 이후에는 이를 보다 강화하면서 민족자주성을 부각하였다. 민족주의 개념 정의는 1970년대까지는 민족주의를 배격하면서 대신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주창하였으나 1980년대에는 부르조아 민족주의의 제한적 긍정성을 인정하더니 1990년대 이후에는 ‘참다운 민족주의’를 주장하기에 이른다.

### 2.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북한은 조국통일의 본질을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처음부터 조국통일의 본질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사고한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민족자주를 중심으로 조국통일 문제를 제기하였다. 민족대단결이 민족자주와 더불어 명실상부 조국통일의 두 축으로 올라선 것은 1980년대 이후이다. 스탈린주의적 민족개념에서 탈피하여 북한식 민족개념이 정식화되고 이에 따라 민족주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도입되면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대한 비중이 강화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민족자주가 통일문제 해결에 있어 근본이 되는 제1의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민족대단결은 민족자주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3. 우리 민족끼리와 민족공조

‘우리 민족끼리’는 2000년 남북공동선언에서 채택된 정당성에 기초해 북한이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을 결합하여 새로운 환경에 조응시킨 변형된 구호

다. 즉 6.15 남북공동선언 제1항의 ‘우리 민족끼리’와 ‘자주적 해결’은 별개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 두 개념을 통합해서 사실상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에 관한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 따라서 남북공동선언 이후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으로 등장한 우리 민족끼리는 민족대단결의 이념을 기본 축으로 삼으면서도 이 내용과 동시에 민족자주의 이념까지 포함하고 있다.

한편, 민족공조는 당면한 국내외적 환경에 의해 제출된 전술적 차원의 구호로서 민족대단결 실현의 방도다. 1993-4년 제1차 북핵위기 때 북미핵협상에 참여하지 못한 한국이 미국과 협의를 하면서 정책을 공동으로 조율한다는 의미에서 생긴 ‘한미공조’에 대응해, 2002년 10월 제2차 북핵위기 이후 북한이 공세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 민족공조다.

#### 4. 민족공조(적) 주장의 역사적 변천과정

시기별로 남북관계 관련 구호가 바뀌었듯이 북한의 남한에 대한 태도도 시기별로 변하였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에는 남한당국이 반통일의 길로 가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북공동선언 이후에는 남한당국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약해지는 대신 민족공조는 애국이고 외세공조는 매국이라며 민족공조를 강조하기 시작한다. 제2차 북핵위기가 본격화된 2002년 10월 이후에는 기존의 민족공조를 더욱더 강조하면서 급기야는 현 시기 한반도 대립구도가 남북 대 미국이라고까지 주장한다.

#### 5. 민족공조론의 전략적 목표, 실행방법, 우선적 조치

- (1) 전략적 목표: 총적 목표는 ‘핵억지력 보유의 정당화와 대외협상력 제고’이고, 구체적으로 ① 한미공조 배경, ② 남한정부 견인 및 남한내 통일운동세력과의 연대 강화, ③ 핵억지력 보유 정당성 제고 및 체제유지 등이다.
- (2) 실행방법: ① 민족공조 정당성 집중 홍보, ② 미국의 침략적 행태 비판 및 반미반전투쟁 촉구, ③ 남한내 반통일세력 집중 공격 등이다.
- (3) 우선조치: ① 남북관계 개선방향으로 제반 법률 수정 및 폐기, ② 남북



교류협력 차단장치 제거, ③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등이다.

## 6. 민족공조론의 정치적 함의와 대남전략

첫째, 1990년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북한은 주체역량의 전반적 약화 속에서 2002년 10월 이후 심화된 북핵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기존의 북한 對 미국이라는 대립구도를 북한 + 남한정부 + 남한의 통일운동세력 對 미국 + 소수의 반통일세력의 새로운 구도로 만들어 대외협상력을 제고하고자 민족공조론을 제기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한 압박에 의해 궁색한 처지에 놓인 북한이 남한내에서 성장한 민주세력, 통일세력을 적극 견인하고 특히 이들 세력의 지지로 출범한 노무현정권과의 대미 공동전선을 구축하려는 것을 이해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은 1990년부터 1999년까지 개최되었던 하층통전인 범민족대회 대신 2001년부터 하층통전을 상층통전과 연계시킨 8.15 민족대회에 계속 진행시키면서 민족공조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즉 북한은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국내외 정세 속에서 민족공조론을 주도적으로 제기해 1990년대부터 강화된 내적 측면에 의한 외적 측면의 촉발이라는 대남전략을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정부, 민간을 가리지 않고 민족공조를 강조하면서 남북교류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이라는 구호는 수십년간 사용되면서 그 용어가 식상해져 남한주민에 대한 설득력이 저하되었다. 제2차 북핵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민족공조라는 용어는 1993-4년 제1차 북핵위기시 사용되었던 한미공조라는 용어와 직접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남한으로 하여금 명확한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민족공조라는 용어를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제2항의 '우리 민족끼리'에서 그 연원을 찾음으로써 민족공조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당면한 북핵상황을 모면하고자 민족공조론을 제기했듯이 향후 북핵상황이 해결되고 새로운 위기상황이 도래할 경우 민족대단결, 우리 민족끼리의 유사용어를 계속 만들어내 현실과의 조응성을 높일 것이다.

셋째, 민족공조론 제기에 의해 기존 북한 통일전선론의 개념이 수정될 여지가 발견된다. 2002년 발간된 장석의 『김정일 장군 조국통일론 연구』에서는 민족공조가 실현방도인 민족대단결론과 민족통일전선론(주체의 통일전선

론)을 구분하여 전자는 단결의 주체가 남, 북, 해외의 모든 각계각층 민중이고 당국자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통일전선전략이 아닐 뿐 아니라 통일전선론이라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운동의 영도계급문제, 계급노선과 균중노선과의 결합문제 등이 민족대단결론에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족대단결론과 통일전선론을 구분한 장석의 의도는 통일전선에 대한 남한내 부정적 인식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장석의 견해는 북한의 공식적 입장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 스스로도 “앞으로의 토론과 연구를 위한 하나의 자료적인 시안”이라는 사족을 달고 있다. 어쨌든 북한은 민족공조론 공세를 강화하면서 통일전선론을 거부하는 남한내 정서를 고려하여 이에 대한 새로운 이론화를 시도하고 있다. 결국 민족공조론은 대남전략의 기본 축이었던 통일전선론에 균열을 가하고 있고 향후 보다 정치화된 이론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7. 우리의 정책적 대응방향

반핵과 한미공조를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피포위의식을 심화시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고, 반면 반전과 남북공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북한 핵보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구조를 해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반전과 반핵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남북공조와 한미공조를 조율해 나가야 한다. 냉전시대의 유물인 이분법적 논리를 깨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

또한 민족공조론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민족공조라는 주장은 그 의도와 명분에 상관없이 남남갈등을 증폭시키고 한미갈등을 야기하는 ‘북한식 용어’가 됨으로써 남한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하고 제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체적 정책결정과 의도를 반영하는 ‘남북협력’이라는 개념으로 돌아가자는 주장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 〈 목 차 〉

I. 문제제기 .....	101
II. 민족·민족주의 개념의 변화 .....	102
1. 민족 개념의 변화 .....	102
(1) 1960년대까지의 민족 개념 .....	103
(2) 1970년대의 민족 개념 .....	103
(3) 1980년대의 민족 개념 .....	104
(4) 1990년대 이후의 민족 개념 .....	105
2. 민족주의 개념의 변화 .....	107
(1) 1960~70년대 민족주의 개념 .....	107
(2) 1980년대 민족주의 개념 .....	107
(3) 1990년대 이후 민족주의 개념 .....	108
III. 민족공조론 분석 .....	110
1. 민족공조의 개념적 정의 .....	110
(1)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	110
(보론) 통일전선론과 민족대단결론 비교 .....	113
(2) 우리 민족끼리와 민족공조 .....	113
2. 민족공조(적) 주장의 역사적 변천과정 .....	117
(1)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의 민족공조 .....	117
(2)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의 민족공조 .....	118
(3) 2002년 10월 북핵문제 대두 이후의 민족공조 .....	120
3. 민족공조론과 대남전략 .....	122
(1) 민족공조론의 전략적 목표 .....	122
(2) 민족공조론의 실행방법 .....	124
(3) 민족공조를 위한 우선적 조치 .....	125
(4) 민족공조론의 정치적 함의와 대남전략 .....	126
IV. 우리의 정책적 대응방향 .....	129
※ 참고문헌 .....	131



## I. 문제제기

2002년 10월 17일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시인 사실을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발표함으로써 촉발된 북핵사태는 한반도 정세를 건잡을 수 없는 긴장국면으로 몰고 갔다.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단연 ‘민족공조’다.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 등 국제적 압박을 돌파하기 위해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 제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를 근거로 민족공조론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3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조국통일운동의 성패는 북남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어떻게 고수하고 구현해 나가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 민족공조를 실현하는 것은 통일로로의 지름길이다. 피줄도 하나, 언어도 하나, 문화도 하나, 력사도 하나인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민족공조는 당연한 리치이며 생존방식이다”고 주장한 이래 거의 모든 북한의 공식매체는 남북관계에 있어 민족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2001년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 부여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달성하자는 것, 민족자주 등에 두고 있으며, ‘민족공조’란 단어는 적시하고 있지 않으나 ‘동족공조’를 강조하였다. 물론 로동신문을 비롯한 공식매체에서는 민족공조란 단어를 사용하였다. 민족공조가 신년 공동사설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02년부터이다.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것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민족공조 주장은 예전부터 계속되어온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등의 연장선상에서 원론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런데 2002년 10월 켈리의 방북 이후 북핵문제가 불거지자 북한은 민족공조를 당면 북핵문제와 연관시켜 “현 시기 조선반도에서의 대결구도는 북과 남의 조선민족 대 미국”이라며 국제적 압박에 대처하고자 하였고 대북압박이 가시화되자 민족공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를 살펴보겠다.

첫째, 민족공조론에 대한 예비적 고찰로서 그의 내적 논리와 구조다. 민족공조론이 그 동안 북한이 주장해온 민족과 민족주의,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우리 민족끼리 등의 개념과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즉 이들 개념

과의 공통성 및 차별성이 무엇인지를 비교분석적 차원에서 밝히고 그 결과로서 민족공조론의 논리와 구조를 체계화시키겠다.

둘째, 민족공조론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과 이후, 2002년 10월 북핵문제 대두 이후 등 세 시기로 나누어 그 특징과 경향을 알아보겠다. 이후 민족공조론의 전략적 목표, 실행방법, 우선조치 등 민족공조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의 정치적 함의와 대남전략의 특성을 고찰하겠다.

셋째, 북한의 민족공조론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약간의 제언을 하겠다.

## II. 민족·민족주의 개념의 변화

북한에서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정의는 주체사상의 체계화,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 시기별로 변화해 왔다.<sup>1)</sup> 민족 개념 정의에 있어 1960년대까지는 스탈린적 정의에 따랐고 1970년대에는 이 정의에 혈통을 추가했으며 1980년대에는 연방제 통일방식의 제기와 더불어 북한식 민족 개념을 구축하였고 1990년대 이후에는 이를 보다 강화하면서 민족자주성을 부각하였다. 민족주의 개념 정의는 1970년대까지는 민족주의를 배격하면서 대신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주창하였으나 1980년대에는 부르조아 민족주의의 제한적 긍정성을 인정하더니 1990년대 이후에는 ‘참다운 민족주의’를 주장하기에 이른다. 북한의 민족주의는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들의 독자성을 강조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여기에 대외적 자주성의 측면에서도 국가건설 초기부터 상당한 자율성과 고유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내적 동력이었으며 사회주의가 붕괴한 이후에도 그들의 체제를 유지시켜 나가는 중요한 정치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sup>2)</sup>

### 1. 민족 개념의 변화

1) 정영철, “북한 민족주의의 전개와 그 특징: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4권 2호 (2001), 226쪽.

2) 찰스 암스토롱, “북한 문화의 형성: 1945-1950,” 『현대북한연구』, 제2권 1호 (1999), 148쪽.

## (1) 1960년대까지의 민족 개념

북한의 국가건설은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1960년대까지의 민족 개념 역시 언어, 영토, 경제생활, 심리상태의 공통성을 중요시한 스탈린적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본주의 민족과 사회주의 민족을 구분하는 동독식 민족 논리를 따르고 있고 민족이 근대로부터 형성되었으며 전 세계의 공산주의 실현과 함께 민족이 소멸될 것으로 바라보았다.

민족이란 언어, 영토, 경제생활, 심리상태(문화의 공통성에 의하여 표현되는)의 공통성에 의하여 오랜 역사를 거쳐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을 말한다. (이 네 개의 공통성 중 어느 하나가 빠져도 그것은 민족으로 되지 못한다.) …… 민족은 자본주의의 발생과 함께 나타난 역사적 산물이다. 민족에는 부르주아 민족과 사회주의 민족이 있다. 민족은 역사적 현상이므로 그 시초를 가질 뿐 아니라 종말도 가지고 있다. …… 전세계에서 공산주의가 실현되고 모든 민족들이 유일한 공산주의적 경제체제를 가지게 되면 점차 민족들의 합류가 실현될 수 있다.(1964년판 『대중정치용어사전』)

## (2) 1970년대의 민족 개념

수령중심의 유일적 지도체계가 수립된 1970년대는 북한식 민족 개념 형성에 있어 과도기다. 이때에는 스탈린적 민족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는 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민족 개념에 혈통을 추가하였고 언어의 공통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1960년대와 달리 민족의 형성이 근대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래 전에 국가의 형성과 함께 나타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민족은 언어, 지역, 경제, 생활문화와 심리 등에서 공통성을 가진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 …… 민족을 특징짓는 공통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언어의 공통성입니다. …… 우리 인민의 민족적 공통성은 우리나라에서 일찍부터 봉건적인 강력한 중앙집중적 통일적인 국가가 세워지고 이 틀 안에 언어, 지역, 문화의 공통성, 경제생활의 공통성이 점차로 이루어져 가는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되었다.(1970년판 『철학사전』)

민족은 언어, 지역, 경제생활, 혈통과 문화, 심리 등에서 공통성을 가진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 …… 민족을 특징짓는 요소로서 가장 중요

한 것은 하나는 언어의 공통성이다. 그것은 언어와 문자의 공통성에 의하여서만 경제생활과 문화와 심리의 공통성이 이룩되고 또한 그것이 공고한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1973년판 『정치사전』)

### (3) 1980년대의 민족 개념

1980년대 들어 북한은 맑스주의적 민족 개념을 비판<sup>3)</sup>하면서 혈통과 언어를 중요시하고 경제생활과 심리상태를 제외시킨 북한식 민족 개념을 정식화한다. 이는 민족 개념을 통일문제, 한반도문제로 확장시킨 것으로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제안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연방제는 1민족, 1국가, 2사상, 2체도로 동독의 2민족, 2국가, 2체제와는 다른 것으로서, 1민족, 1국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생활보다는 혈통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동독의 자본주의 민족, 사회주의 민족 등 민족구분론을 비판하는 것이고 계급보다 민족이 우선이라는 논리로 연결된다.

민족이란 핏줄과 언어, 령토와 문화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생활 단위이며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 씨족공동체가 해체된 다음 사람들이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장구한 역사적인 투쟁과정에서 핏줄과 언어, 령토와 문화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결합되면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민족은 사회적 요인의 작용에 의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이다.(1985년판 『철학사전』)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민족에 관한 종래의 개념을 전면적으로 해부하시고 주체의 방법론에 적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으로 결합되게 하는 공통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피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피줄과 언어의 공통성이라는 것을 천명하심으로써 민족에 관한 주체적인 학설의 본 내용을 더욱 뚜렷이 밝혀주시었다.<sup>4)</sup>

3) “맑스주의에서는 경제생활의 공통성을 기본으로 하고 령토와 언어, 문화, 심리생활의 공통성을 민족의 징표로 보았다. …… 구라파에서(는) 자본주의적 관계가 발생하면서 지역적 폐쇄성과 대립성이 극복되고 언어, 문화, 심리생활의 공통성이 형성되고 인간들의 공고한 생활단위, 사회적 집단으로서의 민족이 형성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반만년 역사를 한 피줄과 한 언어와 문화를 가꾸면서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자주적인 민족의식이 뿌리깊고 하나의 민족임을 자각하여 뭉치고 협력하는 단결력이 강하고 슬기롭고 용감하기 류례가 없는 민족인 것이다.”(“계급과 민족,” 1989년 발간한 『주체철학원론』) 국가안전기획부, 『북한의 「민족주의」 선전자료집』 (1995).

4) 리규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민족의 개념에 대한 리해,” 『사회과학』, 제2호 (1986), 6쪽.



민족문제의 해결은 계급해방이나 인간해방 문제의 해결에 앞서야 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민족이 있고서야 혁명과 건설도 있을 수 있고 사상과 리념도 있을 수 있으며 민족을 떠나서는 그것이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족주의를 하든 공산주의를 하든 그 어떤 사상과 리념을 신봉하든지 간에 무엇보다 먼저 민족을 찾아야 하며, 나라의 자주성을 지켜야 합니다.<sup>5)</sup>

#### (4) 1990년대 이후의 민족 개념

1990년대 민족 개념은 기본적으로 1980년대 연장선상에 있다. 먼저 연방제 통일방안과 연관시켜 민족 자주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주체사상의 자주성 원칙을 민족 단위로까지 확장하였다.

가장 포괄적인 사회집단은 나라와 민족입니다. 나라와 민족은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결합체이며 운명공동체입니다. 혁명과 건설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실현되어 나갑니다. 인민대중은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는 자기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해 나갈 수 없습니다. 주체사상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것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요구로 내세웁니다.<sup>6)</sup>

서로 다른 사상과 사회제도로 나뉘어지든, 동일한 사상과 사회제도로 합쳐지든 그에는 상관없이 민족은 어디까지나 하나이며 전적으로 외적 요인에 의하여 일시 갈라졌던 민족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성이나 그 동일성에는 관계없이 하나로 재결합되는 것은 민족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한 합법칙적 요구로 된다. …… 한 민족, 두 제도의 통일방안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바로 민족의 형성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에 관한 이러한 주체적인 리론에 기초하고 있는 방안이며 그것을 분열된 민족의 재결합 문제를 해결하는데 창조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방안이다.<sup>7)</sup>

다음으로 계급, 계층문제에 대한 민족문제 우선의 원칙을 보다 강조하면서 “민족은 오늘날에 있어서 사회생활의 기본단위로 될 뿐 아니라 미래 공산주의 사회에 가서도 사회생활의 기본단위로 존재하게 되는 것”<sup>8)</sup>이라며 민족소

5)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김중린의 보고, 『로동신문』, 1980년 10월 14일자.

6)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1991) 『김정일 선집』, 1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47쪽.

7) 강승춘, “민족문제해결의 독창적인 길,” 『철학연구』, 제4호 (1990).

멸론 대신 민족영원론을 제시하며 민족의 始終문제를 정리하였다.

민족은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여온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며 사회생활 단위입니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운명을 개척하여 왔습니다. 자주성은 사람의 생명인 동시에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 개별적 계급, 계층의 사상과 리념을 옹호하고 리익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족공동의 위업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계급과 계층은 민족의 부분인 것만큼 어떤 계급과 계층도 민족공동의 리익을 떠나서는 자기의 리익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민족이 있고서야 계급이 있을 수 있으며 민족의 리익이 보장되어야 계급의 리익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sup>9)</sup>

주체의 민족론은 민족이라는 존재를 자본주의 민족과 사회주의 민족으로 갈라놓은 것은 민족을 사상과 리념, 사회체제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리해되는 리론적 혼란을 가져오게 한다는데 대해 명백히 밝히었다. 그리고 민족은 사멸되는 것이 아니라 불변적인 존재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었다. …… 민족내부에 여러 계급과 계층이 있을 수 있지만 민족이 있고서야 계급이 있을 수 있으며 민족의 리익이 보장되어야 계급의 리익도 보장될 수 있다. …… 사회주의가 점차로 더욱 발전하게 되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도 점차 줄어들게 되거나 종국적으로는 없어지게 된다. 말하자면 무계급사회가 실현되게 된다. 이것은 계급의 시간적 유한성을 말해 준다. 그러나 민족은 계급이 없어진 다음에도 그대로 존재하게 된다. 민족이 면면히 이어오는 혈통은 대를 이어 그대로 존속하게 되며 민족집단은 자기의 고유한 민족어를 사용하면서 살아 나가게 된다. …… 민족은 영원하지만 계급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리해로부터 민족을 중시하고 민족을 계급보다 우위에 놓아야 할 필연적 요구가 제기되는 것이다.<sup>10)</sup>

한편, 북한은 1990년대 중반에 들어 “지금 해외동포들은 조선민족을 김일성민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조선민족의 자존심을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더욱 잘하여야 합니다.”<sup>11)</sup> 등의 직간접적 형식으로 ‘김일성민족’을 가끔 사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민족제일주의에서 주장한 수령의 지도를 받는 민족으로서 북한 ‘민족’을 우월한 지위에 올려놓은

8) 리순덕, “민족의 본질에 대한 주체적 리해,” 『철학연구』, 3호 (1995), 42쪽.

9) 김일성, “우리 민족의 대단결의 이룩하자”(1991) 『김일성 저작집』, 4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168쪽, 178-179쪽.

10) 김혜연, 『민족, 민족주의론의 주체적 전개』 (평양: 평양출판사, 2002), 70-77쪽.

11)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1994) 『김정일 선집』, 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425쪽.

것과 관련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북한의 민족주의가 전한반도 차원으로 민족주의로서의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자칫 초체제적인 ‘우리 민족’과 위대한 수령의 지도를 받는 우월한 ‘북한 민족’의 긴장관계를 가질 수 있다.<sup>12)</sup>

## 2. 민족주의 개념의 변화

### (1) 1960-70년대 민족주의 개념

1970년대까지의 민족주의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민족주의 자체를 부르조아 민족주의로 폄하하면서 이를 부르조아의 계급적 이익을 전민족적 이익으로 가장하고 다른 민족을 멸시하는 배타주의로 간주, 배격하였다. 대신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sup>13)</sup>이라고 표현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강조하였다.

우리의 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입니다. 우리는 온갖 부르조아민족주의와 배타주의를 배격합니다. 민족주의는 인민들간의 친선관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자기 나라자체의 민족적 이익과 근로대중의 계급적 이익에도 배치됩니다.<sup>14)</sup>

민족주의는 계급적 이익을 전민족적 이익으로 가장하고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내세우면서 다른 민족을 멸시하고 증오하며 민족들 사이의 불화와 적대를 입삼는 부르조아 사상 …… 민족주의는 언제나 부르조아적 성격을 띤다.(1973년판 『정치사전』)

### (2) 1980년대 민족주의 개념

북한식 민족 개념이 정식화된 1980년대의 민족주의 개념에서는 식민지 국가에서 부르조아 민족주의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1986년 김정일이 우리민족제일주의를 주창하면서 민족애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사회주의는 계급적 위업인 동시에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위업”<sup>15)</sup>, “우리민

12)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196-203쪽.

13) 최성욱, 『우리당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6), 25쪽.

14) 김일성,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단계,”(1957) 『김일성 저작집』, 1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410쪽.

족제일주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투철한 민족자주정신 …… 민족제일주의 정신은 민족의식 발전의 최고형태”<sup>16)</sup>라며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등치시켰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는 민족주의자가 될 수 없다’는 김정일의 말처럼 아직까지는 민족주의에 대한 전면적 동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민족적 리익을 내세우면서 자기 민족내의 부르조아지의 리해관계를 합리화하는 사상. 식민지 예속국가 민족 부르조아지의 반제적 측면이 인민대중의 반제민족해방투쟁과 결합할 때 그것은 일정하게 진보적 역할을 하게 된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족주의자들의 계급적 제한성과 동요성을 고려해야 한다.(1985년판 『철학사전』)

우리 인민이 지닌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바로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시고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이다.<sup>17)</sup>

세계혁명 앞에 우리 당과 인민이 지닌 첫째가는 임무는 혁명의 민족적 임무인 조선혁명을 잘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 혁명에 충실하자면 무엇보다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합니다. ……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로 될 수는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참다운 애국주의자인 동시에 참다운 국제주의자입니다.<sup>18)</sup>

### (3) 1990년대 이후 민족주의 개념

북한은 1990년대 부르조아 민족주의와 ‘참다운 민족주의’를 구분하여 민족주의의 긍정성뿐만 아니라 그 발생의 진보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민족주의가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자주적인 목적과 지향이라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고 그 기초에는 애국심이라는 최대공약수가 전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애국애족은 공산주의를 참다운 민족주의와 연결시켜 주는 대동맥이고 참다

15)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1997) 『김정일 선집』,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310쪽.

16) 고영환, 『조선민족제일주의론』 (평양: 평양출판사, 1989), 67쪽.

17) 김영진,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것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결정적 담보,” 『철학연구』, 1호 (1992).

18) 김정일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1986) 『김정일 선집』, 제 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444쪽.

은 민족주의를 연공의 길로 이끌어 주는 원동력이라며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를 접목시킨다.<sup>19)</sup> 이러한 민족주의 개념의 변화는 급기야 김일성이 자신은 민족주의자라고까지 주장하게 만든다.

민족주의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하여 온 민족이 단결하여 투쟁할 데 관한 사상이다. …… 민족 공동의 리익을 반영한 사상, 자기 조국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의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는 민족성원들의 공통적인 사상감정이 바로 민족주의이다. 그러므로 민족주의는 원래가 인류 역사발전과 인민대중의 자주성 실현에 이바지하는 진보적인 사상으로 출현하였다. …… 부르조야민족주의는 민족 공동의 리익을 희생시켜 자본가계급의 협애한 계급적 리익을 추구하는 반민족이며 반인민적인 사상이다. 그것은 진정으로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참다운 민족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배치된다.<sup>20)</sup>

원래 민족주의는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진보적인 사상으로서 발생하였습니다. 신흥부르조야들이 민족주의 기치를 들고 민족운동의 선두에 섰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민족주의가 처음부터 자본가계급의 사상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부르조야민족운동시기에는 인민대중의 리익과 신흥부르조야지의 리익이 기본적으로 일치하였으며 따라서 민족주의는 민족공동의 리익을 반영하였습니다. 그후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부르조야지가 반동적 지배계급으로 되면서 민족주의는 자본가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사상적 도구로 되었습니다. 부르조야민족주의는 진정으로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참다운 민족주의와는 배치되는 사상입니다. …… 단일 민족국가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진정한 민족주의는 곧 애국주의로 됩니다. …… 이런 의미에서 나는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이고 국제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sup>21)</sup>

한편, 1990년대 민족주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1993-4년에 고조선 단군왕릉(1993.10), 고구려 동명왕릉(1993.5), 고려 왕건릉(1994.1)을 발굴·재건하면서 “평양은 인류 발상지의 하나이며 우리 민족사에서 첫 계급국가가 성립하여 번성한 고대문명의 시원지인 동시에 대대로 도읍지로 번영하여온 조선민족문화발전의 중심지”<sup>22)</sup>라며 평양중심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주장하였다. 즉 “우리나라 민족사는 고구려, 고려 등 평양중시정책을 높이 내

19) 김혜연, 위의 책, 235쪽.

20) 강승춘, “주체적 민족관,” 『철학연구』, 제4호 (1991), 7쪽.

21) 김일성,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1991) 『김일성 저작집』, 4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168-169쪽.

22) 강현수, “민족의 성지 평양을 력사의 도시로 더욱 훌륭히 가꾸겠다,” 『로동신문』, 1993년 12월 10일자.

세운 나라들에 의해서 통일운동이 힘있게 추진되었으며 그 과정에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조선민족의 통일국가가 이루어지고 민족적 존엄을 빛내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sup>23)</sup>다며 통일국가의 중심이 평양이라는 것을 과거 민족유산을 근거로 그 정당성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은 조선민족제일주의와도 연관이 있는데, 민족문화를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적 발전과 관련된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사고한 것이다.<sup>24)</sup> 결국 북한은 단군릉 발굴로 혈연적 공통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문화적·언어적 공통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1990년대 이후 한반도통일의 중심이 평양이라는 것과 ‘북한 민족’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이다.

단군이 고조선의 시초로 확인되고 단군조선이 민족사상 첫 국가로 인정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통이 고조선에서 시작되어 고구려를 비롯한 세 나라와 발해, 고려로 련련히 계승되었으며 민족의 정통이 계승되는데 따라 고조선의 출현과 함께 처음으로 형성된 민족성이 더욱더 공고하게 다져졌다는 것이 뚜렷이 입증되었다. 민족의 정통이 형성되고 그것이 계승발전되는 데서 중심은 변함없이 평양일대였다.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의 성지였던 평양은 오늘 우리 혁명의 성지, 주체조국의 수도로서의 그 위용을 세상에 자랑떨치고 있다. 또한 평양은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불행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의 희망봉으로 되고 있다.<sup>25)</sup>

<표1> 민족·민족주의 개념의 변화

### III. 민족공조론 분석

#### 1. 민족공조의 개념적 정의

##### (1)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23) 현명오, “첫 문명국가인 고조선의 수도 단군의 도읍지는 바로 평양이었다.”(1993.10 북한문제조사연구소 발간 「북한의 단군릉 발굴 관련자료」)

24) 북한은 1993년 12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9기 6차 전원회의에서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결정을 채택한 바 있다.

25) 장우진, 「조선민족의 발상지 평양」(평양: 평양출판사, 2000), 173쪽.

시기	민족	민족주의
60년대 까지	<p style="text-align: center;">&lt;스탈린적 정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어, 영토, 경제생활, 심리상태</li> <li>○자본주의 민족과 사회주의 민족 구분</li> <li>○민족 근대형성론</li> <li>○민족 소멸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족주의 배경</li> <li>○사회주의적 애국주의</li> </ul>
70년대	<p style="text-align: center;">&lt;스탈린적 정의와 북한식 정의 절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어, 지역, 경제생활, 혈통과 문화, 심리</li> <li>○혈통 추가, 언어 강조</li> <li>○국가의 형성과 함께 민족 형성</li> </ul>	○上同
80년대	<p style="text-align: center;">&lt;독자개념 구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줄, 언어, 지역, 문화</li> <li>○피줄과 언어 강조</li> <li>○심리상태와 경제생활 제외</li> <li>○연방제 통일방식과 연관성 부각</li> <li>○민족문제 해결의 선차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르조아 민족주의의 반제적 측면 인정</li> <li>○우리민족제일주의,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등치</li> <li>○민족주의자 반대</li> </ul>
90년대 이후	<p style="text-align: center;">&lt;민족자주성론&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방제 통일방식 강화</li> <li>○민족문제 해결의 선차성 강화</li> <li>○김일성민족 거론</li> <li>○민족 소멸론 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다운 민족주의</li> <li>○민족사적 정통성 주창, 문화와 역사 강조</li> </ul>

북한은 조국통일의 본질을 ①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전 한반도 차원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②남과 북 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전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 즉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sup>26)</sup>

그러나 북한이 처음부터 조국통일의 본질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사고한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민족자주를 중심으로 조국통일을 바라보았다. 북한은 1960년에 조국통일의 본질로 자주, 민주, 평화의 실현<sup>27)</sup>을 들었고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도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 장애물인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그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현 군사파쇼독재를 뒤집어엎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여야 합니다.”<sup>28)</sup>며 민족자주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그러다가 1972년 7.4 공동성명에 의해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이 동시에 주장되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이 같이 이야기되었으나 월남전, 북한의 상

26)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1980) 『김일성 저작집』, 3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345-346쪽.

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8차 회의에서 남조선 국회 및 제 정당, 사회단체들과 인민들에게 보낸 편지(1960.11.20).

28)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1970) 『김일성 저작집』, 2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314쪽.

대적 우위 등으로 인해 초점은 민족자주에 있었다.

민족대단결이 민족자주와 더불어 명실상부 조국통일의 두 축으로 올라선 것은 1980년대 이후이다. 스탈린주의적 민족개념에서 탈피하여 북한식 민족개념이 정식화되고 이에 따라 민족주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도입되면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대한 비중이 강화된 것이다. 이에 는 북한 국력의 상대적 약화,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1민족, 1국가 연방제 통일방안의 도입 등도 기여하였다. 이후 1990년대 들어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1993년 4월 6일), “온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1998년 4월 1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1997년 8월 4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1997년 6월 19일) 등 민족대단결에 관한 김일성, 김정일의 논문들이 계속해서 발표되었다.

일반적으로 민족자주 원칙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 조국통일 문제해결의 출발점, 조선민족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것이고, 민족대단결 원칙은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전민족을 하나로 굳게 뭉치게 하는 행동지침이다. 하지만 조국통일의 본질에 있어 민족대단결 원칙이 1980년대 이후 크게 부상하였다 해서 민족자주 원칙과의 관계가 전도된 것은 아니다. 북한은 민족자주가 통일문제 해결에 있어 근본이 되는 제1의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민족대단결은 민족자주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한반도 통일문제는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따라서 민족자주의 원칙은 민족문제 해결의 핵이고 전민족대단결의 기초라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위해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고 민족적 단합을 도모하는 두 측면을 떠나서 통일개념을 옳게 규정할 수 없으며 …… 이 두 측면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어 있으며 여기서 기본을 이루는 것은 민족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문제이다. 외세가 우리 조국을 강제로 분렬시켜 놓고 랭전이데올로기를 끌어 들여 동족간의 불신과 대결관계를 조성, 증폭시켜 온 상황하에서 반외세자주화를 실현함이 없이는 남북의 단합을 이루어낼 수 없다. 한편 민족의 화해와 단합은 반외세자주화에 작용을 한다. 리념과 체제가 다르다는 리유로 동족을 불신, 증오하며 이데올로



기가 같다는 명분으로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수용하는 한에 있어서는 민족의 자주권 확립이라는 통일의 기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sup>29)</sup>

#### (보론) 통일전선론과 민족대단결론 비교

북한이 이해하는 통일전선 문제는 대중을 전취하며 변혁운동역량의 결정적 우세를 보장하기 위한 역량편성에서 나서는 노동자계급의 당의 중요한 전략전술 문제의 하나이다. 즉 통일전선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역사적 조건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계급, 계층과 정당, 단체들이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정치적 연합이다. 특히 제국주의에 의하여 식민지로 된 나라, 분단된 나라에서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족해방투쟁과 통일운동의 전 과정에 관철되면서 형성, 발전하게 되는 민족통일전선은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전개되는 전략적 통일전선이다. 따라서 민족통일전선론은 주체의 통일전선론의 하나이다.

반면,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민족대단결론을 단결의 주체가 남, 북, 해외의 모든 각계각층 민중임은 물론이고 여기에 당국자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통일전선전략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 즉 통일전선론에서 중요한 이론적 골격을 이루고 있는 운동의 영도계급문제, 계급노선과 균중노선의 결합문제 등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은 민족대단결이 전 민족에 대한 애국애족의 광폭정치이며 민족공조는 민족대단결 실현의 방도라고 주장하고 있다.<sup>30)</sup>

#### <표2> 주체의 통일전선론, 민족통일전선론, 민족대단결론 비교

<자료> 장석, 위의 책, 305-328쪽.

#### (2) 우리 민족끼리와 민족공조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북남공동선언이 마련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통일문제 해결의 주인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나라의 통

29) 장석, 『김정일 장군 조국통일론 연구』(평양: 평양출판사, 2002), 9-10쪽.

30) 앞의 책, 306쪽.

	주체의 통일전선론	민족통일전선론	민족대단결론
본질	민중·민족의 자주성과 민중·민족의 이익에 대한 공통적 지향에 기초해 형성되는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정치적 연합	진국적 범위에서 광범한 민족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남과 북의 모든 통일애국역량을 조국통일의 기치 밑에 하나로 굳게 결집한다는 것	민족자주성을 옹호, 실현하기 위해 사상·이념·정견·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와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계급·계층이 민족공동의 요구와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단합하는 것
특징	①노동자계급이 각계각층 대중을 최대한으로 전취해서 노동자계급의 전위당, 전위조직의 사회정치적 기반을 확대, 강화, ②변혁의 반대세력을 철저히 고립, 약화시키고 강력한 변혁운동역량을 형성	①주체의 통일전선론의 한 부분, ②최근에 남, 북, 해외 등 3자로 확대	①단결의 주체는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계급, 계층, ②민족대단결론은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통일전선전략'이 아님. 단결의 주체가 남, 북, 해외의 모든 각계각층 민중임은 물론이고 여기에 당국자들도 포함되기 때문
기본방향 및 목적	①통일전선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영도를 확고히 보장, ②노동동맹 강화, ③변혁운동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급, 계층들을 단결시키고 운동의 주인, 담당자로 만들	조국통일 달성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것, 즉 조국통일을 달성하는 것
원칙	<원리> 계급노선과 대중노선을 올바르게 결합 ①통일전선 안에서 노동자계급의 당의 독자성과 주도적 역할을 보장, ②하층통일전선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에 기초해 상층통일전선을 실현, ③통일전선안에서 단결과 투쟁을 강화	<기본원칙> 민족대단결의 원칙 ①남, 북, 해외 3자는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 민족적 이념을 앞세우고 민족공동의 위업에 모든 문제를 북중, ②상호 상대방을 존중, 신뢰하는 입장에 서야 하며 차이점은 뒤로 밀고 공통점을 찾기 위해 노력, ③남한에서 반공반북대결정책을 인공연북화해정책으로 전환	①민족자주의 원칙은 민족대단결의 근본원칙, ②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 아래 단결, ③과거불문의 원칙과 신의의 원칙, ④차이점을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찾아 단결하며 차이를 인정하고 더 큰 하나가 되는 것
유형과 형태	①국내통일전선(자본주의국가에서의 인민전선운동, 식민지예속국가에서의 민족통일전선운동), ②국제통일전선(각국공산주의자들의 반제공동행동, 제국주의의 침략을 당하는 나라와 인민들의 반제통일전선) 등	①남북 제 정당, 사회단체, 각계각층 민중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정치협상회의, ②대민족회의, 범민족연합과 같은 전 사회적이고 전 민족적인 연합체 등	<과제 및 방도> ①남한당국이 반공반북대결정책을 인공연북화해정책으로 전환, ②외세와의 공조를 그만두고 민족공조를 실현하는 것, ③민족반역자, 분열주의자와 투쟁, ④남북, 해외의 전 민족이 서로 왕래하고 대화를 발전시키며 연대연합을 실현
기타	1930년대 김일성 중심의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	남한의 반동적 보수세력에 속하는 사람들 가운데 통일을 지향하는 양심적인 사람 포함	①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주체역량을 강화하는 사상이론이며 전략, ②통일전선론에서 중요한 이론적 골격을 이루고 있는 운동의 영도계급문제,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의 결합문제 등을 설정하지 않음

일을 이룩해 나갈 수 있는 지침을 가지게 되었다.”며 남북공동선언의 핵은 첫 조항에 담겨진 민족자주정신이라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 시기 조국통일 위업에서 나서는 문제는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것인데, 그 이행의 잣대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즉 ‘민족자주’라는 것이다.<sup>31)</sup> 그리고 해마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2001년),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2002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2003년) 등의 구호를 제시하며 남북공동선언의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이행하고자 주장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이 북한의 전통적 조국통일의 원칙이라면, 우리 민족끼리는 2000년 남북공동선언에서 채택된 정당성에 기초해 북한이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을 결합하여 새로운 환경에 조응시킨 변형된 구호다. 즉 6.15 남북공동선언 제1항의 ‘우리 민족끼리’와 ‘자주적 해결’은 별개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 두 개념을 통합해서 사실상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에 관한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 따라서 남북공동선언 이후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으로 등장한 우리 민족끼리는 민족대단결의 이념을 기본 축으로 삼으면서도 이 내용과 동시에 민족자주의 이념까지 포함하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해 나간다는 것은 바로 조국통일의 담당자, 그 주체가 우리 민족이며 우리 민족의 힘에 의해서만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끊어진 분단의 혈맥을 잇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조국통일위업 실현에 외세가 개입될 수 없고 철저히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는 것을 근본원칙으로 하는 것이다.<sup>32)</sup>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우리 민족끼리) 등이 전략적 차원에서 제기된 구호들이라면 민족공조는 당면한 국내외적 환경에 의해 제출된 전술적 차원의 구호로서, 민족대단결 실현의 방도다. 1993-4년 제1차 북핵위기 시 북미핵협상에 참여하지 못한 한국이 미국과 협의를 하면서 정책을 공동으로 조율한다는 의미에서 생긴 ‘한미공조’에 대응해, 2002년 10월 제2차 북핵위기

---

31)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6.15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이행해 나가는 것 …… 6.15 북남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밝힘으로써 나라의 통일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민족공동의 강령으로 이정표로 되고 있습니다. ……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이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민족의 사활적 운명이 걸려있는 조국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핵심적인 문제로 나섭니다.”

32) 심병철, 『조국통일문제 100문 100답』 (평양: 평양출판사, 2003), 173쪽.

이후 북한이 공세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 민족공조다. 민족공조가 신년 공동사설에 처음으로 등장한 해는 2002년이나 2001년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동족공조'라는 표현은 나온다. 특히 2002년 10월 켈리 방북 이후 핵시인 사태와 관련하여 북한은 민족공조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핏줄도 하나, 언어도 하나, 역사도 하나, 문화도 하나인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민족공조야말로 당연한 이치이고 생존방식이며 남북관계와 자주통일의 근본원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민족공조를 실현하기 위해 외세의 공조를 배격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하며 국내외의 분열주의 세력의 책동을 남과 북이 힘을 합쳐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이 절박한 민족적 과제로 나서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온 민족은 민족공조로 미국의 대조선 침략정책을 분쇄해야 한다며 현 시기 한반도의 대결구도는 남과 북의 조선 민족 대 미국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핵 억지력 보유를 정당화하고 북한이 핵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인 남한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남한에 민족공조를 내세우면서 한미공조와 민족공조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의 주제어 분석을 통해 본 민족자주, 우리 민족끼리, 민족공조에 대한 주장 빈도는 2000년 남북공동선언 이전에는 당연히 우리 민족끼리와 민족공조란 단어가 없고 민족자주 단어만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공동선언 채택 이후부터 2002년 제2차 북핵위기까지는 민족자주와 우리 민족끼리 단어가 각각 월 14회 등장하였으며 제2차 북핵위기부터는 우리 민족끼리(월 25회)가 민족자주(월 16회)를 능가하고 있다. 민족공조 단어도 제2차 북핵위기 이후에는 이전보다 10배 이상 급격히 강조되고 있다. 이 세 단어는 공통적으로 제2차 북핵위기부터는 이전보다 더 많이 주장되고 있다.

### <표3> 조선중앙통신 주제어 검색 결과 (98.1 - 0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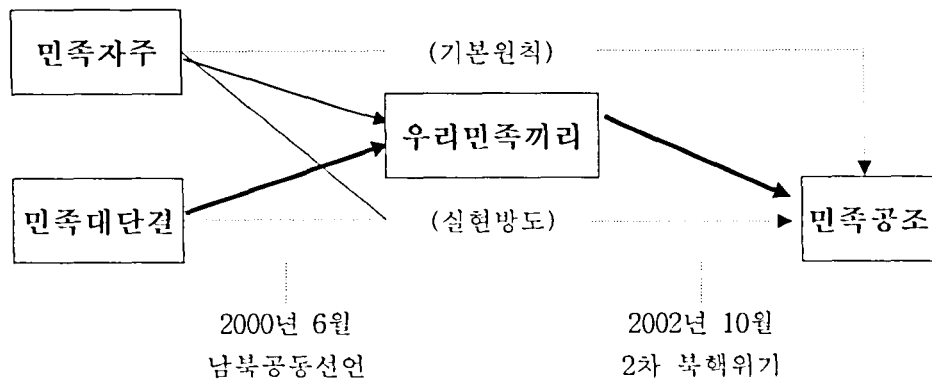
※ 민족공조 단어는 2001년 1월 4일부터 등장

※ 2000년 이전에는 기사를 많이 수록하지 않았을 것임

<자료> <http://www.kida.re.kr/anbo>

/ 中 조선중앙통신 검색

	98.1.1 - 00.6.11 (30개월)	00.6.13 - 02.9.30 (27개월)	02.10.1 - 03.8.30 (11개월)	계
민족자주	209 (월당 7회)	387 (월당 14회)	181 (월당 16회)	777
우리민족끼리		376 (월당 14회)	271 (월당 25회)	647
민족공조		37 (월당 1회)	121 (월당 11회)	158



<그림1> 시기별 주요 대남구호 변화도

## 2. 민족공조(적) 주장의 역사적 변천과정

시기별로 남북관계 관련 구호가 바뀌었듯이 북한의 남한에 대한 태도도 시기별로 변화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에는 남한당국이 반통일의 길로 가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북공동선언 이후에는 남한당국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약해지는 대신 민족공조는 애국이고 외세공조는 매국이라며 민족공조를 강조하기 시작한다. 제2차 북핵위기가 있는 2002년 10월 이후에는 기존의 민족공조를 더욱더 강조하면서 급기야는 현 시기 한반도 대립구도가 남북 대 미국이라고까지 주장한다.

### (1)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의 민족공조

이 시기 북한의 대남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하층통전에 기반해 있고 남한 당국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북한은 1990년에 1차 범민족대회를 개최한

이래 1999년까지 총 10회의 범민족대회를 열면서 남한정권의 ‘동족 적대시 정책’과 ‘반북대결책동’을 비판하고 반미자주화 확산에 매진하였다. 또한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도 극력 저항하면서 남한정권을 ‘괴뢰’, 햇별정책을 ‘괴뢰의 사주책’이라고까지 비판하고 DJ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였다. 특히 남북공동선언의 기초가 되었던 2000년 3월 DJ의 베를린선언에 대해서도 혹평을 가했다. 따라서 남한당국과 정당들은 사대와 외세의존과 결별한 용단을 내려 반북대결정책을 연북화해정책으로 바꾸고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 시대의 흐름과 민족의 념원에 도전하여 반통일의 길로 나가는 현 남조선통치배들의 책동을 천추에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낙인하였다. 남조선통치배들은 민족의 통일 열망과 지향에 배치되게 동족을 적대시하면서 계속 반북대결전쟁의 길로 나가고 있다.(로동신문, 1999.1.11)
- 괴뢰들의 <해별정책>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그 반동적 본질이 드러나 내외여론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면치 못했으며 결국 빛도 보지 못하고 묵사발이 되고 말았다. …… 괴뢰들은 이처럼 상전의 압력도 있는 조건에서 이 기회에 <해별정책>을 미국의 본을 따서 <포용정책>으로 간판을 바꿈으로써 상전의 비위도 맞추고 <대북공조>도 이루어보려 하고 있는 것이다.(로동신문, 1999.1.16)
- 남조선당국자들이 년초부터 북침전쟁소동을 일구며 겨레의 통일운동에 도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통일의지는 꼬물만큼도 없고 오직 외세와 야합하여 공화국을 해칠 흥심만이 짝 차있다는 명백한 증거(로동신문, 1999.1.19)
- 남조선집권자는 겨레의 불같은 통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반북대결정책, 북침전쟁정책을 걷어치워야 하며 이제라도 련북화해에로 정책을 전환하여야 한다.(로동신문, 1999.8.17)
-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우리를 걸고 자기 임기 중에는 <통일이 되지 않을 것>이라느니, 북의 <전쟁도발을 방지>할 것이라느니 하는 반통일적이고 반북대결적인 망발을 늘어놓았다.(조평통, 1999.2.19)
- 최근 남조선집권자가 해외에 나가 북남관계와 관련하여 그 무슨 <연설>이라는 것을 하고 (베를린)<선언>이라는 것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공화국에 대한 심히 자극적인 말들이 있는가 하면, <폐쇄>니, <고립>이니, <야망>이니 하는 극히 모독적인 소리들까지 들어있다.(로동신문, 2000.3.15)

## (2)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의 민족공조

이 시기에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가운데 남북공동선

언에 대한 남남갈등, 9.11테러와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공격, 주적 논란, 북핵문제와 미국의 대북압박, 서해교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16대 대선 등에 의해 남북관계가 요동치고 있었다.

이에 북한은 해마다 ‘우리 민족끼리’ 관련 구호를 채택하면서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민족공조로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해나가자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즉 지금은 미국 강경보수세력의 무분별한 ‘반북, 반통일침략책동’으로 진전되던 남북관계가 엄중한 난관에 직면했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며,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이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과정을 차단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확고한 민족공조를 실현하고 연대·연합하여 그것을 저지 파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기 민족공조에 대한 기본시각은 ‘민족공조는 애국이고 외세공조는 매국’이라는 표현에 집약되어 있다. 따라서 외세의 눈치를 보며 외세의 간섭에 굴종하는 것은 제 정신을 잃은 행동이고 남북관계에 문제가 발생한 것도 남한의 외세공조 때문이라며 남한을 압박하였다. 특히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2002년 6월 13일 남북공동선언 2주기를 맞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죄행’이라는 장문의 고발장을 제출, 12월 대선을 겨냥하여 남한내 ‘반통일세력’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이전 시기의 범민족대회 대신 보수와 진보, 그리고 정부측을 다 포괄하는 8.15민족대회가 2001년부터 열리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대남정책이 기존의 하층통전 중심에서 상층통전까지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다.

- (한나라당) 그들은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일정에 오른 첫날부터 <시기상조>니, 북의 <통일전선전술>에 말려 드는 것이니 하면서 반기를 들었으며 6.15공동선언이 채택되었을 때에는 북에 굴복하고 리용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거부해 나갔다.(로동신문, 2000.12.15)
- 최근 <국방백서>를 통하여 우리를 또다시 <주적>으로 선포한 것은 실로 용납 못할 엄중한 도발이다. 이것은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을 뒤집어엎고 북남관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대결선언이고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이다.(로동신문, 2000.12.15)
- 미국호전세력의 침략책동은 민족공조로 분쇄해야 한다. 민족공조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의 안전과 리익을 지키기 위한 무기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반미자주화의 기치 밑에 공동투쟁을 벌려 나갈 때 나라의 평화도 수호하고 통일위업도 지켜나갈 수 있다.(로동신문, 2001.3.25)

- 미국은 <의혹>이요, <불투명>이요 우리를 모해압살하기 위한 대조선강경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이 맞장구를 치고 있다. 이로하여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는 정지상태에 빠지게 되었다.(조선중앙통신, 2002.1.14)
- 최근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 속에서 미국의 범죄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반대하고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그것은 온 겨레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로동신문, 2002.3.1)
- 남조선에서 6.15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는 매국적인 외세공조는 애국적인 민족공조로 확고히 전환되어야 하며 동족을 적대시하고 민족단합과 통일을 범죄시하는 모든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로동신문, 2002.4.18)
- 당국과 민간단체들 사이의 래왕과 접촉을 활발히 하며 서로 련대련합하여 공동행동을 적극 벌려야 한다. 당국이 주도하건, 민간이 주도하건 모든 통일행사들은 마땅히 민족의 화합에 리롭고 단결에 도움이 되는 진정한 민족단합의 장으로 되어야 한다.(로동신문, 2002.6.15)
- 민족공조보다 외세와의 <공조>를 더 중히 여기는 남측의 처사로 하여 지난 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에서는 더 거둘 수 있는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다.(로동신문, 2002.8.17)

### (3) 2002년 10월 북핵문제 대두 이후의 민족공조

2002년 10월 켈리 방북시 북한의 핵보유 시인 사태는 북한으로 하여금 민족공조를 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전면적으로 주장하도록 하였고 이때부터 민족공조 주장은 핵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었다.

이 시기 북한은 미국의 대북압박이 단지 북한에 대한 압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핵문제를 걸고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는 것이므로 미국은 남북 공동의 흉적이며 전 민족의 원수라고 주장하면서 현 시기 한반도 대립구도는 남북 대 미국이라며 민족공조로 핵재난의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선동하였다. 이전시기의 남북공조가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미국에 대한 책임 거론이 주요 내용이었다면, 제2차 북핵위기가 심화되면서 북한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위험은 민족내부에서가 아니라 민족외부로부터 오고 있다며 미국과의 대결구도에 남한까지 끌어들이며 한민족 대 미국이라는 전선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이에 북한은 민족공조의 원칙 하에서 미국의 핵소동과 새 전쟁도발 책동을 분쇄하기 위해 반미반전평화투쟁을 전 민족이 벌릴 것을 주장하기에 이르고, 김정일의 선군정치에 의한 핵 억지력 보유는 한반도의 안



전과 평화를 담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핵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대남공격은 2002년 12월 대선 전에는 이회창 후보에게 집중되더니 2003년 5월 노대통령의 방미 이후에는 참여정부에도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16대 대선 이전 북한은 이후보가 집권하면 한미공조 우선정책에 의하여 남북관계는 대결의 시대로 회귀하고 핵전쟁이 터지는 것은 피할 수 없으므로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막기 위해 이후보의 당선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라크전쟁 때부터 남한에 대한 공격의 빈도를 강화하더니 급기야 '한미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 발표되자 공동성명을 미국과 남한과의 종속관계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한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언사들로 엮은 매국선언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특히 핵문제와 관련 추가적 조치, 남북경협 연계 등은 미국에 동의하고 굴복한 것으로서 이것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증대시킨 극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외세공조 대신 민족공조에 앞장설 것을 강요하였다.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하여 남한내의 동맹강조 주장에 대해 외세공조는 외세의존적이며 반통일적인 언행이고 역적행위라고 연일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 2003년 제3차 8.15 민족대회가 개최된 것은 남북공동선언 이후 하층통전과 상층통전을 연계시킨 북한의 대남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리회창은 민족의 운명도, 남북관계의 전망도 안중에 없이 미국의 전쟁정책에 편승하여 <공조>나발을 불어대면서 핵전쟁마차에 채찍질을 해대고 있는 것이다. (로동신문, 2002.11.19)
- 오늘은 북과 남의 전 민족 대 미국, 이렇게 문제가 서고 있다. 민족의 운명이 위협에 처해 있는 이 시각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근본리익을 침해하는 미국에 할 말을 당당히 해야 하며 6.15 공동선언의 정신대로 민족공조의 길로 확신성 있게 나가야 한다.(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2002.11.22)
- 민족공조의 실현을 첫 자리에 놓고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면 얼마든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민족의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할 수 있다.(조선중앙통신, 2003.3.18)
- 미국의 위협천만한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민족공조로 새 전쟁위험을 막아야 할 당사자가 동족을 걸고 정세를 전쟁전야의 사태로까지 격화시키는 것은 외세가 지피는 전쟁의 불가마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으로 될 뿐이다.(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2003.3.21)
- 북과 남, 해외의 온 거래는 굳게 뭉쳐 신성한 우리 조국 강토에 전쟁의 불구름

- 을 몰아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광란적인 핵전쟁 도발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반미, 반전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조선중앙통신, 2003.5.5)
- 대화 일방이 외세와의 관계를 동족과의 관계보다 우위에 놓고 동족과의 공조가 아니라 외세와의 <공조>를 추구해 나서는 한 북남관계는 공동선언의 근본정신에 맞게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될 수 없다.(로동신문, 2003.6.5)
  - 애국애족의 선군정치를 적극 지지 옹호하는 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관건적 문제이다. 자기 힘이 없으면 침략자들에 의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무참하게 짓밟혀도 어디에 가서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일방주의와 강권이 횡행하는 오늘의 비극적인 현실이다.(로동신문, 2003.6.26)
  - 미국호전세력들은 <6자회담합의는 아무 것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라느니, <6자회담 개최가 합의되었어도 한미량국은 군사공격을 포함한 제2의 조선반도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느니 하는 남조선당국도 주대없이 민족을 해치려는 미국의 전쟁장단에 무턱대고 춤을 출 것이 아니라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민족공조에 나서야 할 것이다.(조국평화통일위원회, 2003.8.22)

### 3. 민족공조론과 대남전략

#### (1) 민족공조론의 전략적 목표

2001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민족공조’ 용어의 시원에 대해 한편에서는 북한이 이 용어를 만들어 남한에 유포시켰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 용어가 남한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이 용어가 1993-4년 제1차 북핵위기 때 북미 핵협상에 참여하지 못한 한국이 미국과 협의를 하면서 정책을 공동으로 조율한다는 차원에서 생긴 ‘한미공조’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 10월 제2차 북핵위기 때부터 북한에 의해 공세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민족공조론의 전략적 목표는 당면한 핵위기 상황에서 ‘핵 억지력 보유의 정당화(불가피성)와 대외협상력 제고’다. 북한은 민족공조론에서 우리 민족은 미국이 몰아오는 핵전쟁의 위협에 처해 있고 2002년부터 자기를 ‘악의 축’, ‘핵선제 공격대상’으로 규정하고 악랄한 적대행위를 감행해 왔으며 ‘선핵 포기’라는 최후 통첩적인 요구를 내걸고 대조선 압살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핵전쟁 위협과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그 폐해가 비단 북한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남한까지를 포함한 전 민족에게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에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이 절박한 민족적 과제라 규정한다. 따라서 현 시기 한반도의 대립구도는 남과 북의 한민족 對 미국으로 설정하면서 남북이 전 민족적 이익을 위해 단합하여 제국주의이며 핵전쟁광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박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민족공조론의 전략적 목표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하위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한미공조의 배경이다. 북한은 진정한 민족공조는 외세공조(한미공조)를 철저히 배격하고 민족자주의 원칙에 서서 민족문제를 바로 해결하는데 있다며 외세와 공조하여 민족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민족문제의 자주적 해결이 아닌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전 한반도에 지속시키겠다는 것 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민족공조는 애국이고 외세공조는 매국이며,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담보하는 민족공조와 한반도의 정치군사정세를 긴장시키고 새로운 충돌을 야기하는 외세공조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민족공조의 주 투쟁대상은 미국과 주한미군이라며 남과 북이 단결하고 힘을 합쳐 평화와 통일의 길을 개척하고 외세가 강요하는 핵재난의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둘째, 남한정부의 견인 및 남한내 민족주의세력과의 연대 강화이다. 북한은 남한정부가 민족자주정신에서 이탈하고 민족공조를 외면하면 사대와 굴욕에 빠지게 되고 민족의 운명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민족의 규탄밖에 받을 것이 없다고 남한을 압박하고 있다. 민족공조냐 외세공조냐, 자주냐 예속이냐, 평화냐 전쟁이냐 식의 이분법적 강요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내외의 각계 통일운동단체들과 인사들은 남북공동선언을 고수, 이행하고 민족적 화해와 통일, 그리고 평화를 위한 투쟁을 광범하게 벌려 나가고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은 강력한 연대연합으로 민족공조를 반대하면서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반통일우익보수세력을 철저히 고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핵 억지력 보유의 정당성을 제고시켜 체제유지 강화이다. 미국의 대조선 압박정책은 남한까지 위태롭게 할 것인데 북한이 핵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이 편안할 수 있다는 논거를 제시하며 핵 억지력 보유의 불가피성을 강변하고 있다. 즉 힘 우위의 국제질서, 미국의 일방주의 세계질서 속에서 우리 민족의 안전과 평화는 북한의 핵 억지력 보유에 달려있고 이것이 가능하게 한 김정일의 선군정치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있다.

결국 민족공조론은 북한의 핵 억지력 보유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제고시켜 김정일체제 유지에 기여하고, 민족주의 정서에 호소하여 남한의 정부·정당·시민단체 등에게 한미공조와 민족공조 중 택일하라면서 이들의 정책적 운신의 폭을 좁혀 궁극적으로는 당면한 북핵협상에서 북한 + 남한 정부 + 남한의 광범위한 국민 對 미국 + 소수 반통일세력의 대립구도를 형성하여 대외협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 (2) 민족공조론의 실행방법

북한은 민족공조론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족공조론에 대한 대대적 홍보 및 정부·민간 간 남북교류 지속, 미국의 죄행 폭로와 반미투쟁 촉구, 남한내 보수세력 공격 등을 강화하고 있다.

첫째, 민족공조의 정당성을 집중 홍보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와 민간간 남북교류를 설명하고 있다. 북한은 민족공조가 남북의 민족역량을 결집시키고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민족역량의 상승효과를 기하게 되며 이 과정에 남과 북의 상호불신을 상호신뢰로 바꾸어 놓게 될 것이며 화해와 단합을 강화하여 남북관계를 성과적으로 개선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행사와 모든 매체를 통해 민족공조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다. 남북장관급회담, 이산가족상봉,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착공, 부산아시아게임과 대구유니버시아드 공식 입장 등도 내외의 반통일세력의 책동에도 불구하고 민족공조를 지키려는 북한의 '충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의 침략적 행태를 비판하고 남한내 반미반전투쟁의 확산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대아프카니스탄 공격, 대이라크전쟁 등을 예로 들면서 미국의 침략적 일방주의적 행태를 비판하고 특히 당면 북핵위기와 연관해서도 미국이 북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하고 북한을 핵선제공격하려 한다며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색'을 드러내는데 총력을 기하고 있다. 또한 남한 내에서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등 반미투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재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남북공동선언 채택 이후 남북관계는 불신과 대립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미국이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이모저모로 시비를 걸고 남한에 압력을 가하면서 훼방을 놓고 있다며 비판한다. 결국 미국만 없으면 남북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북한은 남과 북 그리고 해외의 통일역량들이 서로 힘을 합쳐 반전

반미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호소하고 있다.

셋째, 한나라당을 비롯한 남한내 '반통일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 북한은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들이 동족보다 외세를 중히 여기고 통일보다 분열을 추구하는 천추에 용납할 수 없는 사대매국노들이며 집권야욕을 위해서는 그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불순세력들이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16대 대선 전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고발장을 발표하면서 이회창 후보를 파쇼통치의 일선에서 정의와 민주를 악랄하게 교살한 파쇼살인광, 미국의 충견이며 부시의 북침전쟁마차를 끄는 마부, 극악한 반통일분열주의자, 부정부패의 능수이며 인간추물 등 인격적 모독까지 하면서 남한정치에 관여하고 이 후보 낙선운동에까지 동참하였다.

### (3) 민족공조를 위한 우선적 조치

북한은 남한이 진정한 민족공조의 길로 나서려면 남북관계 개선 방향으로 제반 법률 수정 및 폐기, 남북교류협력 차단장치 제거,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등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상대방의 체제를 부정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북간 화해협력이 빈말밖에 되지 않으므로, 체제가 다른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는 법률을 재검토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에서 수정 또는 폐기하라는 것이다. 우리 헌법 영토조항(3항)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조항(4항)이 북한을 미수복지역으로 간주하고 앞으로 흡수통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 역시 북한의 체제와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과 민족공조 강화의 방향에서 고칠 것은 고치고 없앨 것은 없애라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남북교류협력의 발전을 가로막는 차단장치를 제거하라고 요구한다. 먼저 남북화해협력시대에 맞게 사법, 검찰, 정보기관의 체질 개선을 주장한다. 물론 이 주장은 남북공동선언 이전에 강하게 제기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약화되고 있다. 또한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세력이라면 과거를 묻지 않고 다 같이 손잡고 나가자고 해놓고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주장하는 범민련과 한총련을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을 계속 이적을 몰아 박해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의 집중적 표현이라며 범민련의 승인과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동족을 주적으로 규정한 것은 명백

한 대결론이고 남한 스스로 남북간의 화해와 통일을 바라지 않는 반민족세력의 징표라며 주적론의 폐기를 제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03년 8월 1일부로 대남방송인 '구국의 소리방송'을 중단하면서 남한에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자고 주장한다. 북한은 남한이 역사적으로 북의 남침위협을 강조하고 그에 기초하여 안보우선의 논리를 세우고 있으며 모든 대내외정책, 통일정책까지도 안보논리에 종속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북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및 ICBM은 북한의 대미억지력, 북미군사대결의 위력한 수단으로서 주일미군기지와 미국본토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남한을 타격대상으로 하는 것을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남한의 과도한 군사비 책정과 무장장비 구입문제를 거론하면서 주한미군에 의한 북침위협성을 경고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이 미국의 한반도전쟁 전략에 매달려 끌려 다니지 말고 전쟁정책을 포기하고 긴장을 완화하여야 하며, 진정한 민족공조를 위해서는 남한에서의 무력증강과 외부로부터의 무기반입의 중지, 외국군대와외의 합동군사훈련과 무모한 군사적 도발행위의 중지 등 사전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표4> 민족공조론 체계도

전략적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억지력 보유의 정당화와 대외협상력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공조 배경</li> <li>· 남한정부 견인 및 남한내 통일운동세력과의 연대 강화</li> <li>· 핵억지력 보유 정당성 제고 및 체제유지</li> </ul>
실행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공조 정당성 집중 홍보</li> <li>· 미국의 침략적 행태 비판 및 반미반전투쟁 촉구</li> <li>· 남한내 반통일세력 집중 공격</li> </ul>	
우선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관계 개선방향으로 제반 법률 수정 및 폐기</li> <li>· 남북교류협력 차단장치 제거</li> <li>·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li> </ul>	

#### (4) 민족공조론의 정치적 함의와 대남전략

그 동안 북한은 통일문제의 본질을 민족자주권 실현과 민족대단결 도모의 두 측면에서 사고하면서 1970년대까지는 민족자주권 실현이라는 외적 측면에 주력하였다. 그러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의해 민족대단결 도모라는 외적 측면을 강화하면서 199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외적 측면이 내적 측면을 촉진시킨다는 주장을 내세워 민족적 단합을 더욱 중시해 나간다는 대남전략을 정식화하였다.<sup>33)</sup>

민족공조론 역시 이러한 대남전략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더욱 강화하려고 제기된 것이다. 1990년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북한은 주체역량의 전반적 약화 속에서 2002년 10월 이후 심화된 북핵위기 국면을 돌파하고자 기존의 북한 對 미국이라는 대립구도를 북한 + 남한정부 + 남한의 통일운동세력 對 미국 + 소수의 반통일세력의 새로운 구도로 만들어 대외협상력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한 압박에 의해 궁색한 처지에 놓인 북한이 남한내에서 크게 성장한 민주세력, 통일세력을 적극 견인하고 특히 이들 세력의 지지로 출범한 노무현정권과의 대미 공동전선을 구축하려는 것을 이해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은 1990년부터 1999년까지 개최되었던 하층통전인 범민족대회 대신 2001년부터 하층통전을 상층통전과 연계시킨 8.15 민족대회에 계속 진행시키면서 민족공조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즉 북한으로서는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국내외 정세 속에서 민족공조론을 주도적으로 제기해 1990년대부터 강화된 내적 측면에 의한 외적 측면의 촉발이라는 대남전략을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정부, 민간을 가리지 않고 민족공조를 강조하면서 남북교류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족공조론의 정치적 함의는 기존 일반적이고 추상성이 높은 대남정책 구호가 보다 구체적이고 정당성을 가진 형태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이라는 구호는 수십년간 사용되면서 그 용어가 식상해져 남한주민에 대한 설득력이 저하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제2차 북핵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민족공조라는 용어는 1993-4년 제1차 북핵위기사 사용되었던 한미공조라는 용어와 직접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남한으로 하여금 명확한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sup>34)</sup> 그리고 북한은

33) 홍승길, “북한의 ‘민족대단결로선’ 전개와 그 의미,” 『극동문제』, 21권 2호 (1999), 29쪽.

34) 북한의 민족공조 강조는 과거 구소련이나 중국이 강대한 외적에 직면하여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위기의 사대에 직면하였을 때 진술적으로 계급을 초월하여 민족적 단결을 호소하는 민족주의를 사용한 것과 같이 핵 비확산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민족공조라는 용어를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제2항의 ‘우리 민족끼리’에서 그 연원을 제기함으로써 민족공조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당면한 북핵상황을 모면하고자 민족공조론을 제기했듯이 향후 북핵상황이 해결되고 새로운 위기상황이 도래할 경우 민족대단결, 우리 민족끼리의 유사용어를 계속 만들어내 현실과의 조응성을 높일 것이다.

다음으로 민족공조론의 제기에 의해 기존 북한의 통일전선론에 대한 개념이 수정될 여지가 발견된다. 북한은 한나라당이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남한이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말려들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2000년 12월까지만 해도 “우리가 하자는 통일전선은 북과 남의 각 계층이 화해하고 단합하며 조국통일을 위해 함께 손을 잡고 나가자는 것이다. 사상과 정견, 주의주장을 초월하여 민족을 위하여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단결하고 힘을 합쳐 통일하자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민족대통일전선”<sup>35)</sup>이라며 최근의 남북관계의 발전이 통일전선전술 자체임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02년 발간된 장석의 『김정일 장군 조국통일론 연구』에서는 민족공조가 실현방도인 민족대단결론과 민족통일전선론(주체의 통일전선론)을 구분하여 전자는 단결의 주체가 남, 북, 해외의 모든 각계각층 민중이고 당국자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통일전선전략이 아닐 뿐 아니라 통일전선론이라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운동의 영도계급문제, 계급노선과 균중노선과의 결합문제 등이 민족대단결론에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족대단결론과 통일전선론을 구분한 장석의 의도는 통일전선에 대한 남한내 부정적 인식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장석의 견해는 북한의 공식적 입장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고 그 스스로도 “앞으로의 토론과 연구를 위한 하나의 자료적인 시안”<sup>36)</sup>이라는 사족을 달고 있다. 어쨌든 북한은 민족공조론 공세를 강화하면서 통일전선론을 거부하는 남한내 정서를 고려하여 이에 대한 새로운 이론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족공조론은 대남전략의 기본 축이었던 통일전선론에 균열을 가하고 있고 향후 보다 정치화된 이론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위하여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는 미국과의 대결에 한국 국민의 민족정서를 이용하려는 계산이 있다. 송종환, “북한의 ‘민족공조론’ 주장 배경과 전술적 함의,” 『극동문제』, 4호 (2003), 48쪽.

35) “자주통일의 21세기로 나아가는 민족의 발걸음은 막을 수 없다,”(북남공동선언 발표 이후 6개월간을 총화하는 글) 『로동신문』, 2000년 12월 15일자.

36) 장석, 위의 글, 309쪽.



## IV. 우리의 정책적 대응방향

북한의 계속되는 민족공조론 공세와 당면한 북핵위기 상황 속에서 남한 사회는 양자의 해법을 둘러싸고 분열되어 있다. 특히 반핵보다는 반전을 중시하는 진보진영과 반대로 반전보다는 반핵을 중요시하는 보수진영간 갈등은 그 도를 넘고 있다. 마치 치킨게임처럼 서로를 향해 돌진하는 양측의 입장을 타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지 우리의 외교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반전과 반핵 그리고 한반도 평화가 우리의 외교목표가 되어야 함은 명확하다. 남북공조와 한미공조는 이 외교목표는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외교수단이다. 더구나 반전과 반핵이 서로 맞물려 있듯이 남북공조와 한미공조는 길항관계가 아니라 불가분의 고리로 연계되어 있다.<sup>37)</sup>

반핵과 한미공조를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피포위의식을 심화시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고, 반면 반전과 남북공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북한 핵보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구조를 해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반전과 반핵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남북공조와 한미공조를 조율해 나가야 한다. 냉전시대의 유물인 이분법적 논리를 깨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

우리 정부가 이러한 외교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대북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노무현정부는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킨 평화번영정책을 천명하였지만 이 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고 있지 않을뿐더러 당면한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도 만족스럽지 않다. 시시각각 변화된 정세 속에서 우리의 대응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일관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에 의연히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급히 한미공조와 남북공조를 둘러싼 남남갈등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이 바탕 위에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회복해야 한다. 국민적 통합에 의한 일관된 대북정책의 수립, 그리고 이를 통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 확보만이 우리의 국익과 외교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민족공조론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민족공조라는 주장은 그 의도와 명분에 상관없이 남남갈등을 증폭시키고 한미갈등을 야기하는 ‘북한식 용어’가 됨으로써 남한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하고 제반 부작용을 극복하기

37) 문정인, “보혁의 이분법을 넘어서,” 『한국일보』, 2003년 6월 5일자.

위해서는 우리의 주체적 정책결정과 의도를 반영하는 ‘남북협력’<sup>38)</sup>이라는 개념으로 돌아가자는 주장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

38) 한용섭, “민족공조서 남북협력으로,” 『중앙일보』, 2003년 9월 8일자.

## ※ 참고문헌

-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방송자료, 김일성·김정일 전집류  
국가안전기획부, 『북한의 「민족주의」 선전자료집』 (1995.12).  
강승춘, “민족문제해결의 독창적인 길,” 『철학연구』, 4호 (1990).  
강승춘, “주체적 민족관,” 『철학연구』, 4호 (1991).  
고영환, 『조선민족제일주의론』 (평양: 평양출판사, 1989).  
김성보, “북한의 민족주의세력과 민족통일전선운동,” 『역사비평』, 통권 16호 (1992).  
김영진,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것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결정적 담보,” 『철학연구』, 1호 (1992).  
김정민, “남북한이 보는 3.1운동과 민족주의: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개념은 무엇인가,” 『북한』, 통권 339호 (2000).  
김창순, “공산주의의 민족개념 및 민족정책과 북한,” 『북한학보』, 17집 (1993).  
김혜연, 『민족, 민족주의론의 주체적 전개』 (평양: 평양출판사, 2002).  
리규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민족의 개념에 대한 리해,” 『사회과학』, 2호 (1986).  
리순덕, “민족의 본질에 대한 주체적 리해,” 『철학연구』, 3호 (1995).  
배성인, 윤기로, “세계화시대 남북한 민족주의,” 『북한연구』, 4권 (2001).  
송종환, “북한의 ‘민족공조론’ 주장 배경과 전술적 함의,” 『극동문제』, 25권 4호 (2003).  
송종환, “북한핵 위기와 북한의 ‘민족공조론’ 주장의 전술적 함의,” 『북한』, 통권 376호 (2003).  
심병철, 『조국통일문제 100문 100답』 (평양: 평양출판사, 2003).  
양호민, “북한의 민족-계급정책,” 『북한학보』, 23집 (1998).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이종석, “주체사상과 민족주의: 그 연관성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6권 1호 (1994).  
임채완, “북한의 민족주의 이론과 그 변화추이,” 『정신문화연구』, 17권 2호 (1994).  
임채욱, “북한의 민족심리와 ‘민족공조론,’” 『극동문제』, 25권 4호 (2003).

- 장석, 『김정일 장군 조국통일론 연구』 (평양: 평양출판사, 2002).
- 장우진, 『조선민족의 발상지 평양』 (평양: 평양출판사, 2000).
- 전미영, “북한 지배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사회주의,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5집 1호 (2001).
- 전미영, “통일담론에 나타난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연구: 통일이념의 모색,” 『국제정치논총』, 43집 1호 (2003).
- 전현준, 『북한의 대남정책 특징』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정영철, “북한 민족주의의 전개와 그 특징: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4권 2호 (2001).
- 찰스 암스토롱, “북한 문화의 형성: 1945-50,” 『현대북한연구』, 2권 1호 (1999).
- 최성욱, 『우리당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6).
- 홍승길, “북한의 ‘민족대단결로선’ 전개와 그 의미,” 『극동문제』, 21권 2호 (1999).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주민의 의식구조 변화 실태

2003. 9.

연구책임자 : 서 재 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 요약 〉

### I. 7·1조치의 내용

- 가격개혁: 비공식경제와 공식경제의 가격차이로 인한 공식경제의 파행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
- 노동동원 양식의 개혁: 사회주의적 생산양식 하에서 노동의식이 저하되어 노동생산성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체사상 등의 이념으로 노동력을 동원하던 기존의 정책을 물질적 인센티브제도로 전환한 조치
- 분배체제의 개혁: 노동생산성에 무관하게 분배되는 무상배급제 하에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배급제도를 공식 폐지
- 세제개혁: 무상배급제 하에서 만성적인 재정적자 문제를 타개하고 재정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
- 공장 기업소 자율성 강화: 기업소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기업소 단위의 자력개생 강화

### II. 7·1조치가 주민생활에 미친 영향

#### 1. 긍정적 영향

- 7·1조치에 포함된 기업의 자율성 확대는 기업소의 부업 확대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데 각 기업소에서 가용한 부업을 통하여 종업원들의 임금을 보전
- 국영상점에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자 상점지배인이 개인능력으로 상품을 확보하여 판매하고 국가에 대해서는 수익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지불함에 따라 국영상점이 사영화되는 추세에 있음.

- 7·1조치가 취해진 직후에는 암시장에서 개인장사를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하여 장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고 북한 당국에서도 이를 양성화하여 공산품까지 판매하는 종합시장으로 양성화함.
- 취로사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7·1조치로 국가의 재정이 확충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취해진 조치로 볼 수 있음.
- 일한 만큼 임금을 지불함에 따라 농업 및 광공업 등 가동이 가능한 부문에서는 노동의 인센티브가 강화되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이것은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내고 있음.
- 개인 생활의 자유화 진전: 7·1조치는 많은 부문에서 중앙정부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조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간섭과 개입도 감소하였음.

## 2. 부정적 영향

- 암시장 경제의 혼란: 7·1조치 이전에는 가격이 안정되고 생활이 안정되어 가고 있었으나 물가가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고정된 임금이 없는 일반주민들에게는 인상된 물가와 세금이 그만큼 부담으로 남았으며 구매력이 약화되어 개인장사하기가 불리해짐.
- 사회보장제도의 후퇴: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취해지기 이전까지 북한주민들의 생필품 공급은 국가 배급제였으나 배급제가 소멸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가 후퇴된 결과를 의미함.
- 국가의 기능변화: 7·1조치는 국가의 차원에서 볼 때 배급제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공급의 기능이 중단되고 대신 인민들의 자발적 사영 영업에서 발생하는 이득금을 걷어들이며 주택세, 전기세, 교통요금 등 각종 공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징세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음



### III. 북한주민의 의식구조 변화

#### 1. 일반적인 차원

##### 가. 돈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물신주의 등장

- 배급제도가 폐지되고, 임금노동제가 도입되었으며, 종합시장제도가 도입된 상황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양식과 사회의식을 혁명적으로 바꾸었음.
- 이전에는 당과 수령에 충성하면 생계가 보장되었지만 이제는 노동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상품을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 제도에 살고 있는 것임.
- 자본주의 시장제도와 큰 차이가 없는 방향으로 체제가 변화된 것임.
- 결과적으로 돈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음.

##### 나. 장사에 대한 의식 변화

- 7·1조치이후 주민의식의 변화 중에서 괄목할 만한 것은 개인 차원에서 돈 벌기 위하여 머리를 쓰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며, 북한 관료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임.

##### 다. 책임감과 근로의욕의 강화

- 배급에 의존하던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배급제가 없어지자 국가에 의존적인 의식이 많이 쇠퇴하고 대신 더 많은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창의적인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함.
- 북한 지도부가 7·1조치를 취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바로 노동의욕의 창출에 있다고 본다면 그 정책은 크게 성공한 셈임.

##### 라. 사회주의에 대한 회의와 자본주의적 마인드 부상

- 북한에서 사회주의 = 배급주의, 장사 = 자본주의로 등식화되었는데 배급이 폐지되자 이를 사회주의의 붕괴로 인식하며, 장사를 해야 먹고 살며 장사는 곧 자본주의라는 인식이 팽배함.

## 2.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 변화

- 북한주민에게는 배급제는 곧 사회주의를 의미하였고, 사회주의는 곧 배급제를 의미하였는데 그런 배급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사회주의에 대한 개념 변화가 불가피해짐.
- 최근 30권짜리 『조선대백과사전』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정의를 집단주의로 정의하고 있음.
  -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사회이며, 그 내부의 협동적 소유, 국가적 소유---상관없이, 집단적 형태로 운영되면 사회주의이다”라고 정의되어 있음.
  - 즉, 사회주의의 본질 및 기본속성은 집단주의라는 것임.
  - 김정일의 1994년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연설이 사회주의를 집단주의로 재정의하는 근거가 되었던 것으로 보임.

## 3. 배급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

- 배급제와 관련, 7.1조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반응은 북한의 경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고 사회주의체제의 핵심인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미 오래전에 배급제에 대한 기대는 포기하였다고 함.
  - 그러나 일반주민들에 대한 배급은 사실상 없애면서 당, 정, 군 간부들에 대한 공급은 지속되고 있어 주민들의 냉소적인 태도는 심화되고 일반주민들의 당정 간부들에 대한 반감은 계급갈등의 양상을 띠고 발전하고 있음.

## 4. 시장에 대한 인식 변화

- 이제 시장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장 문을 닫으면 단 하루도 먹고 살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결국 암시장이 양성화되어 종합시장으로 발전되고 있음.

## 5.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의 변화

- 북한 주민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무의식적으로 자본주의 양식에 의존하고 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
- 북한주민들은 장사는 비사회주의라는 의식은 갖고 있으나 장사가 곧 자본주의라는 것으로는 해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사회주의 장사와 자본주의 장사는 다른 것으로 이해함.

## 6. 김정일에 대한 태도

- 북한언론은 '7·1 조치'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써 주민들의 사기가 올라갔고 주민들이 김정일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선전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않음.
- 탈북자들은 대체로 외부로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내심으로는 김정일에 대한 불만이 점점증하고 있다고 증언함.

## 7. 당 및 간부에 대한 태도

- '7·1 조치' 이후 물품부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암시장은 더욱 교묘하게 발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지고 간부들의 횡포도 가혹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8. 남한에 대한 태도

- '7·1 조치'이후 남한에 대한 태도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7·1조치' 이후의 상황으로만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지만 최소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부터는 남한의 대북 지원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IV. 지역 및 사회집단별 차이

- 7·1조치는 일한 만큼 월급을 받는다는 것이 핵심적인 정책 내용이며 또

- 실제로 그렇게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간에 월급 수령 여부에 큰 차이가 있음.
- 결국 평양은 대부분 국가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 지방 도시들은 공장 기업소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지역적으로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음.
- 정상 출근 하는 부문의 종사자들은 7·1조치에서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문의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 이러한 집단별, 지역별 차이 때문에 북한체제와 김정일에 대한 인식에서 양극적인 차이를 보임.
- 정부 부문에서 일하는 간부층들은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집단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

## V. 정책적 함의

- 7·1조치 이후 북한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주민들의 의식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음.
- 공급 부문이 희생되지 않으면 7·1조치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기존의 일반적 평가이나, 7·1조치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북한의 경제난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가 아니라 북한의 사회와 사회의식에 얼마나 변화가 왔느냐는 측면에서 볼 때는 7·1조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됨.
- 71조치이후 북한의 변화는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의 근간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임금노동제에 유사한 분배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임.
- 배급제가 폐지되고 대신에 일한 만큼, 생산한 만큼 노임을 지불하는 제도로 변화됨에 따라 자본주의의 임금제도에 유사한 분배제도가 도입되었음
- 과거 칼 맑스가 자본론에서 자본주의의 본질을 임금노동제에 근거한 잉여가치라고 지적한 바를 상기한다면 북한의 배급제의 폐지와 임금노동제의 도입은 큰 의미를 갖는 변화임.
- 둘째, 배급제도가 공식 폐지되기 이전부터 북한 주민들이 대부분의 생필품을 암시장에서 구매하던 현실을 양성화하여 종합시장 제도를 도입하여 과

거에 암시장에서 판매를 금지하던 공산품까지 허용하는 등의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였음.

- 계획경제 제도가 마비되고 시장제도가 대체되고 있는 과도기적인 단계로 볼 수 있는 셈임.

○ 셋째, 사회주의의 개념을 과거에는 생산수단의 소유여부로 설명하였는데 이제는 집단주의의 사회주의의 본질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임.

- 배급제가 곧 사회주의라고 인식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배급제 폐지 이후에 사회주의 개념을 집단주의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주의의 본질에서 후퇴한 조치임.

○ 넷째, 과거에는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동원의 수단을 주로 주체사상 등의 이념에 의거하였는데 이제는 임금노동제에 근접하는 물질적 수단에 의존하고 있음.

- 70년대 이후 주체사상의 본재적 기능이었던 노동동원의 기능이 실패한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북한의 변화를 추구하는 대북정책의 차원에서 볼 때 북한사회의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음.

○ 북한의 7·1조치가 북한 내부의 요구 때문에 나온 것이지만 남북관계에서의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북한 당국에게 경제지향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북한의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화해협력 정책을 지속하고 교류협력을 지속해야 함.

- 북한당국에게는 북한이 7·1조치 및 경제성공을 위해서라도 남한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음.

- 또한 7·1조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외적 수혈이 필수적이며 대외적 수혈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설득해야 함.



# 〈 목 차 〉

I. 문제제기 .....	145
II. 7.1경제관리개선 조치의 내용 및 의도.....	146
1. 내 용 .....	146
2. 의 도 .....	153
가. 가격현실화를 통한 암시장경제의 통제와 공식경제의 정상화.....	153
나. 분배제도의 개선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사회주의적 배급제에서 임금노동제로 .....	154
다. 배급제 폐지 및 사회보장제도 축소를 통한 국가의 재정확충.....	157
III.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주민생활 변화에 미치는 영향.....	159
1. 긍정적 영향 .....	159
가. 기업의 자율성의 확대에 의한 부업의 활성화 .....	159
나. 국영상점의 사영 제도 확대.....	161
다. 시장의 활성화와 제도화-종합시장의 등장.....	162
라. 취로사업의 증가-새로운 일자리 창출.....	163
마. 개인생활의 자유화 진전 .....	163
2. 부정적 영향 .....	164
가. 암시장 경제의 혼란 .....	164
나. 사회보장제도의 축소 .....	166
다. 국가의 기능변화:보급기능에서 징세기능으로.....	167
IV. 북한주민의 의식구조 변화 .....	168
1. 일반적인 차원 .....	168
가. 돈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물신주의 등장 .....	168
나. 장사에 대한 의식 변화.....	168

다. 책임감과 근로의욕의 강화 .....	169
2.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 변화 .....	170
3. 배급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 .....	172
4. 시장에 대한 인식 변화 .....	174
5.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의 변화 .....	176
6. 김정일에 대한 태도 .....	180
7. 당 및 간부에 대한 태도 .....	182
8. 남한에 대한 태도 .....	185
V. 지역 및 사회집단별 차이 .....	187
VI. 정책적 합의 .....	190



## I. 문제제기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경제관리개선조치는 국영시장의 가격을 암시장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였고 동시에 임금수준을 가격 인상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인상하였으며 배급제를 폐지하고 각종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북한의 세계은행 가입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북한과 접촉해온 북한전문가 브래들리 뱀슨 세계은행 아시아담당 고문은 미 상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1946년의 토지개혁 이래로 가장 획기적인 경제조치였다고 평가하였다.<sup>1)</sup>

실제로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의 근간을 개혁하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정책이며 그 영향이 심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와 영향이 잘못 평가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북한의 7·1조치는 공급이 따르지 못하여 실패한 정책이라고 의미를 단순화하거나 7·1조치는 암시장을 국영시장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등 그 의미를 축소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7·1조치의 본질에 대한 평가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기존의 평가는 7·1조치의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출 경우에 나올 수 있는 평가이다. 그러나 7·1조치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북한의 사회와 사회의식에 얼마나 변화가 왔느냐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북한의 경제체제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제체제의 변화는 사회주의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것은 또한 북한 주민의 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이 보고서는 7·1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 조치를 취한 북한 당국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며, 이러한 정책과 변화들이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들의 의식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7·1조치의 내용 분석을 위하여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에게 교육용으로 사용한 문건의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7·1조치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7·1조치 이후에 북한을 출국한 탈북자들과 북한을 방문한 남한 사람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

1) 자유아시아방송(RFA), 2003년 6월 24일자.

## II. 7·1경제관리개선 조치의 내용 및 의도

### 1. 내용

7·1경제관리개선 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가격을 현실화하여 대폭 인상하였다는 점이다. 가격개혁은 지금까지 암시장이 번성하는 상황에서도 국정가격은 이전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였기 때문에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의 간극이 심화되면서 공식경제가 붕괴되었다는 인식에서 나온 조치이다. 7·1조치는 가격을 생산원가를 반영하는 가격으로 대폭 인상하였다. 일상생활용품의 가격을 약 20-40배 인상했으며, 식품가격은 거의 40-50배나 인상했으며, 쌀가격은 kg당 82전에서 40원으로, 옥수수 1kg당 49전에서 20원으로 인상되었고, 지상 전차요금이 10전에서 1원으로, 지하철요금이 10전에서 2원으로 인상되었다.

7·1조치 이후 식량 및 주요 생필품의 가격 변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7·1조치의 주요 내용으로는 식량가격의 현실화, 생활용품의 인상 및 주택사용료도 징수하고, 배급품도 현실에 맞는 수매가와 판매가로 전환하였다. 가령 쌀값의 경우 1kg에 80전, 매도가는 8전으로 1953년에 책정된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주민들의 기본생활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이러한 정책을 제도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7·1조치 이전과 이후의 주요 생필품의 국정가격은 <표1>과 같다.

<표 1> 7·1 조치이후 국정가격의 인상률

상품종류	품목	단위	조치이전 가격(A)	조치이후 가격(B)	인상폭 (B/A배)	종별 변화	
육어류	돼지고기	kg(생체)	10원	110원	11	12.2	
		kg(지육)	17원	170원	10		
	닭고기	kg	18원	180원	10		
	청어	kg	10원	100원	10		
	말린 명태	마리	10전	2원	20		
양념류	된장	kg	20전	17원	85	67	
	간장	kg	20전	16원	80		
	콩기름	kg	4원	180원	45		
	조미료	kg	5원	300원	60		
	고추가루	kg	1.5원	100원	66		
주류	소주	l	50전	43원	85	78	
	맥주	병	50전	50원	100		
	설탕	병	2원	100원	50		
공산품	남자 운동화	켤레	3.5원	180원	51	33	
	세수비누	개	3원	20원	7		
	세탁비누	개	40전	15원	38		
	텔레비전	대	350원	6,000원	17		
	페니실린	개	40전	20원	50		
연료	석탄	톤	34원	1,500원	44	58	
	전력	1kWh	3.5전	2.1원	60		
	디젤유	리터(l)	40원	2,800원	40		
	휘발유	톤	922.86원	64,600원(옥탄가 95)	70		
		리터(l)	40원	2,800	70		
공공요금	철도여객	운임	17원	590원(평양↔청진)	36	27	
	침대열차	운임	50	3,000 (평양평성↔함북남양)	60		
	시내버스	운임	10전	2원	20		
	지하철요금	1구간	10전	2원	20		
	전차요금	1회	10전	1원	10		
	유원지입장료		3원	50원	17		
의류	겨울내의	벌	25원	2000원	80	77	
	남자양복	벌	90원	6,750원(최상품)	75		
비식료품	월간잡지 (조선문학)	권	1원 20전	35원	29	재산정	
	탁아소 식비 유치원 식비	월액*	100원	500원	5		
			50원	300원	6		
	담배	갑	35전	2원	6		
	치솔	개	1.5원	15원	10		
	베어링	개	2~5원	20~100원	10~20		
	집세			수입의 0.03%	1㎡ 당 월 2원		
					한 세대 60㎡ 78원		
	난방비	60㎡		175원			
	전기등				45		
	강판				45		
	생고무				45		
안경	1개	20원	600원	30			
화장품	개	10원	750원	75			

<표 계속>

상품종류	품목	단위	조치이전 가격(A)	조치이후 가격(B)	(B/A배)	종별 변화
비식료품	월간잡지 (조선문학)	권	1원 20전	35원	29	
	탁아소 식비 유치원 식비	월액*	100원 50원	500원 300원	5 6	재산징
	당배	갑	35전	2원	6	
	치솔	개	1.5원	15원	10	
	베아링	개	2~5원	20~100원	10~20	
	집세		수입의 0.03%	1㎡ 당 월 2원 한 세대 60㎡ 78원		
	난방비	60㎡		175원		
	전기등				45	
	강판				45	
	생고무				45	
	안경	1개	20원	600원	30	
	화장품	개	10원	750원	75	

출처: 북한내부자료, 「노동자 생활비 표준표」, 2002년 10월 북한현지조사, 남성욱, "2002년 북한 임금과 물가인상에 따른 주민 생산 소비형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평가와 향후 전망」(서울: 고려대 북한학연구소, 2003), pp.25-26.  
비고>유치원과 탁아소의 식비가 과중하다는 부모들의 의견에 따라 가격제정국에서 기관에 대해 비용 재산징을 지시

둘째, 물가를 인상시키면서 임금수준도 이에 상응하는 비율로 인상되었다. 사무직 종사자는 140원에서 1,200원으로, 생산직 근로자는 110원에서 2,000원으로, 탄광 등 고강도 근로자는 20여 배 인상되었고, 노동자, 농민, 과학자는 10배 인상되었으며, 군인 및 공무원은 14-17배 인상되었다.

7.1조치에서는 근로자들이 실지 자기가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생활비를 엄격히 계산해서 주도록 기준을 다시 정했다. 북한의 7.1조치 관련 강연자료에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

우선 올해 7월부터 모든 상품 값이 개정되는데 맞게 근로자들의 최저생계비를 타산하고 생활비를 전반적으로 평균 18배정도로 높여 개정했다. 한 가정에서 평균2명 정도 일하는 것으로 보고 노동자, 사무원 한사람의 한달 생활비는 평균 2천원 정도로 기준을 정했다. 그리고 사회와 집단을 위해 실지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원칙에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과 고급기능공 등, 과학자, 기술자들의 생활비를 더 높게 정했다. 이번 생활비를 새로 개정하면서 탄광, 광산을 비롯하여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하거나 국가전략물자들을 생산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생활비를 20~25배정도로 더 높여 다시 정했다.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기사화 해당 기술 자격직제에서 일하는 연구사, 설계원,

대학교원 등 전문가들의 생활비는 19배정도로 높여 놓았다. 그러나 비생산 부문과 지도단위 일꾼들의 생활비는 17배정도로 재정했다.

가급금도 지난 시기에 20여가지나 되던 것들을 대폭 정리했다. 사회적으로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들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 빨리 도입되어 실지 은이 나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과학기술로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였을 때에는 그 가치에 따라 3년동안 얻은 리익금중에서 연구자와 연구집단, 도입단위에 많은 자금을 현금으로 주게 하였다.

농민들도 지난 시기 가동일수에 따라 분배하던 것을 없애고 농장에 나가 실지 자기가 번 로력일에 따라 분배평가를 받게 했다. 이와 관련하여 작업반 우대제는 없애고 분조관리제는 그대로 실시한다. 농업생산을 빨리 늘리기 위해 농민들의 한달 생활비는 평균 2천 300원정도로 로동자, 사무원들보다 더 높게 기준을 정해 주고 그것으로 식량도 사먹고 생활도 해나가게 하였다.

다음으로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군인생활비를 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군인생활비는 지난 시기 사회일꾼들과 생활비균형을 맞추어 실시하던 조건에서 장령, 군관, 군관대우자, 초기복무사관들은 사회성원들과 같이 식량을 사먹는 것으로 타산하여 군인생활비를 평균 18배 수준에서 올리였다. 또한 정기복무 병사, 사관들의 생활비도 군인들의 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소모품을 구입할수 있도록 올리였다. 그리고 적과 직접 대치하여 경계근무를 수행하는 군인들과 중요 부문, 정신, 육체적으로 힘든 부문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의 생활비를 일반 병종부문 군인들의 생활비보다 더 높여 주어 그들이 맡은 군사적 임무를 책임적으로 하는 원칙에서 개정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군사복무에 대한 영예감을 높여 주기 위해 군사칭호비를 새로 제정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기간 군관복무년한가급금으로 3~30%를 주던 것을 군사복무년한가급금으로 1년당 40원씩 최고 40년까지 주는 것으로 하였다. 이렇게 새로 개정한 군인생활비는 평균 총액(직무생활비, 군사복무년한가급금, 군사칭호비)이 소위 2,970원, 중위 3,240원, 상위 3,510원, 대위 3,780원, 소좌 4,130원, 중좌 4,610원, 상좌 5,270원, 대좌 5,830원, 소장 6,670원이다. 여기서 군사복무년한에 따라 생활비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직업별 노동자 임금 인상에 대한 세부 내역은 <표2>와 같다.

<표 2> 직업별 노동자 임금 인상 내역

분야별 노동자		임금인상 이전	임금인상 이후	인상률
굴진·채탄노동자	무(無)기능	160 ~ 200원	3,140 ~ 3,770원	18배
	기능	220 ~ 250원	4,400 ~ 5,040원	20배
	고급기능	270 ~ 300원	5,680 ~ 6,000원	20배
제철·제강노동자	무(無)기능	60 ~ 80원	1,560 ~ 2,380원	30배
	기능	160 ~ 200원	3,200 ~ 4,020원	20배
	고급기능	110 ~ 160원	4,840 ~ 5,250원	33배
화력발전소 보일러운영 노동자	무(無)기능		1,800 ~ 2,460원	
	기능		3,120 ~ 3,790원	
	고급기능		4,450 ~ 4,780원	
전자공업: 집적회로 생산	무(無)기능		1,200 ~ 1,460원	
	기능		1,730 ~ 1,460원	
	고급기능		2,260 ~ 2,400원	
농산물 생산 노동자	무(無)기능		1,320 ~ 1,570원	
	기능		1,830 ~ 2,080원	평균 2,300원
	고급기능		2,340 ~ 2,480원	
자동차운수 : 버스, 전차운전사	정원 25명		1,360 ~ 1,900원	
	정원 50명		1,460 ~ 2,010원	
	정원 100명		1,730 ~ 2,380원	
상업부문	상품판매		1,000 ~ 1,360원	
	농민시장 관리		1,000 ~ 1,260원	
	일반 노동자		1,000 ~ 1,260원	
급양부문	취사원		1,000 ~ 1,400원	
	요리사		1,450 ~ 1,600원	
	고급요리사		1,650 ~ 1,800원	
편의부문	일반이발		1,100 ~ 1,400원	
	고급이발		1,500 ~ 1,980원	
	사진제작		1,250 ~ 1,380원	

출처: 북한 7.1조치관련 「노동자 생활비 기준표」, 2002년 11월 북한현지조사, 2003년 6월 탈북자 면접조사, 국가안전기획부, 「북한편람」(서울: 1990), 남성욱, 앞의 책, p.40.

<표 3> 계층별 임금인상 내역

구분		월 임금 지급액		인상폭 (B/A, 배)
		인상전(A)	인상후(B)	
당정기관	당·정무원상상(省相)	300 ~ 350원	4,000 ~ 4,500원	13
	정무원 부부장	250 ~ 300원	3,500 ~ 4,000원	14
	도인민위원회 부원장, 군인민위원회 위원장	170 ~ 200원	2,800 ~ 3,000원	16
	당지도원	150 ~ 200원	2,500 ~ 3,000원	15
	중간관리자	120원	2,400원	12
공장·기업소	특급기업소 지배인	250 ~ 300원	3,500 ~ 4,000원	14
	1~2급 기업소 지배인	150 ~ 200원	2,500 ~ 3,000원	15
	사무원	140원	1,200원	9
외화벌이 사업소	금강산 관광 총회사 직원	150원	2,500원	17
	총지배인	300원	4,500원	15
대외무역	과장급	150원	3,000원	20
교원	대학교수	270원	4,000원	15
	대학강사	200 ~ 250원	3,500원	16
	일반교원	80원	2,400원	30
	유치원 보모	135원	2,400원	15
의사	평양산원(10년 경력)	120 ~ 250원	2,500 ~ 3,000원	12
서비스 분야 종사자	여관, 이발소, 식당 등 편의시설 종사자	20 ~ 60원	1,000 ~ 1,500원	25
	보통강호텔 10년경력환전상	120원	2,500원	21
	호텔 10년 경력 의례원	1,00원	2,000원	20
연예인	인민배우	200원	4,000원	20
	공훈배우	500원	6,000원	12
군인	소 장	247원	6,670원	27
	대 좌	219원	5,830원	27
	상 좌	197원	5,270원	27
	중 좌	185원	4,610원	25
	소 좌	163원	4,130원	25
	대 위	149원	3,780원	27
	중 위	107원	3,240원	30
	소 위	95원	2,970원	31

출처: 북한내부자료, 2002년 11월 북한현지조사, 2003년 6월 탈북자 면접조사. 남성욱, 앞의 책, p. 34.

셋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지금까지의 유명무실하던 배급제도가 공식적으로 폐기되고 국영시장에서 현물가로 구매하는 제도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95년 이후 식량배급은 거의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로였지만 북한주민들은 경제가 호전되면 배급이 다시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김일성과 김정일 생일에 이틀분 정도의 식량이 배급되곤 하였다. 그런데 7·1조치를 통하여 배급제가 전면 폐지된 것이다.

식량 품목에서는 배급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식량은 과거의 배급소에서 '판매'하고 있다. 대신 가구마다 식량 판매량이 할당되어 있으며 유상으로 구매해야 하는 것이다. 즉 식량 배급도 완전히 폐지되었으나 북한당국이 식량의 유통을 국가가 통제할 목적으로 과거의 배급소를 식량 상점으로 변경하여 가구당 정량제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는데 이것은 두가지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기업운영 전반에 대한 자율권 확대이다. 김정일의 2001년 10월의 지시내용은 계획작성, 가격제정, 자재공급 전반에 걸친 것으로서, 계획작성은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지표는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계획하지만 나머지는 해당 기업소에서 하도록 하였다. 지방경제 부문은 공업총생산액이나 기본건설 투자액 등 중요지표를 제외한 세부지표들은 도·시·군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가격제정에서도 지방공업 생산품(주로 소비재)은 상급기관의 감독 아래 공장 자체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재공급체계에서도 생산물의 일부분을 자재용 물자교류에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허용하였다.<sup>2)</sup>

다른 하나는 기업소내 종업원들의 식량공급을 기업소 내에서 자력갱생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주력 업종 외에 83소비품을 생산하여 이를 시장에 판매하여 수익금을 올려서 종업원의 월급으로 지급하라는 조치이다. 어떤 기업소에서는 시당위원회에서 7·1조치의 내용을 전달할 때 기업소 내의 부업을 통한 기업소내 식량 자력갱생을 주 내용으로 전달한 곳도 있다고 한다.

2002년 7·1조치를 당비서 및 공장 지배인이 종업원을 집합한 자리에서 전달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해당 공장의 주력상품 이외의 것을 생산해서 종업원을 먹여 살려야 된다고 지시하였으며, 지배인 및 당비서가 머리를 짜내서 종업원을 먹여 살리라는 것이다. 공장이 자체로 벌어서 종업원 먹여 살리는 것으로 선포하였다는 것이다.<sup>3)</sup>

요약컨대, 경제관리개선 조치의 골자는 그 동안 국가가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오던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를 최소화하고 유료화하며, 상품

---

2) 「조선신보」, 2002. 7.26일자

3) 탈북자 박0섭의 증언. 2003.7.18.



가격을 암시장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현실화하며, 개인과 기업소가 자력갱생하는 것이었다. 김정일이 “무상교육, 무상치료, 사회보험 등 사회주의 우월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을 제외한 일부 불합리한 사회적 시책들은 현실적 조건에 맞게 정리해야 한다”라고 지시(2001년 10월)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 2. 의도

7.1조치에 대한 당정 지도부와 간부들의 강연 및 해설 자료<sup>4)</sup>에 나타난 내용에서 북한 지도부가 7·1 조치를 취한 의도를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 가. 가격현실화를 통한 암시장경제의 통제와 공식경제의 정상화

북한은 그 동안 주요 생필품에 대하여 배급제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가격의 개념이 있을 수 없었다. 가격이 있기는 하되 생산 원가를 고려하지 않는 가격이며, 국가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배급하는 차원의 가격이었다.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가격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경제사업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미쳤음을 인식하고 있다.<sup>5)</sup> 국정가격이 농민시장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국가물자들을 무더기로 빼내어 암시장에서 비싸게 팔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장사행위가 성행하여 국가에는 상품이 부족하나 개인들에게는 상품이 쌓여있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보았다. 농민시장에 가보면 쌀을 비롯한 식료품으로부터 공업품에 이르기까지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상품이 다 있다고 지적하였다. 심지어 차 부속품과 국가적인 주요 원자재들까지도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암시장의 발달은 개인이 국가의 돈주머니를 털어 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다고 분석하였다.

국가가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은 이뿐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가령, 기차비나 버스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 번 수입을 가지고 운수수단들의 보수도 제대로 못하였다고 한다.

북한 당국의 이 지적은 매우 정확하며 현실을 직시한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지하경제의 규모는 엄청나며, 공식경제는 무너진 반면 지하경제가 북한 주

4) 『7·1경제관리개선 조치에 대한 강연 자료』(평양, 2002).

5) 위의 글, p. 2.

민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북한경제의 계획 메커니즘이 마비되기 시작한 이래 국영상점 혹은 배급소에서 물품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비공식부문은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공식부문에서는 계획경제라고 하면서도 계획을 수립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이 심각하게 된 반면, 북한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났다. 7월경제관리 개선조치와 관련한 북한의 내부 문건은 “솔직히 말하여 지금 국가에는 돈이 없지만 개인들에게는 국가의 2년분 예산액이 넘는 돈이 깔려 있다”고까지 언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비공식 부문이 확대되면서 달러화는 중요한 교환수단 및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북한의 비공식부문에서 통용되고 있는 달러화의 규모는 6억-1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규모이다.<sup>6)</sup>

북한이 7·1조치를 취한 중요한 배경의 하나가 바로 암시장 경제를 억제하여 공식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1조치의 핵심의 하나는 가격제정에서 국가보상은 일체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국가가격이 고정가격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능동적으로 조절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나. 분배제도의 개선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사회주의적 배급제에서 임금노동제로

7·1조치의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은 분배제도를 개선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7·1조치 강연자료는 사회주의분배원칙을 바로 실시하여 사람들이 실지 자기가 일한 것만큼 덕을 보게 생활비가 지출되게 했다고 밝히고 있다. 분배원칙에 관련된 북한의 7·1조치관련 지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는 분배에서 평균주의가 많았다.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생활비를 줄 때 기업소가 계획을 넘쳐 수행했다고 하여 일을 많이 한 사람인가 적게 한 사람인가, 기본 로력인가 보조부문 로력인가를 따지지 않고 모두 똑같이 계산해서 주었으며, 협동농장원들인 경우에도 농장에 나가 일을 잘했건 못했건 가동일수만 보장하면 한해 식량을 가족들에게까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다 주었다. 결국 지난 시기 사회주의분배원칙이 바로 실시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공짜와 평균주의가 지나치게 많다 보니 그것이 사람들속에 건달풍을 조장시키고 근로자들의 로력적 열성을 떨어뜨리게 하였으며 나아가

6) 정연호, “최근 북한의 달러화 사용금지 조치의 배경 분석,” 『KDI북한경제리뷰』 2002-12월호 (KDI, 2002), p. 9.

서 국가예산에서 적자가 계속 생겨 나라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보여 주는 사회적 시책들도 바로 실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자기가 탄 생활비를 가지고 생활하게 된다. 절대로 공짜, 평균주의가 없다. 누구나 다 자기가 번 돈으로 쌀을 제 값으로 사먹게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적용해 온 낮은 가격에 의한 식량공급제는 1946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시기 노동자, 사무원들의 실질생계비에서 식량값이 차지하는 몫은 불과 3.5%밖에 되지 않았다. 하루만 일하면 한달 식량을 사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애써 일하지 않고도 살아가게 되어 있었다. 일할 수 있는 많은 가정부인들이 사회에 진출하지 않고 일부 근로자들이 생산활동에서 열성을 내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특히 최근 년간에 국가가 식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직업마저 버리고 장사나 하면서 자기 개인의 리속을 채우는데로 나갔다.

지금까지 북한 체제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는 사회주의 명령계획경제체제 하에서 수동적이고 무사안일주의로 변화된 주민들의 작업태도를 극복하고 노동동원을 효율화하려는 것이다. 북한의 임금체계는 현물배급제로서 저렴한 가격을 지불하기는 하지만 무상에 가까우며 이 무상배급제도는 일하지 않고도 1인당 정액의 배급을 받는 것이었다. 이 제도 때문에 북한의 간부와 주민들은 열심히 일할 필요를 못 느끼었으며 노동생산성은 정체되어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연설에서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의 하나가 주민들과 간부들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독려하는 내용이다. 김일성의 말로 “사업작품에서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이기주의, 무사안일주의, 본위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질타이다.

일군들속에서 사업을 눈가림식으로 실속없이 하는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없애야 합니다. 사업에서 형식주의, 요령주의는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근본적으로 배치될 뿐아니라 당과 혁명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의 표현입니다. 사업을 형식적으로, 요령주의적으로 하는 사람은 걸치레로 발라맞추는데 버릇되고 건달풍에 물젖게 되며 나중에는 당을 속이는 것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발뺌을 하는 것과 같은 혁명가답지 못한 현상들도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7)

7) 김정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4년 5월 24일), 『김정일 선집』 13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405.

70년대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주민들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고양하여 노동에서의 요령주의와 무책임한 태도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사회주의적’ 인간개조사업의 이론적 기초로 활용되었다. 북한의 천리마운동, 속도전, 대흥단 정신, 성강의 봉화 등 농업과 공업부문의 각종 구호들은 노동력 동원에서 박차를 가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70년대에 새롭게 개정된 주체사상의 핵심도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명제를 앞세워 주민들 각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라는 내용이다.

7·1조치는 이데올로기나 사상교양, 집단생활, 인간개조사업으로는 노동동원에 실효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화폐 및 물질적 인센티브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의 현물 및 무상 제공을 없애고 일한 만큼 보수를 받아서 자력갱생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사회주의적 사회보장제도를 최소화 및 폐지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자력갱생이 국가단위의 경제발전 노선이었으나 이제는 개인차원의 생계유지의 개념으로 변화된다. 일하지 않고도 국가에서 공짜로 배급받던 제도는 폐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현물 배급제는 연령에 따라, 필요에 따라 1인당 정량의 현물배급을 받는 제도로서 김정일이 지적한 대로 ‘평균주의 분배’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평균주의를 지양하는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배급을 주던 것을 ‘자기가 일한 만큼’ 화폐임금으로 받아서 국영상점에서 구매하도록 한 조치이다. 가게에서 수입과 지출의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이번의 경제관리개선 조치는 노동보수제에 있어서 기존의 사회주의적 사회보장에 입각한 배급제도를 폐지하고 임노동에 의한 자력갱생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경제관리 방식 및 체제의 성격에서 큰 변화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새로이 도입한 보수제도는 자본주의적 임금노동 제도와 유사한 방식이다.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받는다는 ‘능력급제’를 도입함으로써 ‘실리보장’이라는 개념 하에 화폐적 보상을 중심 제도로 도입하여 노동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공짜로 주던 배급을 원가만큼의 가격으로 인상하고 생산성 만큼의 임금을 현금으로 주는 제도로 변경함으로써 기존의 북한식의 배분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분배의 평균주의 배제를 강조한 김정일의 관련 정책 지시내용(2001년 10월)에서 7·1조치의 취지가 분명히 드러난다.

- 사회주의 노동생활의 기풍을 확립해 건달을 부리거나 놀고 먹는 사람

이 없도록 해야 하며,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 향상시켜야 한다.

- 물질적 평가에 정치적 평가를 잘 결합시켜 노동량과 질이 높은 사람은 물질적 정치적으로 응당 평가를 받게 하며 분배에서 평균주의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 현실의 변화발전에 따라 노동에 대한 새로운 평가, 분배방법을 연구 도입해서 사회주의 노동보수제를 더욱 개선하고 완성시켜야 한다.

- 경제생활에서 공짜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하고 무상공급, 국가보상 기타 혜택들도 검토해서 없을 것은 없애야 한다.

김정일 지시내용의 핵심은 지금까지 국가가 공짜로 주던 제도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짜로 먹여주고 열심히 일하도록 사상적으로 독려하던 제도가 작동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놀고먹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경제전문 계관지 「경제연구 2호」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확히 실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분배에서 평균주의를 경계하고 있다. 이 잡지는 ‘경제관리 개선조치’이전의 ‘평균주의 분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나 건달(개으름)을 부리는 사람에게 다 노동의욕을 저하시키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며 놀고 먹거나 쉬운 일을 하려는 건달풍을 조장시킨다고 비판하였고, 특히 “공짜를 없애는 것은 근로자들의 노력적 열성과 창의·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 데서 중요한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sup>8)</sup> 즉 과거에는 노동의 양과 질을 묻지 않았고, 물질적 평가보다는 정치적 평가를 중요시한 잘못을 시인한 셈이다. 또한 7.1조치를 통해 평균주의와 공짜를 없애겠다고 주장하고 과거 국가 예산 중 74%가 공짜로 나가는 뭍이었다고 이의 척결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sup>9)</sup>

보수체계를 이념에서 물질로 개혁하는 것이며, 노력한 만큼 벌어서 현금으로 구매하라는 것이다. 생계수단을 자기가 일한 만큼 받는 수입에 의존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 다. 배급제 폐지 및 사회보장제도 축소를 통한 국가의 재정확충

7.1조치가 취해진 또 하나의 배경은 국가의 재정확충을 위한 것이다. 북한

8) 「연합뉴스」, 2003.7.9.

9)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한 김정일의 지시에서 인용

의 7·1조치 강연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사회적으로 공짜가 너무 많았다고 지적하고 이것을 모두 없애겠다고 밝혔는데 결과적으로 국가의 재정지출이 급감하게 된다.

국가예산에서 비생산적인 지출이 생산적 지출보다 더 많았으며 그 가운데서 공짜로 나가는 몫이 무려 74%나 되었다. 인민들에 대한 식량공급에만도 한해의 수십억원이 넘는 돈이 국가부담으로 지출되어 왔다. 돌격대원들에게도 그들이 한달에 자기 생활비의 40%정도밖에 벌지 못하지만 나머지 60%의 생활비를 매달 국가가 보장해 주고 매일 식비와 려비, 이동작업보조금까지 공짜로 주었다. 해마다 여기에 지출되는 돈만 해도 1억 수천만원에 달한다. 심지어 철도일꾼이라고 해서 그 가족들까지도 무임승차권을 가지고 려행하였다. 그밖에 무슨 가급금이요, 간식비요, 관람비요 하는것들을 비롯해서 국가적으로 공짜로 나가는 돈이 매우 많았다. 이달부터 국가가 협동농장에서 수매한 식량값에 일정한 부가금을 붙여 지금의 식량공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팔아 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의 실질생계비에서 식량값이 차지하는 몫이 50%정도 된다. 지난 시기에는 출장을 가면 량표 1장에 부식물값만 내면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출장자들이 그 어디에 가든지 쌀값은 반드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회주의는 누구나 자기가 일한 로동의 결과에 따라 번 것만큼 먹고 사는 가장 공정한 사회제도이다.

그 동안 국가가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오던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를 최소화하는 것은 곧 국가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제도로의 전환을 기도하는 것이다. 국가로서는 집세와 교통비를 포함하여 모든 무료 또는 무료에 가까운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였고, 국경에 국가세무국을 설치하여 고액의 세금을 징수한다. 이런 조치들은 모두 재정수입을 크게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의 재정이 확보되어야 국영기업과 국가기관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계획경제의 틀을 유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과거의 중앙정부의 힘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며, 국영상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고수하겠다는 의지이다. 조총련의 『조선신보』는 “나라가 허리를 펴 수 있도록 하는 현명한 조치”라고 평가한 것으로 보아 이번 조치의 목적의 하나는 국가재정 확충을 기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III.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주민생활 변화에 미치는 영향

#### 1. 긍정적 영향

##### 가. 기업의 자율성의 확대에 의한 부업의 활성화

7·1조치가 북한주민들에게 전달될 때 중요한 내용의 하나가 기업의 자율성 강화이다. 여기서 기업의 자율성의 강화란 곧 기업차원의 자력갱생의 강화를 의미한다. 중앙정부가 북한주민들에게 식량을 배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장 기업소에 원자재를 공급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장 기업소 단위로 자력갱생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종업원을 먹여 살리라는 의미이다.

7·1조치에서 기업의 자율성 강화에 포함된 의미는 공식경제가 가동이 중단되거나 가동율이 저하된 상태에서 주력업종 외의 상품이라도 뭐든지 가능한 것을 생산하여 시장에 판매하고 이 수익금으로 종업원의 노임으로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곧 기업차원의 부업을 장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부업은 과거에 8·3소비품생산 제도와 유사한 점이 있는데, 8·3소비품은 그 기업에서 사용하고 남은 짜투리 원자재를 활용하여 생필품을 생산하도록 한 것인데 반하여, 7·1조치에서 추가된 내용은 생산품의 내용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기업에 자율권 높여주고 기업자체로 먹고 살아라는 의미이다.<sup>10)</sup>

이러한 조치이후 각 공장 기업소의 부업의 실태는 공장의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실현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지방의 기업은 유희지를 불하받아 농사를 지어서 종업원들에게 식량으로 배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탈북자 박 00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이 근무했던 회령시 유선피복공장은 땅 5정보를 배정받아 그 땅에서 600톤의 식량을 생산하여 먹고 살았다고 한다. 공장기업소가 땅을 배정받게 된 경위는 지역의 산림보호원과 결탁하여 땅을 불하받았다는 것이다. 이 공장은 주위에 농촌을 끼고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고 한다.<sup>11)</sup>

또한 한 신발공장에서는 신발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가구를 짜서 이를 직원들의 노임을 주도록 하였다고 한다.

어떤 기업은 부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함흥 영해 수지공장의 경우이다. 이 공장은 북한 전국의 농업용 비닐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인데

10) 탈북자 윤0실의 증언. 2003.8.18

11) 탈북자 박0섭의 증언. 2003.7.18.

비닐은 생산하지 않고 부수입을 위하여 학생 가방을 만들어서 시장에 판매하여 수익금으로 공장 노동자에게 월급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김정일이 지난 4월 현지도 시에 이 사실을 알고 대노한 장면이 북한 TV에 10분간 방영되었다고 한다.<sup>12)</sup>

지역마다 편의봉사소에서 온천목욕탕을 운영하였는데 과거에는 국가소유였지만 이제는 기업소의 자율화 방침에 따라 목욕탕의 수입중에서 일정액의 세금을 국가에 내고 나머지는 자체로 처분한다고 한다. 관리방식이 달라진 것이다. 7·1조치 이전에는 입장료가 독탕이 5원, 대중탕이 3원씩이었는데, 이후에는 독탕이 15원, 대중탕이 10원으로 인상하여 수입금을 올렸으며, 이전에는 수요일에는 휴무했으나 이제는 휴무도 없이 일을 하면서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sup>13)</sup>

북한의 기업들은 이러한 상부의 지시를 기업의 부업 제도로 인식하여 기업소단위에서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업소 내 종업원의 개인단위 부업으로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즉, 기업소 내 종업원들로 하여금 기업소 밖에서 부업을 하여 일정한 금액을 기업소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90년대부터 음성적으로 시행해 오던 것이다. 공장 기업소 마다 한 달에 800원씩 내고 기업소 밖에서 부업을 하는데 기업소 밖의 부업이란 장사를 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최근 유행하는 말이 두 몫을 하라는 것인데 한 몫은 국가계획량을 달성하는 것이며, 두 몫은 8·3 제품을 생산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두 몫에서 더 나아가 세 몫으로서 개인장사를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원래의 8·3소비품 생산제도를 확대한 것으로서 몇단계의 변형을 거친 셈이다. 신발공장이라도 8·3제품으로 가구 등의 다른 상품을 만들어서 노동자의 월급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제도가 실제로 운영되는 것은 가구도 안만들고 노동자들을 장사 내보내서 회사에 800원씩 8·3자금으로 지불하게 한다는 것이다. 탈북자 황0국의 증언에 의하면 이러한 관행은 전 북한에 다 퍼져 있다고 한다.

노동자를 기업소 밖에 장사를 내보낼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직급이 자재인수원이다. 인수원은 매월 800원을 직장에 납입하고 대신 자유롭게 장사를 하러 다니는 직종이다. 인수원 100명중 99%가 개인장사를 한다고 한다. 7·1조치 전에는 300원을 납입하도록 했지만 이후에는 80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한

---

12) 정창현(중앙일보 기자), 통일연구원에서의 간담회 내용. 2003.7.10.

13) 탈북자 윤0실의 증언. 2003.8.18



다.

통일거리의 군고구마 장사는 유명한 사례이다. 기업의 자율성을 인정하여 고구마를 군고구마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액수의 세금을 국가에 납입하면 할 수 있다. 60여명 여성을 고용하여 군고구마를 판매한다고 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포함된 7·1조치를 북한에서는 ‘신경제체제’라고 칭한다고 한다.<sup>14)</sup>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기업 자율성 때문에 북한에서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sup>15)</sup>

#### 나. 국영상점의 사영 제도 확대

7·1조치로 각 개별 기업소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또 하나의 현상은 국영상점이 사영화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국영상점을 운영하는 지배인 또는 개인이 국가에는 이득금만 내고 나머지 이익금을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영상점이지만 국가가 상점에서 판매할 상품을 보급해주지 못하고 상점 지배인 개인의 개인적 수단으로 상품을 확보하여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직매점, 백화점은 결국 개인 운영으로 체제가 바뀌어가고 있다. 국가가 운영하는 상점의 상품이 모두 개인 상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익금은 개인의 몫이 되고 대신 국영상점을 사용하는 대가를 이득금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다. 즉, 형식은 국영상점이지만 실제 내용은 개인상점이다. 식당 중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식당은 거의 없으며 모두가 개인이 운영한다고 한다.<sup>16)</sup>

7·1조치이후 대부분의 국영상점 또는 식당들을 개인이 접수하였다. 소유는 국가이지만, 운영은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만 제대로 내면 누구 소유든 아무 상관 없다고 한다. 세금 즉 리득금만 내면 된다.<sup>17)</sup>

이 밖의 다른 업종에서도 개인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 가령, 바닷가에서 배를 소유한 개인이 여럿 있다고 한다. 배를 만드는 사람이 개인에게 팔기 때문이다. 개인 소유의 배를 가진 사람은 생선을 잡아서 판매

14) 탈북자 황0국의 증언. 2003.7.3.

15) 탈북자 박0섭의 증언. 2003.7.18.

16) 탈북자 황0국의 증언. 2003.7.3.

17) 탈북자 박0섭, 황0국 증언.

하여 개인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 다. 시장의 활성화와 제도화 - 종합시장의 등장

7·1조치가 취해진 직후에는 장마당의 개인장사는 모두 국영상점에 물건을 이관하도록 하고 개인장사를 금지했으나 이 조치는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7·1조치는 경제의 정상적인 가동을 전제로 하여 취해진 조치로서 각 기업소에서 생산한 만큼 월급을 주도록 했지만 공장 가동율이 20-30%에 불과한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은 일을 할 수가 없고 결국 임금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암시장에서 개인장사를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은 생계를 위하여 장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고 북한 당국에서도 이를 묵인하여 2002년 11월에 들어서는 국영상점의 물건을 다시 개인에게 환원해 주었다고 한다. 북한의 전 주민 중에서 농민들과 간부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장사해서 먹고 산다고 한다. 95년 이후 산 사람은 모두 다 장사해서 먹고 살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북한의 경제상황에 따라 농민시장이 활성화되고 북한주민이 생필품을 확보하는 주요 수단으로 정착하게 되자 북한당국은 암시장을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

국가가 생필품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7.1조치로 배급제를 폐지한 이상 주민들이 생필품 부족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상황에서 비공식 경제부분의 부분적 양성화 조치는 생필품 공급 증대, 고용창출과 소득 증대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시장을 양성화하였다.<sup>18)</sup>

2003년 4월 1일자 「조선신보」에 이어 6월 10일자 「조선중앙통신」은 종래의 농민시장을 공업제품의 거래를 허용하는 등 시장기능을 확대한 '종합시장'으로 개편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올해 들어 회계법이 채택되고 농민시장도 종합적인 소비품시장으로 확대되었다”면서 “경제와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이 취해졌다”고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 농산물 등 토산물 뿐 아니라 공업품까지 사고 팔 수 있는 종합시장이 북한전역에 조성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금년 8월 북한을 방문한 남성욱교수에 의하면 평양시내에 11곳에 서구식

---

18) 위의 글, p. 29.

시장을 건설 중이라고 관찰하였다. 그리고 평양 통일거리에 건설 중인 ‘통일거리(종합)시장’ 건물 사진이 중앙일보에 보도된바 있다.<sup>19)</sup>

종합시장은 장마당과는 달리 건물의 지붕이 있고 국가가 물자 거래에 개입하지 않으며 연중 상설 운영된다고 한다. 종합시장에는 개인 및 기관이 매대를 임대하여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시장건물에 매대를 설치하기를 원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평양시 인민봉사총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인이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종합시장에 개인의 입점을 허용한 것은 큰 변화로 볼 수 있다.

#### 라. 취로사업의 증가 - 새로운 일자리 창출

7·1조치이후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이 관측한 것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의 하나는 활발한 평양시의 재건축 및 건물 보수공사이다. 이것은 7·1조치이후 배급을 중단하고 주택사용료, 전기세, 버스요금, 전철요금 등 각종 세금을 대폭 인상한 데서 발생한 정부 재정수입이 확대된 데서 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한 것도 국가의 재정수입이 확대된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국가의 재정이 확충되었지만 공장가동율은 여전히 향상되지 않자 주민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취로사업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7·1조치이후 주민들에게서 징수한 세금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것은 주민들에게 새로운 생활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 마. 개인 생활의 자유화 진전

7·1조치는 많은 부문에서 중앙정부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조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간섭과 개입도 감소하였다.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이념적 동원보다는 물리적 인센티브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당적 지도를 담당하는 당간부의 숫자와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주민들은 기업소 생활이 옛날보다 다소 자유로워졌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당원은 총화가 남아 있지만 사로청은 총화가 거의 없어졌다고 한다.

---

19) 「중앙일보」 2003년 6월 26일.

중국에 많이 다니면서 사람머리가 깨어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면서 예전보다 자유롭게 말한다고 한다.<sup>20)</sup>

## 2. 부정적 영향

### 가. 암시장 경제의 혼란

7·1조치 이전에는 가격이 안정되고 생활이 안정되어 가고 있었다. 그런데 7·1조치로 이전의 암시장 경제가 혼란스러워졌다. 7·1조치 직후 처음에는 주민들이 매우 어리둥절했다고 한다. 번만큼 분배한다는 해설 자료만 본 수준이었다. 주택사용료, 전기료를 얼마나 내야 할 지 몰랐다. 주민들은 흔히들 “이제 장사를 통하여 살만 한데 간첩이 있나?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지?”라고 생각하곤 했다고 한다.<sup>21)</sup> 어떤 이들은 처음에는 변화를 기대하고 좋다고 생각했으나, 7월이 지나면서 못살겠다고 불평이 들끓었다고 한다.<sup>22)</sup>

7·1조치는 시장을 양성화하여 종합시장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등의 긍정적 영향을 낳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암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가가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아 고정된 임금이 없는 일반주민들에게는 인상된 물가와 세금이 그만큼 부담으로 남았다.

그래서 북한주민들은 7·1조치 이전까지 암시장에서 장사를 통하여 살아가는 생활이 정착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가만 수십 배로 인상되는 조치가 도입됨으로써 생활고가 심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물가 인상으로 암시장 경제에 혼란이 초래된 것이다.

물가가 급등하여 생활고에 허덕이며, 국가에 지불해야 될 세금이 과중하다. 이전에는 전기세 등의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였는데 이제는 세금이 매우 과중하다. 가령, 전기세는 70배 올랐다. 개인땅도 10평이 넘으면 세금을 낸다.<sup>23)</sup>

이번 조치가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은 물가가 너무 인상되었고 국가에 지불해야 할 집세, 전기세, 교통비 등의 세금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으로서 북한주

20) 탈북자 황0국의 증언. 2003.7.3.

21) 탈북자 윤0실의 증언. 2003.8.18

22) 홍00(탁아소 관리, 2002년 8월 탈북),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2002. 12. 20.

23) 위의 증언.

민들의 부담은 대폭 증가한 반면, 공급측면의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생활고와 물가고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sup>24)</sup> 평양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임금이 제대로 지급될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덜하며, 그렇지 못한 지방의 일반주민들에게는 손해가 더 크다.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노동제가 제대로 가동될 수 없다.

가격인상 및 임금제도에 대해 이미 북한 주민들이 불평을 하고 있다. “그전에는 일을 하지 않고도 그럭저럭 살았으나 이제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되었다”고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는데서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배급제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기는 했지만 이제 제도마저 없어진다는 것은 국가의존적인 인성을 가진 북한 주민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인식되고 있다.

7·1조치에 대하여 주민들이 가장 불만을 느끼는 사항은 물가가 폭등하여 장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평백성들은 장사를 목숨걸고 하였는데 물가가 지나치게 인상되어 소비자가 구매력이 없어 장사가 안되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7·1조치 직후에는 국정가격으로만 팔아야 한다고 했다. 암시장에서도 국정가격으로 거래하라고 하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었다. 국정가격은 군대와 안전부만 동했지 백성들은 모두 암시장 가격으로 구매했다고 한다. 어찌해야 좋을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고 한다.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몰랐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사람들을 더 조였다. 고난의 행군 겪으면서 중국 드나들던 사람이 많아져서 감시가 더 심했다.<sup>25)</sup>

그렇지만 직장 나가서 일해서 월급 받아봐야 그 노임을 살 수 없다. 장사를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사를 계속하였다고 한다. 월급으로 생활이 안되고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생활이 안되었다.<sup>26)</sup>

장사에 다시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7·1조치 이후에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장사에 나섰다. 당원들은 생활총화에 무조건 참가해야 하지만 직맹들은 달랐다. 어디나 돈으로 고이면 다 눈감아 주었기 때문이다. 안전원, 보위원, 군대는 저 땅에서는 그저 살 수 있지만 노동자들이 불쌍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배급 안주어도 좋으니 장사나 마음대로 하게 해달라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었다. 7·1조치 나왔을 때 장사를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인민들을 죽게 하는 것이라고 불만이 많았다.<sup>27)</sup>

---

24) 위의 증언.

25) 탈북자 윤0실의 증언. 2003.8.18

26) 위의 증언.

27) 위의 증언.

## 나. 사회보장제도의 축소

북한주민들은 사회주의란 식량을 포함한 모든 생필품을 국가가 배급해주는 제도라고 인식할 정도이다. 실제로 배급제도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핵심적 특징 중의 하나이다. 배급제도가 식량과 식료품 뿐만 아니라 의복, 주택 등의 기초 생필품을 포함하며,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의 제도 하에 교육, 의료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에서 7·1경제관리개선 조치 관련 강연회 자료에 의하면 공짜를 없애라는 김정일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국가에서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키기 위해 무상치료제, 무료의무교육제, 사회보장제와 영예군인우대제를 비롯한 30여 가지의 사회적 시책들은 계속 실시하면서 이에 대한 국가적 지출을 더 늘리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가령, 연로보장자들의 연금과 영예군인보조금을 비롯한 연금, 보조금은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영예군인보조금과 낮은 연금액은 더 올려 놓았다고 한다. 또 부모 없는 어린이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을 데려다 부양하는 세대들에는 부양자 1명당 매달 300원 정도의 보조금을 더 주게 된다고 한다. 노력자가 없이 아이들만 사는 세대, 부양해줄 자식들이 없이 늙은이들만 사는 세대, 부부가 다 일할 수 없는 환자로서 아이들만 있는 세대에는 가족 1명당 한 달에 600원 정도의 생활보조금을 주게 된다. 육아원, 애육원, 야영소들에서는 원아들과 야영생들의 쌀값까지도 다 국가가 부담해 준다. 그리고 앞으로 나라의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따라 근로자들의 생활비도 그에 맞게 계속 높여주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 헌법과 사회보장법 등을 보면, 북한은 제도적으로는 완전한 사회보장이 가능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 헌법에는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 병약자·노약자·어린이 등은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의료시설, 국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72조).

북한은 사회보장제도 면에서 선진국보다 앞서 있음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보장 시책은 제도와 실천 간에 커다란 괴리를 보이고 있다. 필요한 재원의 부족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정년퇴임자의 연금제도는 법적으로는 완비되어 있지만 실천이 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서 정년퇴임 후 남한으로 귀순한 김산<sup>o</sup>의 증언에 의하면, 정년퇴임자에게 배급 600g, 노임 60원을 주도록 되어 있지만 배급은 물론, 노임도 받지 못한다고 한다. 노임은 저금통장에 문서상의 임금만 해주지만 인출은 못한다고

한다.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퇴직하면 살기가 매우 어려워진다고 한다.<sup>28)</sup>

북한이 사회보장제도에서 가장 앞서워 자랑하고 있는 부문은 ‘무상치료제’인데 이것도 역시 경제난에 기인한 재원부족으로 실현이 거의 안되고 있다. 특히 농촌과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병원은 의료기구와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적십자사와 국제민간지원단체들이 밝히고 있다. 북한은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 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헌법 제56조)고 규정하고 있다.

7·1조치를 계기로 배급제가 폐지되고 주택세, 전기세 등의 주요 공과금이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보장제도가 대폭 후퇴한 효과를 낳고 있다.

#### 다. 국가의 기능변화: 보급기능에서 징세기능으로

7·1조치는 국가의 차원에서 볼 때 배급제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공급의 기능이 중단되었다. 대신 인민들의 자발적 사영 영업에서 발생하는 이득금을 걷어 들이는 징세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7·1조치이후 북한 당국은 재정수지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모든 주민생활에 필요한 생산수단과 생필품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집세, 전기세 등 그동안 무료나 마찬가지로 저렴한 세금을 내고 살았던 주민들은 이제 고율의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식량난 이후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농민시장에서 장세가 15원에서 50원으로 올랐으며, 개인토지 1평당 12원씩 토지세를 내도록 조치하였다.<sup>29)</sup>

지금까지 북한의 국가의 기능은 주민들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무상에 가까운 가격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 주된 기능이었다고 본다면, 이제는 그러한 공급 기능은 소멸된 셈이다. 대신 다양한 형태의 세금을 높은 세율로 징수하는데 국가의 기능이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8) 김산0 (전 의과대 당비서, 2001년 10월 입국),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2002. 11. 13.

29) 탈북자 박0섭의 증언. 2003.7.18.

## IV. 북한주민의 의식구조 변화

### 1. 일반적인 차원

#### 가. 돈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물신주의 등장

배급제도가 폐지되고, 임금노동제가 도입되었으며, 종합시장제도가 도입된 상황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양식과 사회의식을 혁명적으로 바꾸었다. 이전에는 당과 수령에 충성하면 생계가 보장되었지만 이제는 노동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상품을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 제도에 살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제도와 큰 차이가 없는 방향으로 체제가 변화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돈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

물가가 천장부지로 뛰어오르고 모든 것을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며, 현물배급제에서 화폐경제로 완전히 이행함에 따라 돈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변화하였고, 사상이나 이념은 2선으로 후퇴하고 물질 우선의 사고방식이 강화되고 있다. 이전에는 월급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으나 이제는 월급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 이전의 월급은 용돈 개념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생활비 개념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과거 배급체제 하에서는 현금이 별 의미가 없었던 데 비하여 이제는 명실상부한 화폐경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 변화는 7·1조치를 계기로 바뀌어진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기존의 변화를 7·1조치가 제도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7·1조치이후 북한의 간부나 안내원들이 남한 방북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달러를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전에 비교해 본다면 엄청난 변화이다. 돈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며 또 한편으로는 과거보다 생활이 어려워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남북회담에서 북한측이 금강산에서 회담하기를 고집하는 이유도 해당기관에서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 나. 장사에 대한 의식 변화

7·1조치이후 주민의식의 변화 중에서 괄목할 만한 것은 개인 차원에서 돈 벌기 위하여 머리를 쓰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평양 통일거리의 군고구마장



사가 한 예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에 대하여 북한 관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것이 대세라고 인식한다는 것이며, 장사에 대하여 거부감이 없어졌다고 한다. 북한 간부들이 7·1조치에 대하여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한다고 한다. 공급이 안되어 가격이 상승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것을 ‘경제개혁’이라고 칭해도 좋다고 김정일이 지시했다고 한다. 김용순이 비공개석상에서 ‘개혁’이라는 말을 썼던 적이 있으며, 대외적으로 나가서 개혁이라는 말을 써도 좋다고 허가받았다고 발언하였다고 한다.<sup>30)</sup>

사회주의체제에서 장사를 지속하기 위한 논리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 즉, 장사를 해도 집단적 기관이나 국가를 위한 것이면 된다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벌어서 국가에 보답하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사회주의 장사는 자본주의 장사와 다르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보위부는 장사에 대하여 계속 문제제기를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정책의 방향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주의 요소 통제가 기관의 임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편, 배급제가 폐지되고 장사에 의존하여 살고 있는 북한주민들은 배급제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과거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배급을 타서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 다. 책임감과 근로의욕의 강화

배급에 의존하던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배급제가 없어지자 국가에 의존적인 의식이 많이 쇠퇴하고 대신 더 많은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창의적인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평양의 군고구마 장사와 같은 기업가적인 발상을 토대로 한 장사 및 기업이 싹을 트고 있다.

또한 7·1조치를 도입한 목적의 하나가 북한 주민들의 노동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인바, 이 목적에 관한 한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공장 기업소의 가동율이 낮은 제조업 분야에서는 7·1조치의 성과가 없지만 가동이 가능한 농업분야 및 광업분야에서는 성과가 있다. 농업과 광업 분야는 생산 성과

---

30) 정창현(중앙일보 기자), 통일연구원에서의 간담회 내용. 2003.7.10.

만큼의 임금을 주도록 하는 7·1조치가 성과를 발휘하여 경제가 회생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가령 농민의 경우 생산량의 15%를 토지사용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85%를 농장에서 자체 분배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의욕이 높아졌다고 한다. 광업의 경우도 생산량이 석탄생산량이 증가하여 화력발전소 가동율을 높이고 북한의 전기사정도 호전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상점이나 식당 등의 서비스업종의 경우 매출액에 상응하여 월급을 받는 종업원들의 노동에 대한 태도는 이전에 비하여 현저하게 달라졌다. 북한을 방문하는 많은 방북자들은 7·1조치 이전과 이후의 태도를 비교할 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고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가령 평양의대병원에 기증한 한민족복지재단의 의료기기들을 정상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품들을 요구하는 편지가 한민족복지재단에 매우 자세하게 그리고 매우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평화자동차에서 일하는 북한 사람들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생산량을 높이기 위하여 일요일에도 나와서 일한다고 한다.

노동에 대한 물질적 인센티브가 주어진 이후 노동의욕이 급격히 증가하여 노동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북한 지도부가 7·1조치를 취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바로 노동의욕의 창출에 있다고 본다면 그 정책은 크게 성공한 셈이다.

## 2. 사회주의에 대한 의식 변화

배급제도가 지난 50여 년간 북한 주민들의 의식구조를 지배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북한주민에게는 배급제는 곧 사회주의를 의미하였고, 사회주의는 곧 배급제를 의미하였다. 그런데 그런 배급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90년대 중반이후 배급이 양이 줄거나 중단될 때에는 경제가 호전되면 배급이 다시 원상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기대도 없어졌다.

명실상부하게 배급제도가 폐기된 것이다. 북한주민들에게는

사회주의 = 장사 않고 배급 탄다

비사회주의 = 장사해서 먹고 산다

라는 의식이 구조화되어 있다. 이런 인식 하에서 북한주민들은 장사를 해서 먹고사는 현실에 대하여 “낮에는 사회주의하고 밤에는 자본주의한다”는 식으로 표현한다.<sup>31)</sup>

그렇다면 김일성 사후 95년 이후 배급을 안주었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비사회주의로 먹고 살았던 셈이다. 북한에서는 장사를 통제하기 위하여 ‘비사회주의 그루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던 것을 보아도 장사는 곧 비사회주의이며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자본주의라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 주민의 대부분이 장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사회주의를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그 대안은 사회주의의 개념을 다르게 정의하는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의 개념이 변경되고 있다. 최근 30권짜리 『조선대백과사전』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정의를 집단주의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사회이며, 그 내부의 협동적 소유, 국가적 소유---상관없이, 집단적 형태로 운영되면 사회주의이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사회주의의 본질 및 기본 속성은 집단주의라는 것이다. 시장요소 = 자본주의, 북한의 시장화 = 자본주의화라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다. 북한은 사회주의를 소유의 여부로 정의하지 않고 집단주의 여부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이 1994년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연설이 사회주의를 집단주의로 재정의하는 근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역사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될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자면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로부터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인류사회 발전의 역사적 총화이다. 자본주의는 개인주의를 극소수 자본가들의 무제한한 탐욕으로 전환시키고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의 적대적 모순을 극도에 이르게 하였다. 한편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현시대는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한 자주성의 시대이다. 이것은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로 넘어가는 것이 역사발전의 필연적요구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하여 준다. 집단주의는 사람의 본성적요구이다. 사람은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활동하여야 생존하고 발전할수 있다. 사람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사회성원들의 집단적 협력에 의해서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수 있으며 자주적요구를 실현할수 있다.<sup>32)</sup>

31) 탈북자 박0섭의 증언. 2003.7.18.

32)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에 발표한 논문, 1994년 11월 1일) 「김정일 선집」 13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454-455.

### 3. 배급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

북한은 배급제에 대하여 “국가가 공급량이 제한 되어 있는 상품의 분배와 소비를 조절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품을 판매, 공급하는 임시적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sup>33)</sup> 그리고 일반적으로 배급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품종과 수량이 지정되며 국정배급가격이 적용된다. 북한에서 배급제는 일제식민지통치의 후과로 아직 상품을 많이 생산하지 못하고 소상품경리형태와 자본주의적 경리형태가 존재하였던 시기에 국영부문의 노동자, 사무원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배급제를 실시하였고, 1946년에 실시된 노동자, 사무원들에 대한 식량배급, 1947년에 실시된 공업상품을 비롯한 일부 생활필수품에 대한 배급 및 조국해방전쟁의 어려운 시기에 배급제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후에 와서 농업생산이 늘어나고 소비품생산이 급격히 성장하여 공업상품에 대한 배급제는 폐지되었으나 식량배급제는 식량공급제로 전환되었는바, 이것은 당의 인민적 시책의 구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식량을 포함한 주요 생필품에 대해 배급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주민들의 식량과 기본적인 생필품을 제공하여 주민 생활의 물질적 담보를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사회주의의 성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배급제는 정부가 주민들의 물질적 생활을 담보하는 것으로 배급제의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의미를 널리 선전해 왔다. 정치적인 의미에서 북한 당국은 배급제를 통해서 모든 주민들의 식생활을 보장하는 공산주의에 가까운 제도를 구현하고 있다고 선전해 왔다. 모든 주민들에게 식량과 기본적인 생필품을 배급하는 이 제도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지도력과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을 유도하는 제도로 활용해 왔다.

한편 배급제는 주민들의 사회생활을 완전 통제하여 김일성-김정일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배급제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통해 한국 전쟁 이후 단시일 내에 동원 가능한 자원을 중공업 우선 발전이라는 사회주의체제의 발전전략을 통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자본축적과 동원에 절대 필요한 제도였고, 배급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능한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배급제를 통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식량과 생필품을 제

33)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건」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666.

공하기보다는 잉여 농산물을 중공업 발전에 우선적으로 돌리고 최소한의 식량과 생필품을 주민들에게 제공하였고, 이는 주요 생필품을 생산하는 경공업 발전을 등한시하였고 만성적인 생필품 공급 부족 현상을 빚어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북한 당국은 주요 생필품에 대한 파격적인 무상공급과 더불어 이들이 선전해 온 무상의무교육, 무상치료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선전해 온 것은 인권보장을 위한 물질적 담보가 김일성-김정일 지도자의 시혜라는 정치적 선전도구의 일환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소련과 동국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국제적 고립 등으로 빚어진 경제난 악화와 식량난 부족으로 사회주의 핵심인 배급제는 실제적으로 붕괴되었고, 국가는 주민들의 생필품 보장을 사실상 포기하였다. 따라서 많은 북한의 주민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기아로 사망하였고, 현재도 기아의 위협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북한 당국은 유엔 등 국제사회와 남한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였고 미국, 일본, 중국 및 남한 등이 식량을 제공하는 주요 지원국이 되었다.

국가가 식량 및 주요 생필품을 보장하는 것을 포기하자 주민들은 생필품 해결을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상황으로 내던져 졌다. 따라서 주민들은 자구책으로 장사를 하든지 밀수 및 국가 소유의 곡물들을 탈취하는 등 사회적 일탈행위가 증대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공개처형 등은 주요 인권남용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식량난은 다양한 사회적인 병리현상을 낳고 있는바, 가정파괴로 인한 고아들의('꽃제비') 양산, 결혼과 출산 기피, 어린이들과 산모의 영양 악화, 청장년의 신체 악화와 탈북자 증대로 인한 노동력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배급제와 관련, 7.1조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반응은 북한의 경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고 사회주의체제의 핵심인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미 오래전에 배급제에 대한 기대는 포기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주민들에 대한 배급은 사실상 없애면서 당, 정, 군 간부들에 대한 배급제의 지속되고 있어 주민들의 냉소적인 태도는 심화되고 일반주민들의 당정 간부들에 대한 반감은 계급갈등의 양상을 띠고 발전하고 있다.

일반주민들은 배급제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여 이미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다. 일반주민들은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직장에 나가지 않고 모두 장사에 종사하거나 8.3제품 생산에 종사하여 장마당에 팔아(장사) 연명하고 있다.<sup>34)</sup>

---

34) 탈북자 박0섭의 증언. 2003.7.18.

이에 따라 일반주민들의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인식과 충성은 사라지고 있다.

탈북자 순0범은 김일성 사후 배급제는 무너졌으나 군부대, 안전원, 보위부 등은 1-12월까지 한꺼번에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일반주민들은 7.1 조치 이후에도 만성적인 물자부족과 물가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 경제사정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고 7.1조치에 비판적이나 어쩔 수 없이 순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35)</sup> 탈북자 황0국은 7.1조치로 과거의 배급제를 없앴다고 했으나 당, 정 간부들은 아직도 배급을 주고 있다.<sup>36)</sup>

<표 4> 2002년 2월과 2003년 2월 농민시장 주요 가격(단위:북한 원)

물품(단위)	2002년 2월	2003년 2월
쌀(1kg)	48 ~ 55	130 ~ 150
옥수수(1kg)	20 ~ 32	75 ~ 85
두부콩(1kg)	60 ~ 70	180 ~ 190
식용유(1kg)	160 ~ 200	600 ~ 650
달걀(1알)	10 ~ 13	22 ~ 25
돼지고기(1kg)	160 ~ 180	360 ~ 380
미원(453g, 한 봉지)	180 ~ 190	420 ~ 430
사탕가루(1kg, 설탕)	130 ~ 150	400 ~ 420
휘발유(1kg)	130 ~ 150	330 ~ 350
경유(1kg)	80 ~ 100	280 ~ 300
가루비누(중국산450g)	60 ~ 70	165 ~ 175
담배(국산 한 갑)	45 ~ 50	70 ~ 80
담배(외국산 한 갑)	100 ~ 110	230 ~ 240
이발비(한번)	5 ~ 10	15 ~ 20

자료:월간 탈북자들(탈북자동지회 발행) 2003년 3월호 최근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작성한 것. 1달러=150북한 원.(북한 공식 환율)

출처: 동아일보, 2003년 6월 20일

#### 4. 시장에 대한 인식 변화

탈북자 김0실(여)은 이제 시장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장 문을 닫으면 단 하루도 먹고 살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하고 있다.<sup>37)</sup> 북한에서 시장은 모든 생필품의 조달과 함께 식량난 극복을 위한 경제

35) 탈북자 순0범의 증언, 2003.7.8.

36) 탈북자 황0국의 증언, 2003.7.3.

활동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탈북자 황0국은 주민들이 모두 장사를 해서 식량난을 해결하려고 나서고 있고 시장에서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맞는 선에서 결정되고 있고, 쌀, 신발, 의복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점이 점점 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시장이 제도화, 전문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시장의 발달은 현금이 중요 유통수단이 등장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채놀이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sup>38)</sup>

그러나 문제점은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가격인상에 따른 인플레이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주민들의 고통만 증대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북한과 같은 가난한 경제에서 만성적인 물자 부족과 물가 상승 압력은 불가피하고 물리적인 가격 통제마저 사라졌기 때문에 주민들은 인플레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sup>39)</sup>

<표 5> 함남 이원군 농민시장 물가

물품명	가격(원)
쌀(1kg)	185-195
밀가루(1kg)	160-170
돼지고기(1kg)	300-330
쇠고기(1kg)	330-350
계(1kg)	3,500-4,500
운동화	400-1,000
중고자전거	25,000-50,000
중고냉장고	50,000-60,000
중고전기밥통	6,000

\* 출처: 정창현(중앙일보기자) 방북 취재자료(2003. 5.23)

또한 새로운 정책과 제도에 대한 사전교육 미비와 중간 간부들의 권력 남용 등으로 주민들의 불평이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시장을 공식화하는 반면 주민들에게 인기가 좋고 잘 팔리는 일본, 중국제 상품은 국영백화점에서만 취급하여 이득이 많은 상품에 대한 국가독점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장을 통한 개인의 장사는 이득이 많은 중국 물품은 판매를 금지시키고 있고, 중간 간부들의 부패는 시장의 유통 품목 등 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하여 주민들을 혼란시키고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

37) 연구원에서의 인터뷰, 2003.7.29.

38) 연구원에서의 인터뷰, 2003. 7.4.

39) 탈북자 순0범의 증언, 2003.7.8.

다. 즉 상품 매매 시에 개인이 판매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직매점에 넘기라고 위협하고 뇌물을 주면 묵인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어떤 물건을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를 몰라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어 7.1조치에 불만이 많다고 김0실은 진술하였다.<sup>40)</sup> 중간 간부들은 새로운 시책과 규정을 부당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물공급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만성적인 공급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에서는 물가 및 임금인상의 동시조치가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고, 외생적 경제지원이 없는 경우에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괴리가 필연적으로 다시 확대되는 등 '가격의 이중구조 현상'이 심화되어 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은 더 제약을 받을 것이다.

## 5.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의 변화

북한은 경제난과 식량난의 악화와 자본주의 사조의 유입 등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김정일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 미국과 일본의 경제적, 정치적 안전의 담보를 요구하고 있고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관계 발전으로 남한의 경제적 지원이 절대 필요한 실정이다.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국제적인 고립을 탈피하고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요소의 수용과 자본주의 국제질서에서의 편입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은 과거의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 북한 사회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북한의 문학 작품에서도 서서히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60년대는 남한에서의 해방전쟁을 역설하고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열성적으로 성토하였다. 1970년대는 자본주의 멸망이라는 역사적 법칙보다는 자본주의의 영속성을 인정하면서도 통일전선전략에 의해 민족자본가들에 대한 수용과 포섭을 강조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는 사회주의권의 쇠락과 몰락,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편입 가능성 및 북한체제의 생존을 위해서 자본주의 요소의 전면 또는 부분적인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자본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점차 유화적인 면을 띠고 있고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도 현

---

40) 김0실, 연구원에서의 인터뷰, 2003. 7.29.



저히 열세에 있는 북한은 대남 비방에서도 남한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보다는 특정 집단과 개인의 비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41)</sup> 그러나 체제유지와 대내 정치적 이유로 미국과 남한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강경하고 자본주의에 비판적인 선전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 당국도 1990년대 들어 경제난 해소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주요 작동 원리와 그 효율성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이윤추구를 위해서 경제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있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고, 사회주의도 개인의 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쟁과 이윤을 추구하고 부를 축적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생산증대를 위한 동기유인과 관련, 평등한 사회구축이라는 정치적, 이념적 동기유인은 자본주의체제가 이용하는 물질적 동기유인보다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자본주의에 대한 포용이 넓어진 것은 이념적인 아량보다는 북한의 당면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남한을 포함한 해외자본유치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남북경제협력의 강화를 기대하면서 남한의 재벌과 자본가를 수용하는 유화적이고 현실적인 태도를 취하고 금강산 관광개발, 신의주와 개성 등에 경제특구 및 공단 설치에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계획경제 메커니즘은 무력해지고 배급제 및 국영상점의 기능은 거의 마비되었다. 그리고 생필품의 절대적 부족으로 암시장 등 비공식 경제부분의 사적거래가 성행하고 물가는 급등하는 등 경제관리의 난맥상은 계속되었다. 이에 대응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조직 개편, 기술혁신 등을 시도했으나 그 효과는 미진하였다. 북한 당국은 2002년 7월 1일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한 김정일 지시'를 발표하여 경제운용에서 자본주의 요소를 가미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7.1조치의 목적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견지하면서 강성대국을 건설을 추구하는 것으로 시장경제를 향한 전면적인 개혁이 아니라 시장경제 요인을 도입하여 계획경제시스템을 정상화하려는 '사회주의체제 내의 개선 또는 개혁'으로 볼 수 있으나, 지금까지 급기시 되어 왔던 자본주의시장경제 요소를 대폭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자들은 개혁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번 7.1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품가격과 임금 인상, 배급제 폐지와 환율 인상, 공장과 기업소의 자율성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이 주요 특징이다.

현재 북한의 현실에 비추어 보아 자본, 노동 및 신기술의 혁신적인 증가로

41) 이우영,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 변화」 (통일연구원: 서울, 2000).

생산증대를 성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자본과 노동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려는, 곧 내부적으로 퇴장되어 있는 자본을 공식부문으로 동원하고, 노동 인센티브 강화로 노동력의 추가적 동원 하려고 하는 것이다.

쌀값을 기준으로 생필품 값과 주요 외화를 현실화하는 등 가격인상 및 환율인상을 단행하고 농민시장을 상설 시장으로 공식화한 것은 농민시장 및 암시장 등 비공식부문의 경제활동을 공식부문으로 유인, 흡수하여 자본을 자체적으로 동원하고 국가의 재정 수입도 확보한다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 또한 자본 배분과 소득 분배를 시장의 가격기능에 점진적으로 맡기는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꾀하는 획기적인 조치이다. 농촌의 협동조합, 공장 및 기업소들의 자율권 확대는 경제관리체제를 시장경제에 접근시키는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모색하려는 조치이다.

임금인상으로 노동인센티브를 제고한 것은 비공식부문의 높은 가격과 공식부문의 낮은 임금으로 노동인센티브가 크게 저하된 것을 제도적으로 수정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차등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사회주의 분배원칙에 합당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가 경제운용 방식이 명령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정치적 유인 제공에서 물질적, 개인적 유인 제공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7.1조치에 대한 당정 지도부는 효율적인 경제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간부들과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개혁 전문가인 장광호 국장(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대경추)은 전국을 돌며 자본주의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고, 북한 당국은 평양에 국제경영대학원 설립에 합의하여 자본주의 경제 운용에 대한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북한 안내원들은 과거와는 달리 공개적으로 봉사료를 요구하고 있고, 민간지원을 접수하는 단체들도 정확한 숫자를 밝히는 등 합리적인 사고도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42)</sup>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고 정몽헌 현대회장에게 개성공단의 개발을 계기로 자신과 지도부는 사회주의가 비효율적이며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으며, 남한의 기업가들이 북한 사람들에게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그 효율적인 첩경을 잘 지도해 줘야 한다고 언급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sup>43)</sup>

그러나 7.1조치에 대한 간부들과 일반주민들의 인식의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군민위원회의 간부는 7.1조치를 설명하면서 주민들에게 앞으로 두 몫, 세 몫 해야 한다고 교양하고 있는 반면 주민들은 직장일 외에

42) 김형석(한민족복지재단), 연구원에서의 인터뷰, 2003.7.1.

43) 「중앙일보」, 2003. 7.1.

빛자루나 옷 등을 만드는 부업을 해서 생산량을 늘리라는 의미로 받아 들였다고 한 탈북자는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간부나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장사를 잘해 인민과 국가에 기여한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가정주부인 이순희 주부가 부업인 군고구마 장사로 돈을 번 이야기를 널리 선전하여 노동 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자본주의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sup>44)</sup>

또한 탈북자 황0국은 7.1조치를 왜 취했는지는 모르나 초기에는 개방인줄 알았고, 개방은 곧 자유를 의미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는 장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up>45)</sup> 개방에 대한 준거들은 중국의 개방·개혁 정책을 지칭한다고 기술하고 있다.<sup>46)</sup>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분명한 의식 없이 자본주의를 실천하고 있는바, 주민들 거의 모두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장사에 종사하고 있다.

주민들이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장사에 종사하여 분명한 의식이 없이 자본주의의 삶을 영위하는 숫자는 증대되고 있다. 중국 거주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북한에서 장사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92.5%에 이르고 있다(표-6 참조).<sup>47)</sup> 또한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세대는 90% 이상이 48.9%, 80% 이상이 79.5%로 전체 응답자의 평균은 81.9%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북한 가정이 장사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48)</sup> 또한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남한에 대한 소식을 직접, 간접으로 전해 듣고 남한의 경제발전과 풍요함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외부 정보에 접한 경우에 자본주의 사회의 장점을 익히 알고 있어 탈북과 귀순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탈북자 황0국 등 많은 경우에 남한이 잘 사는 줄은 알았으나 이렇게 잘 사는 줄은 몰랐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무의식적으로 자본주의 양식에 의존하고 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44) 「중앙일보」, 2003. 6.26.

45) 탈북자 황0국과 순0범의 증언, 2003.7.3과 2003.7.8.

46) 탈북자 현0인의 증언, 2003.7.9.

47) 좋은 벗들, "북한주민의 사회·경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사," p. 39.

48) 위의 논문, p. 38.

<표 6> 북한의 장사경험

장사경험	사 례 수(개)	비 율(%)
경험있다	482	92.5
경험없다	39	7.5
계	521	100.0

\*출처: 좋은 벗들, “북한주민의 사회·경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사,” p. 39.

## 6. 김정일에 대한 태도

일반적으로 북한주민들은 김정일에 대해 나름대로 실무적이고 통솔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다. 특히 김정일이 1973년 이후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 세력기반을 구축해 놓았다는 것과 당 조직지도부 등 억압기구를 관장하고 자기 주변에 많은 정보요원을 활용하여 바깥세상 정세를 비교적 정확히 판단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김정일의 퇴폐적이고 자유분방한 성격이나 돌출적이고 예상치 못하는 행동 등도 긍정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듯 보인다. 김정일의 돌출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성격도 북한주민들에게는 이것이 북한의 의도대로 “통이 크고 대담한” 성격으로 학습되어 있는 형편이다. 물론 김정일이 1992년 군최고사령관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이 軍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김정일을 군최고통수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정일에 대한 인식은 성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성분이 좋은 사람은 김정일에 대해 일반적으로 좋게 이야기한다. 북한주민 전체를 일직선상에 놓고 볼 때 일반적으로 주민의 10% 정도는 김정일에 대한 열렬한 광신도라고 볼 수 있으며, 반대쪽의 10%는 그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정치에 대한 언급은 삼가며 경제가 잘못된 것은 김정일 때문이 아니라 중간간부들의 잘못 때문으로 생각한다. 이들 중에는 경제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개방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자기 자신이 불만이 약간 있더라도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일에 대한 충성노선을 따를 수밖에 없으며, 혹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김정일을 지지한다.

그러나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분명한 현상 중의 하나는 주민들이 “김정일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다”고 생각하고 이를 친한 사람들에게 표현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sup>49)</sup> 그 이유는 김정일은 1974년 후계자 확정 이후 김일성 위상화를 위한 ‘기념비적 대건축물’ 축조에 과도한 예산을 지출함으로써 인민경제를 피폐화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50)</sup> 주민들의 이러한 인식은 ‘7·1 조치’ 이후에도 크게 변화된 것 같지는 않다. 체제불만 때문에 탈출한 탈북자들의 증언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지만 대체로 김정일에 대한 평가는 김일성보다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김정일이 경제회생을 위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이미 형성된 선입관으로 인해 주민들은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sup>51)</sup>

북한주민들은 기본적으로 ‘7·1 경제관리개선’ 조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sup>52)</sup> 정확한 내용이나 당국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간부 자신들도 잘 몰랐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지도 모른다. 단지 이전의 화폐개혁 시기처럼 새로운 조치가 내려졌나보다 하는 정도의 인식이었던 같다. 따라서 김정일에 대한 태도 또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다. 기존의 김정일에 대한 태도는 2중적이었던 것 같다. 김일성의 아들로써 ‘미제’로부터 국가를 보위한 지도자라는 인식과 경제난을 심화시켜 많은 주민들을 굶겨 죽인 독재자라는 인식의 공존이다.<sup>53)</sup>

북한언론은 ‘7·1 조치’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써 주민들의 사기가 올라갔고 주민들이 김정일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선전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탈북자들은 대체로 외부로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내심으로는 김정일에 대한 불만이 점증하고 있다고 증언한다.<sup>54)</sup> 물론 ‘7·1조치’가 발표됐을 당시 주민들은 ‘개방조치’라고 인식,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개방조치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해 왔던 주민들은 김정일의 조치에 대해 ‘이제야 올바르게 가는 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sup>55)</sup>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불만으로 전변되었다. 일반인들은 월급을 1개월 또는 2개월분 밖에 수령하지 못한 반면, 일부 ‘수완 좋은 사람들’은 장사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7·1 조치’가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킨 것이다. 더욱 큰 불만은 물자부족과 물가인상에서

49) 탈북자 정재광의 증언. 1997.4.17.

50) 장맹렬, “북한경제의 문제점과 내부구조: 내재적 접근,” 황의각 외, 『북한 사회주의경제의 침체와 대응』 (서울: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1995), p. 94.

51) 정창현(중앙일보 기자), 통일연구원에서의 간담회 내용. 2003.7.10.

52) 북한민주화네트워크, 『Keys』, 2002.10월호, p. 31.

53) 탈북자 윤0실의 증언. 2003.8.18

54) 탈북자 박0섭의 증언. 2003.7.18.

55) 탈북자 황0국의 증언. 2003.7.3.

비롯되었다. 월급은 제대로 받지 못한 반면, 물가는 수십 배가 상승했다. 이러한 불만은 자연스럽게 김정일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졌다.

김정일은 '7·1조치'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계법'<sup>56)</sup> 등 각종 개혁입법을 시도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이 법은 선진 회계기법 도입과 각 기업의 재무회계 결과를 발표토록 함으로써 북한이 분명한 대외개방 의지를 보여준 사례이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이 현재 북한주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현재 김정일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김정일의 신임받는 사람들, 김정일에 의해 등용된 간부들, 항일투사들, 김일성과 빨치산투쟁한 사람들뿐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이 당장 '김정일 타도'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아직도 '3인중 1명'은 당,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등과 연계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한 탈북자는 "앞에 내놓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원수님 있을 때는 일없었는데 김정일이 김일성의 위신을 깎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는 말하지만 앞에서 얘기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세월이 어떤 세월인가, 나 아니면 믿지 못하는 세월인데...앞에서는 충신인데 뒤에서는 모두 간신입니다. 내가 보위부 지도원이라면 뒤에서 돈벌이하고 잘 살고 있으면서 앞에서는 일하는 것처럼 합니다."<sup>57)</sup>

결국 '7·1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김정일에 대한 인식, 즉 김정일 등장 이후 경제난이 심해졌다는 판단에는 큰 변함이 없는 것 같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를 노골적·집단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하고 있고 그 기간은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 7. 당 및 간부에 대한 태도

'7·1 조치' 이후 주민들의 노동당에 대한 태도는 해당 기관의 당간부에 대한 태도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7·1 조치'는 해당 기관의 당간부들에 의해 설명되어 졌다. 그러나 당간부도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이와 관련한 증언을 들어보면 "국가가 뭘 의도하는지 모른다. 간부들도 잘 모른다. 이번에 7월 1일에 국가적으로 '실력경제'<sup>58)</sup>를 실시하기에 앞서 군당책임비서들 앞으로 비행기로 상자가 내려왔다고 한다. 이걸 6월 31

56) '회계법' 전문은 통일부, 『주간 북한통향』 제652호, pp. 55-61 참조.

57) 북한민주화네트워크, 『Keys』, 2003.6월호, p. 17

58) 실력경제란 실력 즉 능력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새로운 보수체제를 포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밤 12시 이전에 그 누구도 헤쳐 볼 수 없도록 했다고 한다. 퍼진 소문이 그렇다. 그 상자를 밤 12시에 열어보니 거기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 다 있었다고 한다”<sup>59)</sup>는 내용이다.

사실 북한주민들은 이미 어떤 ‘중대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지는 않았고,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다. 물론 그 동안 화폐와 관련된 ‘긴급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금번에도 화폐교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7월 1일 신경제를 실시한다는 소문이 나서 벌써 6월부터 사람들을 뒤숭숭하게 만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화폐를 교환한다, 개혁개방을 한다, 별 말이 다 돌았다.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돈을 트렁크나 배낭에 넣어서 은행에 저금시키겠다고 막 뛰어갔다. 은행에다 저금 안시키면 화폐 교환할 때 다 무효로 해버린 과거가 있기 때문이다. 89년도에 그랬다. 그 때 개인에게 천원이 있든 만원이 있든 관계없이 일인당 399원만 바꿔줬다.”<sup>60)</sup>

노동당에 대한 인기는 당원가입에 대한 열망으로 규정지어 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는 당원이 아니면 간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당원가입을 선호한다. 그러나 경제난이 심화된 90년대 초 이후 경제분야 종사자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료에 대한 인기도 점차 하락하였다. 더구나 경제난으로 인해 관료들의 부패가 증가하면서 당이나 당관료에 대한 불만도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7·1 조치’ 이후 물자부족으로 인해 밀무역 및 암시장이 더욱 확대되면서 당이나 기관원의 통제도 강화되었는 바, 이것은 비례적으로 권력기관에 대한 ‘고임(뇌물)’을 증가시켰다. 따라서 주민들의 당이나 권력기관에 대한 불만이 증가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sup>61)</sup>

한편 노동당이 노동자나 농민의 생활을 보장해 주지 못하면서 통제만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의 당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에서도 단위책임자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출근을 안하느냐고 따지러 찾아가면 ‘밥 못먹어 출근 못하겠다’고 하면서 싸움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등급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단위책임자가 기업관리하기 어렵게 됐단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자기 아래의 노동자들이 밥을 먹지 못하고 있으면 먹여야 하겠는데 무작정 일 시키자니 되지 않을 소리고...”<sup>62)</sup>

‘7·1 조치’ 이후 기업소나 협동농장의 지배인, 공장장, 당비서 등은 그 책

59) 북한민주화네트워크, 『Keys』, 2002.12월호, p. 41.

60) 위의 책.

61) 탈북자 윤0실의 증언, 2003.8.18.

62) 북한민주화네트워크, 『Keys』, 2003.6월호, p. 41

임이 막중하게 되었다. 모두 다 ‘자력갱생’을 통해 소속 노동자나 농민들에게 월급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각 사업 단위에서는 월급지급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아이디어를 짜고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업으로는 도저히 자금조달이 어려워 우선 자재인수원을 많이 고용하여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면 근무나 ‘총화’를 면제해 주는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또한 ‘8·3 인민소비품’을 만들어 팔아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정상적인 물품이나 자재를 불법판매나 훼손하는 일이 빈번하다. 물론 이러한 일은 ‘7·1 조치’ 이후에 등장한 현상은 아니지만 더욱 확대되었다. 따라서 해당 관료가 소속 근로자들을 책망하기가 어려워 졌고, 그 만큼 조직질서 유지가 어렵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같은 직장의 하급 당관료에 대해서는 동정하거나 동류 의식을 갖지만 중앙당 간부나 고급관료들에 대해서는 반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7·1 조치’ 이후 물품부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암시장은 더욱 교묘하게 발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지고 간부들의 횡포도 가혹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민들은 식량난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지만 배급제의 폐지로 식량 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최소한 군당 과장급 이상에게는 암암리에 식량공급이 이루어짐으로써 간부들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간부들은 배급품을 암시장에 내다 팔아 재산을 축적하기까지 하는 바, 주민들은 유사시 간부들을 공격하겠다고 다짐할 정도이다.

아울러 간부들이 부정을 저질러 더욱 부자가 되는 데 대한 불만도 많은 것 같다.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불만인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빈곤의 차이’가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더 불어날 것이고 못사는 사람은...큰놈(부자)들은 돈을 몇 만달러씩 가지고 있죠. 그걸로 디젤유 장사, 공업품 장사, 자동차장사..권력자들을 끼고 크게 장사를 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은 발전하기 힘듭니다. 차이가 심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집에 가도 일본사람 못지 않게 삽니다. 못사는 집에 가면 장판도 못 깔고 사는 한심하게 사는 집이 많습니다.”<sup>63)</sup>

---

63) 위의 책, p. 72.



## 8. 남한에 대한 태도

해방직후 김일성은 미국이 한반도 전체를 식민지로 만들고 '괴뢰' 정권을 세우려 한다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김일성의 시각은 이후 북한의 대남 인식 기초가 되었다. 김정일 시대인 현재까지도 이러한 관점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남한을 식민지로 보는 시각 때문에 북한은 일제식민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항일무장독립투쟁을 한 것처럼 '미제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항미무장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도발을 지속하고 핵·미사일 문제로 미국과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며 '선군정치'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도 이로부터 출발한다. '민족론' 및 '민족해방론'을 주장하는 이유도 유사하다.

한편, 남한정권에 대한 북한의 기본인식은 '파쇼'이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북한은 기회있을 때마다 '파쇼타도'와 '민주정권 수립'을 주장한다. 민주정권 수립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파쇼론'은 남한 최고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도록 한다. 이러한 일련의 대남 시각은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세뇌되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를 사실로 받아 들인다.

그러나 '7·1 조치'이후 남한에 대한 태도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개인이나 기업의 자력갱생 원칙이 자리를 잡으면서 중국이나 일본, 남한 물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외제에 대한 거부반응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북한내 소비재의 90%정도는 중국산이고 일본, 남한산도 상당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비록 대북 지원식량이나 생필품이 주민들에게 직접 배당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돈이 필요한 군인이나 관료들이 배당된 식량을 '암시장'으로 빼돌림으로써 주민들이 남한의 대북 식량지원을 알게 된다.

한 탈북자는 장마당에 쌀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보내온 쌀도 있고...”라고 말하면서 “포대에 대한민국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한민국이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뭐 관계가 있나, 대한민국 쌀포대도 사람들이 끌고 다니고 합니다. 먼저 군대 주고 나머지는 배급을 꼭 줘야하는 특급기업소인 무산관광, 김철연합, 황해제철, 순천비날론 그런 곳에 줍니다. 그런 곳까지 멈춰 서게 되면 조선은 망하니까.”라고 증언하였다.<sup>64)</sup>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남 적개심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특히 다만 아직도 열악한 처지에

---

64) 위의 책, p. 70.

있는 주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이판사판식’의 사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탈북자는 “한끼 국수야 일없고 죽 한그릇씩 먹는다고 합니다. 군대는 항상 조국을 지키고 있으니깐 백성들은 못줘도 군대는 줘야지, 군대까지 못주면 안된다는 겁니다. 정세가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전쟁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중국을 오가며 살아도 잘 살지 못하니 싸움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sup>65)</sup>

결국 ‘7·1조치’ 이후의 상황으로만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지만 최소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부터는 남한의 대북 지원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sup>66)</sup> ‘비통’을 통해 남한이 자신들보다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경제난으로 인해 중국과의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을 통해 남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남한에 대한 막연한 동경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67)</sup>

다만 아직까지도 중국방문을 비롯한 해외경험을 해보지 못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남한을 ‘미제식민지, 파썸’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

65) 위의 책, 같은 쪽

66) 탈북자 윤0실의 증언. 2003.8.18.

67) 위의 증언

## V. 지역 및 사회집단별 차이

7·1조치는 일한 만큼 월급을 받는다는 것이 핵심적인 정책 내용이며 또 실제로 그렇게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간에 월급 수령 여부에 큰 차이가 있다. 공장 기업소는 가동율이 20-30%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공장기업소 종업원의 20-30%만이 월급을 받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정상 근무하고 있는 국가 공무원과 군인들은 정해진 월급을 받는다. 월급의 액수의 차이를 떠나서 월급을 받느냐 못받느냐의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로 된 것이다.

결국 평양은 대부분 국가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인 반면 지방 도시들은 공장 기업소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지역적으로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정상 출근 하는 부문의 종사자들은 7·1조치에서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문의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신 정상 출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암시장에서 장사를 함으로써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다. 출근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시장 기능에 적응한 사람과 적응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도 있다. 장사를 하는 사람 중에는 정상출근하여 월급을 받는 사람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사례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본다면 장사는 영세한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이익을 본다고 볼 수 없다.

결과적으로 지방 사람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더 높을 수 밖에 없으며, 암시장 지향적인 사회의식을 더 많이 발달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탈북자의 증언은 7·1조치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잘 드러내 준다.

7·1조치에 대하여 처음에는 호기심이 컸다. 개방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종이쪽지로 내려오는 것 뿐이다. 공장에 가봐야 기계가 돌아가지 않으니, 놀지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게 했다. 생산되는 것만큼 공장에서 먹고 살아라고 하지만 공장에 원료가 있나 에너지가 있나. 먹고 살 것이 없다.<sup>68)</sup>

이러한 집단별, 지역별 차이 때문에 북한체제와 김정일에 대한 인식에서 양극적인 차이를 보인다. 정부 부문에서 일하는 간부층들은 매우 긍정적인 태

68) 탈북자 황0국의 증언. 2003.7.3.

도를 가지고 있다. 98년 이후 북한의 간부층들은 체제의 안위에 대한 안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난의 행군에서 살아남았으며 체제붕괴의 위기를 극복하여 체제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난의 행군시절을 외부인에게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자신일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면서 과거보다는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90년대 후반이 굶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다.

97년경에는 중국의 심양이나 연변에서 나온 이야기로서 신의주 일대에 절반 이상이 김정일에게서 마음이 떠났다고 평가하였다. 김주석 사망 이후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는 안도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군’이라는 용어에 친근감이 묻어나는 의미로 사용한다고 한다. 교육의 효과일 수 있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의 압살책동에 사회주의 나라를 지켰다는 인식으로 통일되어 있다고 한다.

김일성이 나라를 되찾고 세웠다면 김정일은 90년대 후반의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간 명장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지방 출신의 탈북자들이 생각하는 만큼 김정일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sup>69)</sup>

그런데 지방의 주민들은 불만이 더 많아졌다. 절대적인 빈곤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지방 주민들은 월급도 없이 땅 뒤져서 농사짓고 장사하고 중국 왔다갔다하면서 먹고 산다는 것이다.<sup>70)</sup> 그에 반해서 제 때에 월급타는 사람들은 시당 간부, 법다루는 보위부, 안전부, 검찰소, 재판소 사람들, 군인들이라는 것이다. 당간부, 책임비서, 조직비서들의 경우 돈을 내고 배급을 받기는 하지만 양정사업소에서 매달 100kg씩 공급이 된다고 한다.

탈북자 박00의 경우 다니던 피복공장에서는 아무도 월급을 못 받았다고 한다.<sup>71)</sup> 공장의 간부들도 월급이 없기 때문에 농사지어서 산다는 것이다.

농촌의 농민들은 토지에 매여 있기 때문에 떠나기가 어려우며, 의식의 차이가 많이 난다. 농민은 중국 가면 죽는 것으로 생각할 만큼 순종적이다. 도시의 사람들은 자루라도 메고 중국에 가서 뭔가를 사와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군대에 대한 인식도 매우 부정적이다. 집에 침입하여 훔쳐가는 것이 모두 군대라는 것이다. 군인들 때문에 집 지키는 사람이 필요하다. 부인이 장사 나가면 남편은 집에서 집을 지킨다고 하여 남자를 ‘자물쇠’라고 부르

69) 정창현(중앙일보 기자), 통일연구원에서의 간담회 내용. 2003.7.10.

70) 탈북자 박0섭의 증언. 2003.7.18.

71) 위의 증언.

곤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가에 대한 불신도 매우 크다. 국가에서 어떻게 한다고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한다. 7·1조치이후 물가를 너무 올려놓으니 물건이 잘 안팔려서 장사도 힘들어 졌다고 한다.

이들에게 사회주의라는 말은 아예 입에서 없어졌으며 언제 개방하느냐에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 북한주민들에게 개방이라는 말의 의미는 장사를 맘대로 하게 하고, 직업도 마음대로 고르게 하는 것 등 자유를 달라는 것이다. 7·1조치 이후 뭔가 달라지겠구나 하고 기대하였는데 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개방도 아니다. 풀어놓지도 않고 개인농도 아니고, 배급도 안주고, 장사라도 하게 할 것이지” 하면서 불만을 토로한다고 한다.<sup>72)</sup>

앞에서는 사회주의 구호를 외치지만 뒤에서는 “저 개새끼들 언제 쓰러지겠나” 라고 생각하지만 말은 못한다고 한다. 말은 못해도 속으로는 욕을 많이 한다고 한다. 특히 김정일 욕을 많이 하는데 “나라 수령이 사람들 다 죽인다, 정치를 잘못한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경제봉쇄해서 못산다고 가르치지만 요즘은 사람들이 왜 못사는지를 다 안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는 것을 김정일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

72) 위의 증언.

## VI. 정책적 함의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7·1조치 이후 북한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의식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공급 부문이 회생되지 않으면 7·1조치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기존의 일반적 평가이다. 이러한 평가는 7·1조치의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출 경우에 나올 수 있는 평가이다. 그러나 7·1조치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북한의 사회와 사회의식에 얼마나 변화가 왔느냐는 측면에서 볼 때는 7·1조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도 임금노동제가 도입되었다는 점, 종합시장이 도입되었다는 점, 배급제가 공식 폐지되고 국가의 징세기능이 강화되었다는 점, 주민통제를 사상이념에서 화폐로 전환하였다는 점 등이 중요한 변화이다.

이와 더불어 주민들의 의식구조가 많이 변화하였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의식이 화폐주의 및 물질주의로 급변하였다 점이다. 당국에서 강조하는 사상 의식이 퇴색하고 물질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배급제가 공식 폐지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급제는 곧 사회주의로 인식해오던 북한 주민들에게 사회주의를 정당화하기가 어려워지자 사회주의의 개념도 변화되었다. 즉 사회주의는 집단주의라는 의미로 재해석되고 있다고 한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를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이념적 특화가 무력해지고 있는 셈이다.

배급제가 붕괴되고 모두 일한 만큼 월급을 받는다는 임금노동제와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집단별 지역별 소득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경제가 회생될수록 7·1조치의 본래의 취지가 가속화되어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종합해 볼 수 있다. 즉,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의 근간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노동제에 유사한 분배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배급제가 폐지되고 대신에 일한 만큼, 생산한 만큼 노임을 지불하는 제도로 변화됨에 따라 자본주의의 임금제도에 유사한 분배제도가 도입되었다. 과거 칼 맑스가 자본론에서 자본주의의 본질을 임금노동제에 근거한 잉여가치라고 지적한 바를 상기한다면 북한의 배급제의 폐지와 임금노동제의 도입은 큰 의미를 갖는 변화이다.

둘째, 배급제도가 공식 폐지되기 이전부터 북한 주민들이 대부분의 생필품을 암시장에서 구매하던 현실을 양성화하여 종합시장 제도를 도입하여 과거

에 암시장에서 판매를 금지하던 공산품까지 허용하는 등의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계획경제 제도가 마비되고 시장제도가 대체되고 있는 과도기적인 단계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셋째, 사회주의의 개념을 과거에는 생산수단의 소유여부로 설명하였는데 이제는 집단주의의 사회주의의 본질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배급제가 곧 사회주의라고 인식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배급제 폐지 이후에 사회주의 개념을 집단주의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주의의 본질에서 후퇴한 조치이다.

넷째, 과거에는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동원의 수단을 주로 주체사상 등의 이념에 의거하였는데 이제는 임금노동제에 근접하는 물질적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 70년대 이후 주체사상의 본래적 기능이었던 노동동원의 기능이 실패한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변화를 추구하는 대북정책의 차원에서 볼 때 북한사회의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7·1조치가 북한 내부의 요구 때문에 나온 것이지만 남북관계에서의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북한 당국에게 경제지향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화해협력 정책을 지속하고 교류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북한당국에게는 북한이 7·1조치 및 경제성공을 위해서라도 남한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또한 7·1조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외적 수혈이 필수적이며 대외적 수혈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최근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중문화 다양화 실상 및 전개방향

2003. 9

연구책임자 : 이 우 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 요약 〉

### I. 서론

북한의 문화는 정치사회체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변화방향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체제의 주요한 변혁기마다 문화체제의 성격도 변화하여 왔다고 볼 수 있고,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상 정치사회화의 매체로 기능하는 문화체제에는 새로운 정책방향이 즉각 반영되기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문화를 통하여 체제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본 연구는 선군정치가 대두된 1999년 이래 북한대중문화의 전개양상을 검토함으로써 최근 북한문화의 변화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체제의 변화를 전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II. 북한의 군중문화와 대중문화

문학예술에서 인민성이란 바로 인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 창작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인민의 입장에서 인민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민의 해방과 행복한 미래의 건설에 복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학예술 작품은 인민의 이해관계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인민대중이 알 수 있는 형식과 내용에 인민이 소망하는 바를 담아야 한다.

인민성의 개념이 인민의 입장을 대변하며, 이들을 지향하고 공통의 가치체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대중문화와 일정 부분의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 문학예술이 인민을 위해 존재하지만 인민 그 자체가 주체가 되지 못하며, 대상으로 존재하며, 문화활동에서 주체는 어디까지나 당이며, 인민들은 당에서 제시한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외의 선택은 차단되어 있다. 문화의 수용자인 대중의 여론이 폐쇄되어 있으며, 국가로부터 제시된 메시지만이 전달된다는 점에서 북한에서는 취향공중에 의한 선택 문화로서 대중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대중문화의 대중성과 군중문화의 인민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 대중성과 인민성 비교

	대중문화(대중성)	군중문화(인민성)
공급주체	대중문화 자본	국가
수용주체	불특정 대중	인민
지향	소비	생산(혁명투쟁제고)
주제	대중적, 보편적	교훈적, 혁명적
결과	경제적 이익	의식교양
수용방식	선택적 수용(양방향)	강제적 수용

북한에서 대중(군중)문화란 ‘전문 작가, 예술인이 아닌 인민대중에 의하여 군중적으로 창조되고 발전하는 문학예술’이며, 군중문화사업은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과 기술문화지식수준제고를 위하여 군중적으로 진행되는 문화사업’<sup>1)</sup>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군중문화사업에서는 “문학예술을 대중화하며 광범한 근로자들을 문학예술활동에 참가시키는 것은 군중문화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된다. 북한은 중요한 시기마다 문학예술을 통한 군중문화사업을 벌여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인 군중문화사업으로는 문학예술소조의 조직·운영, 예술소조 축전 진행, 개인별 예술활동 진행 등이 있는데, 이러한 군중사업을 통하여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면서 주체사상화를 실현할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

‘인민취향형 군중문화’는 중앙단위 예술단이나 방송언론 등을 통하여 대중취향적 문화를 공급하는 것이다. 생활소재 가요의 보급과 같이 인민정서를 반영하는 예술활동이다. 북한의 대중문화를 매체의 특성에 맞춰 대중문화의 활동이 본격화된 시기는 대체로 1980년대 중반으로 잡을 수 있다. 이 시기 북한의 가장 큰 화두는 ‘조선민족제일주의’였다. 조선민족제일주의가 국가지도이념으로 확립되면서 각 분야에서 민족적 특성을 찾는 작업이 시작되었고, 문학예술 분야에서는 민족적 전통을 살리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조선민족 제일주의는 민족적 특성을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문화적으로는 문화적 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전자음악이나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는 경희극, 생

1) 「문학예술사전(상)」(과학기술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pp. 246-247.

활상을 반영한 드라마의 보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

1990년대 이후 대중취향적 군중문화는 이전의 문화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그 특징은 무엇보다 공연중심에서 방송매체 중심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규모 중앙공연단의 공연과 달리 보천보전자악단은 텔레비전이나 방송을 주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소재에 있어서도 대중매체의 특성에 맞추어 부분적이거나 생활소재를 바탕으로 한 생활가요가 보급되었다는 점이다. 북한 문화의 이러한 변화는 최근 대중문화의 다양화와 변화 현상이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점이라 할 수 있다.

### Ⅲ. 최근 북한의 문화정책

최근 북한의 문화는 이전과 다른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화예술 활동이 국가에 의해 관리되고 전개된다는 점에서 최근의 변화양상은 그 자체로서 북한 내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며, 북한체제와의 변화의 징후로 파악할 수도 있다.

최근 북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미국이다. 북미관계가 악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반미사상 교양을 강조하는 작품이 강조된다. 최근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의 주제가인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이 21세기에 영원히 불려져야 할 노래로 각광받는 배경에는 김일성 주석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반미감정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역시 북한 문화정책의 변화 요인이 된다. 2000년 이전의 북한 문학예술은 주로 남한 사회의 부조리와 부정부패, 민주인사에 대한 탄압, 독재 등의 부정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6·15공동선언 이후 남한 사회에 대한 문제보다는 민족에 초점을 두면서 통일을 소재로 한 작품이 양산되었다. '통일돈돌라리' '통일경축의 아리랑' 등 민족적 색채의 작품과 통일을 소재로 한 작품이 나온 것도 이러한 정치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다.

한편 사회주의 체제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상교양을 강화하였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설·담화 등을 통한 사상 교양을 강화하여 '자본주의적 풍조'에 대해 경계하면서 '군대문화 따라 배우기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정신무

장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문화적인 탈출구를 마련하고 사회분위기 반전을 위한 대중사업을 강화하였다. 북한 정권 수립이후 지금까지 지속해온 이념전파의 한계성이 드러나면서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문화 사업의 강화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최근의 문화정책은 사회구성원의 변화에 따라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들의 욕구를 수용하면서 선택의 폭을 조금씩 넓혀가는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 고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 IV. 최근 북한 대중문화의 실태

최근 문화정책은 포용 범위 안에서의 다양성을 허용하며, 내용에서는 웃음, 문화정책의 주체로서 선군의 역할 강화로 요약된다.

문화의 다양성은 최근 북한의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00년을 전후하여 북한의 대중문화는 다양한 양상으로 보이고 있다. 생활문예의 다양화는 변화된 인민의 욕구를 반영하면서 다름대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1980년대 중반 전자음악의 수용으로부터 본격적인 출발점을 잡을 수 있다. 즉 이전까지 전자음악에 대하여 부정적인 북한이 전자음악을 수용하여 변화된 인민의 정서를 반영하였던 것이다. 북한의 생활문예는 가요가 중심이 돼 이 끌고 있다. '음악정치'가 등장하였으며, 부르기 쉽고 따라 배우기 쉬운 노래의 창작과 대대적인 보급이 나타났다.

생활문화를 다양화하면서 문학예술 작품의 내용은 웃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역설적으로 웃음이 강조되는 것은 현실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최근 들어 김정일식 통치방식으로 강조되고 있는 노래정치를 언급하면서 '노래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선군시대의 문화정책의 중심축은 군문예 단체이다. 선군시대의 개막에 따라 조선인민군협주단 산하의 공훈합창단을 별도의 단체로 독립하고 새로운 경향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경희극(코메디) 창작을 군산하 예술단체에서 주로 창작케 하고 있다.

최근의 북한 대중문화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북한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대중문화 창작에 있어 주체적 창작지도체계와 창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작품 창작의 논거라 할 수 있는 기존의 문예관과 문예이론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 동구사회주의권 붕괴, 구소련 해체 등에 따른 북한체제의 동요를 우려하여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 '우리식 사회주의', '붉은기 사상', '고난의 행군', '선군사상', '4대제일주의(우리수령·우리사상·우리군대·우리제도 제일주의)' 등과 같은 일련의 사상운동을 전개해 왔는바, 그 과정에서 대중문화를 체제 결속 및 사상결집을 위한 선전·선동수단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대중문화 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최근 대중문화 작품에서의 서정성이 풍부해지는 경향이 있다. 여성의 생활과 정서를 담은 노래, 어린이에 대한 노래, 젊은이들의 사랑에 대한 노래 등과 같은 북한의 생활가요에서 잘 나타나며, 북한의 보통사람들의 생활과 현실을 주제 및 소재로 한 영화작품에서도 잘 엿볼 수 있다. 또한 서정성은 북한 문학작품에서도 잘 나타난다.

1990년대 이래 북한의 대중문화는 모든 장르에 있어 주제 및 소재가 다양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음악부문에서 주제 및 소재의 다양화는 1990년대 들어 현저하게 증가한 생활가요의 창작·보급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영화와 텔레비전부문에서도 작품의 주제 및 소재가 다양해졌다.

반면에 선군정치 표방 이래 군사물 주제 영화작품들도 다량 창작, 보급되고 있다. 인민군군인들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반영한 대표작은 <비행사 길영조>, <병사를 사랑하라>, <젊은 참모장>, <소속 없는 부대>, <복무의 길>, <우리 정치위원> 등이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월남자가족을 소재로 한 작품과 이산가족문제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대중문화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적인 것은 전반적으로 정치성·사상성이 약화되고 오락성과 대중성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양상은 생활가요의 창작·보급, 전자악기를 사용한 경음악과 가요의 창작·보급 등에서 엿볼 수 있으며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의 오락성 강화와 남녀애정문제 부각 및 남녀애정관계의 감각적 묘사 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 V. 북한 사회의 변화와 대중문화의 의미

‘선군정치’란 ‘선군혁명’으로 불리는 김정일 시대의 통치방식, 정치방식을 말한다. ‘선군(先軍)’이라는 단어에서도 나타나듯 그 핵심은 모든 사업에서의 ‘군대우선주의’를 말한다. ‘군사중시정치’, ‘총대중시정치’도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선군정치는 당연히 문학예술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선군정치’가 문학예술 분야에 적용되어 탄생된 것을 곧 ‘선군혁명문학예술’(또는 ‘선군문학예술’이라고도 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선군시대’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문학예술, 보다 직접적으로는 ‘선군시대’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문학예술이 곧 ‘선군혁명문학예술’로 설명된다.

‘선군혁명문학예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선군시대’의 현실과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데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시대정신의 핵심으로 ‘혁명적 군인정신’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모든 분야의 문학예술 작품에서 핵심 종자는 ‘혁명적 군인정신’에 관계되어 있다. ‘혁명적 군인정신’으로부터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혁명적 낙관 정신도 나오고, ‘수령’을 ‘결사옹위’하며 ‘일심단결’하는 ‘믿음’도 나온다는 것이다.

선군시대에 강조되고 있는 선군문학혁명은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핵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문학예술에서 선군사상을 구현하는 경향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그러나 처음에 살펴본바와 같이 북한 문학예술의 성격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요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민성으로 상징되는 북한주민들의 반응도 중요한 요소이고, 외부문화와의 접촉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주민의 반응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도 사회주의 공업화를 통하여 산업화를 추진하여왔고, 결과적으로 새세대로 대표되는 산업사회적인 인간형이 탄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이념적 요소를 강조하겠지만, 새로운 세대를 중심으로 산업사회적 특성, 예를 들어 빠른 템포의 음악을 선호하다든지 영상에 경도된다든지 하는 경향성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타문화의 접촉이라는 점에서 모기장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기장은 자본주



의의 황색문화를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모기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창문을 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즉, 북한은 불가피하게 타문화와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든지 타문화와 접촉이 확대되면 영향을 받게 된다.

북한문학예술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마지막 요소의 하나는 상업적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은 문학예술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영화가 하나의 예가 된다. 북한은 최근 국제 영화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개봉영화와 해외 진출용을 별도로 편집하기도 한다.

## VI. 결론

북한의 문학예술이 기본적으로 정치적 선전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선군정치를 주장하는 북한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작품들이 창작되고 보급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의 문학예술도 문학예술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문제는 정치적 목적과 사회적 요구(혹은 주민의 요구)간의 간격이 넓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경제난 극복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외부문화와의 접촉이 불가피하게 많아지고, 새로운 조류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문학예술이 중심이 되는 경우 북한은 한편으로는 정치적 선전을 위하여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품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문학예술 작품을 변화시키거나 교류를 대비한 작품을 준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 문학예술은 적지 않은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남한으로서는 북한 문화 특히 대중문화의 변화와 지속이라는 상황을 보다 엄밀히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문화교류의 확대를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문화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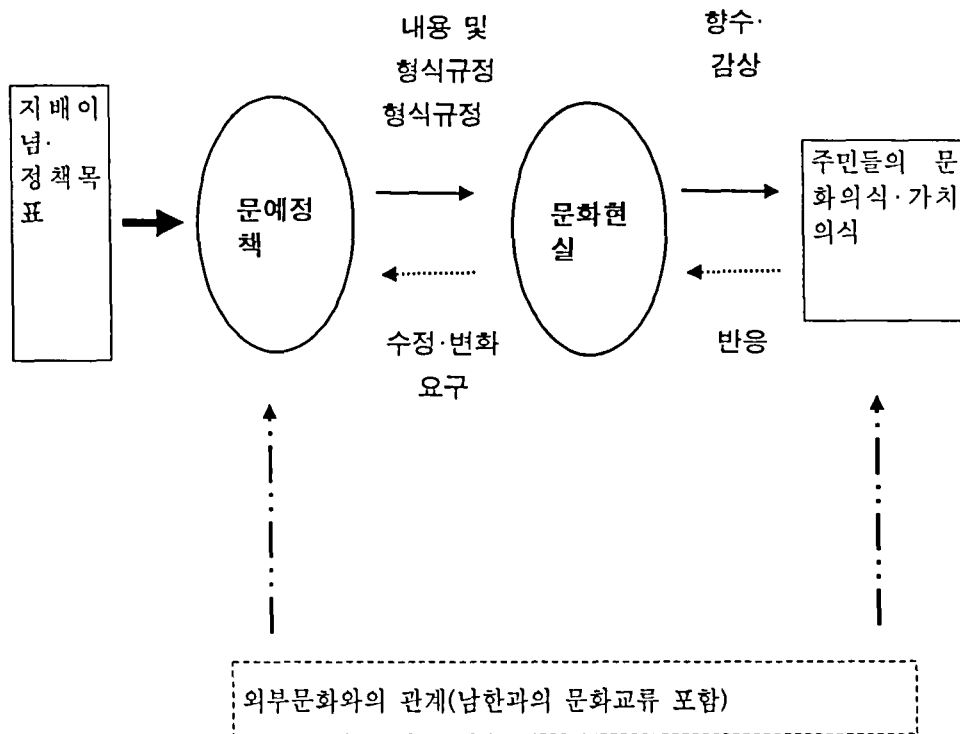
# 〈 목 차 〉

I. 서론 .....	205
II. 북한의 군중문화와 대중문화 .....	207
1. 군중문화와 대중문화 .....	207
가. 대중문화와 대중 .....	207
나.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인민성 .....	209
2. 인민성의 내용과 형식 .....	211
가. 인민성의 내용적 측면 .....	212
나. 인민성의 형식적 측면 .....	215
III. 최근 북한의 문화정책(선군정치이후) .....	221
1.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문예정책 .....	221
2. 창작의 기본원칙 .....	226
가. 주체사실주의 창작 .....	226
나. 종자론 구현 .....	227
3. 창작의 기본방향 .....	228
가. 작품창작에서 기본과업 수행 .....	229
나. 창작에서 주체적 입장 견지 및 주체 확립 .....	230
다.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강화 교양 .....	230
라. 인민대중을 위한 작품 창작 .....	230
IV. 최근 북한 대중문화의 실태 .....	232
1. 최근 문화정책의 방향과 키워드로서 웃음과 선군 .....	232
2. 최근 북한 대중문화의 특징:지속과 변화 .....	234
가. 작품의 서정성 강화 .....	235
나. 작품 주제 및 소재의 다양화 .....	236
다. 오락성·대중성 강화 .....	238
V. 북한사회 변화와 대중문화 의미 .....	241
VI. 결 론 .....	246



# I. 서론

북한의 문화는 정치사회체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변화방향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체제의 주요한 변혁기마다 문화체제의 성격도 변화여 왔다고 볼 수 있고,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상 정치사회화의 매체로 기능하는 문화체제에는 새로운 정책방향이 즉각 반영되기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문화체제는 기본적으로 해당시점의 정치적 지배이념이 반영되고 있지만 북한주민들의 반응도 반영되고 있기도 하다. (그림 참조) 따라서 북한 문화에 대한 분석은 동시에 북한 정치체제의 문제를 이해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북한주민을 비롯한 북한 사회체제를 이해하는 방편이 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심화된 체제위기를 경험한 북한체제에서 북한문화도 적지 않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바, 북한문화의 변화를 통하여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추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문화를 통하여 체제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본 연구는 선군정치가 대두된 1999년 이래 북한대중문화의 전개양상을 검토함으로써 최근 북한문화의 변화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체제의 변화를 전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식량난으로 대변되는 극심한 위기의 고난의 행군의 시기를 거치고 대두된 선군정치 시대에 어떠한 대중문화가 제기되고 이를 어떻게 체제 유지에 활용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북한 군중문화와 대중문화의 성격을 검토하고, 대중문화라는 차원에서 대중매체와 관련되는 방송, 공연, 영화등의 장르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자본주의적 상품유통을 전제하고 있는 대중문화가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체제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대중적인 문화라는 차원에서 북한의 군중문화를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 II. 북한의 군중문화와 대중문화

북한의 군중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대중성과 북한 문학예술의 창작원리로서 인민성에 대한 구별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민성이란 사회주의 문학예술은 공산주의를 완성하는 데 이해관계를 가진 인민대중의 이익을 반영하고 인민들에게 복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인민의 입장에서 인민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민의 해방과 행복한 미래의 건설에 복무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하여 문학예술 작품은 인민의 이해관계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인민대중이 알 수 있는 형식과 내용에 인민이 소망하는 바를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민성은 예술의 본질로서 당성 및 노동계급성과 연관되어 있으며, 인민대중에게 쉽게 이해되고 감동되는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통속예술론이나 군중예술론을 정립하는 근거가 된다. 이런 점에서 인민성의 원리는 문화의 대중성과 일정 부분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중문화의 대중성과 군중문화의 인민성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군중문화 활동은 근거로서 인민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본 장에서는 군중문화의 특성과 내용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 1. 군중문화와 대중문화

#### 가. 대중문화의 대중

대중문화를 논의할 때 대중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상반된 평가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대중문화라고 할 때 대중은 두 가지로 이해된다. 하나는 매스(mass)의 개념이다. 매스 컬처(mass culture)는 생산적이기보다는 소비적인 것을 의미한다. 작품성보다는 상품성으로서 대중매체에 의해 대량으로 소비되는 문화, 추잉껌처럼 순전히 그리고 직접적으로 대량소비를 위한 상품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sup>2)</sup> 대중문학예술은 단순화된 인물과 복잡한 사건들, 격렬한 감정과 극단적인

---

2) 강현두 편, 「대중문화론」(나남, 1989), p. 45.

성격, 노골적인 색조, 무시무시한 드라마에 대하여 자연스러운 취향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대중의 상상력과 감수성을 가능한 한 매우 강하게 자극해야만 하고 무엇보다 말초신경에 호소한다는 것이다.<sup>3)</sup> 대중문화는 문화적 가치체계를 문제화하기보다는 현실 도피와 쾌락성을 강하게 추구하면서 대중적으로 널리 전파된 값싼 문화상품을 생성한다. 대중문화 상품의 제조방식은 표준화된 상품제조 방식과 유사하여, 낮은 생산 비용과 적은 비용을 들여 도식적이며,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작품을 생산해 낸다. 이런 점에서 대중문화 비판론자들은 대중적 소비를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스 컬처(mass culture)가 대중문화의 본질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주장한다.<sup>4)</sup>

반대의 입장에서는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비판하면서 가치중립적인 용어로서 포퓰러 컬처(popular culture)의 사용을 주장한다.<sup>5)</sup> 포퓰러 컬처(popular culture)에서 대중은 매스 컬처(mass culture)의 대중과 달리 일방적인 전달과 주입에 의해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들은 문화의 가치를 표현하거나 수용하는 사람과 문화의 가치 그 자체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고 파악한다. 취향문화 수용자들은 유사한 가치와 문화 내용을 선택하는 집단으로 비조직적 집단일지라도 취향문화 공중 또는 취향공중(taste public)이라 불리는 문화적 공중을 이루게 되는데, 이들은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는 문화공중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공통의 가치나 기준을 갖고 서로 유사한 문화적 내용물을 선택하는 사람들로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즉 다양한 선택 가능성 가운데서 다수의 취향에 따라 선택되어진다는 점에서 포퓰러 컬처는 대중의 지향, 대중의 가치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며, 포퓰러 컬처로서 대중문화는 다수에 의하여 선택된 문화로서 보편성을 의미한다는 것이다.<sup>6)</sup> '해석적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다.

3) 대중문학연구회 편, 「대중문학이란 무엇인가」 (평민사, 1995), pp. 157-160 참고.

4) 대중문화를 일컫는 용어로서 매스컬처는 독일어의 마스(mass)와 쿨루트(kultur)의 복합어이다. 쿨루트는 무화적으로 세련되지 못한 계층으로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중하층에 해당한다. 영어의 매스는 분별없는 군중집단을 가리키며 심지어는 폭도를 암시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허버트. J. 갠즈 저, 강현두 역, 「대중문화와 고급문화」 (삼영사, 1990) 참조.

5) 허버트 J. 갠즈 저, 강현두 역, 「대중문화와 고급문화」 (나남, 1998), p. 29.

6) 이러한 대중문화의 발달은 대중매체의 발달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대중문화는 출발



사회주의 문학예술은 어떤 형태의 대중예술이든 자본주의 시대 예술 소외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한다. 마르크스는 예술을 인간 노동의 일부로 파악하고 있다. 인간은 주어진 자연적, 사회적 환경 안에서 도구로 필요한 재화와 더불어 사상, 의식, 예술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소유'나 '소장'의 욕망으로 타락시키면서 시장의 상품적인 위치로 전락시켰고, 이에 따라서 상당한 정도로 소외된 노동의 형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문학예술을 통해 인간의 사회생활에 관련된 기본 전제(계급 상황)에 기초하여 작품이 의미하는 것을 읽어 내려하였다. 이로부터 대표적이며 전형적인 상황과 인물, 특정한 역사적 환경과 더불어 구체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상징하는 전형성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sup>7)</sup>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북한 문학예술에서 주체사실주의로 전개되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당대사회의 현실과 역사적 상황을 반영해야 하는데, 북한은 역사발전의 주체로서 인간, 노동계급이 주인인 주체시대이므로 노동계급의 이익을 반영한 주체사상에 의거하여 작품을 창작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체사실주의 전개의 논리이다.

#### 나.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인민성

사회주의 문학예술이 자본주의가 문학예술에 대한 소외를 확대하였다는 비판에서 출발하면서부터 문학예술의 소외 극복을 지향한다. 문학예술이 창작 주체와 역사발전의 주체로서 인간 특히 노동계급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경우 문학예술 창작 주체로서 노동계급이 있었지만 예술이 이들을 위해 복무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북한은 노동계급이 진정한 주인인 사회이기에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당(국가)에서 모든 문학예술을 관리한다. 문학예술을 창작하는 작가, 예술인에 대한

---

부터 도시의 발달과 함께 서민층의 경제력이 증대되면서 형성된 예술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대중매체의 발전에 의해 대량 생산, 대량유통, 대량 소비의 대중문화 시장이 발전하여 왔다.

7) 유진런 외, 김병익 외 옮김, “마르크스 사상에서의 예술과 사회” 「마르크스주의」(고려원, 1991), pp. 11-32 참조.

관리로부터 창작된 작품에 대한 검열, 유통과정, 향유된 예술작품에 대한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국가가 개입한다. 문학예술 체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인민이 비록 역사발전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선진사상에 의하여 지도될 때 역사의 힘있는 창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선진사상은 수령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당은 인민을 역사발전의 주체로 이끄는 수령을 대변하는 조직, 수령과 인민을 연결하는 신경조직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sup>8)</sup>

주체시대 참다운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은 역사발전의 앞날을 내다보고 방도를 제시하는 수령의 사상을 따르는 것이며, 당은 인민들에게 이러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 예술은 인민들을 수령의 혁명성으로 무장하고 교양하여 역사발전의 주체로서 나서게 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한다. 예술이 현실생활과 투쟁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동시에 인민의 더욱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문학예술이 예술로서 창의성보다는 당 정책의 충실한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하기에 문학예술 행정 체계는 오로지 당 정책을 분명하게 파악하며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예술가들은 당의 지도에 따라 참다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감성을 통하여 그려내야 한다. 인민들을 더 낫은 미래를 위하여 복무하고 투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술가들은 선진적인 사상을 이해하고 현실에서 주어진 과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즉시적으로 인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당정책의 효율적인 전달과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강조되는 것이 인민성이다.

문학예술에서 인민성이란 바로 인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 창작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인민의 입장에서 인민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민의 해방과 행복한 미래의 건설에 복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학예술 작품은 인민의 이해관계

---

8) 인류역사는 끊임없이 변화 발전되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수령에 의하여 만들어진 사상에 의하여 노동계급이 영도될 때 보다 자주적 인간으로서 진정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 수령에 의하여 창시된 주체사상은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를 파악하고 풍부한 혁명투쟁 경험을 기초하여 만든 지도사상으로 자주성에 의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킴으로써 인민이 주인이 된 새시대, 주체시대를 개척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돛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 3. 31 참조.

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인민대중이 알 수 있는 형식과 내용에 인민이 소망하는 바를 담아야 한다.

인민성의 개념이 인민의 입장을 대변하며, 이들을 지향하고 공통의 가치체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대중문화와 일정 부분의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 문학예술이 인민을 위해 존재하지만 인민 그 자체가 주체가 되지 못하며, 대상으로 존재하며, 문화활동에서 주체는 어디까지나 당이며, 인민들은 당에서 제시한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외의 선택은 차단되어 있다. 문화의 수용자인 대중의 여론이 폐쇄되어 있으며, 국가로부터 제시된 메시지만이 전달된다는 점에서 북한에서는 취향공중에 의한 선택 문화로서 대중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대중문화의 대중성과 군중문화의 인민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대중성과 인민성 비교

	대중문화(대중성)	군중문화(인민성)
공급주체	대중문화자본	국가
수용주체	불특정 대중	인민
지향	소비	생산(혁명투쟁제고)
주제	대중적, 보편적	교훈적, 혁명적
결과	경제적 이익	의식교양
수용방식	선택적 수용(양방향)	강제적 수용

## 2. 인민성의 내용과 형식

북한에서 규정한 인민성은 “인민들의 리해관계와 요구를 반영하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문학예술의 질적 특성. 문학예술은 인민대중의 리해관계에 비추어 현실생활을 반영하며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표현할 때 인민성을 가진다”<sup>9)</sup>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질적 특성이란 특정 장르 혹은 문학예술의 형식적 측면이나

9) 「문학예술사전(하)」(과학기술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3), p. 726.

내용적 측면의 구별 없이 적용되는 가치적 개념임을 의미한다.

예술작품에서 인민성은 작품 속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과 내용을 표현하는 형상 수단 모두가 인민대중의 이해에 맞아야 한다. 내용으로서 인민성은 인민의 생활에서 본질적이고 의미 있는 문제들을 진솔하게 반영하여 인민들이 인민의 이해관계에 투철한 투쟁을 전개하도록 이끄는 것을 의미하며, 형식으로서 인민성은 인민대중의 사상감정과 미학적 요구에 맞게 예술적 형식들과 표현수단들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용적인 면에서 인민성은 기본적으로 당성, 노동계급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형식으로서 인민성은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예술 형식과 연관된다. 훌륭한 예술작품이란 고상한 사상적 내용이 우아한 예술적 형상과 결합될 때 이루어진다. 특히 형식적 차원의 문제는 민족적 형식과 관련된다.

### 가. 인민성의 내용적 측면

내용적 측면에서 인민성은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체문예이론에 따르면 참다운 예술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옹계 반영하여 사람들에게 생활의 본질과 아름다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주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사물현상이 아름다운 것도 인간의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에 맞기 때문이며, 문학예술 창작 대상으로서 자연이 아름다운 것도 그 자체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지향과 요구에 맞기 때문이라고 규정한다.

예술작품에서 인민성이 구현되었다는 것은 인민의 근본 이익과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며,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민성이란 인민의 생활에서 본질적이고 의미 있는 문제들을 진솔하게 반영하여 인민들을 인민의 이해관계에 투철한 투쟁을 전개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북한 문학예술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근로인민대중이 온갖 착취계급과 착취사회를 때려부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현실과 세계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강력한 무기로 되는 올바른 세계관에 기초"<sup>10)</sup> 하기 있기에 인민성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

10) 「문학예술사전(하)」(과학기술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3), p. 726.

예술 작품에서 인민성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가예술인들이 올바른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

인민 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근본리익에 맞게 사회주의 문학예술을 건설하려면 우리 식의 창작 방법에 철저히 의거해야 하며 문학 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혁명적 문학 예술 전통을 굳건히 옹호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 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 주체 시대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유일하고 옳은 창조 방법론인 주체 사실주의는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인간과 생활을 보다 진실하게 그려냄으로써 문학예술로 하여금 인민대중을 참담게 복무할 수 있게 하는 방법론이다.<sup>11)</sup>

우리의 예술을 옳게 발전시키려면 예술을 대중화하여야 합니다. 예술을 대중화하여 공장과 농촌의 광범한 근로자들이 예술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하여야 우리의 예술을 참다운 인민적예술로 만들수 있고 빨리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예술을 인민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인민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인민들의 사상감정에 맞는 예술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민들의 생활과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한 예술만이 대중의 심금을 울릴수 있으며 사람들을 웃길수도 있고 울릴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예술만이 사람들을 새힘과 용기를 가지고 사업에 분발하도록 고무추동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자기 사업과 생활을 돌이켜보고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도록 자극을 자기 사업과 생활을 돌이켜보고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도록 자극을 주는 교양적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sup>12)</sup>

문학예술이 인간생활을 반영하는 것인 만큼 문학예술에서 표현하는 인민의 가치관도 작품에서 그리는 생활을 통해 제시된다. 인민들의 생활을 진실되고 폭넓게 반영하는 것이 풍부한 인민성을 보장하는 기본 조건인 것이다.

주체사상에 따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주성에 기초한 요구와 지향을 가지고서,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자주적인 요구를 실현하면서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만들어 간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인간이며, 사물도

---

11) 고철훈, “문학예술 창작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자,” 「조선어문」 1992년 4호, p. 23.

12) 김일성, “사회주의예술의 우월성을 온 세상에 널리 시위하자-제7차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할 예술인들과 한 담화”, 1959. 7. 1.

인간의 위하여 복무할 때 가치를 갖는다. 사물이 인간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것은 인간의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사물현상 가운데 자신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것에 대해서는 기쁨과 만족, 사랑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지만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과 증오, 불쾌감 같은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감정 가운데 미적 감정은 인간의 자주적인 요구에 맞는 대상을 파악하며 창조할 때 느끼는 것이므로, 문학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며 개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목적 의식적인 활동을 벌이는 것을 표현해야 하고, 이때 미적 감정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예술작품에서 인민성을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근로 인민대중의 생활 진실하게 그려야 한다. 인민생활을 진실하게 그린다는 것은 인민들이 생활에서 제기한 절박한 문제를 찾아내고 인민대중의 이익과 요구에 맞게 올바른 해명하는 것이다. 인민의 생활을 그리되, 그들의 근본이익을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흐른다면 심금을 울릴 수 없다. 사상교양의 차원에서 문학예술은 생동한 자료를 갖고 진실하고 참신하게 그려야 한다.<sup>13)</sup>

인민의 생활 속 이해관계는 작품 주인공을 통하여 제시된다. 문학예술 작품의 기본 묘사대상은 인간과 인간의 생활이며 작품에 그려진 형상의 중심에는 인간성격이 자리 잡고 있기에, “작품에서 전형적인 인간성격을 그리는 것은 생활반영의 진실성과 높은 사상예술성을 보장하며 그 인식교양적 의의를 담보하는 기본요인”이 된다는 것이다.<sup>14)</sup> 인간의 성격을 잘 그린다는 것은 전형을 올바르게 잡는다는 것이다. 전형이란 ‘개별성을 통해서 보편적·사회적 의의를 가진 일반적이며 본질적인 것을 보여’주는 예술창작방식으로 통하여 사회변화의 핵심적 문제를 그리는데 목적이 있다. 즉 일정한 사회에서 일정한 계급·집단의 공통된 본질적 특성이 문학작품 속에서 개별화된 인물에 반영함으로써 그 계급의 본질적 특성을 보여주

13) 김정일, “당사업을 잘하여 사회주의혁명진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자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4. 1. 1 : “사상교양사업에서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사상교양사업은 어디까지나 생동한 자료를 가지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게 진실하고 참신하게 하여야 합니다.”

14) 김정일, “인간 성격과 생활에 대한 사실주의적전형을 깊이있게 실현할데 대하여-작가들과 한 담화”, 1967. 2. 10.

는 것이다.<sup>15)</sup>

전형의 본질은 계급성을 그리는데 있다. 창작 방법으로서의 전형화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이 견지해야 하는 계급의식 교양과 각성을 위한 필수조건이며, 정치적인 의식을 통해 본질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sup>16)</sup> 사람은 사회계급적 성격에 따라서 사상이예술적 가치가 다르게 규정되는 만큼 인민들의 사상 교양을 위해서는 역사발전의 과정 속에서 주인공의 사회계급적 성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결론적 말해 문학예술에서 인민성은 북한 인민들에게 있어서 문화는 미적 가치의 표현 차원이 아니라 공통의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고 있다는 윤리적 연대감을 확인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제라고 할 수 있다.

#### 나. 인민성의 형식적 측면

형식으로서 인민성은 인민대중의 사상감정과 미학적 요구에 맞게 예술적 형식들과 표현수단들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이다. 주체시대는 인민대중이 주인인 시대이고, 인민이 주인인 시대의 예술은 마땅히 인민을 위하여 복무해야 한다. 문학예술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것은 인민의 정서에 맞아야 한다. 인민의 정서에 맞기 위해서는 예술에서 반영하는 배경이나 상황이 인민의 생활과 일치해야 한다. 민족적 정서에 맞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형상수단으로서 평이하고 소박한

---

15) '문화' 「조선말 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p. 1185 : "역사발전의 행정에서 인류가 창조한 물질적 및 정신적 부의 총체. 문화는 사회발전의 매단계에서 이룩된 과학과 기술, 문학과 예술, 도덕과 풍습 등의 발전수준을 반영한다. 문화는 사회생활의 어떤 영역을 반영하는가에 따라 물질문화와 정신문화로 구분된다. 매개 나라의 문화는 자기의 고유한 민족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계급사회에서 문화는 계급적 성격을 띤다."

16) 김정일, "인간성격과 생활에 대한 사실주의적전형화를 깊이있게 실현할데 대하여-작가들과 한 담화", 1967. 2. 10 : "문학예술에서 전형적인것에 관한 문제는 예술적인 문제이기애 앞서 정치적인 문제로 됩니다. 작품에서 인간의 성격과 생활을 전형화하지 않고 비본질적인것을 내세우면 인간생활과 사회생활을 외곡하여 보여주고 정치사상적 결함을 나타내게 됩니다."

언어, 인민들에게 친숙한 선율과 율동 등 인민대중들이 즐기는 생동하고 아름다운 형식들을 다양하게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연극에서 인물의 대사나 그림에서 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모두 인민의 정서에 맞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가극의 경우 예전의 가극이 까다로운 선율, 말도 대화도 아닌 대화창, 고정불변한 무대장치 등이 인민의 생활감정과 비위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극복하여 대중적 정서에 맞는 예술을 창조하였다는 것이다.

생활현실에서 사용하는 것과 일치시킴으로써 인민의 정서를 반영한다는 인민성은 나아가 민족적 특징이 강한 민족문화예술 창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민성이 문학예술 창작에서 민족성과 연결되는 것은 “민족생활을 바탕으로 삼고 자기나라 인민들의 생활감정과 정서, 미감에 맞게 창조되고 발전하는 과정을 통하여 구현되는 문학예술의 고유한 속성”<sup>17)</sup>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예술관에 따르면 모든 예술은 민족을 기본 단위로 한다. 민족을 기본 단위로 하기에 예술에서 범세계적인 예술, 국경없는 예술이라는 것은 예술의 민족적 특성을 무시한 현대부르주아 리론가들의 반동적인 견해로부터 출발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각 인민은 자기의 고유한 전통적인 민족예술을 가지고 있으며, 이 민족예술은 민족생활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전통적인 예술로서, 이 민족예술이야말로 자기 민족의 심리적 특성에 맞고 민족적 감정과 구미에 가장 잘 맞는다는 것이다.

문학예술에서 민족성을 살린다는 것은 묘사대상과 구성방식, 표현수단에서 민족적 특징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묘사대상으로서 민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민족적 특성, 미풍양식, 조국산천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민족 고유의 민족적 성격이란 오랜 생활과정에서 사회역사적으로 형성된 각 민족의 고유한 특징이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족적 성격적 특징이란 정의감이 강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의리를 귀중히 여기고, 동정심이 많으며, 예절이 밝고, 겸손한 품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sup>18)</sup> 민족의 아름다운 미풍양식이란 가정생활에서 부모를 공대하고 자식을 사랑하며 형제와 친척 간에 의리가 깊고 이웃사이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다. 민족성을 살린다는 것은 미풍양속을 그리는 것뿐만 아

17) 고철훈, 「문학예술의 주체성과 민족성」(사회과학출판사, 2001), p. 12.

18) 고철훈, 「문학예술의 주체성과 민족성」(사회과학출판사, 2001), pp. 114-122.



나라 우리 인민에게 낯익은 조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린다는 것이다.

민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상을 선택하여 민족적 정서에 맞는 방법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작품 창작에서 구성은 여러 이야기를 재미있고 뜻이 깊은 극으로 엮어간다. 따라서 작품을 형상하면서 작품에 그려지는 민족생활을 이야기로 엮어 가는 구성형식에도 민족의 고유한 취미와 기호가 반영되기에 구성형식이 민족적 특성을 반영하여 한다는 것이다. 인물을 그릴 때에는 주인공의 선을 일관성 있게 살려 가는 정연한 논리로 평이하고 선명하게 그리는 것이 특징이다.

표현수단과 수법에서 민족 고유의 표현수단과 수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민족 고유의 표현수단과 수법에는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다듬어진 그 나라 인민의 감정과 정서, 취미와 기호가 반영되어 있기에 문학예술은 민족적 사상감정과 정서가 반영된다는 것이다.

### 3. 군중문화의 유형

북한에서 대중(군중)문화란 '전문 작가, 예술인이 아닌 인민대중에 의하여 군중적으로 창조되고 발전하는 문학예술'이며, 군중문화사업은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과 기술문화지식수준제고를 위하여 군중적으로 진행하는 문화사업'<sup>19)</sup>고 규정하고 있다. 군중문화사업에서는 "문학예술을 대중화하며 광범한 근로자들을 문학예술활동에 참가시키는 것은 군중문화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된다. 북한은 중요한 시기마다 문학예술을 통한 군중문화사업을 벌여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인 군중문화사업으로는 문학예술소조의 조직·운영, 예술소조 축전 진행, 개인별 예술활동 진행 등이 있는데, 이러한 군중사업을 통하여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면서 주체사상화를 실현할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

문학예술을 군중문화 활동에 활용함으로써 사상교양과 선전선동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군중문화 활동은 그 목적에 따라서 '인민교양형 군중문화', '인민동원형 군중문화', '인민취향형 군중문화'로 구분할 수 있다.

---

19) 「문학예술사전(상)」(과학기술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pp. 246-247.

‘인민교양형 군중문화’란 군중문화의 중심을 사상교양에 두는 것이다. 북한의 모든 문학예술이 인민교양형의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건설현장의 활동이나 생활보다 교양적 성격이 강한 경우이다. 주로 예술소조 활동을 통한 문화 활동이다. 예술소조란 ‘근로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학 예술활동을 하기 위한 자원적 대중조직’으로 북한에서 강조하는 군중문화 사업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모임이다. 북한에서는 문학예술소조의 목적을 “당의 주체적 문예사상과 독창적 문예방침을 연구학습하며 그에 기초하여 문예작품들을 감사하고 보급하며, 그 과정을 통하여 소조원들의 사상이론의 수준과 미학적 소양을 부단히 높이는 것을 주요한 과업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술소조는 문예총 소속의 전문 작가, 예술인들과는 달리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각급 학교, 인민군 등에 만들어져 있으며, 직업동맹, 사로청, 농근맹, 여맹 등의 지도 밑에 활동하는 비전문 작가, 예술인 내지 동호인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소조는 문학소조, 연극소조, 음악소조, 무용소조, 사진소조, 교예소조 등 장르에 따라 나뉘어 지며 보통 20명에서 30명 정도를 한 단위로 구성된다.

문학예술소조는 전국, 각지의 노동자 문화회관을 비롯하여 군중문화회관, 선전실, 학교 등을 이용한다. 문학의 경우 문학통신원 제도를 통해 문학작품현상모집을 실시하고 당선된 작품을 출판해 주기도 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모 등을 통해 전문예술인으로 진출할 수도 있다. 이들 예술소조활동을 격려하기 위하여 전문 예술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제한적이거나 전문예술인이 길을 열어두기도 한다.

북한 문학예술의 중앙 공급적 문화와 달리 예술소조의 활동을 통한 창의적이고 다양하며, 생동한 문화라는 점이 특징이다. 김일성 주석·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당창건일 같은 국가적 명절을 앞두고 문학예술 분야의 전국 단위 현상모집이나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성적을 올린 입상자에게는 예술가로 발탁되기도 한다. 예술소조 활동을 통하여 중앙무대로 진출하는 예술인도 있으나 전문적 기교보다는 생동하고 진실하게 생활을 반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평가된다. 필요한 경우 중앙 단위 예술단체의 지도나 전국단위 경연대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2월 명절(2월 16일)과 함께 ‘당과 인민과 수령’

이 일체를 이루는 '주체시대'의 민족최대 명절로 일컬어지는 '4월 명절' 기간 동안 북한에서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각 지방단위에서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 '배움의 천리길 답사행군', '만경대상 체육대회', '미술작품 전시회', '중앙사진 전람회' 등 각종 행사와 생일 축하를 하는 중앙보고 대회와 각 지방에서의 군중집회, 무분별토론회 등이 전국에서 일제히 벌어진다. 뿐만 아니라 국가학위·학직수영위원회에서 수여하는 교수, 부교수의 학직과 박사학위, 학사학위도 수여되는 등 각종 행사와 생일 축하를 하는 중앙보고 대회와 각 지방에서의 군중집회, 무분별토론회 등이 전국에서 일제히 벌어진다.

예술소조 활동을 격려하고 생활 속의 교양교육을 위하여 '노래수첩 지참', '노래보급원 임명', '설참 노래경연', '1인1개 이상 악기다루기', '그림해설 모임', '영화주인공 따라배우기' 등을 시행하며, '로동신문' 등의 출판보도물에 혁명가요를 게재하여 각종 노래모임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주민들이 취미생활 차원에서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생활악기인 손풍금(아코디언), 하모니카, 기타, 북, 피리, 단소, 저대 등의 대중악기 보급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하며, 소조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한 전국단위 현상공모나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주요 명절을 기해 벌어지는 전국단위 현상공모나 경연대회 입상자에게는 작가나 전문 예술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군중문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인민동원형 군중문화'는 생산현장이나 건설현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군중문화 활동이다. 공장·기업소 등의 각종 단위에서는 예술선전대를 조직하여 대원들의 출퇴근이나 근로현장에서 예술 활동을 전개하는 예술 활동이다. 북한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기동 선전대가 결성된 것은 이미 1960년대 초부터였다. 1961년 12월 28일 개최된 전국청년기동선전대 종합공연을 관람한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각 공장·기업소 단위나 시·군 등의 행정 단위별로 구성되어 생산 현장에서 다양한 예술 공연과 당정책 해설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경제선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92년부터 '전국시·군기동예술선전대 경제선동경연'과 '전국청년기동예술선동대 집중경제선동경연' 등의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기량을 겨루기도 한다. 중앙단위 조직과 별도로 각 시도별로 '예술선전대'가 꾸려져 있으며,

직업총동맹 산하에 '노동자예술선전대'가 있다.

'인민취향형 균중문화'는 중앙단위 예술단이나 방송언론 등을 통하여 대중취향적 문화를 공급하는 것이다. 생활소재 가요의 보급과 같이 인민정서를 반영하는 예술활동이다. 북한의 대중문화를 매체의 특성에 맞출 때 대중문화의 활동이 본격화된 시기는 대체로 1980년대 중반으로 잡을 수 있다. 이 시기 북한의 가장 큰 화두는 '조선민족제일주의'였다. 조선민족제일주의가 국가지도이념으로 확립되면서 각 분야에서 민족적 특성을 찾는 작업이 시작되었고, 문학예술 분야에서는 민족적 전통을 살리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조선민족 제일주의는 민족적 특성을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문화적으로는 문화적 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전자음악이나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는 경희극, 생활상을 반영한 드라마의 보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

1990년대 이후 대중취향적 균중문화는 이전의 문화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그 특징은 무엇보다 공연중심에서 방송매체 중심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규모 중앙공연단의 공연과 달리 보천보전자악단은 텔레비전이나 방송을 주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소재에 있어서도 대중매체의 특성에 맞추어 부분적이거나 생활소재를 바탕으로 한 생활가요가 보급되었다는 점이다. 북한 문화의 이러한 변화는 최근 대중문화의 다양화와 변화 현상이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점이라 할 수 있다.

### Ⅲ. 최근 북한의 문화정책

최근 북한의 문화는 이전과 다른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화예술 활동이 국가에 의해 관리되고 전개된다는 점에서 최근의 변화양상은 그 자체로서 북한 내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며, 북한체제와의 변화의 징후로 파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 대중문화의 활성화는 북한 문화예술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모든 예술활동인 북한 문화예술은 작품의 창작적 미학보다는 당정책을 홍보하고 체제 유지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 문화예술은 북한이 처한 당대 정치사회적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의 다양화를 곧 북한의 대내외적인 정책 변화 없는 자연적 발생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오히려 문화예술이 당에서 제기한 당면한 과제와 이를 해결하려는 당 정책의 방향에 맞추어 문예정책이 추진되고 작품 활동이 전개된다는 점에서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대중문화의 다양성의 의미를 분석할 때 변화의 의미와 방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은 북한 현실의 정치사회적 반응으로서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활용되어 왔듯이, 최근의 문예정책 역시 당면한 북한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대응하는 당정책에 맞추어 변화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문화정책은 최근 북한 정치사회적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문화정책과 연관지어 분석하는 것이 문화정책의 특성을 살피는 작업이 될 것이다.

#### 1.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문예정책

북한의 문화정책은 북한 체제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전선동의 수단으로서 당면한 시대의 정치사회적 환경에 맞는 역할과 임무에 충실하게 진행하여 왔다. 앞서 언급했듯이 문화예술의 변화는 최근의 대내외적 환경을 읽어내는 것이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을 분석하는 지침이 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력 승계가 본격화되고 지도자로서 공식화되는 1990년대 이후 후계자 구도의 확정, 김일성 주석의 사망, 계속된 식량난과 경제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공식 취임,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중국·러시아의 개방정책 추진에 따른 개방 압력, 미국의 대북압력이라는 큰 변화를 겪었다. 북한이 당면한 대내외적인 위기는 사회체제의 전면적인 전환 없이는 극복되기 어려운 차원의 문제였다. 그러나 전면적인 개방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김정일 체제는 내적 모순을 적절히 수용하면서 체제의 유지 발전을 위해 변화를 적용시켜 나갔다. 이 과정에서 문화예술은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권력승계의 당위성, 사회주의 건설의 필요성이라는 정책을 선전하고 선동하는 기둥으로서 작용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정치사회적 상황은 크게 대외적인 요인과 대내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변화요인과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외적인 요인이라면 북한을 둘러싼 대외관계로서 다시 국제관계와 남북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문학예술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국제관계를 반영하는 작품들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에는 친중국, 친소적 작품이며, 미국이나 일본을 소재로 한 작품은 반미, 반일을 주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북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미국이다. 북미관계가 악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반미사상 교양을 강조하는 작품이 강조된다. 최근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의 주제가인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이 21세기에 영원히 불려져야 할 노래로 각광받는 배경에는 김일성 주석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반미감정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 주석에 대한 영원한 충성의 그리움을 내용으로 하면서도 반미감정을 통한 인민사상 교양에 더없이 좋은 이유는 한국전쟁을 작품배경으로 하기 때문이다. 반미사상을 교양하려 할 때 정서적으로 인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소재로 프예 블로호 사건이나 한국전쟁이 있다. '당의 참된 딸'은 5대 혁명가극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북미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에 대한 저항심과 반발을 일깨워 줄 필요에 의해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의 주제가가 강조되는 것이다.

대외적인 환경요인의 하나로서 남북관계 역시 북한 문화정책의 변화 요인이 된다. 2000년 이전의 북한 문학예술은 주로 남한 사회의 부조리와 부정부패, 민주인

사에 대한 탄압, 독재 등의 부정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져 왔었다. 그러나 6·15공동선언 이후 남한 사회에 대한 문제보다는 민족에 초점을 두면서 통일을 소재로 한 작품이 양산되었다. '통일돈돌라리' '통일경축의 아리랑' 등 민족적 색채의 작품과 통일을 소재로 한 작품이 나온 것도 이러한 정치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다.

대내적인 요인으로는 정치지도자의 교체와 사회구성원의 변화가 문화정책에 변화를 준 요인이었다. 정치지도자로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오랜 기간 동안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지만 최고지도자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오래 되지 않았다. 김일성 주석의 사망이후 예상과 달리 주석직을 폐지하면서 유훈 통치를 통하여 김일성의 영향력을 유지하였으나 더 이상 유훈에 기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일성 사후에도 수령을 중심으로 한 예술작품 창작을 독려함으로써 김정일 정권이 곧 김일성의 정통적 계승자로서 위상이라는 점을 각인시켜 나가면서 동시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정치적 변별성을 높여 나갔다.<sup>20)</sup>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헌법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자리매김한 1999년 이후 선군정치를 표명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선군'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선군시대 문화정책의 요체는 선군을 중심으로 한 김정일식 통치스타일의 우수성과 특성을 부각하는 데 있다. 문학예술 분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 역량을 쌓았던 곳으로서 '김정일총비서의 영도'를 빛내고 차별하는 데 있어 예술 분야는 더없이 좋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현실의 어려움을 노래를 통해 풀어나

---

20) 신개념으로는 추모문학, 단군문학, 태양(민족)문학, 선군혁명 문학 등이 있다. 추모문학이란 김일성 주석을 추모하는 문학, 김만영의 「위대한 수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네」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단군문학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유훈통치기 문학의 가장 큰 특징으로 단군이라는 민족사적 인물과 대비되는 건국의 영웅으로서 김일성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으로 김일성=건국, 김정일=민족중흥의 이미지를 결부하기 위한 개념이다. '태양(민족)문학'은 1995년 김정일을 주체의 태양으로 묘사한 것과 수령형상을 태양문학으로 일컫는 개념에서 나온 것으로 백두산 3대장군(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을 폭넓게 아우르는 개념이다. 태양민족문학의 개념에 따르면 작가들은 '태양의 위성작가'로 표현된다. 태양문학은 2001년 1월 1일자 신년 축하 서사시 '21세기 찬가'가 있다. '선군혁명문학'은 김정일의 '선군정치'에서 나온 개념으로 김일성 중심에서 김정일 중심으로 문학예술의 비중이 옮겨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자는 음악정치를 '총비시의 영도예술'로 높이는 것이나 「영화예술론」에서 김정일 제기한 종자론을 강조하는 것이 이러한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은 광폭정치나 인덕정치 등의 용어를 통하여 정치적 역량을 예술이나 인성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왔었다. 따라서 자신의 독특한 통치방식으로서 예술을 선택하였다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우회적 통치술로서 예술적 감성, 정서적 호소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지도자의 교체는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이미지 정립이 필요하게 되었고, 김일성 주석과는 다른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 한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은 文·史·哲을 통하여 형성된다. 文은 문학예술로서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이며, 史는 역사적 당위성과 정통성이고, 哲은 옳고 그름의 가치판단이 된다. 북한의 정체성은 1960년대 이후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한 이후 수령을 중심으로 한 문예정책을 확립하여 왔었다. 즉 아름다움은 수령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 사명을 다했으며, 역사적 정통성은 수령의 역사, 수령의 혁명역사가 정통의 역사였으며, 북한 역사 자체가 주체의 조선이 건국된 것을 기점으로 삼았다. 가치판단 역시 수령의 철학관에 근거를 두었다. 이후 북한의 모든 문화정책은 이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대외적인 가변 요소에 의하여 정책의 변화는 있었지만 그 기본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북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북한의 문화정신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주석의 사망이후 새로운 지도자의 목소리를 내게 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중심이 바로 '선군'이었다. 선군혁명은 혁명의 연속선이면서 동시에 차별성이 공유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대내적인 변화요인의 다른 한 축은 문화를 수용하는 구성원의 변화이다. 북한 사회는 1980년대 중반부터 김정일 시대로 접어들었다. 김정일 시대의 출범은 곧 김정일 세대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며, 사회 모든 분야에서 혁명세대 이후의 세대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들은 전쟁에 대한 체험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서 혁명적인 열의가 약한 세대였다. 특히 90년대부터 시작되어 10년 동안 지속된 경제난 속에 형성된 사고방식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자본주의에 대한 간접체험 등으로 이념보다는 실리적 경향이 강한 세대들이었다. 이들의 사상적 오염을 막고 자본주의 이념의 침투를 막는 문제는 북한 체제의 존속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사회체제의 유지가 곧 문화침략으로부터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는 북한으로서는 황색바람의 유입은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대외 개방을 위한 준비를 마련하면서 문화적 침투, 이른바 ‘황색바람’ 유입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식량난과 장마당을 통해 사회통제의 약화를 경험한 이후 자본주의 사상 유입이 계획경제를 위태롭게 하며 체제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면서 사회주의 경제수호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자본주의에 대한 법적인 통제는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이 최고조에 달한 1998년과 1999년에 특히 대외사상 유입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과시하였다. 1998년 10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를 통해 경제부문의 결정된 6대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지침을 발표하였는데, 핵심은 1) 정치사상적 위력과 집단주의 정신 발휘, 2) 경제관리원칙의 철저한 고수와 경제사업·경영활동 계획화, 3) 우리식 경제구조의 위력 강화의 세 가지였다. 이 결정은 김정일 정권의 공식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제시된 실천 대책으로 향후 경제정책의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실천 지침의 내용이 모두 사회주의 경제체제 유지를 강조하였다는 것은 경제적 실용주의를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려는 북한이 개방에 따른 체제 위기의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다. 199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 회의에서 ‘인민경제계획법’의 채택은 자본주의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주민통제와 계획경제를 통한 경제회복을 정책기조로 할 것임을 공식화한 조치였다.

한편으로 사회주의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상교양을 강화하였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설·답화 등을 통한 사상 교양을 강화하여 ‘자본주의적 풍조’에 대해 경계하면서 ‘군대문화 따라 배우기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정신무장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문화적인 탈출구를 마련하고 사회분위기 반전을 위한 대중사업을 강화하였다. 북한 정권 수립이후 지금까지 지속해온 이념전파의 한계성이 드러나면서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문화 사업의 강화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최근의 문화정책은 사회구성원의 변화에 따라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들의 욕구를 수용하면서 선택의 폭을 조금씩 넓혀가는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 고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 2. 창작의 기본원칙

### 가. 주체사실주의 창작

영화와 음악을 비롯한 북한의 대중문화는 주체사실주의에 의거해 창작된다. 주체사실주의는 북한에서 “유일하게 정당한 창작방법”<sup>21)</sup>이며, 문학예술 창작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창작방법이다. ‘우리 식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인 주체사실주의는 김정일의 저술 「주체문학론」에서 처음으로 공식화되었다.<sup>22)</sup> 북한이 종래 고수해 온 사회주의적사실주의 대신 주체사실주의를 유일한 문예창작방법으로 공식화한 데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동기가 크게 작용했다고 보겠다. 북한은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와 구소련의 해체 등,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가 체제동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문예부문에 대한 사상적 결속 및 통제를 위해 새로운 용어를 개념화한 것이며, 이로써 주체사실주의가 공식화되었다고 보는 것이다.<sup>23)</sup>

주체사실주의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문예창작방법이다. 민족적 형식이란 “자기 민족의 미감과 요구에 맞고 자기 민족이 좋아하는 형상 수단과 수법, 형상기교”<sup>24)</sup>를 뜻하며,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서 말하는 민족적 형식과 같다. 사회주의적 내용이란 ‘주체사상을 구현한’ 혁명적 내용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모든 문제를 주인다

---

21) 리수립, “자주시대 문학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불멸의 대저작 <주체문학론>,” 「조선문학」 (1992. 10), p. 25.

22) 「주체문학론」에는 1980년대 후반 이래 급속하게 전개된 대내외적 환경 변화 속에서 문학뿐만 아니라 북한 예술의 모든 분야가 견지해야 할 주체문예 창작의 기본과제 및 원칙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주체사실주의에 대해서는 김정일, 「주체문학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91-116 참조.

23) 김재용교수는 북한문예학계가 주체사실주의를 표방하게 된 이유로서 “사회주의리얼리즘이라는 용어의 역사적 존재가치가 다했다는 문학외적 사실의 대두”를 들고있다.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에 따라 동구권에서 사회주의리얼리즘 미학이 폐기되자 북한은 급격한 정세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용어개념을 새롭게 내세웠다는 것이다. 김재용, “1990년대 전반기 북한문학과 이후의 전망,” 「북한문화연구」 2집, p. 25.

24) 김정일, 앞의 책, p. 114.

은 립장에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내용, 인간의 제일생명은 정치적생명이며 사람의 사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내용, 주체의 혁명관과 인생관, 집단주의적생명관을 세워나가는 내용을 비롯하여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성을 발양시키고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모든 내용이 포괄”<sup>25)</sup>된다. 주체사실주의에서는 특히 자주성에 관한 문제를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강조하며, 이로써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사회주의적 내용과 차별화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체사실주의가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내용의 핵심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주체문학론」은 문학예술 작품이 담아야 할 자주성에 대한 문제는 자주적인 인간,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간의 전형을 통하여 실현되는 바, 주체사실주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그리고 주체사실주의가 창조한 자주적 인간의 가장 숭고한 전형인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는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여기는 참된 인간, 견결한 혁명가”라고 규정함으로써, 주체사실주의 창작에 있어 궁극적인 의의와 목적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구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 나. 종자론 구현

북한 문예정책의 핵심은 주체의 문예이론과 종자론이다. 주체의 문예이론이 김일성에 의해 주창되었다고 하는 미학의 원리라고 한다면, 종자론은 주체의 문예이론에 입각하여 예술창작에 임하도록 요구하는 일종의 실천강령이다.<sup>26)</sup> 종자론은 김정일의 저술 「영화예술론」(1973년)에서 정식화되었다.

「영화예술론」과 「주체문학론」을 통해 본 종자의 의미는 다음의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종자란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가 뿌리 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를 뜻한다. 종자가 작품의 핵이라는 것은 작품이 종자를 기초로 하여 창조되며 종자가 작품의 생명력과 가치를 규제

25) 위의 책, p. 108.

26) 권영민, “북한의 문예이론과 문예정책,” 「북한의 문학」(서울: 을유문화사, 1990), p. 73.

하는 근본요인이라는 것을 말한다.<sup>27)</sup> 종자는 문예작품에서 형상의 원형이며 작품 창작과정을 통해 구현된다.

둘째, 종자는 작품의 사상, 주제 및 소재와 구별된다. 사상은 주관적인 것으로서 작가가 종자의 구현 과정을 통하여 밝히려는 자신의 주장, 생활에 대한 평가, 인물의 운명에 대한 결론이며, 추상적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종자는 객관적인 것으로서 구체적인 대상 속에 생동한 형태로 나타난다. 주제는 작품에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로서 종자가 체현되어 있는 생활 속에서 제기된 것이다. 소재는 작품 형상의 바탕인 생활자료, 사실자료이다. 종자론에 따르면, 주제 및 소재와 종자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종자는 사상과 주제 및 소재를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작품의 기초이며 핵이다. 그리고 종자를 중심으로 한 사상, 주제, 소재의 유기적 연결 및 통일은 곧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을 의미한다.

작품 창작의 출발점이며 작품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라고 하는 '올바른 종자 선택'이란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게 종자를 선택하는 것을 뜻한다. 종자를 형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제를 정치적 의의가 있게 풀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제를 당 정책에 의거해서 풀어야 하며, 당 정책에 맞게 창작한 작품만이 사람들의 혁명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작가, 예술인들에게 있어 종자는 그 내용이 제한되어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지향하는 사회정치적 집단에 체현되어 있는 사상적인 것, 곧 종자의 실체는 당과 수령의 의도 내지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우리 문학에 있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 당정책이 곧 작품의 종자로, 내용으로 되고 있으며 장군님의 의도와 당의 요구가 곧 작품의 문제성으로 되고 령도자가 키우고 내세워준 인민이 바로 작품의 주인공으로, 전형으로 되고 있다.<sup>28)</sup>

### 3. 창작의 기본방향

---

27) 김정웅, 「주체적문예리론의 기본: 문학예술작품창작」 (평양: 문예출판사, 1992), p. 11.

28) 최길상, "주체문학의 영원한 생명선, 불멸의 기치," 「조선문학」 (1997. 1), p. 8.

북한 대중문화 창작의 기본방향은 다음의 네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 가. 작품창작에서 기본과업 수행

북한의 대중문화 창작에서 작가, 예술인들이 수행해야 할 기본과업은 수령형상 창조, 당의 위대성 형상, 주체형의 인간전형 창조 등, 세 가지이다.

수령형상 창조란 수령의 존재를 수령형상 작품에 고유한 생리<sup>29)</sup>에 따라 잘 형상하는 것을 말한다. 수령형상 작품창작에서는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해야 하며, 언제나 인민 속에서 활동하는 수령의 풍모를 그려야 한다. 또한 수령형상 작품에서는 후계자 김정일을 수령 김일성과의 관계 속에서 형상해야 한다. 이는 한 작품에서 두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30)</sup> 북한은 수령형상 창조를 통한 수령에 대한 충실성 강화라는 문학예술의 선전선동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령형상 창조를 기본으로 하는 창작집단을 설립하였다. 문학부문에서의 '4.15문학창작단'과 영화부문에서의 '백두산창작단'이 그것이다.

당의 위대성 형상은 조선노동당의 의의와 업적을 형상하는 것을 말한다. 당의 위대성 형상에서는 당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여 형상함으로써 세상에서 노동당이 제일이라는 사상을 강조해야 하며,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업적을 잘 그려야 한다.

주체형의 인간전형 창조란 주체형의 공산주의자<sup>31)</sup>가 지닌 품성을 잘 형상하는 것을 뜻한다. 주체형의 인간전형 창조에서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가 지닌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형상해야 한다.

---

29)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 있어 지켜야 할 일종의 원리, 원칙을 말한다. 김정일, 앞의 책, pp. 140-151 참조.

30) 최길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건국업적은 우리 문학의 영원한 형상원천," 「조선문학」 (1998. 9), p. 20.

31)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란, "자주적인 인간의 사상의식과 정신도덕적 풍모를 가장 원만히 체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여기는 참된 인간이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주체혁명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를 일컫는다. 김정일, 앞의 책, p. 113.

## 나. 창작에서 주체적 입장 견지 및 주체 확립

이는 대중문화 창작을 “우리 당의 요구와 우리나라의 구체적 실정,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해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테면, 음악창작에서의 주체적 입장 견지 및 주체 확립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민족음악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방송사업에서는 방송편성을 ‘우리 식’대로 하며, 주체적인 방송화술체계<sup>32)</sup>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 다.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 교양

다른 사회주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군중 교양의 기본 방법이며 당적 방침으로 되어 있는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 교양은 대중문화 작품 창작의 실천적 방도로서도 크게 강조되고 있다. 북한의 작가, 예술인들은 당의 문예정책에 의거하여 사회내의 아름다운 긍정적 사실들과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형상한 좋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여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데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이다.<sup>33)</sup>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1979년 10월 「숨은 영웅 따라배우기 운동」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 보급되기 시작한 이래 대중문화 부문에서도 대중교양을 목적으로 하는 ‘숨은 공로자’와 ‘숨은 영웅’을 소재로 한 작품이 다량 창작, 발표되고 있다. 작품에서 숨은 영웅과 숨은 공로자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형상된다.

## 라. 인민대중을 위한 작품 창작

북한 대중문화 창작의 기본 목적은 인민대중의 수요 만족을 통한 혁명적 교양에

32) “주권이 인민의 수중에 있고 혁명하는 나라의 방송화술은 그 나라 인민의 언어생활을 반영하여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화술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일, “방송사업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선집」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288.

33) 김일성, “문화예술총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1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 39-40.

있다. 따라서 영화, 음악, 연극, 소설 등, 모든 대중문화는 인민대중이 알 수 있는 것으로 되어야 하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인민대중을 위한 노래는 인민들이 즐겨 부를 수 있도록 쉬운 곡조로 만들고, 인민들이 사랑하고 부르기 좋아하는 조선식 노래로 창작해야 하며, 인민대중이 요구하는 통속적 혁명가요<sup>34)</sup>를 많이 창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

34) 통속적 혁명가요란 부르기 쉬운 곡조에 혁명적인 가사를 붙인 노래를 뜻한다. 주요 내용은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 반대, 지주와 자본가 반대, 사회주의건설 매진, 자력갱생과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조국통일과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등이다.

## IV. 최근 북한 대중문화의 실태

### 1. 최근 북한 대중의 문화 방향과 키워드로서 웃음과 선군

최근 문화정책은 포용 범위 안에서의 다양성을 허용하며, 내용에서는 웃음, 문화정책의 주체로서 선군의 역할 강화로 요약된다.

문화의 다양성은 최근 북한의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00년을 전후하여 북한의 대중문화는 다양한 양상으로 보이고 있다. 생활문예의 다양화는 변화된 인민의 욕구를 반영하면서 다름대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1980년대 중반 전자음악의 수용으로부터 본격적인 출발점을 잡을 수 있다. 즉 이전까지 전자음악에 대하여 부정적인 북한이 전자음악을 수용하여 변화된 인민의 정서를 반영하였던 것이다. 북한의 생활문예는 가요가 중심이 돼 이끌고 있다. '음악정치'가 등장하였으며, 부르기 쉽고 따라 배우기 쉬운 노래의 창작과 대대적인 보급이 나타났다. 생활가요로서 「평양 냉면 제일일세」, 「김치깍뚜기」 등은 당정책 가요, 송가 중심에서 탈피한 다양한 생활가요의 등장이 있으며, 왕재산경음악단, 보천보전자악단의 활동 강화, 북한의 첫 여성취주악단인 인민보안성 산하 여성취주악단의 창설과 활동 강화가 있다.<sup>35)</sup>

이외에도 바둑의 보급이나 대중악기 전시회를 통한 여가활동 독려, 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을 배경으로 남녀의 사랑을 경쾌한 웃음과 코믹한 연기로 그린 「옥류풍경」(손광수 극)이나 수중발레를 소재로 한 텔레비전 드라마 「갈매기」, 북한에서는 금기시되었던 가정의 불륜을 소재로 2001년 10월에 방영되어 화제를 모았던 「가정」 등은 생활문화의 다양한 변화를 보여준다. 이와 함께 1990년대 초반까지도 '자본주의 사회가 낳은 퇴폐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하였던 여자복싱의 활성화, 1989년 체육위원회(현 내각 체육지도위원회) 산하에 결성한 바둑협회를 중심으로 한 바둑의 보급도 생활문화의 다양해진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문화를 다양화하면서 문학예술 작품의 내용은 웃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역

---

35) 약 150여명으로 결성된 것으로 알려진 여성취주악단은 여성 나팔수로 구성된 여성 취주악단의 창설은 이후 경음악 분야의 대중문예 활동이 더욱 활발해 졌다.



설적으로 웃음이 강조되는 것은 현실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최근 들어 김정일식 통치방식으로 강조되고 있는 노래정치를 언급하면서 '노래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한 '난관'이란 곧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상징한다. 어려움이 있지만 웃으면서 지나가자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노래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였듯이 현재의 어려움도 지도자를 믿고서 승리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갖고 웃으면서 가자는 것이다. 경쾌한 내용의 생활가요나 경희극 작품이 높이 평가되는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선군시대의 문화정책의 중심축은 군문에 단체이다. 선군시대의 개막에 따라 조선인민군협주단 산하의 공훈합창단을 별도의 단체로 독립하고 새로운 경향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경희극(코메디) 창작을 군산하 예술단체에서 주로 창작케 하고 있다. 특히 조선인민군 공훈합창작단을 선군시대 나팔수로 규정하면서 김정일의 노래정치를 총대와 결합시키면서 '선군음악정치'라는 용어를 선보이기도 하였다. 음악과 정치를 결합한 알려진 '노래정치'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도 2000년 2월에 개최된 인민무력부 발표회 자리<sup>36)</sup>였다.

군과 예술을 결합한 선군노래정치는 '노래를 사상이나 총대처럼 중시'하는 사상으로 '총대와 노래의 결합'이 북한군을 '일당백의 강군'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이로 인해 '총포성 없는 전쟁'에서 연승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2001년 2월 17일 평양방송은 "한계없는 무자비한 총폭탄이 우리의 군가"라며 동유럽의 사회주의가 몰락할 때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라는 내용의 가요 「사회주의 지키세」로 주민을 뭉치게 했고 제국주의가 '핵 몽둥이'로 위협을 가했을 때는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는 노래로 이에 대항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조선인민군협주단 작가 윤두근이 작사하고 보천보전자악단 소속 작곡가 안정호가 작곡한 「강성부흥 아리랑」에 대하여 "군대가 가사를 쓰고 인민이 곡을 붙인 '강성부흥 아리랑'은 군대가 부르면 무적의 힘이, 인민이 부르면 승리의 신심이 넘친다"고 평가하면서 '김정일 강성부흥의 찬가', '선군혁명시대의 민족적

36) 「연합뉴스」(2001. 12. 10), '북, '조선민족 제일주의' 주제 가요창작 촉구'.

재부(財富)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 것도 선군정치 시대 군중심의 문예활동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2. 최근 북한 대중문화의 특징: 지속과 변화

최근의 북한 대중문화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북한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대중문화 창작에 있어 주체적 창작지도체계와 창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작품 창작의 논거라 할 수 있는 기존의 문예관과 문예이론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 동구사회주의권 붕괴, 구소련 해체 등에 따른 북한체제의 동요를 우려하여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 ‘우리식 사회주의’, ‘붉은기 사상’, ‘고난의 행군’, ‘선군사상’, ‘4대제일주의(우리수령·우리사상·우리군대·우리제도 제일주의)’ 등과 같은 일련의 사상운동을 전개해 왔는바, 그 과정에서 대중문화를 체제 결속 및 사상결집을 위한 선전·선동수단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대중문화 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음을 나타냈다. 따라서 최근에도 북한 대중문화에 있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형상한 수령형상창조 작품들이다. 김일성과 관련해서는, 그의 영생을 기리는 내용의 노래, 유훈관철의 의지를 담은 노래, 탄생(태양절)을 기념하는 노래,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다짐하는 노래들이 꾸준히 창작·보급되고 있다. 북한은 특히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해빛같은 미소 그림습니다>, <수령님은 영원한 인민의 태양> 등, ‘수령영생송가’작품들의 창작을 1990년대 가요창작에서 가장 의의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sup>37)</sup>

또한 ‘불후의 고전적 명작’을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합창곡으로 형상화 했다는, 가요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도 빈도 높게 연주되고 있다.

김정일 찬양 가요는 1992년 김정일이 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된 이후 크게 증가하여 최근에는 김일성을 형상한 가요보다 더 많은 곡들이 다량으로 창작, 보급되고 있다. 특히 김일성 사후 유훈통치 기간에 발표된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음악에서 수령형상창조의 기본원칙을 그대로 구현하여 수령의 후계자 형상을 창조한 대

37) 우정혁, “시대를 격동시킨 1990년대 음악예술,” 「조선예술」 (2000. 2), pp. 19-20.

표적 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영화부문에서도 수령형상창조 작품은 기록영화와 예술영화로 다량 제작, 보급되고 있다. 기록영화로는 <빛나는 삶의 품>, <위대한 령장을 모시어>, <강성대국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 <민족 최대의 명절 2월 16일>, <위대한 령도의 빛나는 력사>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김정일의 현지지도 관련 기록영화가 많다. 예술영화로는 '수령의 위대성 형상'과 '혁명적 수령관 구현'이 핵심주제인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이 100부작을 목표로 제작, 보급되고 있으며, <푸른 주단우에서>, <자강도 사람들>, <복무의 길>, <잊을 수 없는 모습>, <불빛>, <이어가는 참된 삶>, <그가 걷는 길> 등,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발표되었다.

또한 연극부문에서도 혁명가극 <피바다>를 비롯해, <피바다>식 혁명가극이라고 하는 <꽃파는 처녀>,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사랑의 바다>, <어머님의 당부> 등이 텔레비전방송에서 꾸준히 방영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 북한의 대중문화에서 다소 변화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 대중문화의 창작·보급에 있어 이론 및 정책상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으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체제동요 및 사상성 약화를 우려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는 다소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북한 대중문화의 특징적 변화양상은 다음의 세 가지로 집약된다.

### 가. 작품의 서정성 강화

대중문화 작품에서의 서정성은 여성의 생활과 정서를 담은 노래, 어린이에 대한 노래, 젊은이들의 사랑에 대한 노래 등과 같은 북한의 생활가요에서 잘 나타나며, 북한의 보통사람들의 생활과 현실을 주제 및 소재로 한 영화작품에서도 잘 엿볼 수 있다. 또한 서정성은 북한 문학작품에서도 잘 나타난다. 북한 대중문화에서의 서정성 강화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관련해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생활에서 시도 모르고 소설도 읽지 않고 지내는 목적같은 사람은 심장이 뜨거울 수 없다. 목적과 같이 딱딱하고 심장이 뜨겁지 못한 사람은 사업과 생활에서 균중성이 있을 수 없으며 인간성을 발휘할 수 없다. 우리 시대 인간의 높은 혁명성과 뜨거운 인간성을 심오하게 그려내어 사람의 문화정서교양에 도움을 주자면 작품에서 딱딱한 정치적인 술어나 구호 같은 것을 라벌하지 말고 현실에 있는 산 사람의 사상과 감정, 생활을 구체적인 화폭으로 생동하게 그려야 한다.<sup>38)</sup>

북한은 생활가요 창작·보급의 의의와 중요성을 퇴폐가요의 침습방지에 두고 있다.<sup>39)</sup> 따라서 대중문화에서의 서정성 강화는 일면 '착취계급의 반동적인 사상조류'인 부르조아 문예사조의 침습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서 시사하는 바, 대중문화에서의 서정성 강화는 정치사상교양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문화정서교양 수단으로서의 대중문화의 기능을 크게 인식하여 취해진 조치라고도 볼 수 있다.

#### 나. 작품 주제 및 소재의 다양화

1990년대 이래 북한의 대중문화는 모든 장르에 있어 주제 및 소재가 다양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음악부문에서 주제 및 소재의 다양화는 1990년대 들어 현저하게 증가한 생활가요의 창작·보급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sup>40)</sup> 생활가요의 창작·보급이 강화됨에 따라 여성과 어린이를 주제로 한 노래, 결혼식이나 환갑잔

38) 김정일, 앞의 책, p. 20.

39) 김정일, "음악창작과 보급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1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446.

40) 1990년의 한 담화에서 김정일은 "음악예술부문 창작가들이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노래를 창작하는 데만 관심을 돌리고 근로자들의 다양한 생활과 정서를 반영한 생활적인 노래를 창작하는 데는 관심을 잘 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근로자들의 정서생활을 반영한 노래들을 많이 창작해야 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김정일, "인민이 사랑하고 즐겨부르는 혁명적인 음악작품을 창작하자," 「김정일선집」1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63; 북한의 생활가요는 비교적 사상성이 적은 가사와 빠른 템포, 경쾌한 곡조가 특징이며 북한사회의 '밝고 건전한 시대정서'를 강조한다.

치 때의 축하노래, 청춘남녀의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 등 다양한 주제의 가요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다양한 주제의 가요들 가운데 특히 청춘 남녀의 사랑과 생활을 담은 가요들은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 널리 애창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구애(求愛)를 내용으로 한 서구풍의 경쾌한 리듬의 대중가요 <휘파람>은 크게 인기를 모은 곡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가요에서 주제 및 소재의 다양화는 <평양은 우리의 고향>, <평양은 낙원의 절경일세>, <평양을 나는 사랑해>, <평양랭면 제일이야> 등 평양찬가, <농장 별에 종다리 노래하네>, <농장 별의 기계화 부부>, <도시처녀 시집와요> 등 농촌찬가, <자강도는 내 나라의 자랑도일세>, <대흥단은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등, 지역 찬가 등에서도 나타난다. 이 외에도 노동생활, 관병일치 및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 등, 다양한 주제 및 소재의 노래들이 창작·보급되고 있다.

영화와 텔레비전부문에서도 작품의 주제 및 소재가 다양해졌다. 1987년 제작·상영된 <도라지 꽃> 이래 90년대를 통해 북한영화 작품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향토애'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 영화와 텔레비전의 주제 및 소재는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해졌다. 선군시대 청춘들의 사랑을 주제로 한 예술영화 <기다리는 처녀>, 세계 정상에 오른 여자 마라톤 선수 정성옥을 형상한 예술영화 <달려서 하늘까지>, 역사물 주제의 영화 <임진왜란>, <하랑과 진장군>, 민간의 전설로 내려온 고려말의 야담을 계급사관으로 해석하여 영화화한 괴수영화 <불가사리>, 고아를 양육하는 처녀들의 미담, 최전선 초소 근무 군인들과 결혼하기 위해 집단 탄원한 처녀들의 미담 등, 공산주의 미풍을 주제로 한 영화, 수중발레를 소재로 한 텔레비전 드라마 <갈매기>, 가정의 불륜을 소재로 한 <가정> 등이 그것이다. 또한 90년대 말 이래 조국통일을 주제로 한 대중문화 작품의 창작·보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요로는 조국통일을 갈망하는 전 민족의 절절한 염원을 그대로 노래로 형상했다는 <통일아 통일아>를 비롯해 <마중가자 통일해돋이>, <통일무지개>, <통일오작교>, <반갑습니다> 등이 있다. 조국통일을 주제로 영화작품으로는 최근작은 아니나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예술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1·2부가 있다.

1945년 8월, 패전한 일제가 광복을 맞아 '우키시마마루'를 타고 귀국하던 조선인

5천여 명을 배를 폭파시켜 수장한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 예술영화 <살아있는 영혼들>은 북한 영화의 새 기원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은 작품이다. 이와 같은 평가는 이 작품이 그동안 제작된 북한 영화들 가운데 가장 많은 제작비가 소요된 작품이며, 컴퓨터 그래픽을 본격적으로 이용한 최초의 작품이고, 기존의 반일영화작품들과는 달리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투쟁을 소재로 하지 않았다는 데에 근거하고 있다.

선군정치 표방 이래 군사물 주제 영화작품들이 다량 창작, 보급되고 있다. 인민군군인들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반영한 대표작은 <비행사 길영조>, <병사를 사랑하라>, <젊은 참모장>, <소속 없는 부대>, <복무의 길>, <우리 정치위원> 등이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월남자가족을 소재로 한 작품과 이산가족문제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종래 월남자가족과 이산가족문제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북한의 정책적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관련 작품들로는 예술영화 <혈육>, <금희와 은희의 운명>, <우물집여인>, 텔레비전 연속극 10부작 <수평선> 등이 있으며, 특히 텔레비전 연속극 <평양은 아리랑을 노래한다>는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분단의 비극과 이산가족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이산가족 상봉의 당위성 및 중요성을 크게 강조한 작품이다.

위에서와 같이 최근 북한 대중문화에서 작품 주제 및 소재의 다양화가 추구된 것은 정치성, 사상성을 전면에 내세운 도식적인 체제·수령 홍보 위주의 기존 작품들이 수용자인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함에 따라 대중의 관심 유도를 목적으로 취해진 전략적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80년대 말 이래 부분적 체제개방에 따른 외부사조 및 문물의 침투와 경제난 등으로 인해 가치관의 변화를 겪으며 욕구가 다양해진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사상성, 혁명성을 앞세운 기존의 대중문화 작품들이 사상교양 도구로서의 기능을 잃게 됨에 따른 결과라고 하겠다.

#### 다. 오락성·대중성 강화

최근 북한의 대중문화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적인 것은 전반적으로 정치성·사상성이 약화되고 오락성과 대중성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양상은 생활가요의 창작·보급, 전자악기를 사용한 경음악과 가요의 창작·보급 등에서 엿볼 수 있으며<sup>41)</sup>,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의 오락성 강화와 남녀 애정문제 부각 및 남녀 애정관계의 감각적인 묘사 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서의 한국 유흥가와 대중가요의 등장은 북한 대중문화의 변화를 극명하게 말해 주는 단적인 예라고 하겠다. 또한 유흥준의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에 실린 다음의 글에서도 오락성과 대중성이 강화된 북한 대중문화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한편으로 북한사회에도 알게 모르게 남한식 '자본주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음도 보았다. 자본주의적 감각과 욕망의 표정들을 방북기간중 방영된 텔레비전 '런속극' '먼 훗날의 초상'에서 홀깃홀깃 볼 수 있었다. 한 번은 젊은 여주인공이 얇은 옷을 입고 물에 빠져 옷이 몸에 착 달라붙은 섹시한 장면이 스치듯 지나가는 것이었다. 정상적인 남자라면 그 아련한 여운이 3일은 갓을 성싶은 짜릿한 감각문화였다.<sup>42)</sup>

1995년의 희극극단 창단과 함께 빈도 높게 공연되고 있는 경희극 역시 북한 대중문화의 오락성, 대중성 강화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최근에 잘 알려진 작품으로는 동해안의 어느 한 여성해안포중대가 김정일의 초청으로 평양견학을 마치고 돌아와 김정일을 그리며 그가 보내준 "사랑의 말씀과 선물"을 전달받고 감격한다는 내용의 <약속>이라는 작품이다.<sup>43)</sup> 이 외에도 <동지>, <다시 돌아 온 잉어>, <웃으며 가자> 등의 작품이 있다.

41) 보천보전자악단은 가요와 민요에 전자악기의 음향과 현대적인 서구의 팝 음악적인 요소를 도입시켜 시대성이 강한 현대적인 감각의 새로운 노래들을 창작함으로써 1990년대에 들어 북한식의 새로운 가요 창작의 '선구자적 위치'를 차지했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 「90년대 북한 문화예술계의 정책적 변화양상과 향후 남북문화교류방안」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8), p. 70; 특히 보천보전자악단이 녹음한 외국음악 카세트테이프와 청춘남녀의 사랑과 생활을 담은 노래들은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42) 「중앙일보」, 1999. 2. 20.

43) 이 작품의 종자는 "최고사령관과 전사들의 관계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간의 혈연적관계, 혼연일체의 관계이며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친어버이시라는 것"이다. 박호일, "창작수기: 새롭고 특색있는 경희극을 창작하기까지-경희극 <약속> 창작과정을 두고-", 「조선예술」 (1997. 1), p. 44.

그러나 위와 같은 북한 대중문화의 오락성, 대중성 강화 경향이 북한 대중문화에서의 사상성 내지 혁명성 배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오랜 동안 변함없이 반복·재생되어 온 사상성과 혁명성을 전면에 내세운 도식적인 작품들에 대한 인민대중의 거부감으로 인해 사상교양 수단으로서의 대중문화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른 방법론상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종래와 다름없이 사상성, 혁명성을 작품의 핵으로 하면서 다만 대중문화의 수용자인 주민들에게 사상성과 혁명성을 전달, 주입시키는 방법을 간접적·우회적인 것으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화는 점차 기존의 대중문화를 외면해 온 대중의 관심과 흥미 유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조치일 뿐 대중문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자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입장 및 의도는 김정일의 한 담화에 서도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생활세대를 반영한 노래를 창작하는데서 순수한 생활이나 사랑만을 묘사하지 않도록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생활이란 사람들이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생활이며 참다운 사랑도 혁명의 한길을 함께 걸어가는 청년들의 건전한 사랑일것만큼 그 어떤 순수한 인간생활이나 청년들의 사랑을 묘사하는것은 주체의 창작원칙에 맞지 않습니다.<sup>44)</sup>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북한의 대중문화는 정치성과 사상성, 혁명성을 원색적·노골적으로 강조한 기존의 창작 경향을 벗어나 사상성과 혁명성을 흥미와 오락으로 채색하여 간접적·우회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요약하건대, 부분적 체제개방에 따른 외부사조 및 문물의 침투와 경제난 악화로 인한 북한주민들의 가치관 변화 내지 사상성·혁명성 약화 등이 북한 대중문화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때, 북한의 대중문화는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양상으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체제개방은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대중문화 수용자인 북한주민들의 가치관 변화와 사상성·혁명성 약화도 심화되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

44) 김정일, “음악창작과 보급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446.



## V. 북한 사회의 변화와 대중문화의 의미

‘선군정치’란 ‘선군혁명’으로 불리는 김정일 시대의 통치방식, 정치방식을 말한다. ‘선군(先軍)’이라는 단어에서도 나타나듯 그 핵심은 모든 사업에서의 ‘군대우선주의’를 말한다. ‘군사중시정치’, ‘총대중시정치’도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1997년 10월 조선중앙방송 정론을 통해 처음으로 공식화된 ‘선군정치’는 2000년대 들어 김정일 시대의 통치를 지탱하는 중심 개념이자 노선으로 구체화되었으며, 2003년에는 사회 전 분야에서 ‘선군정치’를 통한 ‘강성대국’ 건설이 추구하고 있다.

‘선군정치’의 요체는 군대와 총대를 앞세워 밖으로부터의 압력(북한의 용어를 빌면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에 대응하고, 안으로는 기술과 정보의 현대화, 경제개선 등을 통한 ‘강성대국’의 건설로 집약된다고 볼 수 있다. ‘선군’이란 마디로 ‘김정일프로젝트’를 상징하고 이끌어 나가는 키워드라 할 수 있다.<sup>45)</sup> 지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군대를 앞세워 ‘극복’해 나왔듯이 21세기 이끌어가는 주된 동력(북한식으로 하면 ‘혁명의 주력군’)도 군대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곧 ‘선군정치’이다. ‘위대한 선군기치 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치자’는 2003년도 신년사설은 그 어느 해보다도 북한이 ‘선군정치’를 전면내세우고 있음을 말해 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선군정치’는 김일성 시대의 ‘주체사상’이 지니고 있는 사상적 위상에 이르고 있지는 않지만, 김정일 체제를 강화하여 강성대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현단계 북한사회의 최고 통치원리 내지는 운영철학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선군정치는 당연히 문학예술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선군정치’가 문학예술 분야에 적용되어 산생된 것을 곧 ‘선군혁명문학예술’(또는 ‘선군문학예술’이라고도 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선군시대’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문학예술, 보다 직접적으로는 ‘선군시대’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문학예술이 곧 ‘선군혁명문학예술’로 설명된다. ‘선군시대’의 북한문학예술은 한마디로 ‘선군의

45) 김정일의 ‘강성대국 프로젝트’가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박정희 시대’의 근대화 기획과 대비해 보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대가 모든 사업의 중심에 놓인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나팔수' 기능을 하는 문학예술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정립된 '선군정치'를 문학예술분야에 적용하는 의미도 가지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선군혁명문학예술'을 통해 북한사회에 '선군정치'를 전면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선군시대' 북한 문학예술에서는 모든 장르와 작품이 '선군'으로 일색화되고 있다. 작품의 주제가 되었든 그 활용이 되었든 '선군정치'와 관계된 작품만이 높이 평가되고 또 널리 보급되고 있다.

'선군혁명문학예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선군시대'의 현실과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데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시대정신의 핵심으로 '혁명적 군인정신'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모든 분야의 문학예술 작품에서 핵심 종자는 '혁명적 군인정신'에 관계되어 있다. '혁명적 군인정신'으로부터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혁명적 낙관 정신도 나오고, '수령'을 '결사옹위'하며 '일심단결'하는 '믿음'도 나온다는 것이다.

또 하나 '선군혁명문학예술'에서는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반영하는 문학예술, 즉 문학예술로 형상하는 '선군혁명실록'을 만드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다박솔 초소에서 시작하여 오성산·철령·지혜산·1211고지·초도·판문점·안변청년발전소 등으로 이어지는 '현지지도'의 '대장정'을 문학예술을 통해 기록하는 일로 귀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선군혁명문학예술'을 창조하고자 하는 예술가들은 '선군장정의 길'을 종군하는 자세로 현지취재를 하고, 그 다음 그것을 예술에 담는 창조 방식을 주로 취하고 있다. 물론 '실록'이라 하여 단순히 문자 기록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형상화를 통해 그 높이와 폭과 깊이를 담아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선군정치가 문학예술에 미친 영향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선군혁명문학예술'은 1990년대 후반 군부대 소속 예술단의 선도에 의해 시작된 후 문학예술계 전 분야에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선군정치'에서 군인의 역할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여기에도 '선군'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주로 작품의 소재나 주제, 즉 '종자'에서 '선군혁명로선'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선군혁명문학예술'이 창조되고 있다. 창작방법이나 미학에 있어서는 주체문

학예술의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상황이며,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서 주로 내용면에서 '선군시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혁명적 군인정신'을 핵심으로 '수령결사옹위정신'이나 '일심단결', '군민일치', '혁명적 낙관주의', '총대서정' 등을 담는 것이 곧 '선군혁명문학예술'이라 할 수 있겠다.

셋째,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합창조곡·정론장시 등 새로운 장르가 발생하거나 기존 장르의 경우 새로운 형식이 선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창작발레도 새로 선을 보이고 있다. 작품의 형식상 변화로는 경희극 <철령>에서 서사적 인물인 '시인'의 등장이나 장편소설 <총대>에서의 '다부작 형식' 등이 눈에 띈다. 문학예술로 형상화한 '선군혁명실록'이라는 모토 아래 창작된 작품에서 새로운 형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새 장르 발생이나 새로운 형식의등장이 북한문학예술의 근본적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넷째, 일련의 본보기 작품들이 등장함으로써, 향후 '선군혁명문학예술'이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진전 정도에 따라 주체문학예술의 새로운 단계, 나아가 본격적인 '선군혁명문학예술'의 시대가 등장할 가능성도 보인다. 특히 대부분의 본보기 작품들은 김정일의 직접 지도에 의해 창작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지금의 흐름이 우연의 소산이 아니라는 점을 말해 준다. 북한문학예술의 정점에 김정일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미 '문학예술계'의 '선군혁명'이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다.

다섯째, 지금까지의 '선군혁명문학예술'은 단순히 '선군혁명'을 반영하는 기능을 한다기보다 '선군혁명'을 담은 문학예술을 통해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강하게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선군혁명문학예술'이야말로 북한의 '선군정치'를 실현하는 주요한 방법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는 셈이다.

선군시대에 강조되고 있는 선군문학혁명은 현재의 북한이 겪고 있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핵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문학예술에서 선군사상을 구현하는 경향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그러나 처음에 살펴본다와 같이 북한 문학예술의 성격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요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민성으로 상징되는 북한주민들의 반응도 중요한 요소이고, 외부문화와의 접촉도 적지 않은 영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주민의 반응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도 사회주의 공업화를 통하여 산업화를 추진하여왔고, 결과적으로 새세대로 대표되는 산업사회적인 인간형이 탄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이념적 요소를 강조하겠지만, 새로운 세대를 중심으로 산업사회적인 특성 예를 들어 빠른 템포의 음악을 선호하다든지 영상에 경도된다든지 하는 경향성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악기의 활용이 활성화된것이나 전기기타 연주에서 애드립이 확대되는 성향도 이러한 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상적인 일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도 이와 같은 경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북한 드라마에서 가족을 다루는 작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된다.

타문화의 접촉이라는 점에서 모기장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기장은 자본주의의 황색문화를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모기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창문을 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즉, 북한은 불가피하게 타문화와의 접촉이 이루지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든지 타문화와 접촉이 확대되면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한 간 문화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남한문화의 북한 유입이 확산되고 있다. 비록 철저히 제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화를 개방하고, 철저히 통제되고 있기는 하지만 확대되는 남한문화는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문화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sup>46)</sup>

북한문학예술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마지막 요소의 하나는 상업적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은 문학예술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영화가 하나의 예가 된다. 북한은 최근 국제 영화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개봉영화와 해외진출용을 별도로 편집하고 있기도 하다.

---

46) 각종 공연을 통한 문화접촉도 활성화되고 있지만 동시에 경제 협력차원에서도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만화영화 제작을 합작하는 사업의 경우가 하나의 예가 된다. 현재는 하나의 하청구조와 같은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에 남한 만화가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인적 교류의 확대도 남한문화의 유입을 가속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북하고 이들을 통해서 남한문화가 전달되고 있으며, 아시안게임이나 유니버시아드에 참관한 북한 선수나 임직원 그리고 응원단도 남한문화를 경험하고 돌아간다는 것이다.

2000년에 제작된 '살아있는 영혼들'이 대표적이다. 처음으로 영화제작에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것으로 화제가 되었던 '살아있는 영혼들'은 국내개봉용에 들어가는 김일성·김정일 이야기는 해외배포용에는 빠져있다. 뿐만 아니라 남한을 포함하여 외부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영화구입을 권하기도 하고 있다.<sup>47)</sup> 물론 자본주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북한도 이제 문학예술을 하나의 수입원으로 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판매를 염두에 두면 내용이나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47) 유럽등지에서 개최하는 북한영화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각종 외국어로 자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 VI. 결론

북한의 문학예술이 기본적으로 정치적 선전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선군정치를 주장하는 북한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작품들이 창작되고 보급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의 문학예술도 문학예술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것은 북한의 사회적 변화, 특히 주민들의 성향변화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동시에 선전 작품에도 감성의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주민들이 선호하는 작품들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메시지가 적은 것들인 경향이 있으며, 이는 주민들은 작품을 감상할 때, 정치적 메시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정치적 목적과 사회적 요구(혹은 주민의 요구)간의 간격이 넓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경제난 극복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외부문화와의 접촉이 불가피하게 많아지고, 새로운 조류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현재의 상황에서는 정치적 선전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지속될 것이고,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문화적 조류는 철저히 통제되겠지만, 문화를 수용하는 주민들은 문화적 취향은 점차 변화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문화정책의 효율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도하겠지만 극단적인 통제는 대안문화(혹은 저항문화)의 발생으로 이어진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또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문학예술이 중심이 되는 경우 북한은 한편으로는 정치적 선전을 위하여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품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문학예술 작품을 변화시키거나 교류를 대비한 작품을 준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 문학예술은 적지 않은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남한으로서는 북한 문화 특히 대중문화의 변화와 지속이라는 상황을 보다 엄밀히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문화교류의 확대를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문화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강현두. 『대중문화론』, 나남, 1989.

권영민. “북한의 문예이론과 문예정책.” 『북한의 문학』, 서울: 을유문화사, 1990.

김재용. “1990년대 전반기 북한문학과 이후의 전망.” 『북한문화연구』 2집, 1994.

대중문학연구회. 『대중문학이란 무엇인가』, 평민사, 1995.

문화체육부. 『김정일 문예관연구』, 1996.

문화체육부. 『북한식 문화예술 창작 방법론 연구』, 1998.

박상천.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와 문학”, 『북한연구』, 대륙연구소, 1994 겨울호.

유진런 외, 김병익 외 옮김. “마르크스 사상에서의 예술과 사회” 『마르크스주의』, 고려원, 1991.

이우영. “남북한 사회의 문학예술: 개념과 사회적 역할의 차이.” 『통일연구』 2권2호, 1998.

이우영. “새로운 통일담론의 필요성,” 한국비교사회학회 편, 『동아시아 발전사회학』, 서울: 아르케, 2002.

임채욱. “북한의 전통문화계승과 문화적 정통성문제” 『북방사회연구』 창간호. 북방사회연구소, 1998.

전영선. 『북한의 문학예술운영체제와 문예이론』, 역락, 2002.

한국문화정책개발원. 『90년대 북한 문화예술계의 정책적 변화양상과 향후 남북문화교류 방안』 1998.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공연예술의 변화양상 연구』 2002.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북한 문화예술계의 현황과 운영체제』 2001.

허버트 J. 갠스 저, 강현두 역. 『대중문화와 고급문화』, 나남, 1998.

<북한 문헌>

고철훈. “문학예술 창작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자,” 『조선어문』 1992년 4월호.

고철훈. 『문학예술의 주체성과 민족성』, 사회과학출판사, 2001.

- 김일성. “문화예술총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1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김정웅. 『종자와 작품창작』 사회과학출판사, 1987.
- 김정웅. 『주체적 문예리론의 기본·2』 문예출판사, 1992.
- 김정웅. 『주체적문예리론의 기본: 문학예술작품창작』. 평양: 문예출판사.
- 김정일. “방송사업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선집」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정일. 『군의 역할을 높여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일으키자』,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 김정일. 『무용예술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정일. 『미술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정일. 『사회주의의 사상적 기초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김정일. 『영화예술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73.
- 김정일. 『음악예술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정일. 『인민군대를 강화하며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 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 \_\_\_\_\_. 『주체문학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음악창작과 보급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1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_\_\_\_\_. “인민이 사랑하고 즐겨부르는 혁명적인 음악작품을 창작하자.” 「김정일선집」1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_\_\_\_\_. “음악창작과 보급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김하명. <사회주의현실주제 창작의 가장 옳은 길을 밝힌 강령적문헌(론설)> 『조선문예』 1985년 제11호(통권 457호), 문예출판사, 1985.
- 김하명.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북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문예사상> 『조선문학』 1971년 제3호(통



- 권 283호), 문예출판사, 1971.
- 리수립. “자주시대 문학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불멸의 대저작 <주체문학론>.” 「조선문학」10호. 1992.
- 박호일. “창작수기: 새롭고 특색있는 경희극을 창작하기까지-경희극 《약속》 창작과정을 두고-.” 「조선예술」1호. 1997.
- 우정혁. “시대를 격동시킨 1990년대 음악예술” 「조선예술」2호. 2000.
- 최길상. “주체문학의 영원한 생명선, 불멸의 기치.” 「조선문학」1호. 1997.
- \_\_\_\_\_.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건국업적은 우리 문학의 영원한 형상원천.” 「조선문학」9호. 1998.
- 한재만. 『김정일 인간, 사상, 령도』, 평양출판사, 1994.
- 한중모. 『주체적 문예리론의 기본·1』 문예출판사, 1992.



2000년 이후 북한의  
국제체육 활성화 추이

2003. 9

연구책임자 : 박 영 옥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 〈 요약 〉

### □ 연구 목적

체육교류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촉발된 남북교류 중에서 다른 어떤 분야 보다 진전을 이루었던 분야이다. 2002년 부산하계아시안게임과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등 국내개최 국제경기대회를 계기로 남북체육교류가 남북화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부각되었다. 이를 계기로 남북 체육교류의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정작 북한체육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체계론적 관점에서 북한의 체육실태를 밝히는 것이다. 여기서 다루어질 체육의 범위는 일반인의 생활체육(북한용어로는 군중체육)과 엘리트선수의 전문체육(북한용어로는 전문기술체육)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체육활동의 바탕이 되는 정책이념, 이를 관리하는 관련 조직, 체육시설, 체육용품, 체육인식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은 북한의 국제체육교류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제체육 교류의 참가실태와 국제체육교류의 전략을 분석하였다.

### □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해서 문헌 연구와 이를 보완할 심층 면접이 병행되었다. 통일부의 북한 동향분석 자료와 북한 주요일지를 집중 분석하였고 북한의 일차자료는 제한적으로 활용되었다. 심층면접 조사의 대상은 전직 북한의 체육관계자를 포함한 북한이탈주민 11인과 남한 체육단체의 관계자 2인으로 총 13인이다.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의 체육교류 관련 실무자가 제공해줄 정보는 북한의 경기기술의 수준이나 향후 남북체육 교류 우선 종목 등에 그쳐서 북한의 체육현황을 분석하는데 매우 제한적이었다. 면접 대상이 된 북한이탈주민은 전문체육선수 출신자 5인, 전직 체육지도자(관료) 1인, 전직 체육교사 1인과 일반주민 4인이다.

본 연구의 제약점은 다음과 같다. 북한 체육 중에서 학교의 정과체육과 집단체조를 다루지 못했다. 동시에 북한 연구가 갖는 일반적 제약을 공유하고 있다. 주로 문헌 연구에 의존하였으며 면접조사도 주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수행함으로써 조사의 대표성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 □ 북한의 체육체계의 특성

북한의 체육은 군중체육과 전문기술체육으로 대별된다. 북한은 초기에는 체육의 대중화를 사회주의 혁명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체육을 건국투사를 육성 및 단련시키는 수단으로 보았다. 따라서 북한체육의 주요이념은 주민을 노동과 국방에 적합한 건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체육을 널리 보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체육은 집단적으로 조직되고 관리되었다. 북한에서 군중체육이 일어나는 장은 학교, 직장단위이며 각 조직의 기관장은 체육활동을 활성화시켜낼 의

무를 갖도록 규정되었다. 북한의 사회근로단체(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여성연맹,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는 각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군중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조직으로 보인다.

군중체육은 업간체조 혹은 사이체조의 실시, 토요일과 일요일의 국방체육 실시, 아침운동, 인민체력검정사업의 실시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은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매달 둘째 일요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했다.

그러나 북한의 군중체육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난으로 인해서 적어도 90년대 들어서면 평양 시와 일부 대도시, 그중에서도 대규모 직장 수준에서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지방, 소규모 직장조직에서는 거의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식량난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체육활동을 위한 동원이 지시되어도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최근 들어 북한은 기본적으로는 노동력과 국방력에 기여하는 체육활동 장려라는 과거의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문화적 소양을 높이거나 건강 장수에 기여하는 등 체육활동의 다른 목표를 수용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단 평양 중심으로 골프장이나 볼링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은 체육활동을 노동과 국방을 위한 체력단련의 수단으로 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체육활동을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는 수단으로도 보려는 인식의 유연성이 존재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군중체육의 목표의 변화와 달리 이러한 목표에 부응하는 군중체육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다. 또한 식량난으로 그간 잘 시행되지 않았던 군중체육사업을 점차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전문기술체육의 발전은 초기부터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강조된 것은 김정일 당시 총비서의 등장부터이다. 전문기술체육의 발전이란 선수를 체계적으로 육성시켜 국제체육경기대회의 장에서 우승을 거두게 하는 것이다. 북한에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및 도체육위원회, 시체육위원회, 군 구역 체육위원회라는 행정적 관리조직이 위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그러나 전문기술체육의 경우는 체육종목별로 39개의 체육협회가 종목의 발전을 주도적으로 관리해가고 있다. 실행단위를 보면 각 도와 시 수준에 체육선수단을 두고 있고 하위에는 군 구역 체육구락부(청소년과외체육학교)가 있다. 군 구역 체육구락부에는 종목지도자와 시설이 설치되고 여기서 유망주를 훈련시켜서 경기에 출전시키고 있다. 북한의 선수육성체계는 다원적 구조를 갖고 있고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그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북한에서 체육활동의 유망주는 세 개의 육성 및 선발 통로를 통해서 시도 체육단에 선발된다. 세 개 통로는 학교의 체육대회, 학교의 체육전문화소조 활동과 대회, 군 구역 체육구락부이다. 북한의 체육단은 1조, 2조, 3조(양성조)로 선수를 나누어 관리한다.

북한의 주요경기대회로는 공화국선수권대회,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등 종합대회와 청소년학생을 위한 장자산상전국민학교학생체육경기대회, 오산덕상체육경기대회 등 대회와 단일 종목별 대회가 있다. 전국적인 대회에서 두각을 보인 선수는 국가종합체육단(국가대표팀)에 발탁된다.

북한의 주요 종목은 마라톤을 포함한 육상, 축구(여자축구)와 탁구, 권투, 레슬링, 역도, 유도, 태권도 등이다. 북한은 국제대회에서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메달을 획득해왔다. 북한의 운동 종목에 대한 자료는 크게 부족하다. 북한은 체육과학연구원을 두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북한은 체육선수나 지도자들에 대해서 과대한 포상체계를 갖고 있다. 포상체계는 체육명수와 공훈체육인, 인민체육인, 노력영웅, 공화국영웅으로 구분되어 있다. 일반주민은 체육선수나 지도자에 대해서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고 선수나 지도자 스스로도 긍정적인 자아인식을 갖고 있었다.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체육선수나 지도자는 국가적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다.

일반적인 체육시설로는 군 구역 체육구락부의 시설, 학교운동 시설, 학교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의 체육시설이 있다. 시급 단위에는 경기장과 체육관이 기본적으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에 있는 체육관이나 경기장 등 체육시설의 총 수는 파악되고 있지 않다. 체육시설의 대대적 건설 시기는 70년대이며 이때 대부분의 시군 급 기본체육시설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이들 시설은 지금은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 북한에서 국제경기가 가능한 체육시설은 주로 평양 시에 집중되어 있다.

#### □ 2000년 이후 북한 체육과 변화

2000년 이후 북한의 체육정책 목표와 방향은 이상의 틀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고 있다. 체육의 대중화에서는 노동과 국방 등 ‘집단을 위한 체육’에서 ‘개인을 위한 체육활동으로 의미가 확장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또한 2000년 이후 체육의 대중화라는 사업 목표보다는 전문기술 체육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세계수준의 경기기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전문기술체육을 중점지원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북한의 체육조직의 변화는 거의 없다. 체육행정조직의 경우 1999년 체육성을 다시 국가체육지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선수육성관리조직의 경우 1999년 체육구락부를 과외청소년체육학교로 이름을 바꾸어서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은 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철저히 국제스포츠와 교류를 중단하고 수년간 고난의 행군이라 칭하던 체제위기상황을 겪으면서 전문체육선수들의 경기기술 수준이 크게 낮아졌다.

<조선중앙연감>에 발표된 북한체육의 10대 최우수 선수를 보면, 매해마다 국제대회에 우승한 선수이거나 집중적인 선전의 대상이 된 종목의 선수가 뽑히고 있음이 확인된다. 주요 종목은 전통적인 강세 종목인 탁구, 유도, 레슬링과 사격, 역도이며 마라톤, 축구이다. 북한의 포상 대상이 된 선수들도 주로 이 종목에서 배출되고 있다. 주로 북한은 여자 종목에서 국제적인 우수성을 보인 바 있고 최근에는 그 추세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

## □ 2000년 이후 국제체육교류 추이

1992년 이후 북한은 국제체육대회가 거의 개최하지 못했다. 오로지 백두산상국제피겨대회만 개최되었다. 1992년에 북한은 삼지연에서 1995년에 개최예정이던 제3차 동계아시안게임을 반납했고 아시아컵스피드스케이팅 대회의 개최 권리도 반납하였다.

1999년에 제16회 아시아오세아니아컵 주니어아이스하키선수권대회(북한식으로는 아시아, 오세안주 소년빙상호케이선수권대회) B폴 경기대회를 개최했고 백두산상국제피겨축전과 평양국제탁구초청경기대회를 재개했다. 이후 북한은 국제체육 교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2년에는 7개의 국제체육경기대회가 북한에서 개최되었다. 2002년도에 이렇게 많은 국제대회가 개최된 이유는 김일성, 김정일의 90회 및 60회 생일과 인민군 창건 70주년을 맞은 해로써 의미가 큰 해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남한에서 부산아시안게임과 FIFA월드컵이 개최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이에 대응한 조치라는 평가가 있다.

1992년 이후 북한은 국제체육의 장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1996년 애틀란타하계올림픽에 소규모선수단을 파견하였다. 본격적인 국제체육교류에의 참가를 확인시켜 준 대회는 13회 방콕아시아경기대회였다. 1998년 동 대회에서 북한은 8위를 했다. 아시안게임 2위 수준인 남한과는 아직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이 대회 이후 세계수준의 국제대회와 아시아대회에 지속적으로 선수단을 파견하고 있다.

북한은 2002년의 경우 각종 국제경기대회에 40여회 참석하여 금메달 116개 등 280개의 메달을 획득하였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발표는 대회의 수준과 무관한 메달 수이므로 국제경기력 수준을 나타내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고 보면 북한은 2000년 이후 점차 국제체육교류를 확대시켜왔다. 북한의 국제 체육대회에의 참가와 메달 획득 노력은 2003년에도 일관되게 전개되고 있다.

북한의 국제체육 교류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첫째 북한은 전문기술체육과 군중체육의 발전을 양대 목표로 내걸고 있지만 전문체육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려는 목표를 보다 더 강조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국제체육 교류를 통해서 세계가 북한을 국제사회가 일원이자 정상적인 국가로 이해하고 수용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국제체육교류를 국제대회의 개최와 선수 파견에서 더 나아가 국제 체육체계를 활용해서 북한의 외교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인 바 있다. 넷째 북한의 국제체육교류 정책에서는 체제 위협적 요소가 적은 체육부문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흡수해내려는 의도도 확인된다. 북한은 2000년 이후 국제스포츠에서 이미 주요 흐름이 된 스포츠마케팅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음은 가시적으로 드러난 대내적 조치의 내용을 살펴본 것이다. 첫째는 일단 체육 선수의 경기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육성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경기기술 수준이 낮은 상태이며 세계 수준에 올라가기까지는 주로 아시아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해갈 것이다. 둘째 동시에 체육인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해서 훈련여건을 개선시키고 이미 우승을 한 선수나 지도자 등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북한은 국제체육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그간 뒤쳐졌다고 판단한 국제체육 정보, 스포츠과학 지식을 입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북한이 핵 문제로 인한 긴장상황 속에서 스포츠외교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탈피하려는 노력이라고 평가되며 동시에 대내적으로 주민의 결속과 체제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주기 위한 의도로 평가할 수 있다.



# 〈 목 차 〉

□요 약	253
1. 서 론	261
1) 연구필요성과 목적	261
2) 연구 내용	262
3) 연구 방법	262
2. 북한 체육체계	264
1) 체육정책의 이념	264
(1) 군중체육의 정책이념	264
(2) 전문기술체육의 정책이념	265
2) 체육관리조직	267
3) 전문기술체육	271
(1) 경기대회	271
(2) 체육선수단	276
(3) 종목 및 경기 전적	278
(4) 선수와 체육지도자	282
(5) 체육과학	283
4) 군중체육	284
(1) 학생의 체육활동	284
(2) 직장의 체육사업	286
(3) 직장의 운동경기	287
(4) 체육인식	288
5) 체육시설과 체육용품	289
(1) 체육시설	289
(2) 체육용품	291
3. 2000년 이후 북한 체육체제의 변화	291
1) 체육정책의 목표와 조직변화	291
2) 전문체육의 변화	293
(1) 국내경기 대회	293

(2) 선수와 선수육성체계 .....	294
3) 군중체육의 변화 .....	296
(1) 체육의 대중화 .....	296
(2) 경기대회 .....	297
4) 체육시설과 체육용품의 변화 .....	297
4. 2000년 이후 체육교류 현황과 전략 .....	299
1) 국제체육 교류 실태 .....	299
(1) 국제대회 개최 .....	299
(2) 국제대회 참가 .....	301
(3) 남북체육 교류 .....	306
2) 국제체육 교류전략 .....	307
(1) 국제체육 교류 .....	307
(2) 남북체육 교류 .....	310

## I. 서론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체육교류는 체육활동이 갖는 보편성으로 인하여 남북간에 이질성을 해소하고 남북교류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한다. 체육분야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촉발된 남북교류 중에서 다른 어떤 분야 보다 진전을 이루었던 분야이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과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 등 국내 개최 국제경기대회를 계기로 남북 체육교류가 남북화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부각되었다. 이를 계기로 남북 체육교류의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정작 북한 체육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북한체육의 현황과 특성을 밝히려는 시도로는 김순교(1986)의 「남북한 각각 체육현황 비교연구」와 윤병익(1987)의 「북한의 체육」이 국토통일원과 산하 통일연수원의 나옴고, 이후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1995년에 이학래, 김동선의 「북한체육자료집」이 발간되었다. 북한체육자료집은 북한 조선중앙연감을 재분류해서 정리한 것으로 90년대 초반까지 북한 체육의 현황을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이다. 김건구의 「북한체육에 관한 연구:학교, 사회, 국방체육을 중심으로」가 1996년에, 안민석, 박영옥, 송형석, 이용식, 이학래의 「남북체육교류 활성화」에 관한 연구는 1998년에 이루어졌다. 2000년 이후 자료로는 정동길(2000)의 「북한 체육 스포츠영웅」이란 서적이 발간되었다. 2001년에는 박영옥, 성문정, 송제호, 이명천, 이한규의 남북체육환경 분석과 교류확대방안이란 연구보고서의 일부분으로 북한체육의 특성이 분석된 바 있다.

북한체육에 대한 연구는 문학, 음악, 영화, 건축, 역사 등 사회문화의 다른 영역에서 진전되는 연구의 수나 질적 수준과 비교해서 크게 미흡한 편이다. 북한체육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이유는 자료의 문제와 관심 부족 문제가 겹쳐있다. 북한에서 발행된 체육서적과 잡지, 신문을 연구자들이 국내에서 접할 수 없다는 점은 연구에 큰 장애가 된다. 동시에 체육교류가 장관급 회담과 같은 고위급 교류 채널을 통해서 이뤄져왔기 때문에 남한의 체육계나 체육학계에서 체육교류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으로서 북한 체육에 대한 자료축적과 연구에 대해서 등한시한 경향도 한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지난 수년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문 체육은 물론, 일반인들의 체육활동 참여도와 참여여건에 큰 변화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최근 체육 및 스포츠관련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산출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체계론적 관점에서 북한의 체육실태를 밝히는 것이다. 여기서 다루어질 체육의 범위는 일반인의 생활체육(북한용어로는 군중체육)과 엘리트선수의 전문체육(북한용어로는 전문기술체육)이다. 체육체계란 특정 사회 진체를 구성하는 부분 체계로서 체육활동의 목표(명문화된 정책 이념), 체육활동을 목표에 맞도록 조직화하는 하부 단위로서 체육관리 조직, 인프라(체육시설, 체육용품)와 내면화된 체육관련 가치(전문 체육

인과 일반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전문체육과 군중체육에 대한 내면화된 인식)를 포함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북한의 국제체육 교류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국제체육 교류의 참가 실태를 조사하고 향후 북한이 국제체육 교류에 어떻게 대응해갈 것인가를 전망하기 위해서 이면의 교류전략을 파악하고자 한다. 북한의 국제체육교류 전략을 이해하는 것은 남북 체육교류를 준비해나가거나 스포츠외교의 장에서 남북 협력을 추구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첫째 체육활동의 국가적 목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체육활동을 관리하는 틀로서 중앙의 체육행정을 관장하는 조직과 지방의 체육행정을 관장하는 조직, 사업을 시행하는 체육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했다. 셋째 체육활동의 국가적 목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체육부문을 전문기술체육<sup>1)</sup>과 군중체육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의 사업 내용을 파악하였다. 전문체육의 경우 주요 대회와 선수단, 선수육성 방식과 엘리트체육을 지원하는 스포츠과학 기반인 연구기관, 체육인의 포상제도가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sup>2)</sup>. 군중체육은 인민체력검정, 업간 체조 등과 직장인 대회, 체육인식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다섯째 체육활동의 물적 기반이 되는 체육시설, 운동용품의 현황을 다루고자 하였다. 여섯째, 2000년을 전후로 뚜렷이 나타난 변화는 별도로 기술하였다. 체육부문은 정치경제체제의 차이나 정권의 차이와 무관한 보편적 체육관리 구조와 운영원리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정책목표의 우선 순위나 집중지원 부분은 체육정책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일곱째, 국제 체육교류 측면에서의 나타난 변화는 별도로 한 개의 장으로 다루고자 한다. 2000년 이후 북한의 국제 체육교류 현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그 이면에 일관된 전략이 숨어있는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또한 남북체육 교류도 함께 다루고자 한다. 2000년 이후 남북체육교류 현황을 기술하고 이면의 교류전략을 검토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00년도를 기준으로 북한이 전형적으로 유지해온 체육체계의 특징을 밝히고 그러한 특징 중 어떤 면에서 변화가 나타났는가를 지적하고자 한다. 즉 전형적으로 유지된 체육체계를 구성 부문 및 요소별로 지적하고 이러한 체육체계상에서 나타난 변화를 정리하되 이를 북한 체육체계의 발전과 후퇴라는 관점에서 일차적으로 해석하고자 했다.

## 3) 연구 방법

- 1) 남한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해서 이를 전문체육으로 지칭한다. 전문체육이란 특정 종목을 관장하는 경기단체(예를 들면 대한 축구협회, 대한배구협회 등)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활동이라고 가리킨다.
- 2) 2000년대 활동하고 있는 주요 체육인(선수, 지도자, 행정가)자료는 부록에 덧붙였다.

본 연구는 북한 자료와 국내외의 관련 문헌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문헌 연구방법과 이를 보완할 심층 면접을 병행하였다.

심층면접 자료는 문헌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활용되었다. 심층면접 조사의 대상은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의 남북체육교류 관련 관계자 2인과 북한이탈주민으로 총 11명이다.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의 체육교류 관련 실무자가 제공해줄 정보는 북한의 경기력 수준이나 향후 남북체육 교류 우선 종목 등에 그쳐서 북한의 체육현황을 분석하는데 매우 제한적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은 체육과 관련된 정보에 비교적 밝을 것으로 보인 전문체육 선수 출신과 체육지도자 출신, 체육교사 출신 7명과 군중체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선정된 일반인(비체육 종사자) 4명의 면접자료가 활용되었다. 활용된 면접조사 자료는 13개이다.

<표 1> 북한이탈주민 면접대상자

분류번호	성별	재북시 직업	종 목	특기사항
102	남	노동자	비 해당	-
501	남	노동자	비 해당	-
201	남	노동자	비 해당	-
104	남	선수	배구	평양시체육단(2조)
403	남	체육교사	축구	인민학교 체육교원
101	남	감독(체육행정가)	축구	축구감독
402	남	선수	핸드볼	도체육단
401	남	선수	기계체조	도체육단
103	여	건축기사	-	-
404	여	선수	태권도/프로권투	기관차지부체육단
405	여	선수	아이스하키	도체육단

본 연구는 북한체육 실태 중에서 학교의 정과체육은 다루지 않았다. 체육시간에 대한 논의는 교육문제와 연관되어 분석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연예술의 형태로 간주될 수도 있는 집단체조는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북한 연구가 갖는 일반적 제약을 공유하고 있다. 주로 문헌 연구에 의존하였으며 면접조사도 주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수행함으로써 조사의 대표성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남한의 경기단체나 체육단체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북한의 국제체육계 내에서의 경기력 자료도 확보할 수 없었다. 일단 남한 체육단체나 경기단체가 북한체육계의 정보 수집에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지 못한 점 때문이었고 동시에 북한의 국제대회 참가가 정례적이지 못하므로 관리 대상이 되는 순위 내에 북한이 들어있는 종목을 찾기 어려웠다. 국제대회에 출전한 선수의 성적이 국제순위관리시스템에 반영되는 방식 하에서는 예외적인 종목(탁구, 유도 등)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북한선수의 경기력 수준이 낮고 국제대회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2. 북한 체육체계

### 1) 체육정책의 이념

북한체육은 북한 헌법 53조에 근거한다. 북한은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 나라의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 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고 천명(북한헌법, 55조)하고 국가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북한헌법 제 53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체육정책의 목표와 추진주체로서 국가의 의무를 헌법에서 규정한 것이다. 체육정책의 목표는 대체로 두 가지로 요약되는 바 하나는 체육의 대중화 즉 모든 사람을 위한 체육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적인 운동선수의 경기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보편적인 각국의 체육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유사성 속에서 북한의 체육 정책 목표가 자유자본주의 국가의 체육정책과 다른 점은 체육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하는 사회적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다.

#### (1) 군중체육의 정책이념

북한은 군중체육을 지탱하는 노선을 체육의 대중화라고 구호화하고 초창기에는 이를 사회주의 체제의 건설과 연관시켰다. 초기의 체육의 대중화는 체육을 널리 행하는 것이 사회주의 혁명의 중요한 부분이며 체육은 건국투사를 육성 및 단련시키는 수단으로 해석되었다.

1946년 10월 6일 김일성의 체육인대회 연설, <체육을 대중화하기 위하여>에 따르면 체육진흥의 목표는 건국사업의 중요한 고리로서 인민을 씩씩한 건국 투사를 키우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단련시키는 것이었다. 개인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강하게 단련시키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노동력과 국방력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규정된 것이다. 체육의 대중화를 자주국방과 연관시키는 것은 스위스의 체육정책 목표에도 나타난 바 있다. 1970년대 남한에서도 노동력과 국방력의 강화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체육진흥이 강조되었다<sup>3)</sup>.

1965년 2월 19일 내각결정 7호<체육사업을 전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데 대하여>나 1966년 10월 조선노동당 대표자대회 이후 체육정책은 당시 북한정책의 기초였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병진정책 속에서 해석된다. 1966년에는 평양시에서만 50여 만 명이 참가한 직종별, 학교별로 국방집단 체력경기가 진행되었다. 북한 체육정책의 획을 이룬 주요 문건인 <체육을 대중화하여 전체 인민을 노동과 국방에 준비시키자> (1969년 11월4일 김일성이 전국체육인대회에서 한 연설)가 발표되었다.

체육 사업에 대한 북한 정부의 관심은 체육의 특성 때문에 건강한 체력을 유지 보전시키는 것 이외에 집단주의 정치사상 교양사업을 하는 수단적 목적과 결합되었다. 이러한

---

3) 박성희 대통령 시절 ‘체력은 국력’ 이란 구호를 사용되었다.



체육정책 방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세부사업은 각종 달리기 대회와 집단체조이다. 달리기 대회는 <붉은 기 쟁취를 위한 혁명진적지대로 달리기>, <조국통일달리기>식으로 특정의 정치 사상적 교양과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또한 학생들이 주로 참가하는 집단체조는 사상예술성<sup>4)</sup>과 체육적 기교를 표출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된다.

1970년대 이후 북한 체육은 학교체육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학교체육은 ‘로동과 국방대열에 나갈 공산주의 후비사업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는 김일성의 지적<sup>5)</sup>에 근거한다. 체육의 대중화에서 두 번째로 강조된 정책 방침은 직장인의 체육사업 강화이다. 직장체육의 골격이 되는 하루 20-30분 정도의 업간체조의 실시, 토요일과 일요일의 국방체육 실시가 강조되었다. 이는 김정일의 체육정책에 대한 뚜렷한 지침은 1980년대 후반에 발표된 문건들<sup>6)</sup>에 잘 나타나 있다. 이는 80년대 후반이후 북한의 군중체육 이념에 과거와 다른 요소를 추가했다.(박영옥, 이명진, 이한규, 성문정, 송재호, 2001). 체육의 대중화에서 노동과 국방을 위해 준비하기 위한 체육활동을 강조한 것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나 체육활동이 ‘문화적 소양’을 높이거나 건강이나 장수를 가져오므로 체육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되고 있다는 점은 김일성의 체육정책 이념과 달라진 부분이다.

80년대 후반 재 구축된 군중체육의 목표에 비해서 이러한 목표에 부응하는 군중체육사업은 전국 규모로 추진되지는 못했다. 일단 평양 중심으로 골프장이나 볼링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은 체육활동을 노동과 국방을 위한 체력단련의 수단으로 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체육활동을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는 수단으로도 보려는 인식의 유연성이 존재했기 때문일 것이다.

## (2) 전문기술체육의 정책이념

전문체육이란 엘리트체육 혹은 톱레벨 체육으로서 선수들이 전국대회, 국제대회를 목표로 훈련하고 대회에 경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북한에서는 전문기술체육이란 용어를 쓴다. 1962년 10월 15일 내각 결정 57호 <체육기술수준을 급속히 제고함에 관하여>는 ‘주체적인 교수훈련방법 및 체육기술 및 전술체계의 건설’을 강조했고 이어 1964년 10월 22일에는 교육 및 체육책임부분 책임일군협의회에서 체육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 강화가 논의되었다<sup>7)</sup>.

4) 사회주의애국주의, 혁명정신, 집단주의 등 북한이 청소년 학생들에게 교육시켜내려는 정치 사상적 내용이 집단체조의 사상예술성을 구성하는 것이다.

5) “..만일 학교들에서 학생들 속에서 체력단련을 널리 한다면 모든 학생들이 튼튼한 몸으로 군대에도 가게 될 것이고 직장에도 나가게 될 것입니다..” ( 1969.전국체육인대회에서 한 연설)

6) 김정일이 발표한 1986년에 체육부문일군들과의 한 담화 <체육을 대중화하여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킬 데 대하여>와 1987년 집단체조창작 전문가들과 한 담화 <집단체조를 잘 발전시킬 데 대하여>, 1989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과 한 담화< 체육을 발전시킬 데 대하여>는 80년대 이후 북한 체육정책의 기본 지침이다.

7) 이시기는 곧 올림픽참가가 북한에게도 관건이 된 시기이다. 북한의 대표들이 국제올

북한의 전문체육은 1972년부터 당 사업의 중심인물로 역할을 하던 김정일의 등장과 밀접히 연관된 것이다. 북한체육에서 경기력 향상 및 국제 체육 무대에서 경쟁력 향상이 중시된 것은 김정일의 영향 때문이라고 평가된다(백종원 1995). 김정일은 체육훈련과 경기에 있어서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이란 방침을 1973년에 발표했다. 중앙 각 도, 시, 군의 체육지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중앙의 체육사업이 시군 구역까지 전달되어 실행될 수 있는 행정 체계가 강화되었고 종목별 체육기술협회가 30개로 확대가 설치되고 1971년에는 집단체조창작단이 신설된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전사, 32권, 1981. 354).

체육기술의 발전에 대한 정책적 강조는 학교체육을 바라보는 관점에서조차 변화를 수반했다. 김정일의 주도로 1974년 모든 학교에서 한가지 체육종목을 전문화시키라는 조치가 있었다. 학교에서 체육을 빨리 발전시키며 체육선수 후비를 전망성 있게 키워나갈 수 있게 한다(조선전사 32, 1981, 358)는 목표가 전문화소조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4월18일 우승컵>쟁취를 위한 전국청소년학생종목별 경기대회’가 신설된 바도 있다. 체육 전문화소조가 전문체육선수를 발굴하는 통로로서 체계화된 것이다.

김정일이 표방하는 북한의 체육정책 방향은 1980년대 후반에 발표된 일련의 문건에 잘 나타나 있다. 체육부문일군들과의 한 담화 <체육을 대중화하여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킬 데 대하여(1986년)>와 집단체조창작 전문가들과 한 담화 <집단체조를 잘 발전시킬 데 대하여(1987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과 한 담화<체육을 발전시킬 데 대하여(1989년)>가 그것이다.

현재까지 북한의 체육정책의 이념은 80년대 발표된 문건의 지침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북한의 체육정책 이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기술)체육 진흥이 크게 부각되었다<sup>8)</sup>. 그 이전 시기와 비교해서 체육정책에서 국제대회 참가와 우승, 전문선수의 경기수준의 강화가 국가 사회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는 점은 강조되었다.

둘째, 체육정책의 쟁점별 정책방향이 구체화되었다. 부연하면 선수선발과 육성, 훈련 방법, 지도자문제, 스포츠과학진흥,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 부문별로 정책목표와 추진 방식이 이전시기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북한체육을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집중강화 방식을 채택되었다. 우선 육성종목을 두어 경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차별화 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넷째, 체육부문에서도 과학 및 정보·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

림픽위원회(IOC)가 주선한 스위스로잔에서 열린 회의에서 남한의 올림픽위원회 대표와 논란을 벌이던 시기이다.

- 8) 1985년 조선중앙연감에 따르면 “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나라의 전반적인 체육수준을 빨리 높이며 종목별 체육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려 세우기 위한 강령적 과업을 제시하였으며 체육인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내세워 주도적 조치를 위해 주시었다. 그리하여 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으며 체육부문 일군들과 선수, 지도원들의 열의가 높아졌다...(230쪽).

## 2) 체육관리조직

북한에서 체육의 국가적 목표가 노동과 국방을 위한 국민의 의무처럼 규정되었기 때문에 체육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조직이 관리해야 할 영역이 되었다. 각 직장의 사업을 평가하는 항목에 체육사업이 빠지지 않고 포함되게 됨으로써<sup>9)</sup> 각 기업소, 기관 등 단위 책임자가 해당 단위의 체육사업에 관심과 책임을 갖도록 정한 것은 이후 북한 특유의 직장 단위의 체육관리체계의 구축 배경이 되었다.

### o 국가체육지도위원회

1989년 김정일의 <체육을 발전시킬 데 대하여>에 따르면 북한의 중앙체육행정조직은 국가체육위원회라는 비상설기구와 조선체육지도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체육위원회는 체육사업의 주요 방향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이고 조선체육지도위원회는 산하에 종목별 경기단체와 각 체육정책 사업의 실행기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1989년 문건은 ‘조선체육지도위원회가 기존의 국가체육위원회의 의사결정 역할까지 장악하고 권한을 더 갖게 되며 이름도 ‘국가체육위원회’로 개칭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곧 종목별 협회 등 체육단체를 국가기구로 흡수하여 국가적 감독 통제하에 두게 된 조치이다.

1983년 당시 체육지도위원회는 노동당 중앙위원회로부터 지도 및 감독을 받으면서 경기단체를 감도, 지도하는 4국, 1 연구소, 1 간부양성소의 작은 조직이었다. 그러나 1989년 이후 국가체육위원회도 30개의 종목별 체육단체 집단체로 창작단을 산하에 둔 3위위원회 11국 1처의 큰 조직인 체육지도위원회가 1997년 체육성으로 개명했다가 1999년 말경에 다시 국가체육지도위원회가 되었다.

### o 교육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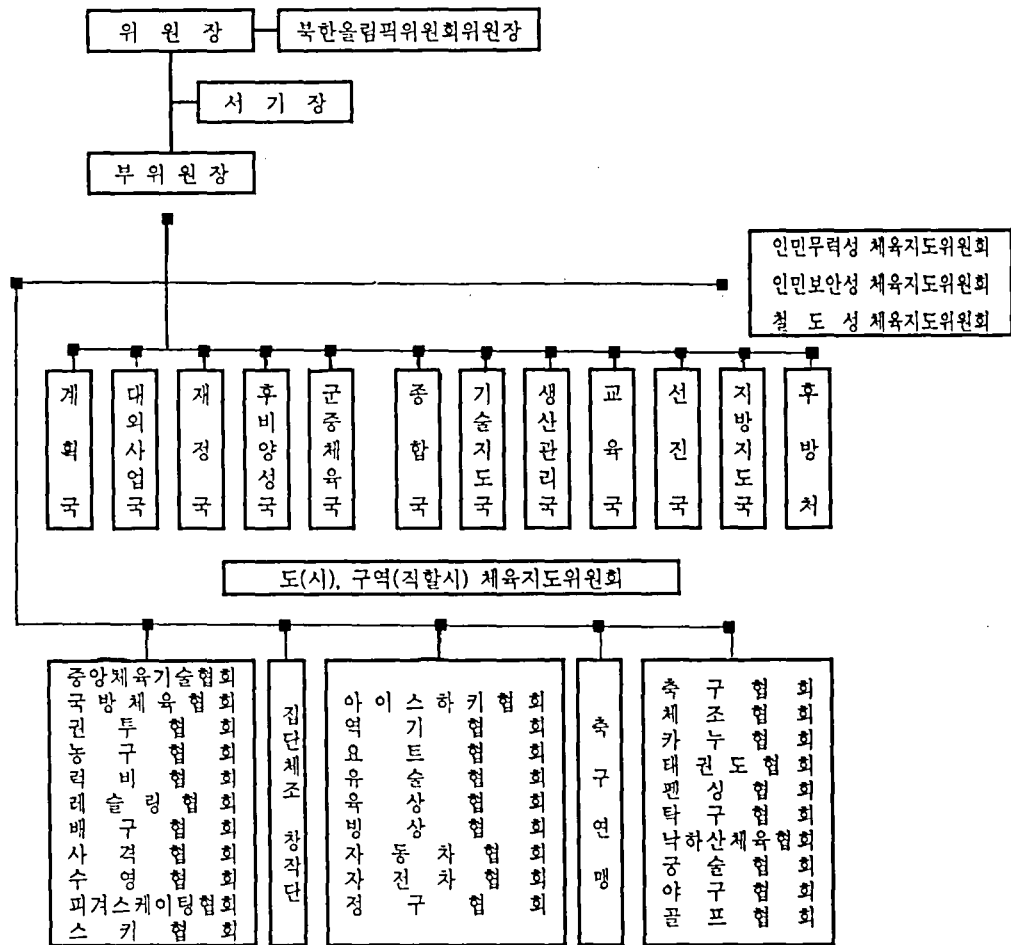
북한의 경우 정과체육 즉 체육교육의 주관자는 교육위원회이다. 교육위원회는 학교에서의 체육대중화를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체육협회는 이외에 체육 및 스포츠를 선전하는 시보 및 기록영화, 스포츠예술 영화를 제작해서 체육대중화를 위한 홍보사업도 교육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 o 체육협회

체육협회란 올림픽에 참가하는 전세계의 국가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조직체이다. 남한에서는 이것을 경기단체라고 부른다. 올림픽 종목인 경우는 그 종목을 보급하고 종목에 관해서 대회를 열고 선수를 등록 받는 관리기구(The National Governing Bodies for sports : NGBs)이다. 각 협회는 실제로 세계 스포츠조직체 - 종목별 국제연맹(The International Federation : IF로 약칭)과 국제올림픽위원회(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 IOC로 약칭) - 에 소속되어있다. 체육

9) 1959년 2월 27일 내각결정 15호(<체육사업을 발전시키며 스포츠 기술수준을 제고할 데 대하여>) 7항은 “근로자의 사회주의 경쟁을 평가함에 있어서 체육사업에서 거둔 성과를 경쟁 종목의 하나로 포함시켜 평가하도록 한다” 이다.

그림 2>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조직도



출처 : 통일부, 북한개요 2000, 535쪽

협회란 종목별로 국제연맹 및 북한의 올림픽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 : NOC)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그 종목을 보급하고 발전시키도록 권한을 받은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남한에서는 경기단체라고 부른다. 북한의 경우 체육협회는 올림픽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이 섞여있다.

조선격투연맹, 조선골프협회, 조선국방체육협회, 조선궁술협회, 조선권투협회, 조선낙하산체육협회, 조선농구협회, 조선력비협회, 조선레슬링협회, 조선마라손협회, 조선모형항공협회, 조선바둑협회, 조선배구협회, 조선배드민턴협회, 조선빙상협회, 조선사격협회, 조선씨이클협회, 조선수구협회, 조선수영협회, 조선스키협회, 조선아이스호키협회, 조선야구협회, 조선역기협회, 조선육상연맹, 조선요트협회, 조선유도(유술)협회, 조선육상협회, 조선정구협회, 조선조정협회, 조선집단체조협회, 조선체조협회, 조선축구협회, 조선카누협회, 조선탁구협회, 조선태권도협회, 조선테니스협회, 조선펜싱협회, 조선핸드볼협회, 조선회거협회가 있다(진한 색은 남한에 해당 종목 경기단체가 있는 경

우임) 북한의 종목별 체육협회는 39개로 숫적으로 남한의 경기단체 47개 보다 적다.

북한의 백과사전에 정의된 체육협회는 ‘체육기술을 보급 발전시키는 사회적인 조직’이며 그 기능은 ‘체육기술 발전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 즉 주체를 세우며, 과학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우리 나라 선수들의 체질적 특성에 맞는 기술, 전술체계의 정립과 독창적인 훈련 방법을 창안 도입하기 위한 사업, 해당 종목의 기술 발전 계획을 세우는 사업 등을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해당 종목의 국제 및 국내 경기대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과 함께 경기규칙을 보급하고 지도서와 세칙을 작성하는 등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이 용효, 2001:137)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종목별 체육단체(경기연맹)는 협의기구 성격을 갖는 각종 위원회 체계를 바탕으로 최소의 상임조직을 갖게되는데 북한도 이점에서는 같다. 예를 들면 국가체육지도위원회의 기술국장이 특정 체육협회의 위원장을 맡거나 체육단 단장이 체육협회 위원장이 되는 식이다.

“체육협회는 대부분 선수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데 북한의 경우는 국가대표팀 선수의 기록, 신상 카드 위주로 관리하고 국가대표급 이하 선수의 개인 기록관리는 해당 선수단이나 체육대학, 체육구락부에서 관리된다고 한다”(면접 101).

#### o 도(직할시) 체육지도처(체육위원회)

도(직할시) 체육위원회의 주요사업은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적 홍보((북한에서는 당 지침, 정부 결정지시의 선전을 하는 셈이다), 생활체육 진흥 즉 군중체육진흥 사업(북한의 경우 체육의 대중화 사업, 인민체력검정 사업), 전문체육진흥 사업, 체육시설 및 기자재 보급 사업, 체육인의 정치실무 수준 제고이다.

행정적 연결은 국가체육지도위원회의 체육(지방)지도국의 지시 및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도(직할시)체육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한다. 이 경우 체육을 관장하는 부위원장은 다른 업무와 겸직을 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업무의 총괄은 체육위원회 사무국장이 관장한다.

종목별 체육분과는 각도(직할시)의 종목 협회(예: 평양시 배구협회 등)로 볼 수 있는 조직이다. 도체육위원회 산하조직이다. 종목별 체육분과(예: 축구분과, 농구분과 등)라고도 한다. 체육의 종목별 분과는 해당 행정구역 내 해당 운동 종목의 활성화 및 기술적 지원을 책임지도록 되어있다.

o 시체육위원회 군(구역) 단위에 체육구락부가 있다면 구역이 모여서 구성된 행정단위마다 시체육위원회가 설치된다. 시체육위원회는 위원장 산하에 해당 시의 체육진흥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시 체육위원회는 각종 시급 대회를 주관하고 체육구락부와 유사하게 선수발굴 육성기능이 있다. 따라서 종목별 지도원이 있고 학생들이 선발되어 기술훈련을 받는다.

### o 군 구역 체육구락부(청소년체육학교)

체육구락부는 군 구역 단위로 설치되어 체육 우수 기능자를 발굴해서 훈련을 시키는 곳이다. 연원은 1958년 내각 결정에 의거 청소년 학생 중 운동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학교 밖에서 전문적으로 훈련시켜 체육선수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청소년스포츠학교가 체계적인 전국적 체계로 되었다. 1964년 군(구역), 시 단위에 체육구락부를 설치하게 했다. 1999년 이후 현재는 청소년체육학교라고 명명되고 있다.

체육구락부의 설치개소 수는 북한 행정구역내 군(구역) 단위 수만큼 설치되어 있다. 체육구락부는 이중으로 지도감독을 받는다. 군(구역)인민위원회의 직속기관으로 각종 사업의 기준을 군 구역 인민위원회로부터 받는다. 동시에 도(직할시)체육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주요 업무는 선수의 저변층 육성하고 권역 내 종합 혹은 종목별 체육경기대회를 주관한다. 설치종목은 축구, 송구, 배구가 기본이며 각 시 군의 여건에 따라서 구락부에 설치되는 종목이 꾸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면 경성군이나 선봉군 체육구락부 모두 7개 종목의 팀을 갖고 있었다. 종목별로 체육지도원이 배치되어 있다(면접 301). 체육지도원은 곧 남한 쪽의 코치나 감독에 해당된다. 지도원이 2명일 경우는 1명은 책임지도원, 다른 한명은 그냥 지도원이라고 한다. 책임지도원은 감독에, 지도원은 코치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성구락부 내에는 여러 종목이 있는데 축구, 여자 소프트볼, 여자 축구, 배구, 권투가 있다. 그 중, 축구는 1,2,3 학년으로 구성된 소년 조와 4,5,6학년으로 구성된 청년조인 2개 조로 나뉘어졌다. 각 조마다 각각 지도원이 있었고 지도 선생님의 감독 아래 훈련을 했다(면접 403)”.

### (2) 군중체육 진흥 하부기구

도(직할시)체육위원회는 체육행사나 체육사업의 추진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예산지원을 책임지며 행사나 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만 10)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하부 기구가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 o 각 직장(기업소, 협동농장, 기관) 관장 부서

근로자의 경우는 최종적인 군중체육사업의 하부 단위는 직장이다. 직장체육사업의 책임자는 각 직장의 최고책임자로 되어 있다. 1000인 이상 직장에는 체육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별도로 체육사업만을 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면접조사 결과를 보면 체육지도원의 직장 배치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sup>11)</sup> 그 대신 직업동맹 조직원 중

10) 여기서 ‘지원’은 “종합적 기술지도”로 되어 있어서 도(직할시)체육위원회가 군중체육행사나 경기대회를 주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11) 남한의 경우도 직장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일정 규모 이상

체육에 관심이 있고 기능이 높은 회원(북한 식 표현으로는 소위 ‘체육열성분자’)이 직장 체육경기의 추진에 앞장을 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접 102).

3급 기업소 이상의 기관에 대해서 국가체육지도위원회 군중체육국이 지도 및 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인의 체육대회가 주요 사업이다.

○ 사회(근로)단체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여성연맹,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 공식적으로 1000명 이상 직장에 체육전문인력을 해당 직장의 직맹에 배속시켜 배치하고 임금을 보장하도록 한 것<sup>12)</sup>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의 사회단체들은 체육사업에서 중요한 추진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 사회단체가 실질적인 체육경기를 조직하며 인민체력 검정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다.

“... 해마다 시험이 있다. 생활 총화(자기가 소속한 조직: 여맹, 직맹, 사로청 등)에서는 자기 비판과 호상비판(무조건 해야함)을 한다...예를 들면 저는 게으르고 나태해서 이번 인민체력검정 시 2급에서 더 아래로 기록이 내려간 것을 반성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꼭 급수에 합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으로 자기 비판한다..”(면접 102).

매년 열리는 전국근로단체 체육사업 일군 연합회의의 참석 범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999년의 경우 조선노동당 비서, 직업 총연맹 위원장, 사회주의 청년동맹 1비서, 농업근로자 동맹위원장, 민주여성동맹위원장의외에 내각 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 각 도(시), 군(구역) 간부, 근로단체 체육사업부문 간부가 체육사업일군 연합회의에 참석하였다.

### ○ 각급 학교

학교는 정무원 교육위원회가 조직하고 해당 도(직할시)에서 열리는 체육경기 즉 학생대상 경기를 주관한다. 또한 학생의 인민체력검정 사업, 업간체조, 아침운동, 체육전문화소 조사사업 등 학내 체육대중화 사업을 책임진다.

## 3) 전문기술체육

### (1) 경기대회

체육경기대회는 종합체육대회나 종목별 체육대회로 나뉜다. 북한의 경기대회는 군중체

---

직장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했으나 실제 직장에서 체육전담 지도원을 배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결과적으로 김대중 정부 이후 각 법제의 규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일정 규모 내 직장 내 체육지도자 배치 조항은 삭제된 바 있다.

12) 1958년 내각결정 30호<체육 및 스포츠보급과 체육간부 양성사업을 개선할 데 관하여>에 따르면 “...종업원 1000명 이상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전임체육지도원 1명을 당해연도 노력фон드 내에서 조절하여 해당공장, 기업소의 직업동맹 단체에 배속시켜 체육사업을 지도하도록 한다.”

육을 바탕으로 조직된 선수나 팀이 참가하는 대회와 검직 체육단이 참가하는 대회, 각종 학생선수의 대회와 전문적인 엘리트선수가 참가하는 대회 등 경기력 수준이나 참가자의 특성에 따라 대회가 개최된다.

면접결과에 따르면 대회마다 참가 범위가 있다고 한다. 즉 검직체육단까지 참여하고, 또 다른 대회에는 전문체육단 만이 참여하는 등 어떤 대회는 일반인과 대회마다 참가 대상을 규정한다.

### <종합대회>

북한의 전국종합대회의 규모는 종목으로는 48~60개, 출전 경기단체는 470개 선수의 수는 6,400명 정도이다(조선중앙연감 2002:208). 전국종합체육경기대회로는 만경대상 체육대회와 백두산상 체육대회, 전국민족체육경기대회, 전국인민체육대회, 공화국선수권대회, 보천보햇불상체육경기대회와 오산덕상체육대회 등이 있다.

○ **만경대상 체육대회**: 김일성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69년부터 매년 개최한다. 김일성의 생일을 전후로 벌어진 축하행사 중 하나로 취급된다. 2월 중 3주간 진행된다. 농구, 배구, 마라톤, 속도빙상, 피겨 스케이팅 등 20여 개 종목의 대회가 열린다. 평양과 지방에서 개최된다.

○ **백두산상 체육경기대회**: 77년 2월 김정일 당총비서의 35회 생일을 기해서 창설된 대회로 매년 2월에 평양과 지방도시(특히 삼지연이 포함)에서 20개 종목에 걸쳐서 열리는 종합체육대회이다. 농구, 배구, 탁구 등 하계 종목 외에 피겨스케이팅, 아이스하키 등 동계종목도 함께 개최된다. 바둑도 이대회의 한 종목이다.

○ **전국인민체육대회**: 60년 창설이후 5년 주기로 개최되는 최대의 종합체육경기대회이다. 정권창건일(9.9)이나 당창건일 (10.10)전후로 20여 일 간에 걸쳐 각 시·도 대항전으로 평양과 지방에서 분산 개최된다. 전문체육선수는 물론 군인·일반주민까지 참여하고 기록경기과 구기종목, 민속경기, 국방체육 종목 등 50여 종목의 대회가 진행된다. 전문선수경기와 일반 직장대항 경기가 이원화되어 조직되며 제일동포 선수까지 참여하며 북한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대규모 대회로 알려져 있다. 전문체육단 경기만도 30개 종목 1,200여명이 참가하고 전국적으로 240만 명의 각 계층 선수(1977년 자료)가 참여한 가장 양적 규모가 큰 대회이다. 남한과 비교한다면 전국체전, 소년체전, 전국생활체육대회를 합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공화국선수권대회**: 종목별 체육기술의 향상과 선수들의 기량 측정을 목적으로 75년 신설된 이래로 매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개최된다. 이 대회는 매년 함흥, 원산, 남포, 해주, 사리원 등 지방과 평양에서 분산 개최되며 남한의 전국 체전과 유사하다. 동 대회는



전문체육 선수단(1급)과 도체육단(2급)이 참가하며 40-50개 종목에서 경기가 치러지는데 국가대표선수나 1급 선수단의 선수 선발의 통로로서 의미가 크다. 대회의 결과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되어 기록으로 남는다고 한다(면접 402)<sup>13)</sup>. 따라서 전문체육 선수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대회이다.

○ **보천보햇불상체육경기대회**: 6월 중에 3주간 열린다. 다른 전국대회와 마찬가지로 예산, 사리원, 해주, 평성, 정주, 남포, 원산, 함흥 등 지방과 평양에서 진행된다. 축구, 농구, 탁구, 유도, 마라톤, 예술체조 등 30여개 종목의 경기가 열린다.

○ **진송킵 체육경기대회**: '94년 김일성 사후부터 시작된 이래 휴전협정 체결(7.27.)일을 전후하여 개최되는 체육행사이다. 주로 각 도·시 체육선수단 소속 선수들이 참가하고 있다. 대회는 초기에는 축구·농구·권투 등 약 40여개 종목을 평양과 약 20일간 실시하였으나 '99년부터 10여 개의 해양체육종목 위주로 변경되었다. 대회 규모 및 기간, 방송보도 등은 축소되는 경향이다.

○ **오산덕상 체육경기대회**: 김정숙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1997년 12월 신설되었다. 연례적으로 매년 12월 김정숙 생일시기에 맞춰 약 1주일간 개최되는 종합체육경기대회이다. 아이스하키, 피겨스케이팅, 스키 등 동계 종목과 농구, 배구, 씨름 등 종목이 시행된다. 전문체육 선수단·도 체육단 선수단 선수들이 참가하여 진행되는 권위 있는 체육행사이다.

#### <종목별 대회>

시기, 공간, 일정은 종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각 종목마다 1년에 1-2회 상시적으로 기술혁신 경기대회를 치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접 101).

종목별 대회로는 축구단일 대회가 가장 발전해있다. 축구대회로는 전국보통교육부문 학생축구대회, 정일봉상축구대회, 만경대상 최상급 축구대회가 있다. 만경대상 최상급 축구대회는 94년 2월 시작된 대회로 축구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경기를 정례적으로 치루게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연합뉴스 1999년 8월 12일자). 월 단위의 연맹전에는 최상급 남녀 전문축구선수단이 리그전을 치른다. 축구리그는 1급 리그와 2급 리그로 나뉘어 시행된다. 축구강자경기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외에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나 8.28청년컵쟁탈 농구경기대회가 대표적인 종목별대회이다.

#### <청소년 대상 대회>

---

13) “ .... 종목별 기록향상과 우수선수를 발굴하는 통로로서 선수나 지도자들에게도 특별히 의미가 있는 대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접 402)”

○ **전국청소년체육학교체육대회**: 전국의 시·군 지역에 1개씩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체육학교(구: 체육구락부)에서 육성된 선수의 실력을 재는 대회이다. 전국체육구락부생체육대회에서 전국청소년체육학교경기대회로 명칭이 바뀐 것은 1999년으로 알려졌다. 매년 8월말에서 9월 중순사이에 1주일 정도기간에 시행된다. 선수육성에서 가장 핵심적이다. 따라서 이 대회가 청소년대상 체육경기대회 중 경기력 수준이 가장 높다.

이 대회는 군(구역) 대항, 도(직할시)대항을 거치면서 구락부의 우수 인재를 발굴하는 기능을 한다. 청소년 대상 체육대회 중에서 가장 높은 기량을 보여주는 대회로 알려져 있다. 각 시도에서 참가한 선수들은 육상, 농구, 배구 등 20-30여 종목별로 평양시와 지방에서 분산해서 경기를 치른다. 2000년 이후에도 매년 개최되고 있다.

○ **전국청년선수권대회**: 9월부터 10월 사이에 지방과 평양에서 농구, 축구, 배구, 탁구, 유도, 역도, 복싱, 리듬체조 등 종목에 걸쳐서 열린다.

○<장자산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와 <정일봉상> 전국인민학교 학생체육경기대회**: 74년 김정일의 지도사업으로 시작된 학교의 체육소조(일명 전문화소조)활동을 전국적으로 결산하는 대회가 변화된 것이다. 1995년부터 <장자산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와 <정일봉상> 전국인민학교 학생체육경기대회로 바뀌었다. <장자산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는 인민학생 대상 대회이며 <정일봉상> 전국인민학교 학생체육경기대회는 고등중학교생이 참가하는 대회이다. 군(구역)단위 학교별 예선을 거치고 다시 시도 대회 결선을 하고 여기서 선발된 선수와 팀이 도를 대표해서 전국 대회를 치른다. 각 학교 체육소조 학생들만 참여하며 선수의 기량 정도는 체육구락부대회보다는 낮은 등급의 대회로 평가된다.

○ **전국청소년학생빙상경기대회**: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창립일에 열린다. 예선을 거쳐 올라온 수백 명의 선수가 참가한 동 대회는 평양빙상관에서 결승이 진행된다. 주요 종목은 스키, 스케이트, 아이스하키 등 동계종목이다. 고등중학교 부문과 인민학교 부문으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 **전국청소년궁전(회관) 체육구락부대회**: 140개 군(구역)에 있는 학생소년회관 또는 궁전의 특기교육을 위한 체육구락부 학생이 참가하는 대회이다. 축구, 농구, 탁구, 태권도, 권투가 주요 종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 대회는 회관에서 체육 특기활동을 하는 소년들이 참가하는 대회로서 전문기술체육 보다는 생활체육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회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열리며 3월 초에 진행된 대회이다.

#### <대학생 대상 대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체육경기대회로는 9월5일상 체육경기대회, 축구, 스키, 스케이트 등 종목별 대학생체육경기대회, 교원양성부문 대학생체육대회, 전국대학생체육

대회, 전국고등체육전문학교학생체육경기대회, 등이 있다. 대학생체육축전은 전국대학에서 예선전을 걸친 대학대표 선수들이 모인 경기로서 전문선수의 경기가 아닌 일반학생까지 함께 참가해서 대학의 체육활동의 성과를 평가한다고 한다.

o 9월5일상전국대학생체육대회: 대학부문과 전문학교부문으로 학교별 대표가 나와서 학교대항전으로 열린다. 77년 9월 5일 제정한 교육절을 기념하기 위해 창설한 대회로서 97년 신설한 대회로서 9월5일상체육대회라고 불린다. 축구, 농구, 탁구, 배구, 국방체육, 체조 종목에서 남녀 대학생이 참가해서 경기를 치른다

<표 2> 북한의 국내개최 체육경기대회

대 회 명	기 간	장 소	비 고
겨울철체육월간	12~2월	북한지역	-
<백두산상>중앙기관일꾼체육경기대회	1.25~2.6	평 양	농구, 배구, 탁구 등 10여개 종목
전국청소년학생 겨울철체육경기대회	1월	안 주	전국에서500여명 참가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	2.7~2.28	평양 등	양궁, 사격, 육상에서 북한 신기록 수립
제4회 전국농업근로자들 농구경기대회	3.1~3.6	평 양	21개 단체의 남녀 선수참가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4.8~4.30	사리원, 평양, 남포 등	약 50개 종목별 경기
제4차 <정일봉상>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	4.26~4.30	평 양	300여명의 선수들참가
제28회<장자산상>전국인민학교 학생체육경기대회	6월	평 양	각 도 선발 1,200여명 학생 참가
<보천보혜분상> 체육경기대회	6월	평양, 혜산, 청진 등	농구, 배구 등 30여개 종목
전국학생소년궁전(회관) 체육구락부생소년선수권대회	6월	평 양	400여명 선수 참가
해양체육월간	7~8월	북한 전역	-
전국<9월5일상>대학생체육경기대회	7월	함 흥	대학부문과 전문학교 부문 구분
8,9월 인민체력검정월간	8~9월	북한 전역	-
<전승컵>체육경기대회	8월	평양, 함흥, 청진 등	해양체육종목 위주로 진행

대 회 명	기 간	장 소	비 고
평양시청소년학생 대동강도하경기	8.24	평양 반월도	1,500여명의 고등중학교 남녀선수 참가
제5차 전국청년학생들의<8.28 청년컵>쟁탈 농구경기대회	8.21~8.27	청 진	대학, 고등중학교, 기업소 팀들이 참가
제28차<정일봉상>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	8.26~9.23	원 산	농구, 축구, 권투 등
제38차 전국청소년체육학교 체육경기대회	9월	평양 및 지방	육상, 씨름 등 30여개 종목
전국농업근로자 민족체육경기대회	9.7~9.10	평 양	씨름, 태권도, 그네뛰기, 널뛰기
공화국선수권대회	9.20 ~10.31	평양 및 지방	사격, 역도 경기에서 북한 신기록 수립
전국노동자 체육경기대회	9.27~10.7	평양 룡라도	800여명의 선수들이 축구, 농구, 배구 참가
예술인체육대회	10.19	평 양	영화, 무대, 교육, 생산부문 선수들이 출전
<오산덕상>체육경기대회	12월	평양 및 지방	농구, 쇼트트랙 등 10여 종목

## (2) 체육선수단

북한의 체육선수단은 수백 개이고 1급 선수단은 30개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규모는 보통 500명에서 800명 정도이다. 매년 실시되는 선수단 대항 리그전에서 최우수선수들을 모아 집중 훈련을 시켜 출전시키고 있다. 국가대표로 선발되면 국제대회에 출전하기 3-5개월 전에 평양 등의 종합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게 된다.

북한의 체육선수단(체육단이란 용어로 주로 지칭되므로 이후에는 혼용해서 사용함)을 구분하는 방식은 조선중앙연감에 따르면 1급선수(체육)단이 수 십개, 2급선수(체육)단이 590개, 3급선수(체육)단(각 공장, 기업소, 기관에 조직된 선수단)이 수백 개라고 (이학래와 김동선, 1995, 33쪽)보고되었으나 최근 체육선수단은 중앙체육단, 도(직할시)체육선수단, 겸직체육선수단으로 구분된다. 중앙체육단과 도체육단, 겸직체육단 소속 선수간에 실력차이가 크다. 세 종류의 체육단에는 수십개 종목이 있고 종목별 차이가 있지만 각 종목 안에 1조, 2조, 양성조를 두어 3단계로 선수를 관리를 한다. 양성 조(組)는 나이가 아직 어려서 육성 중인 선수들이 배속되고 2조는 주전(主戰)선수급에서 한 단계 아래 급 선수들이 배치된다.

1급체육단으로는 「425체육단」, 「압록강체육단」, 「기관차체육단」 등 3여 개의 체육선수단이 있다. 여기서 1급은 일정 규모나 조직 역량을 기준으로 북한이 기관을 관리하

고 감독하는 기준 중 하나이다. 1급은 종목수, 전체 선수수, 성과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체육단이다. 중앙체육단은 모두 1급 체육단이며 도(직할시)체육단의 경우는 중 일부만 1급 체육단이다. 중앙체육단은 대부분 특정 기관(철도부, 경공업성 등)이 운영을 보장하거나 군(軍)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 중앙체육단 >

국가종합체육단은 북한의 대내경기대회에 참석할 때 모란봉체육단으로 이름을 달고 나온다. 국가종합체육단은 따라서 국가종합팀은 북한에서 가장 기량이높은 선수단이다, 각 소속체육단에서 활동하다가 국제대회를 앞두고 참석하기 위해서 소집되어 만들어진다.

국가종합팀은 425체육단 보다 훨씬 더 뛰어난 최고의 팀이다. 국가종합팀의 훈련기지는 평양시 평촌지구에 위치해 있다. 단 축구의 국가종합팀은 평양교외의 송신축구훈련소를 전용훈련장으로 사용한다.

### <도(직할시)체육선수단 >

도(직할시)체육단은 2급 체육단으로 평양시체육단, 개성시체육단, 자강도체육단, 평북체육단, 평남체육단, 함북체육단, 함남체육단, 강원도체육단 등이 있다. 그 규모는 함경북도 가 1,000명 선이다. 평양시 체육단 규모는 이보다 크다. 체육단의 규모는 북한이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체육단은 분산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도 체육단이 3-4개로 분산되어 별도의 체육훈련시설을 쓰며, 1개 훈련기지 즉 체육촌에는 대체로 선수 약250명, 체육지도원 30명 정도가 상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접402).

### < 겸직체육선수단 >

1977년에 전국적으로 설치된 겸직체육단은 절반은 직업적 노동을 하고 절반은 직장 체육선수로 활동한다는 직무의 겸임을 나타내서 지어진 용어이다. 체육단의 경기 수준이나 사회적 보상 수준은 도체육단 보다 낮다.

면접조사에 따르면 함경북도의 경우 약 10개 정도의 겸직체육단이 있다(면접301). 겸직체육단 중에서 우수한 2개 팀과 도 체육단선수들이 교환 경기를 치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겸직체육단은 전문선수에게 계속 운동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전문 선수에게 진로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겸직체육단의 선수들은 구락부나 고등 중학교를 졸업한 후 실력이 비교적 낮은 선수들이다. 이들은 급이 낮은 각종 도급 경기에 참가한다.

겸직체육단의 운영은 우리나라의 실업팀처럼 기업이 운동선수나 팀의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형태이다. 겸직체육단은 한 개 직장(기업소, 농장)에 1개의 겸직체육단이 설치되기도 하지만 여러 개의 직장이 공동으로 하나의 겸직체육단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선봉지역에는 군당(郡黨)과 인민(경영)위원회가 있는데 군당은 제일 위에 기관이고 경

영위원회는 행정을 관장하는데 우리 겸직 체육단은 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체육단 단장이었다. 이름은 종합농장겸직체육단이다. 선수는 40명 정도였다. 선봉군에는 겸직체육단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리고 개인 선수들은 소속되어 있는 기업소나 농장이 달랐다. 나는 수산사업소였고 다른 사람들은 온실농장, 수산기업소, 선봉군 장유 공장 등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렇게 선수들은 여러 곳에 소속되어 있었고 같이 모아서 훈련하지만 노임과 배급은 소속 기업소에서 주었다. 그러나 노르마라고 하는 급식비는 군체육위원회에서 주었다”(면접 303).

“겸직은 큰 공장만 있고 함경북도 다 해서 10개 정도가 있다. 겸직체육단은 선수로 회사를 들어가는 것으로 말은 겸직이지만 주로 운동만 한다. 겸직 선수들은 구락부나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후 실력이 좀 안되는 선수들 즉 전문 체육단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게 된다. 그러니까 겸직 체육단은 남한의 실업팀과 비슷한것으로 결론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선수출신들로 이루어 진다(면접 403).”

### (3) 종목 특성 및 경기 전적

#### 가. 종목 특성

##### [축구]

축구는 마라톤과 함께 북한의 주요종목이다. 김정일은 체육을 대중화하여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킬 데 대하여(1986)에서 ...축구와 마라톤은 상징적 종목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축구와 마라톤을 우선 육성 종목으로 우대하고 있다는 점은 1998년 이후 북경 아시안 게임에 대거 참가했던 북한의 고위체육 지도자를 통해서 확인되기도 했다(조선일보 1998.12.14일자). 북한이탈선수 대상 면접에서도 축구를 주요종목 혹은 육성종목으로 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면접 401)<sup>14)</sup>.

따라서 축구는 북한에서 가장 번성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다. 축구는 북한 전역의 체육구락부에 거의 설치된 종목이다(면접 101). 또한 가장 많은 대회가 열린 종목이기도 하다. 축구만 시행하는 단일대회로 전국보통교육부문학생축구대회, 정일봉상 축구대회, 만경대최상급 축구대회가 있고, 전국 학생소년궁전체육구락부 선수권대회, 9월5일 대학생체육경기대회, 진승컵체육대회, 장자산상체육경기대회, 공화국선수권대회,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 등 종합대회에도 빠지지 않는 종목이다.

북한의 축구대회 중에서 만경대상 최상급축구대회는 가장 권위있는 대회이다. 이 대회는 1부에 속한 우수팀이 남녀 각 8개팀, 2부에 속한 팀과 각도별 10개 팀이 참가해서 풀리그전을 치루는 대회로서 1부 팀 중 하위팀과 2부의 상위 우승팀이 자리 바꿈을 하는

14) “노르마는 일반 선수는 모두 같은데 그 중에서 발전할 종목, 발전단계에 있는 종목이 있고, 발전해 있는 종목처럼 구분단계가 있고 이제부터 발전 할 종목을 살려라 그리고 발전 못하면 노르마를 적게 넣어라 해서 차이가 있다. 우선 최근(여기서 최근이란 탈북이탈선수의 탈북 시기가 1999년도임을 감안할 것)에는 축구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쓴다(면접405).”

것으로 밝혀졌다(면접 101). 1부팀 실력을 갖춘 선수단은 평양시체육선수단, 425체육선수단, 기관차체육선수단, 압록강체육선수단, 경공업부체육선수단, 리명수체육선수단, 월미도체육선수단, 함경북도체육선수단이다.

북한 축구의 실력은 FIFA의 세계 순위 119위이다(2003년 8현재). 그러나 북한의 실력을 119위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북한은 FIFA가 순위관리에서 고려하는 A 매치 대회에 거의 참가하지 않아서 실력이 순위에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의 축구는 1999년에는 방콕에서 열린 제30차 타이왕(킹스)컵축구경기대회에 참가해서 2위를 한 정도이다. 북한은 2002년, 2003년 킹스컵에서 우승 및 준우승을 했으나 1960년대 북한축구의 부활은 아직은 기대하기 어렵다.

여자축구는 1986년 창단되었다. 여자축구가 국제대회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89년 아시아여자축구대회이다. 1993년, 1997년 준우승으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1999년 미국에서 개최된 세계여자축구대회에 출전자격을 획득한 바 있다. 북한의 여자축구는 계속 성장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다.

### [마라톤]

마라톤은 북한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제대회 개최 및 파견에 관심을 보여온 종목이다. 1998년 북경에서 열린 국제마라톤대회에 이어서 1999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참가해서 우승을 했던 종목이다. 1998년 국제마라톤대회에서 김종원이 우승을 여자부에서는 정성옥이 3위를 차지하였다. 1999년 세비야의 세계육상선수권에서 정성옥이 우승하여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마라톤에 대한 관심은 스포츠과학 지원에서도 우선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체육과학연구소는 1996년 '아시아패권을 향한 마라톤 모형'을 만들어 훈련에 활용했다고 보도되었다(연합뉴스 1999.8.13일자).

북한은 96년부터 마라톤 후보선수를 발굴하고 마라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대회도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청소년역전마라톤대회의 개최가 그것이다.<sup>15)</sup>

북한이 마라톤을 유망종목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마라톤이 남한의 우수종목으로 이미 세계를 제패했던 종목(1992년 스페인올림픽에서 황영조선수의 마라톤금메달 획득)이라는 사실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태권도]

태권도는 북한이 메달을 가장 많이 획득한 종목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종목이다. 북한은 2000년에 지난 10년의 체육을 회고하면서 '10년간 다섯 번의 세계선수권 대회와 10여회의 국제경기에서 46개의 우승컵과 220여 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고 태권도의 업적을

---

16) 조선신보를 인용한 국내보도(연합뉴스)에 따르면 매년 청소년대상 마라톤 역전경기가 개최되며 전국에서 남녀 각 20여개 팀이 참가한다고 한다.

선전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태권도선수는 올림픽이나 국제스포츠가 인정하는 세계대회에 나가기 어렵다. 태권도는 남한이 주도하는 세계태권도연맹과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협회로 나뉘어있고 세계태권도연맹이 보급한 남한식 태권도가 각종 올림픽 등국제대회의 종목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인식하는 태권도는 올림픽종목이 아니므로 비교적 중요성이 낮다<sup>16)</sup>

반면에 군중체육으로서 태권도는 다른 어떤 종목 보다 널리 강조되고 보급되고 있는 종목이다. 태권도가 국방과 노동을 준비하기 위한 종목에 적합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태권도는 군중체육의 면에서 인기종목으로 간주되며 태권도대중화 사업이 다른 종목의 대중화 사업 보다 더 강하게 추진되었다. 태권도대중화는 건강태권도의 직장 및 학교별 보급을 추진했으며 건강태권도는 각종 군중집회 시 빈번히 시행된다<sup>17)</sup>. 북한은 태권도를 일반 학생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체육구락부 외에 학생소년궁전(회관)에도 구락부를 두고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다.

### [탁구]

북한은 1957년 「국제탁구연맹」(ITTF)에 가입하는 등 타 종목에 비해 정책적으로 탁구를 육성하였다. 북한의 남자 탁구는 60년대 세계 탁구계의 강자로 군림했다. 1963년 헝가리 부크레스티에서 개최된 국제탁구대회에서 북한은 남자 단체전에서 우승하였다. 남자 탁구는 이어 1965년에는 유고슬라비아 류블랴나에서 개최된 제 28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3등을, 같은 해 8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국제탁구초청경기에서 단체전 준우승을 한 바 있다(조선전사 31권, 1981, 405).

70년대는 북한의 여자탁구가 세계 탁구계의 강자로 부상했다. 1975년 제33차 세계여자탁구선수권(인도 뉴델리)과 1977년 제34차 세계여자탁구선수권대회(영국 버밍햄)에서 북한의 여자탁구는 개인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동 대회에서 북한 탁구는 복식경기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했고 단체전에서 3위를 했다.

1991년 일보 지바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여자탁구가 남북단일팀으로 우승하기도 했다. 2000년대 북한탁구는 다시 세계 무대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김현희와 같은 국제선수를 두고 있다.

### [프로권투와 권투]

- 
- 17) “태권도는 최홍희씨라고 국제태권도협회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체육종목으로는 인정해 주지는 않았던 것 같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에서 관여를 하긴 하는데 어떤 체육단에도 태권도라는 부서가 따로 있지는 않았다. 태권도는 북한에서 대중체육에서 하기도 한다. 태권도는 별로 인기가 없었다. 체육구락부쪽에는 태권도가 있기는 있으나본데 체육종목에는 태권도라는 종목을 안친다”.(면접 401)
- 18) 평양에서 당 간부가 참석한 해양월간 선포식에서 건강태권도가 실시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북한에서 권투는 국방체육으로 중시되었던 종목이며 국제무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종목이다. 올림픽대회에서만 금2, 은2, 동3을 획득하는 등 국제대회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올렸다.

프로권투는 일부 종목에서 프로화가 관심을 끌었던 1997년 이전부터 도입되었다.<sup>18)</sup> 이는 김정일 당시 당총비서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국가체육지도위원회가 발표한 바 있다(연합뉴스, 99. 8.13). 북한의 프로권투는 여자프로권투 포함해서 1992년에 도입되었다. 북한프로권투협회가 1992년에 결성되었고 공화국프로권투선수권대회(9개선수단, 67명 참가)가 1993년에 개최된 바 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금메달리스트 최철수 선수를 프로권투 선수<sup>19)</sup>로 전향시켜서 데뷔전을 치르게 한 것은 1995년이다. 북한은 1995년에 세계복싱평의회(WBC)에 가입했고, 1997년에는 세계복싱연맹(WBA)과 PAPA에 가입했다(연합뉴스 1999, 8.23일자).

북한이 프로권투에 갖게 된 관심은 세계적인 프로스포츠의 발전에 대한 북한식 대응으로 보인다<sup>20)</sup>. 조충련 등을 통해 프로선수 양성에 필요한 기술을 도입하고 프로권투선수로 키울 수 있는 후보선수를 발탁해서 체육단에 소속시켜 경기규칙, 기술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킨 것으로 보인다(면접 404).

#### [역도(역기)]

역도는 권투, 역도, 레슬링, 유도 등과 함께 북한에서는 힘으로 하는 경기라고 해서 중경기라 불린다(면접 401). 역도는 1963년 제3세계 48개국에 참여한 제1차 신홍세력(가네포)대회에서 58kg용상(추켜올리기)에서 세계신기록을 거둔 뒤로 1964년 모스크바상쟁탈 제6차 국제역도 대회에서도 150.5kg용상(추켜올리기)에서 종합성적 3위를 거두었다. 북한은 1969년이래 아시아권에서는 지속적으로 역도경기에서 우세한 성적을 유지해왔다. 특히 경량급에서는 한번도 패권을 빼앗기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이바라키현 가시마군에서 개최된 제3회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에서는 52kg급 인상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을 시작으로 75kg급의 인상, 82.5kg급의 용상과 종합우승으로 금메달 5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3개를 거둔 바 있다.

역도는 1990년대 이후에도 여전히 북한의 올림픽 메달종목이자 메달이 기대된 종목이다. 북한은 유도에서 1992년 바르셀로나 제25차 바르셀로나 올림픽경기대회에서는 동메달 1개(75kg급 김명남선수), 1996년의 애틀랜타 올림픽에서는 은메달 1개(70kg급 김명남

---

19) 이는 김정일 당시 당총비서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국가체육지도위원회가 공표한 바 있다(연합뉴스, 99. 8.13일자).

20) 북한에 프로권투 시장이 생겨난 것이 아니므로 프로권투 선수란 아마추어 권투와 다른 프로권투의 규칙을 훈련받은 선수라는 점에서 반쪽 프로선수이다.

21) 일부에서는 러시아 등 사회주의권 선수들의 국제스포츠 시장에서의 활동과 우승에 따른 상금이 자극이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선수)와 동메달 1개(76kg급 전철호선수)를 거둔바있다. 2000년의 경우 시드니올림픽에서는 여자역도 부문에서만 은메달 1개(58kg급 리성희선수)가 나왔다.

#### [유도]

북한 유도는 '60년대 일본에서 유도를 배웠던 북송 재일동포들에 의해 보급되었으며, 명칭을 '유술'이라 하고 있다. 북한은 동 종목을 국방체육의 일환으로 군을 비롯한 각종 기관과 대학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다. 역도는 국제대회에서도 꾸준히 메달을 획득하는 북한의 메달 유망종목이다(통일부, 주간 동향, 590호). 1998년 이후 북한이 국제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후에 과거 북한 유도의 전통이 살아나고 있다. 계순희선수와 광역철선수, 차현향 선수 등 국제적 선수가 있다.

#### [농구]

농구는 1996년이나 1997년에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다. 그러나 2-3년이 지나면서 그 열기가 수그러 들었다고 지적되고 있다. 당시 총비서가 각별한 관심을 보임으로써 1997년 농구 붐이 조성되었다. 1997년 백두산상 체육경기대회때에 새로운 경기규칙이 도입된다고 발표되어 관심을 끌었다.

“ 내가 대학교 졸업 당시 1996~97년 김정일의 농구활성화 지시는 농구선수선발을 하기 위해 오기도 했지만 1-2년 후 점점 사라졌고, 별로 인기가 없었다(면접 402)”거나 “체육구락부에 키가 크다고 해서 뽑혀가서 농구기능을 2년 정도 배웠는데 시합에 나가기도 전에 별 성과가 없으니 없애버리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갑자기 팀이 없어져버렸다”. (면접 404)

### (4) 선수와 체육지도자

#### 가. 선수

선수가 갖고 있는 경기력 수준은 대회를 통해서 인정된다. 북한의 경우 국제대회에 지속적으로 자주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스포츠연맹에서 종목별로 관리하는 경기력 순위가 확인되지 않는다. 북한이 자신을 갖고 참가하는 탁구와 유도, 역도의 경우 팀 경기가 아니라 선수가 단위가 되기 때문에 일부 선수의 경우 세계적인 서열이 확인 가능하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과 대부분 매년 개최되는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딴 선수는 많지 않다.

이와 별개로 북한은 국내의 활동을 종합해서 10대 최우수선수를 뽑아서 공식 발표한다. 1999년은 북한체육계에 정성욱 열풍이 두드러졌고 그외에 리명훈선수나 박천종선수 등 농구 선수의 대외 활약이 뚜렷했다.

#### 나. 체육선수 및 지도자의 포상

체육단의 경우도 선발된 선수 모두에게 선수 등급기준에 따라서 급여를 지불하고 있다. 일부에서 이러한 급여 때문에 실업이나 프로선수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윤병익, 1987 : 21) 급여는 곧 국가가 주는 것이므로 자본주의 사회의 프로스포츠 선수와 다르다. 또한 북한에 선수 수급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프로선수라는 용어가 적합하지 않다.

국가적 포상이 아니더라도 체육대중화에 대한 수뇌부의 정책적 강조 때문에 운동 기량이 있어서 선수생활을 한 사람들은 사회적 대우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알려졌다.

“체육선수였던 나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고생을 덜 했다”.(면접 201)

포상기준은 체육명수(1,2,3급)→ 공훈체육인→ 인민체육인→ 노력영웅 → 공화국 영웅으로 나뉘어있으며 갈수록 높은 급수이다.

공화국 영웅, 노력영웅, 인민체육인에 든 체육인은 2001년 현재 95명 정도로 알려졌으며 공훈체육인은 660명, 체육명수는 2,700명 정도이다(통일부, 주간동향.)

#### 다. 지도원 및 체육교사

각 도에 설치되어 있던 스포츠 학교를 없애고 1972년부터 각 도 단위에 1개교씩 설치된 3년제 체육전문학교가 있다. 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체육특기자 중에서 선발하며, 졸업자는 인민학교 체육담당 교원이나 각 도 대표선수단에 배치되어 선수 생활을 계속하게 된다.

“체육전문학교는 보통 체육대학이라고 하고 각 도에 하나씩 있는데, 여기를 졸업하면 누구나 인민학교 체육교사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중 특기나 능력이 있으면 대표팀으로 갈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자격증을 따기 위해 대학을 다닌다. 체육대학의 학생 중 95%정도가 교사를 희망한다. 교사의 근무장소는 국가에서 배치한다. 인민학교의 체육교사는 체육대학을 졸업하기만 하면 교육부로부터 자격이 주어진다(면접 403)”.

체육소조는 체육교사가 지도를 했고 구락부의 체육지도원은 프로팀이나 체육단에서 간부생활을 한 경력이 있거나 평양에 있는 조선체육대학과 같은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있다. 체육구락부에 소속된 체육지도원에 대한 보상은 특별히 좋지는 않지만 교사보다는 더 나은 것이다(면접 403).

조선체육대학은 북한 유일의 체육대학으로 체육분야의 최고 교육기관이다. 우수 선수 뿐만 아니라 고급 체육지도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코치를 양성하는 5년제의 지도자 학부와 체육교원을 양성하는 4년제 사범학부 및 집단 체육학부로 구성되어 있다.

평양시 동대원 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조선체육대학은 김책공대, 평양외국어대와 함께 북한의 3대 명문 특수대학으로 손꼽히며 졸업과 동시에 「체육기사」 자격증이 수여되고, 이들에게는 지도원(코치)과 교사자격증이 주어져 대부분 체육현장에 배치된다.

#### (5) 체육과학

북한의 체육과학연구소와 중앙체육의료소는 1959년 설치되었다(1959년 내각결정 15호). 1994년 북한 체육과학원이 북한 체육부 과학기술국 산하기관으로 정비되었고 산하에 5개 연구소(체육과학연구소, 운동의학연구소, 약물연구소, 스포츠정보센터, 스포츠기자재연구소)를 두었다. 북한의 체육과학연구기관의 종사 인력은 500명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 **체육과학연구소:** 150여명의 연구원들이 11개의 연구실을 두고, 주로 국제대회 전략 종목인 유도·레슬링·권투·사격·역도·탁구·축구 등의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평양시에 소재한 체육과학 연구기지에 위치해 있다. 체육과학 연구소서는 체육과학 발전 계획을 세우고 농구, 축구, 마라톤 등 권장 종목과 국제대회에서 승산이 있는 종목의 기술발전을 지원한다고 한다. 국제적으로 체육과학 교류사업을 벌이는 주체이기도 하다(이용호 외, 2001 : 134).

체육생화학, 영양학, 기초과학분야 등 다분과적으로 전문 선수들의 훈련과 경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과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곳이라고 스스로 역할 규정만 바 있다.

○ **운동의학연구소:** 200여명 인력으로 영양·생리·생화학 등 운동의 기초학문에 대한 연구, 선수들의 경기능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 선수들의 부상과 치료예방 활동도 하고 있다. 스포츠전문병원이 산하기구로 운영된다. 전통의학인 고려의학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치료를 하고 있다. 선수들의 피로회복을 위한 사우나 시설과 전문 맛사지사가 있다. 평양시 만경대구역 청춘거리에 세워진 안골체육촌에 자리잡고 있다.

○ **약물연구소:** 도핑 문제를 담당하며 83년 4월에 설립돼 8개의 실험실에서 6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연구소는 1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스포츠음료 공장도 운영한다.

○ **스포츠정보센터:** 국제적인 스포츠정보의 수집과 분석 및 체계적 보급을 위해서 1986년 김정일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체육과학도서관이다. 중국의 스포츠전문 위성채널을 함께 공유하는 방송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평양시 청춘거리 안골체육촌의 송구경기장 내에 설치된 과학기술 보급실이 바로 이 기관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 **체육기자재연구소:** 체육기자재 품질향상 및 개발은 원래 각도의 체육기구공장에 배치된 실험실에서 이루어져 왔다. 북한이 체육과학연구 기능에다 기자재연구개발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 4) 군중체육

### (1) 학생의 체육활동

1980년대나 1990년대 초반까지 인민체력검정 사업, 사이체조, 아침운동은 적어도 평양시에서는 대체로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침에 8시 10분 쯤 수업이 시작하기 때문에 7시45분쯤운동장에 모여서 인민보건체

조를 한다. 이 체조가 끝나면 행사 내용(조희)을 발표한다. 들어갈 때는 사열식을 하면서 들어간다. 담임 선생님도 사열식에 함께 행진해서 들어간다..... 그리고 2교시가 끝나면 사이체조로 인민보건 체조를 한다. 비오는 날만 안하고 언제나 했다(면접 101).

“아침에 일어나서 업간 체조라는 것을 자주 하고 중학교를 다니면서는 학교에서 2교시가 끝나면 운동장에 모여 체조를 하기도 했다(면접 402)”.

그러나 1990년 말이 되면 지방에서는 체육대중화 사업이 거의 실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체육대중화 사업의 일환인 해양월간도 규모가 크게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월 중하순 대동강 반월도에서 벌어지는 청소년학생대동강도하경기는 해양월간에 청년절을 기념하는 행사로서 평양시 각 구역에서 선발된 1500명 정도의 선수가 참가한다.

“해양월간주간 같은 것은 기간을 정해서 했지만 거의 형식적으로 7,8월은 수영을 하는 날, 3,4월은 위생월간 9,10월은 사고방지대책월간으로 산불조심 등을 지도했다. 이는 전문적이진 않고 형식적인 프로그램으로 지금은 거의 없다. 함경북도도 엄청 춥고 눈도 많다. 10월말 두만강을 건너는데 살얼음이 얼었고 자고 일어나면 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눈이 왔다. 내가 인민학교를 다니던 때는 괜찮았는데 1997년에 어린이들은 어렵기 때문에 아침에 학교도 반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오는 것이었다. 그때는 철이 바뀔 때마다 딱지놀이, 연날리기 철엔 연을 날렸고 못치기, 재기차기, 숨바꼭질, 팽이, 스케이트 타기, 축구 등을 했다. 나는 1997년도 4월에 발령이 있었고 1998년 10월에 탈북을 했으니까 1년 6개월 정도 했었다. 학교체육에서 당의 방침은 많이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접 403)

“철봉, 평행봉은 시험을 보기도 했는데 철봉의 턱걸이를 10번 이상을 해야 했고 평행봉은 5번을 해야 했다. 그래서 운동장에 평행봉이나 철봉이 많았다. 북한에서는 체육에 대한 시달림을 받는다. 고등 중학교 때도 집단체조를 했는데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했다. 집단체조를 4월15일날 해야되면 그전 11월 달부터 5개월 정도 연습을 했다. 학교에서 2개월 하고 모란봉에 가서 3개월 다 같이 모여서 연습을 했다. 그런 것에 질려서 사람들이 체육에 질려했다. 약 보름정도가 남은 막판에는 학교 수업도 하지 않고 연습을 한다.”(면접 101).

“고등중학교 체육시간에는 교안이 있었지만 주로 사열식(행진)을 많이 시켰다. 그 것은 인민학교 때도 마찬가지 였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하기 싫어한다. 사열식 줄맞춰서 빨리 끝나면 축구한번 시켜줄게 하면..그러면 애들이 축구를 할 욕심에 열심히 줄서서 연습하고 그랬던 생각이 난다”. (면접 501)

“학교 안에서도 명절날(대학창설일, 10 . 1 학생일)에는 학부끼리 체육대회를 한다. 이중

에는 민속씨름이나 장기, 줄다리기, 응원시합 등이 있다. 여기에는 학생이나 교직원들이 같이 참여하고 학교에서도 운동을 잘하면 인기가 있다”(면접 102).

## (2) 직장의 체육사업

직장 근로자들의 경우 1990년대 초반까지 인민체력검정, 업간체조가 시행되었다. 인민체력검정월간 사업은 매년 8~9월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근로자는 물론 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노동과 국방에 준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체육이란 북한 체육의 목표가 가장 원론적으로 드러난 사업이 인민체력검정이다<sup>21)</sup>. 공식적으로는 인민체력월간을 선포하고 개막식을 한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과거와 달리 인민체력검정 성과에 대한 보도는 찾기 어렵다. 그 이유는 행사가 비교적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평양시나 큰 도시, 대규모 직장에서는 1990년대초까지 인민체력검정이 시행되었으나 당시에도 지방에서나 소규모 직장에서는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인민체력검정은 1년에 한번씩 보통 가을에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방역소에서는 위생담당이 나오고 평양시 행정위원회에서는 담당 직원이 나온다. 그리고 직장내 직장장이나 반장 이런 사람들을 동원되어서 일을 돕기도 한다. 체온, 달리기, 혈압측정 등을 하고 체력검사를 한다. 체력검사는 달리를 위주로 하는데 800m, 100m 등을 한다. 작년에 했던 개인기록과 틀리면 반복하기도 한다(면접 101)”.

북한은 인민체력검정을 87년 이전에는 9월 내지 10월('48.7 북조선인민위원회 교육국 명령 제8호에 의거)중에 실시하다가 87년부터는 8~9월로 변경해서 시행했다. 전체 주민들의 체력상태를 측정하는 것으로 학교 및 직장단위로 이루어지며 남자 10~60세, 여자 10~55세 주민들 대상으로 달리기·넓이뛰기 등 20여개 종목이 측정된다. 나이·성별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검정기준에 따라 수검결과가 우수한 시·군·학교에는 모범칭호를 수여하는 방식으로 참가를 독려해왔다. 근로자들도 학생들의 사이체조와 유사한 업간 체조를 시행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직업소별로 시행정도에 차이가 크다.

“인민보건체조는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는데 오전에는 11시 20분에 시작하여 20분 정도 진행하고 오후에는 3시부터 20분 정도 했다. 대학교인 경우 학생과 교수와 강좌장이 모두 체조에 참여한다”(면접 201).

“회사에서는 방마다 땡땡하고 스피커에서 종이 울리고 소리가 나오면 직원들이 모두 방에서 복도에 나와서 거기서 체조를 한다. 체조는 직장마다 하는 곳도 있고 전혀 안하는

---

22) “인민체력검정사업은 청소년, 학생과 근로자들을 체육활동에 적극 참가시켜 건강을 증진시키고 육체적 능력을 전면적으로 높여주어 그들을 노동과 국방에 믿음직하게 준비시킨다”는 노동신문 기사를 볼 것(연합뉴스,1999.9.3일자)

곳도 있다. 지방인 경우 하는 곳이 별로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체조를 하라고 하지만 귀찮아서 안 하기도 한다. 탁구와 아침달리기(조기 체조)를 하며 아침에 모든 방송에서 인민보건의체조시간임을 알린다. 아침에 달리는 것은 일정한 코스가 있어서 줄을 서서 달렸다(면접 102)”.

“ 동네 주민들은 살기도 힘든데 학교운동장에 나와서 체육을 하는 그런 건 없었다”(면접 101).

체육의 날은 매월 둘째 일요일로 1992년 지정된 이후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1월에는 첫 번째 체육의 날이라고 해서 ‘집단달리기’ 행사가 개최되는데 이는 20002년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03년에는 성·중앙급 기관 80개 단체,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집단달리기’가 있었다. 이러한 집단달리기행사는 국방체육을 강화할 데 대한 당의 의도에 따라 1.12 김일성 광장에서 평양체육관까지 4km 구간에서 성·중앙 기관 일꾼들의 ‘집단달리기’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집단 행사는 결사옹위·총폭탄·강성대국 등의 구호가 앞서서 제기되는 집단주의를 관철시키는 장이 되고 있다.

### (3) 직장의 운동경기

북한의 체육경기대회에는 전문선수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 이외에도 일반인대회도 있다. 당 창건기념일 등 국경일이나 김일성생일, 김정일생일 등 주요 기념일 혹은 북한식 명절에 체육대회가 다양하게 조직된다. 당창건 기념 ‘전국노동자체육경기대회’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노동절의 경우도 각가지 체육대회가 조직된다. 각 기업소별 대회는 겸직선수단이 나가는 것과 각 체육선수단이 참가하는 대회가 따로 있다. 이외에도 근로자 일반이나 학생이 참가하는 대회가 있다.

중앙성부서 일꾼체육대회나 문화부문일꾼체육대회 등 중앙일꾼 대회가 조직되는가 하면 대부분 각 부문(예를 들면, 수산부문, 전기부문, 건축부문 등) 기념절에는 주요 행사의 하나로 부문일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 비공식적인 직장간, 구역간 대회가 치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직장 체육대회의 주요 종목은 축구, 배구, 탁구이다.

“ 지금은 대회가 별로 없는데,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에는 공장간 대회들도 활발히 열리곤 했다(면접 301)”.

“ 나는 보일러공이었다. 직장창립 기념일, 경공업성의 명절, 지역구역의 8.15, 구구절, 10월10일 기념일 행사 같은 때에 체육행사를 했다. 지역구별로 붙어서 연맹전을 하고 명절

당일날 1,2 위전을 했다. 평양시내 구역들 중에 연맹전에서 붙을 구역이 있는데 구역별로 경기하면서 떨어지고 올라가고 해서 다른 지역 올라온 팀과 경기를 하는 식으로 한다. 여자가 많아서 배구나 100m달리기, 손구 등 여자종목을 했다. 이런 대회에는 결직 체육단이 있어도 일반인만 참가해야 한다. 공장에 가보니까 직장별로 이미 종목별로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었다. 평양제사는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었다. 제사공장안에 체육관이 있었는데 탁구, 농구, 배구 등을 할 수 있는 큰 체육관이었다(면접 101).

“ 직장단위의 체육행사에는 평일 날 할 때는 대표선수들과 응원조들 몇 명이 함께 가는데 그곳에 가는 사람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한다. 그리고 이런 경기에 참가할 때 눈속임으로 결직 체육단 선수들을 끼워 넣기도 한다(면접 101)”.

#### (4) 체육 인식

북한에서 체육선수나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높게 평가받는다. 일단 체육교사, 전문선수가 받는 보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한다. 또한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직장대항 경기대회에서 직장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취업에 도움이 된다.

“ 나는 북한에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더 쳐주었다. 더구나 잘 나가는 태권도를 해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선생들이나 학생 또래들도 한급 위로 봐주었다”(면접 404)

“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쁨으로 생각하고 적극 추천하며, 자랑으로 생각한다. 부모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종목에서 특별히 잘하면 전문 체육선수가 되고 제일 못되더라도 학교 선생으로 발령을 받을 수 있다”.(면접 501)

“... 운동을 하는 사람은 군대에 가서도 운동을 하는데 신체단련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군대에서도 운동을 잘하면 인기가 있고 군복무도 쉽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직장까지도 연결이 된다”(면접 301)

“ 축구지도는 2명이 했는데 나보다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은 1,2학년인 저학년을 나는 3,4학년인 고학년을 지도했다. 체육수업은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50분 수업이었고, 체육교사의 대우는 같은 교원인 영어교사의 배급인 700g, 월급이 110원일 때 배급은 800g, 월급은 120원으로 오히려 좋았다”(면접 403)

“ 체육은 중학교를 졸업하면 군대에 가야 하기 때문에 몸을 튼튼히 단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나 주위의 사람들의 영향이 있다. 선생님께서 군대에서 철봉 (앞전, 뒷전)을 못해서 고생했다는 얘기 등이 했다. 북한에서 체육선수들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가겠다고 하면 군대를 보내는데 군대에 가서 운동을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체육단 소속이었다는 이유로 여단이나 사단 체육대회에 나가는 경우가 많다”.(면접 402).

## 5) 체육시설과 체육용품

### (1) 체육시설

부한은 1972년 8월 중앙위원회의 <체육시설건설을 전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데 대하여>의 발표이후 이후 전국적인 체육관, 경기장,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건설을 시도했다. 1970년대는 평양체육관이 개관되는 등 당시로서는 현대적 체육시설이 확장된 시기이다. 1973년에는 종합체육기지라는 남포체육촌 건설이 착공되어 1974년에 대대적으로 완공된다.

김정일은 1971년과 1972년 당 중앙위원회가 밀고 주도하던 체육시설 건설 사업에도 중요한 역할<sup>22)</sup>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에는 1980년 창광원수영장, 1982년 김일성경기장, 1981년 평양빙상장이 건설되었다.

평양시 청춘거리의 체육시설은 1989년 13차 세계청년축전을 준비하면서 건설되었다. 당시에 건설된 시설로는 대규모 옥외체육시설인 양각도경기장과 5.1경기장이 있다. 이 시설들이 북한의 핵심적인 전문체육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평양시 청춘거리(안골)에 건설된 종합체육시설은 세계 청년 축전이 열린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건설되어 현재는 20여 개 종목 경기를 일시에 해낼 수 있다. 89년에 완공된 축구장, 농구경기장, 배구경기장, 탁구경기장, 송구경기장, 역도경기장, 수영, 배드민턴 경기장, 중경기관, 경경기관 이외에 야구경기장, 태권도전당, 사격장, 양궁장이 추가적으로 건설되었고, 2000년 이후에도 피로회복관, 마라톤숙소, 골프연습장, 체육연구원, 체육인숙소가 신축되었다.

각국의 체육정책 당국은 수영장을 종합운동장, 체육관과 함께 더불어 기본 체육시설로 간주한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수영장을 체육시설로 보고있다. 북한의 수영장 시설은 실내의 시설로 각지 수천 곳이라고 하지만(연합뉴스 1999, 8.24일자)주로 자연 하천, 바다 등을 이용한 수영장을 할 수 있는 설비로 판단된다<sup>23)</sup>. 평양시의 경우 대동강 반월도수영장, 문수대물놀이장, 창광원수영장이 있고 각 구역의 학생소년 회관에도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설치비율은 확인되지 않는다.

23) “ (김정일의 보살핌으로).....1977년 모란봉경기장이 현대설비를 갖춘 웅장화려한 경기장으로 변모하였다.....그리고 기관차체육관, 강서체육관, 지방의 종합경기장들, 체육관, 훈련관, 수영관, 스키장, 빙상장이 삼지연, 사리원, 북청 등지에 건설되었다...”(조선전사 32권, 1981, 355)

24) ‘해양체육을 활발히 벌여나가기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서 수영장과 물놀이장을 지방의 특성과 조건에 맞게 구릴 것을 촉구했다....각급 당 조직에서 바다와 강, 호수들에 수영장, 물놀이 장을 잘 보수 정비하여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성 있게 조직할 것’ 에 수영장 물놀이장의 활용의 실상을 엿보게 한다.

북한에는 대중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체육시설도 설치되어 있다. 평양골프연습장, 롤러스케이트장, 평양볼링장이 그것이다. 예를 들면 1994년 평양볼링장은 오락거리로서 체육의 기능에 주목한 시설이다. 평양볼링장은 2730㎡로 40레인을 갖춘 시설인데 개관 이후 5년간 130만명 정도가 이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볼링장 이용은 일부 계층에 한정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 □ 군구역 체육구락부의 시설

체육구락부의 체육시설로는 경기장(운동장)과 체육관이 있다. 군구락부의 경우 500-100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경기장이 있는데 그 안에는 400미터 육상트랙이 있고 축구장이 있으며, 밖에는 농구, 배구를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체육관이 있는 곳도 있다. 체육관은 1층에 종목별 사무실이나 준비실을 배치하고 농구 등 실내경기를 하도록 되어있다. 2층은 경기관람시설이 되어 있고 3층에는 체육위원회 사무실이 있다. 체육위원회는 인민학교끼리의 경기나 학교소조경기, 고등중학교 학생경기 같은 경기를 개최한다.

체육구락부에는 합숙시설이 있다. 일부 집에서 다닐 수 없는 선수들과 통근이 어려운 체육지도원이 숙식을 하도록 되어 있다<sup>24)</sup>. 그러나 체육구락부 시설은 군중집회나 집단행사의 장소로도 사용된다.

“...문화, 체육 등 군에서 열리는 모든 행사를 할 수 있는 군 단위의 시설로 남한의 공설운동장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시설규모는 크지 않다.”(면접 403)

#### □ 학교운동시설

북한의 학교운동장은 남한과 유사하다. 대체로 운동장의 크기가 좀 더 크고, 축구장, 철봉 등 놀이기구가 주변에 설치 되어있다. 북한은 학교운동장에 철봉, 평행봉, 목마 등 체육시설의 설치를 강조하고 있다.

“어려서 작은 광산마을에 살았다. 학교 운동장에 농구대가 있었으나 사람들이 잘 하지 않았음, 운동장에는 철봉, 평행봉, 목마(키크기 운동용으로 맞춰서 만들어져서 키 크기 순서로 차례대로 되어 있음) 등이 있었음, 나무로 만든 탁구대가 있었으나(1개) 상표는 없고 우리 동네 광산기업에서 만들어 주었다. 탁구채가 없어서 나무 판자를 깎아서 했고 운동화 깔창을 그곳에 붙여서 사용했다.”(면접 501)

#### □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

전국 140여 개 군(구역)에 학생소년회관이 설치되어 있고 이 회관시설에는 대체로 체

---

25) “구락부 시절에는 집은 두만강구역인데 구락부는 선봉지역에 있어서 3년 동안 합숙 훈련을 했는데 합숙은 10명 미만 정도 했고 이들을 합숙생이라고 불렀고 나머지는 자가생이라고 했다.”(면접 401)

육활동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평양의 학생소년궁전 체육관은 전국학생청소년 대상 체육경기대회가 개최될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 (2) 체육용품

북한은 선수의 경우 수입 체육용품을 사용하고 일반인의 체육용품은 각 도별로 설치된 체육기구 공장에서 생산해서 상점을 통해서 유통시킨다. 체육용품에 대한 보급은 90년대 중반이후 매우 어려워졌다. 심지어 선수들도 체육용품과 신발, 운동복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있다.

“평양체육기구공장이라는 곳이 있는 데 각 도마다 공장이 있다. 도시 이름을 따서(예: 함흥시 운동기구공장) 명명한다(면접 101)”.

“ 형이 권투를 했기 때문에 집에 권투글러브가 몇 개 있었다. 운동기구를 파는 운동기구상점이 있었다”(면접 102).

“ 일반적으로 보통 집에 있는 운동기구로는 아령이나 줄넘기, 탁구채, 스케이트화 등이 있다. 스케이트 수업을 할 때는 선생님이 애들 데리고 강(얼은 상태)에 나가서 하는데 수업 때마다 이웃에서 빌리기도 어렵고 해서 마련해 준다. 수영 시에는 수영복을 따로 입지 않고 그냥 수영한다. 보통아이들은 수영이나 스케이트 정도는 한다. 모든 학교에는 수영시간이 있고 1년에 두어 번 씩 한다. 강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는 강을 막아 간이 수영장을 만들어 수영했다. 제1 고등중학교(정부 간부들이 다니는 학교)안에는 수영장이 구비되어 있었다”.(면접 102)

“교사시절 축구공과 같은 기자재를 내돈으로 샀었다. 사정이 어려워서 월급은 기준으로만 120원이고 월급은 받지 못했고 배급도 없었다. 학교소조 활동 시에는 축구공 지원조차 없어서 2번 정도 내 돈을 투자했다(면접 403)”.

## 3. 2000년 이후 북한 체육체계의 변화

### 1) 체육정책의 목표와 조직 변화

북한의 체육정책의 이념은 표면상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체육을 대중화하여 전 인민을 노동과 국방에 준비시킨다는 구호와 전문기술 체육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구호가 함께 내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체육정책은 김정일 등장 이후 80년대 주요 문건에서 제시된 정책방향에 따라 구현된 이념과 목표를 계승하고 있다.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기술)체육 진흥이 크게 부각되었다<sup>25)</sup>. 체육정책에서 국제대회 참가와 우승, 전문선수의 경기수준이 강조되었다. 전문체육의 기술향상 및 체육과학 등을 강조하게 된 것은 특히 체육을 3대 혁명의 한 축인 '문화혁명'으로 보는 이념적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백종원, 1995)

둘째, 체육정책의 쟁점별 정책방향이 구체화되었다. 부연하면 선수선발과 육성, 훈련 방법, 지도자문제, 스포츠과학진흥,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 부문별로 정책목표와 추진 방식이 이전시기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북한은 시설, 선수육성, 지도자, 스포츠과학, 체육기자재, 영양등 영역별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체육을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집중강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선 육성종목을 두어 경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차별화 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넷째, 체육부문에서도 과학 및 정보·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강화할 필요성의 인식되었다.

다섯째, 체육의 대중화에서 체육정책 이념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즉 김일성의 1969년 문건은 대중적 체육활동의 이념적 근거를 건국에의 기여, 혁명사업의 지속(노동과 국방에 준비시키는 것)으로 집단적 해석을 했던데 반해 김정일의 문건에서 '문화적 소양', '건강·장수의 비결' 등 체육이 개인에게 주는 효익이 함께 강조되고 있다(박영옥외 2001).

2000년 이후 북한의 체육정책 목표와 방향은 이상의 틀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도 관찰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의 대중화라는 사업 목표보다는 전문기술 체육의 세계적 수준으로의 발전을 핵심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중앙연감> 체육부분 자료는 과거 체육의 대중화를 앞세우는 문구로 시작된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나 2000년, 2001년, 2002년<조선중앙연감> 자료는 전문체육부문의 사업 목표를 강조하면서 시작된다: '우리는 체육사업에 큰 힘을 넣어 나라 체육을 하루 빨리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겠습니다' (2000년판, 2002년판), '체육기술을 발전 시켜 모든 종목들을 세계적인 수준에 끌어 올려야 하겠습니다'(2001년판).

둘째 전문체육의 발전을 강조하고 세계 수준의 경기력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국제적인 교류에 적극적인 점이다. 전문체육의 발전은 세계적 수준의 체력과 기량을 갖춘 우수선수의 발굴과 육성이 이루어져야하고 동시에 세계적인 경기기술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체육의 대중화에서 변화는 과거 노동과 국방 등 '집단을 위한 체육'으로만 의미 부여되던 것이 '개인을 위한 체육활동으로 의미가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sup>26)</sup> 체육활동이

---

27) 1985년 조선중앙연감에 따르면 "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나라의 전반적인 체육 수준을 빨리 높이며 종목별 체육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려 세우기 위한 강령적 과업을 제시하였으며 체육인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내세워 주도록 조치를 위해 주시었다. 그리하여 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으며 체육부문 일꾼들과 선수, 지도원들의 열의가 높아졌다...(230쪽).

28) 체육활동이 '문화적 소양'을 갖게 하고 '건강·장수의 비결' 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

‘문화적 소양’을 갖게 하고 ‘건강·장수의 비결’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천리마)

2000년 이후 북한의 체육조직 변화는 거의 없다. 1999년 체육성을 다시 국가체육지도 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체육구락부는 과외청소년체육학교란 명칭으로 바꾸어서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 2) 전문기술체육의 변화

### (1) 주요 국내경기대회

2000년 이후 북한의 전문체육대회의 변화는 크지 않다. 이미 <표2>에 언급되었던 대회이외에 새로 신설된 대회는 없다. 경기에서 참가군을 구분하거나 규모가 축소 혹은 증가하는 정도의 변화가 관찰된다.

정일봉상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sup>27)</sup>의 경우 각 시·도 청소년체육학교 대표선수가 참가하는 것은 같지만 2001년부터 소년급이 추가되어 소년급과 청소년급으로 나누어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진행하였다. 대회 규모도 커지고 있다. 참가선수가 300명이던 것이 500여명까지 늘어났다. 2002년 북한은 종래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로 부르던 대회를 만경대상 체육축전으로 이름을 바꾸었다(주간동향 580호).

북한은 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철저히 국제스포츠와 교류를 중단하고 수년간 고난의 행군이라 칭하던 체제위기를 겪으면서 전문체육선수들의 수준(경기력 수준)이 많이 약화되었다<sup>28)</sup>.

<표3> 2000년 이후 만경대상 체육대회개최 현황

연도	대회기간	개막 장소	종 목	비 고
2000	4. 6~4.26	함흥경기장	축구, 마라톤 등 40여개 종목	사격, 역기 등 여러 종목 아시아·북한 신기록 수립 선전
2001	4. 8~4.30	사리원경기장	농구, 탁구, 정구 등 40여개 종목	「부분 신기록」
2002	4.10~4.30	농구경기관	축구, 농구, 환쏘기 등 50여개	100개 단체 참가, 역도와 사격종목 세계 신기록 및 북한 신기록 수립 선전
2003	4. 3~4.30	농구경기관	축구, 농구, 마라톤, 권투, 레슬링, 환쏘기 등 42종목	80여 개 체육선수단

다.(천리마)

29) 이 대회는 태권도를 통한 청소년들의 체력 및 정신력 강화를 목적으로 1998년 신설되어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30) 1999년에 당시 북한의 체육성 부상은 국제 우수선수와 북한선수간의 기량 차이가 매우 벌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연합뉴스 1999, 5. 25일자).

## (2) 선수와 선수육성 체계

### 가) 주요 선수와 포상

<조선중앙연감>에 발표된 북한체육의 10대 최우수 선수를 보면, 매해마다 국제대회에 우승한 선수이거나 집중적인 선전의 대상이 된 종목의 선수가 뽑히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참조) 2000년 이후 북한의 경기력은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주요 종목은 전통적인 강세 종목인 탁구, 유도, 레슬링과 사격, 역도이며 마라톤, 축구이다. 북한의 포상 대상이 된 선수들도 주로 이 종목에서 배출되고 있다. 주로 북한은 여자 종목에서 국제적인 우수성을 보인바있고 최근에는 그 추세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 2001년의 경우 10대 최우수선수 중 8명이 여자 선수로 나타났다. 북한이 선발한 10대 최우수선수는 세계선수권 대회 수준의 우승자는 드물고 아시아선수권대회 우승 수준이다.

<표4> 북한의 연도별 10대 최우수선수 명단

	선수 이름	성별	종목 및 체급
1999년	1. 정성옥	여자	마라톤
	2. 리성희	여자	역도 58kg
	3. 리명훈	남자	농구
	4. 박천중	남자	농구
	5. 광익철	남자	유도 81 kg
	6. 계순희	여자	유도 52kg
	7. 최철수	남자	권투(프로)
	8. 리영삼	남자	레슬링 58kg
	9. 김창옥	여자	마라톤
	10. 리봉일	남자	바둑
2000년	1. 리성희	여자	역도 58kg
	2. 계순희	여자	유도 52kg
	3. 김은철	남자	권투 48kg
	4. 박호길	남자	바둑
	5. 립현철	남자	바둑
	6. 권미현	여자	바둑
	7. 강영균	남자	레슬링 54kg
	8. 리영삼	남자	레슬링 58kg
	9. 진주동	남자	레슬링 54kg
	10. 홍명희	여자	육상 1만m
2001년	1. 계순희	여자	유도 57kg
	2. 리경옥	여자	유도 48kg
	3. 리현희	여자	탁구
	4. 김윤미	여자	탁구
	5. 조성옥	여자	여자축구
	6. 진별희	여자	여자축구
	7. 리금숙	여자	여자축구
	8. 강영균	남자	레슬링 54kg
	9. 박남수	남자	사격
	10. 하선비	여자	권투

## 나. 선수육성체계

북한은 2000년 이전까지 유지해오던 선수 발굴 및 육성 체계를 계승하고 있다. 큰 특징은 다원적 발굴 및 육성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로는 체육전문화소조대회 그리고 고등중학교 자체에서 하는 대회가 있고, 체육구락부 대회가 있다. 이는 곧 북한이 선수선발을 위해서 전문화 소조, 체육구락부라는 2개의 통로와 일반학생의 대회참가 또 하나의 통로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통로는 다시 3가지 체육단(중앙 및 도 체육단, 군체육단과 겸직체육단)으로 이어지며 국가대표는 3가지 체육단에서 발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체육단이나 중앙체육단의 선수선발 시기는 수시로 이루어진다. 면접조사 결과에 의거하면 선수 선발에서 경기대회의 입상성적, 대회현장에서의 체육지도원의 현장관찰, 체육구락부 체육지도원이나 학교 체육교사의 추천이 고려된다. 그러나 일단 체육단에 정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체격검사, 체질검사, 체력검사를 거친다. 선수선발 기준은 종목별 차이가 존재하며 표준적인 체격, 체질, 체력검사 외에 체육단의 체육지도원(감독, 코치)의 판단이 포함된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선수출생시 부모의 연령을 고려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고령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은 배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수 선발 시 지능검사가 포함되고 있지는 않지만 생애사 조사에서 '지혜 나 센스'로 표현되는 개인의 지능 수준도 고려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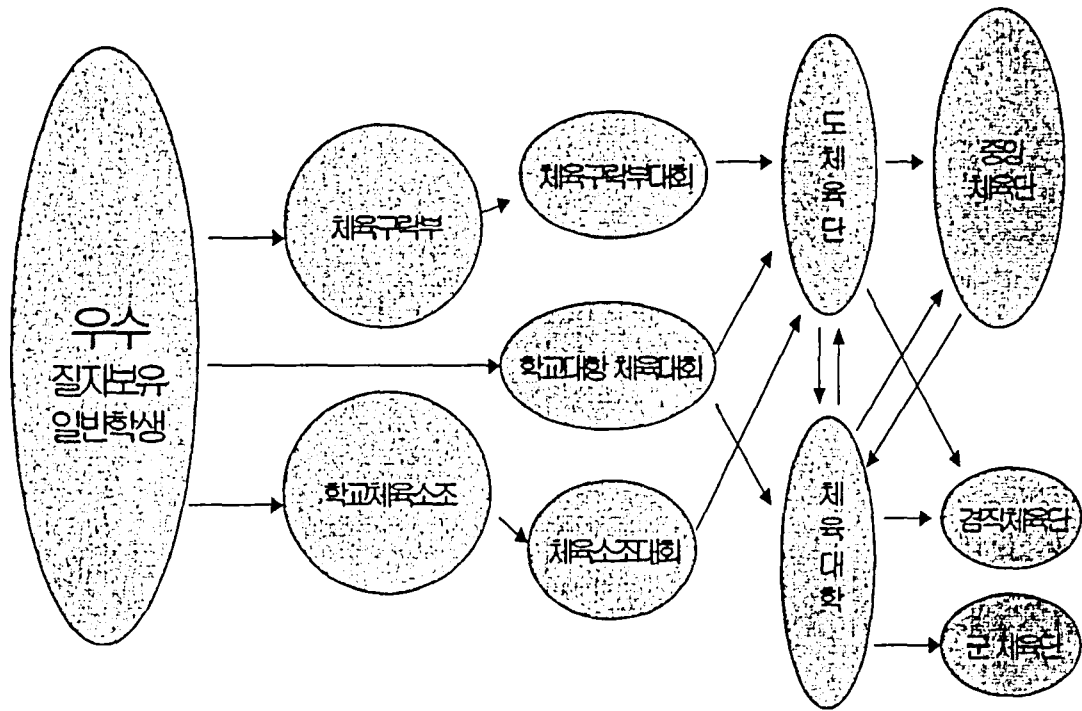
도체육단과 중앙체육단에 선발된 후보선수들은 체육단 내에서 수준별로 관리되며 체육단내의 내부이동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1조, 2조, 3조로 구분되어 훈련에 투입되는데 3조는 발전이 기대되는 후보선수군이다. 3조는 양성조로 별칭되기도 하는데 선수연령층이 낮고 훈련 방식도 1조나 2조와 다르다고 한다. 1조인가 2조인가의 구분은 각종대회의 출전 시 주전인가 아닌가로 가려진다. 대회에 나가면 1조이고 못 나가는 선수는 2조 선수라고 한다.

한편 국가대표선수는 도체육단과 중앙체육단의 선수들과 체육대학에 재학중인 선수를 대상으로 국가대표팀 감독이 각 대회시기 마다 재량권을 갖고 선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단체종목은 우선 감독을 선임한 뒤 감독으로 하여금 선수를 선발하도록 전권을 준다. 종목별 감독은 나름대로 국가대표선수 후보를 선발하여 소속 협회에 보고하게 되는데 협회는 명단을 입수한 뒤 집행부 간부들로 구성된 상무위원회를 열어 감독이 선발한 선수들을 심사하여 일부 선수를 교체하거나 또는 원안대로 승인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감독의 의견을 존중하는 경우가 많다.(정동길, 2001)

특기할 점은 어려서부터 선수등록을 함으로써 종목의 경계를 일찍이 나누어 종목 변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특정 종목 지도원이 현장에서 타 종목 선수를 발탁해서 해당종목 선수로 양성하는 일이 흔한 현상으로 보인다

◁ 그림 2 ▷ 북한의 선수육성체계도



### 3) 군중체육의 변화

#### (1) 체육의 대중화

북한에서 군중체육의 핵심 거점은 직장과 학교였고 주요 사업은 일과로서 진행되는 아침체조나 업간 체조, 중앙에서 주도하는 해양체육월간이나 겨울철체육월간에 참여하는 것과 북한의 명절에 직장대항, 학교대항의 체육경기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군중체육의 개별 프로그램의 시행 여부를 보면 90년대 초중반까지는 평양이나 대규모 기업소 수준에서 시행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지방이나 작은 사업장, 학교에서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던 것이 2000년 즈음에는 평양에서도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북한은 매달 둘째 일요일을 체육의 날로 정해두고 있다. 체육의 날에 열렸던 각종 대회나 사업은 경제난 속에 거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 시행의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확인하기 어렵다. 북한이탈주민의 면접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 북한에서 집단달리기나 사이체조, 아침운동 등 대중의 일상적 체육활동은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북한은 오히려 2000년 이후 체육의 대중화를 더욱 강조하고 인민체력검정 사업, 사이체조, 집단달리기 시행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2003년 새해 첫 체육의날 행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북한의 중앙 TV와 중앙방송은 성중앙급 기관 80개 단체, 4000명이 참가한 집단달리기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주간동향 626호).

## (2) 경기 대회

전국노동자체육축전은 매년 개최되는 전문선수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대중체육 경기대회로서 2000년 이후에도 유지되는 대회이다.

백두산상중앙일꾼체육경기대회는 김정일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성 대회이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된 대중이 하는 체육경기대회 중 아주 중요한 대회 중 하나이다. 매년 시행되는데 95년부터 생일축하 행사의 프로그램으로 정착한 것은 95년부터이다. 적어도 80개 이상 직장(기관)에서 선수를 뽑아서 배구, 탁구, 바둑당기기, 태권도, 집단달리기를 행하는 것은 자발성이 없다는 점이 전혀 다르지만 대회의 구조만 보면 직장인의 생활체육 대회와 유사하다.

북한에서 개최되는 평양불링경기대회는 평양불링장이 주관하는 하나의 이벤트성 경기대회로 파악된다. 이 불링대회의 참가선수수가 100명 정도이지만 전문선수는 아니고 학생이나 근로자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주간동향 632호) 더구나 불링은 북한에서나 남한에서나 아마추어종목 보다는 여가스포츠 혹은 프로스포츠로 대중화된 종목이다.

## 4) 체육시설과 체육용품의 변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97년, 98년 시기에는 체육단내에서도 피죽을 먹어야 할 정도도 어려웠으나 2000년에는 쌀밥이 공급되었다고 한다.(면집104)

2001년 12월 북한은 중앙통신 보도를 통해서 평양시 만경대구역 청춘거리에 체육인들을 위한 고기 및 음료 가공공장을 새롭게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다.(주간동향 571호에서 재인용)

북한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선수의 경기참가 및 메달 획득이 대내적 대외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체육인의 영양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2000년 이후 전문 선수의 훈련 여건을 개선하려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청춘거리의 양궁장과 마라톤 선수의 숙소를 건설하고 체육기자재 연구소를 신설하는 것이 그것이다. 체육기자재 연구소 신설은 선수촌의 보장기능을 강화하여 국제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려는 정책이라고 해석된다.

한편 양궁장 건설도 주목할 만 하다. 양궁장 건설은 이미 남한선수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궁이 북한에서도 메달 유망 종목으로 간주된 결과로 보인다.

한편 2002년에는 평양에 체육도서관을 건설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2002년 3월 26일자 중앙방송-주간동향 571호에서 재인용). 이 시설은 체육시설관리국이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위치는 체육과학원 산하 체육관련 연구기관들 및 각종 경기장이 밀집되어 있는 평양의 청춘거리로 알려졌다.

체육도서관은 체육인들에게 필요한 체육관련 각종 통계 및 분석자료, 정보 전문서적 등을 보관·관리하는 도서관 혹은 정보자료실 개념으로 이해된다. 체육도서관의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다. 체육도서관은 별개의 시설이 아니라 체육연구기관의 부속 시설로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선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과학(영양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마치고 11월에 체육부문 과학자회의를 개최했고 그 자리에서 북한체육의 현재수준 2002년에 대한 비판과 자성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체육계는 북한의 체육을 수년간의 국제체육의 장에서 단절되어 세계 흐름에서 많이 뒤쳐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체육도서관 설치에 북한이 국제체육의 장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국제대회와 경기정보의 입수 외에도 스포츠과학의 활용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북한방송에 따르면 체육도서관은 체육종사자들에게 최신의 국제 스포츠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체육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2003년 2월 들어 보도된 치료체육실 개설 소식이 있었다. 치료체육실은 노젓기 기구, 자전거 에르고미터, 런닝머신 등 체력단련 장비가 갖춰지고 안마치료실이 구비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치료체육실은 최근 세계적 추세인 운동치료(지도)방법을 부분적으로 가미한 헬스클럽으로 볼 수 있다.

동 시설은 설치장소가 인민문화궁전인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문체육시설이 아니라 일반인(비체육인)용 시설이다. 이시설도 일부계층만 이용 할 수 있는 시설로 보이며, 외국인에게 북한사회의 면모를 과시적으로 보여줄 시설이라는 면에서 평양골프연습장, 평양볼링장, 롤러스케이트장과 같은 시설이다.

북한은 2002년 들어 삼지연군의 기존 동계스포츠시설<sup>29)</sup>을 정비하여 동계체육시설단지를 조성하는 건설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시설은 삼지연군 배개봉 인근에 건설 중이며 스키장, 아이스링크, 아이스하키장 등 동계시설과 체육인 숙박시설 및 주차시설, 그리고 체육관으로 알려졌다(평양 타임스 2002년 12.7일자, 평양방송 2003년 3월 9일자 주간동향에서 재인용). 보도내용을 보면 이 시설은 국제대회급 동계체육시설로 건설되고 있다.

한편 2003년 북한이 평북 구성 시에 조성한다고 보도된 공원시설에는 체육공원(탁구, 배구, 농구 시설)도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체육공원은 체육을 교육적 기능이나 집단정신을 훈련시키는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여가와 오락활동으로 체육을 보는 인식의 변화를 깔고 있다.

---

31) 삼지연에는 1982년 개장된 삼지연스키장(스키슬로프와 활강슬로프 설치)과 삼지연빙상경기장(3만 m<sup>2</sup>)이 있어서 각종 동계 종목경기가 개최되고 있다.

## 4. 2000년 이후 체육교류 현황과 전략

### 1) 국제체육교류 실태

#### (1) 국제대회 개최

북한은 평양컵국제축구대회를 1990년에 신설해서 1992년까지 제3차 대회까지 개최하였다(연합뉴스 1999.8.13). 1992년 이후 북한에서 국제체육대회가 거의 개최되지 못했다. 오로지 백두산상국제피겨대회만 개최되었다. 1995년 삼지연에서 개최예정인 제3차 동계아시안게임을 1992년 반납했고 같은 해에 아시아컵스피드스케이팅대회의 개최권리도 반납하였다.

1999년에 제16회 아시아오세아니아컵 주니어아이스하키선수권대회(북한식으로는 아시아, 오세안주 소년빙상호케이선수권대회) B플 경기대회<sup>32)</sup>를 평양시 빙상관에서 개최된 것은 크게 주목을 받을 사건이다. 이 대회에는 남아프리카, 뉴질랜드, 중국, 대만, 태국의 선수단이 참가하였다. 동 대회에는 국제아이스하키연맹 대표가 참석하였다.(조선중앙연감, 2000).

제13차 대회 평양국제탁구초청경기대회<sup>33)</sup>도 1999년 재개되었다. 이 대회도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92년(제12차 대회)에 중단되었으나 7년만인 1999년부터 재개되었다. 따라서 1999년에는 북한에서 평양국제탁구대회와 백두산상국제피겨축전 아시아 오세아니아컵 주니어아이스하키선수권대회등 3개의 국제체육대회가 열렸다. 2000년에는 그 동안 중지되었던 만경대상 국제마라톤대회가 다시 재개되었다. 2000년 북한은 만경대상 국제마라톤대회, 백두산상국제 피겨축전과 평양국제탁구대회, 청소년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등 4개대회를 평양에서 치루었다.

2001년은 만경대상 국제마라톤경기대회, 평양국제탁구대회, 백두산상국제피겨선수권대회가 열렸다. 2000 경대상국제마라톤대회에는 케냐, 에디오피아등 6개국이 참가하던 작은 대회였으나 2001년에는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영국, 에디오피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케냐, 북한 등 25개국으로 참가규모가 늘어났다.

2002년 북한에서는 평양국제탁구초청경기대회, 백두산상 국제피겨선수권대회, 만경대상 국제마라톤경기대회, 평양국제레슬링초청경기대회, 평양국제여자송구초청경기대회, 평양국제 유도초청경기대회, 평양국제 권투초청경기 등 무려 7개의 국제경기대회가 개최되었다. 2002년도에 이렇게 많은 국제대회가 개최된 이유는 김일성, 김정일의 90회 및 60회 생일과 인민군 창건 70주년을 맞은 해로써 의미가 큰 해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남한에서 부산아시안게임과 FIFA월드컵이 개최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이에 대응한 조치라는 평

---

32) 1999년 국제아이스하키연맹의 결정으로 아이스하키국제대회를 A플 대회와 B플 대회로 분산 개최되었고 그 결과 평양개최가 가능해졌다.

33) '81. 8 창설된 이래 매년 개최되는 국제대회로서 초기에는 중국, 소련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만(6~8개국)이 주로 참가했으나, '87년(제7차 대회)부터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비동맹국가들도 참가하는 등 대회규모가 확대되었다.

가가 있다.

북한은 체육을 활용한 스포츠외교의 대상으로 태권도를 중시해온 바있다. 태권도는 국제 태권도 연맹을 기반으로 제3세계 국가를 상대로 북한의 지위를 높이는데 활용되었다. 2001년 국제 무도경기 위원회의 총회를 평양에서 개최 한 것은 북한식 태권도의 국제적 영향력을 보여준 사례이다. 북한은 최홍희 국제태권도연맹위원장의 영향력을 동원하여 국제무도경기위원회를 조직하고 1차 총회를 평양에서 개최하여 경기위원회 본부를 평양에 둘 것과 2003년 1회 국제무도경기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승인되었다고 한다.

<표 5> 북한개최 국제체육대회 현황

연도	대 회 명	기 간	참 가 국
1996	제5차 백두산상 국제피겨축전	2.12~2.16	러시아, 중국, 체코 등 10개국
1997	제6차 백두산상 국제피겨축전	2.14~2.18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등 11개국
1998	제7차 백두산상 국제피겨축전	2.16~2.19	러시아, 슬로바키아 등 5개국
	제1차 9월10일상 국제태권도대회	9.10~9.12	중국, 체코, 불가리아 등 7개국
1999	제8차 백두산상 국제피겨축전	2.14~2.17	러시아, 중국 등 8개국
	아시아-오세아니아주 주니어 청소년 아이스하키선수권대회	3.20~3.25	대만, 뉴질랜드 등4개국
	제13차 평양국제탁구초청경기대회	9.30~10.3	몽고, 이란 등 6개국
2000	제9차 백두산상 국제피겨축전	2.12~2.16	러시아, 불가리아 등 6개국
	제13차 만경대상 국제마라톤경기대회	4. 9	케냐, 이디오피아 등 6개국
	제14차 평양국제탁구초청경기대회	7.31~8.4	중국, 일본 등 7개국
	제5차 청소년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8.23~8.26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 30여 개국
2001	제10차 백두산상 국제피겨축전	2.12~2.16	영국, 우크라이나 등7개국
	제14차 만경대상 국제마라톤경기대회	4.15	노르웨이, 중국 등25개국
	제15차 평양국제탁구초청경기대회	8.13~8.17	중국, 이란 등 7개국
2002	제11차 백두산상 국제피겨축전	2.12~2.16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북한 6개국
	제15차 만경대상 국제마라톤경기대회	4.15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영국, 이디오피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케냐, 북한 8개국
	평양국제레슬링초청경기대회	6.27~7.1	몽골, 중국, 북한 3개국
	평양국제여자사승구초청경기대회	7.10~15	중국, 에스빠냐(스페인), 홍콩, 북한 4개국

연도	대 회 명	기 간	참 가 국
2002	평양국제유도초청경기대회	7.26~7.27	러시아, 몽골, 중국, 북한 4개국과 조총련 선수단
	제16차 평양국제탁구초청경기대회	8.13~8.17	중국, 일본, 타이, 북한 4개국
	평양 국제권투초청경기대회	8.15~8.19	중국, 인디아, 필리핀, 북한 4개국
2003	제 12차 백두산상 국제피겨축전	2.14~2.17	중국, 프랑스, 캐나다, 북한 4개국
	제 16차 만경대상 국제마라톤경기대회	4.13	독일, 중국, 러시아, 영국, 남아공, 노르웨이, 레소토, 이디오피아, 케냐, 북한 10개국
	제 17차 평양국제탁구초청경기대회	8.29~9.1	중국, 중국길림성,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북한 5개국

## (2) 국제대회 참가

1992년 이후 북한은 국제체육의 장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1996년 미국 애틀란타올림픽에 소규모선수단을 파견하였다. 본격적인 국제체육교류에의 참가를 확인시켜 준 대회는 13회 방콕아시아경기대회였다. 1998년 동 대회에서 북한은 8위를 했다. 아시안게임 2위 수준인 남한과는 아직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방콕아시아경기대회 이후와 각종 국제대회에 선수를 파견했다.

1999년부터 북한이 여러 대회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언론에서도 북한체육 선수에 대한 보도가 늘어났다. 1999년 아시아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참가했던 리영삼선수가 자유형 58kg급에서 금메달을, 한영도선수가 자유형 54kg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1999년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에서는 광역철선수가 81kg급에서 계순희선수는 여자 52kg급에서, 차현향선수는 여자 48kg급에서 금메달을 땀다. 이외에도 북한은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에 선수를 파견해서 여자역도 역시 메달을 땀다. 리성희선수가 58kg급에서 금메달을, 김성희선수가 63kg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것이 그 것이다. 리성희선수는 같은 해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서도 58kg급 용상 금메달, 인상 은메달, 종합 개인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마라톤의 경우도 아시아청소년육상선수권대회에서는 여자 5000미터달리기에서 정영옥선수가 금메달을 리명실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고 마카오국제마라톤대회에서 김종원선수가 금메달을 여자마라톤은 김창옥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다. 1999년 북한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도 선수를 파견했고 정성옥선수가 여자마라톤에서 우승했다.

2000년에도 북한의 크고 작은 선수단을 파견했고, 북한이 거둔 국제대회 전적은<표5>와 같다. 2000년 북한팀은 아시아오세안주 소년빙상하키선수권대회 A풀 경기에서 우승했다. 이 대회는 중국 장춘에서 개최된 대회로서 북한은 이듬해에 개최되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 자격을 획득하였다. 2000년 북한이 국제대회에서 거둔 가장 주목할 만한 성적은 북한 여자유도의 간판 계순희가 2000체코오픈국제대회 52kg급에서 금메달을 딴 것

이다. 동 대회에 남자 81kg급에 출전한 곽옥철선수는 5위를 차지했다.

이외에 2000년 북한의 주요 국제대회 성적으로는 13차 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에서 리성희 선수가 58kg급에서 종합우승을 한 것과 14차 아시아 자유레슬링 선수권대회에서 진주동선수 54kg급에서 우승, 리영삼 선수가 58kg급에서 우승했고, 김광일 선수가 68kg급에서 동메달을 따서 선전을 보인 것이다. 2000년도 제27차 시드니올림픽이 개최된 북한은 은1, 동3로 종합 60위를 차지했다.

2001년 대회 중 선수단의 규모가 큰 대회는 북경에서 열린 북경하계유니버시아드였다. 이 대회에서 체조 여자팀들의 손은희, 여자 하프마라톤의 함봉실이 각각 금메달을 따내 금메달 2, 은메달 1, 동메달 8개로 종합 16위를 차지했다. 북한의 이번 북경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참가는 지난 91년 영국 웨필드 대회 이후 10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개최지인 중국과의 우호관계가 크게 작용하여 대규모 선수의 파견이 가능하였다. 북한선수단은 체조, 유도, 여자축구, 탁구, 육상, 다이빙 등 6개 종목에 걸쳐서 115명이 파견되었다.

이 대회에서 체조 여자팀들의 손은희, 여자 하프마라톤의 함봉실이 각각 금메달을 따내 금메달 2, 은메달 1, 동메달 8개로 종합 16위를 차지했다

2001년은 특히 북한의 탁구가 세계 정상으로 복귀한 해로 주목된다. 북한은 2001 영국 오픈탁구대회, 2001카타르오픈탁구대회, 46회 세계탁구선수권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다. 2001년 집중적인 선전을 받았던 것은 여자 축구이다. 북한은 13회 아시아여자 축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고, 2002년 들어 북한의 국제 체육대회 참가는 더 활발해졌다. 북한은 각종 국제경기대회에 40여회 참석하여 금메달 116개 등 280개의 메달을 획득하였다('02.12.20, 중방보도, 통일부 주간동향 591호)북한은 지난 해 9월 부산 아시아경기대회는 물론 일본 아오모리에서 열린 동계아시아경기대회에도 참가했다.

<표 6> 2000년 북한의 국제대회 참가성적

대 회 명	기 간	장 소	성 적	비 고
아시안오세안주청소년아이스하키대회	2.17~2.20	중국 장춘	우승	-
국제대학생권투경기대회	2.19~2.24	러시아 쭈멘	금2, 은1, 동2	최평철 51kg급 금, 리철 63kg급 금, 김은철 48kg급 금, 진명선 54kg급 동, 박준철 60kg급 은
부라짜아공화국대통령상 자유형 레슬링국제경기대회	3.3~3.5	러연방 부라짜아, 울란-우대	금3	고정철 50kg급 금, 서광명 54kg급 금, 강금철 58kg급 금
<아랄그랜드상>국제유도경기대회	3.10~3.12	체코	금1	계순희 52kg급 금

대 회 명	기 간	장 소	성 적	비 고
세계여자아이스하키대회(B급)	3.22~3.26	마자르	우승	강현숙 선수권대회 최우수상 수상
제14차 아시아자유형레슬링선수권대회	4.16~4.28	중국 계림	금2, 동1	진주동 54kg급 금, 리영삼 58kg급 금, 김광일 63kg급 동
제13차 아시아여자역도선수권대회	5.3~	일본 오사카	금3	리성희, 58kg급인상, 용상, 종합에서 각 금(최우수상 수상)
제32차 아시아남자역도선수권대회	5.3~	일본 오사카	동1	임용수 3위
아베베비킬라국제마라톤대회	6.4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금1	신명애(여자) 금
제8차아시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	8.10~8.17	중국 상해	3위	
제8차 부다예브상 국제자유형레슬링선수권대회	7.28~7.30	러시아 울란-우데	금1, 은1, 동1	조용선 63kg급 금, 서광명 54kg급 은, 강금철 58kg급 은
제13차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8.28~8.31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은 3	남자 10종경기 은, 1만m달리기 은, 여자1500m달리기 은
제11차 국제혼성복싱바둑선수권대회	11.18~11.19	일본 도쿄	남, 여 1위	*북한에서 바둑은 체육종목으로 간주 립현철, 권미현 남녀 각각 1위
제27차 시드니올림픽	9.15.-10.1	호주 시드니	금0, 은1, 동2	리성희 58kg급 여자역도 은, 계순희 52kg급 여자유도금, 강영균 고전형레슬링 54kg급 동, 김은철 권투 48kg급 동
제1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10.21.-10.22.	일본 도쿄	종합 1위	금 15, 은 5, 동 1

<표 7> 2001년 북한의 국제체육대회 참가 성적

대 회 명	기 간	장 소	성 적	비 고
2001 영국오픈탁구대회	2.9~2.11	영국	금2, 은1	김현희 여자단식 2위
2001 카타르오픈탁구대회	2월	카타르 도하	금1, 은 1	김현희 여자단식 1위
2001 독일오픈 국제유도대회	2월	독일 뮌헨	금1, 동1	계순희 1위, 이경옥 3위
제14회 아시아유도 선수권대회	4.14~4.15	몽골 울란바토르	금1, 은1, 동2	이경옥 1위
제10회 동아시아 그랑프리 호프스 탁구선수권대회	4.21~4.22	일본 고베	금1, 동3	이 혁 남자단식 1위
제46회 세계탁구선수권 대회	4.23~5.6	일본 오사카	은1, 동1	여자 단체 2위
제4회 세계대학생역도 선수권대회	6.8~6.10	슬로바키아	금14, 은1	-
2001 아시아클레이사격 선수권대회	7월	태국 방콕	금1, 은1, 동1	-
제2회 아시아청소년 레슬링선수권대회	7.4~7.6	이란 테헤란	금1, 은1, 동3	-
제12회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	7.3~7.8	이탈리아	금17, 은5	종합우승
2001년 뮌헨 세계유도선수권대 회	7월	독일 뮌헨	금1, 은1	계순희 1위, 이경옥 2위
제10회 여자소프트볼선수권 대회 아시아지역 예선	7.25~7.29	일본 오사카	1승 4패	지역예선 탈락
삼성배 상해 4개국 축구경기대회	8.3~8.5	중국 상해	1위	중국, 트리니다드토바고, 쿠웨이트, 북한4개국 리그진
2001년 월드컵 여자탁구대회	8.17~8.19	중국 안휘성	은1	김현희 2위
제21회 유니버시아드대회	8.22~9.1	중국 북경	금2, 은2, 동8	손은희(체조) 함봉실(육상)
제1회 아시아 연령별 수영선수권대회	8.24~8.26	중국 홍콩	금4	수중발레
제1회 아시아 여자권투대회	8.26~8.29	태국 방콕	금5, 동1	-
제9회 아시아롤러스케이트 선수권대회	9.30~10.6	대만	롤러하키 1위	스피드, 피겨, 하키 3개 종목 중 하키만 출전
제2회 아시아청소년 유도선수권대회	11월	베트남 호치민	금3, 동5	-
제13회 아시아여자축구 선수권대회	12월	대만 타이페이	우승	14개 팀 참가

북한의 국제대회 우승관련 보도가 대회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메달수를 발표하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이를 감안해보면 북한은 2002년 활발한 국제체육교류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북한이 핵 문제로 인한 긴장상황 속에서 스포츠 외교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탈피하려는 노력이라고 평가되며 동시에 대내적으로 주민의 결속과 체제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주기 위한 의도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국제 체육대회에의 참가와 메달 획득 노력은 2003년에도 일관되게 전개되고 있다.



<표 8> 2002북한의 국제대회 참가 성적

대 회 명	기 간	장 소	성 적	비 고
제33회 킹스컵 국제축구대회	2.16~2.22	태국 방콕	우승	북한, 태국, 싱가포르, 카타르 4개국
제7회 카타르국제오픈탁구선수권대회	3.4~3.8	카타르	은 1	여자복식(김현희·김향미조)
제1회 이집트 국제오픈탁구선수권대회	4월	이집트	동 2	-
제3회 아시아청년유도선수권대회	5.16~5.17.	시리아 다마스커스	금2, 동3, 종합 4위	박명희 52kg급 금 홍옥성 57kg급 금 홍철준 60kg급 동 박옥성 45kg급 동 김선금 45kg급 동
제1회 아시아 역도 강자경기대회	5.10.~5.14.	카타르 도하	금3	리성희 58kg급 용상, 인상, 종합에서 우승
중국 그랜드상 국제탁구경기대회	5.30.~6.2.	중국 칭도	은1	김현희, 김향미 준우승
제4회 아시아 청소년 역도선수권대회	7.19.~7.21.	태국 방콕	종합 2위	금7, 은6, 동2
제2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	7.30~ 7.31	몽골 울란바테르	종합 1위	금23, 은6, 동1 종합 1위
제2회 세계여자권투선수권대회	10.21~ 10.28	터키	종합 1위	국제아마추어복싱연맹(IABA)주관대회
세계 남녀역도선수권대회	11.18~ 11.25	폴란드 바르샤바	개인 남녀 종합 1위	리성희 58kg급 용상, 인상, 종합 금 임용수 62kg급

<표 9> 2003년 6월 현재 북한의 국제체육경기대회 참가 성적

대 회 명	기 간	장 소	성 적	비 고
제34회 킹스컵 국제축구대회	2.16~2.22	태국 방콕	준우승	북한, 스웨덴, 태국, 카타르 4개국
제5회 동계아시안게임	2.1~2. 8.	아오모리	종합 6위	-
아시안컵 축구예선전	3.24~3.30.	인도, 북한	-	1차 예선 통과
제4회 아시아 청소년여자배구선수권대회	4.20~4.27	태국	2위	신용순 수비부문 최우수상, 김혜옥 공격부문 최우수상
아시아여자축구선수권대회	6.8~6.21	태국 방콕	우승	미국 여자월드컵 본선진출권 획득
제13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6.12~6.15	그리스	종합 우승	금21, 은2, 동1, 컵 10
제22차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8.21.~8.31	대한민국 대구	종합 9위	금3, 은7, 동3

### (3) 남북체육교류

1991년 이후 북한은 남북체육교류에 부정적 태도로 일관했다. 더구나 1994년 이후 북한은 국제체육경기대회에도 북한내 개최수를 줄였고 1994년부터는 국제체육대회에 불참했다. 1997년 동아시아대회가 부산 개최된 해였지만 동 대회에 북한은 불참했다. 1998년은 IOC위원장이 남북체육교류를 촉구하고 IOC 집행위원이 북한을 방문했다. 1998년 방콕아시안게임이나 2001년 북경 유니버시아드에서 남북은 체육교류는 없었다. 2000년 6.15 선언 이전에 북한은 경협과 연관되어 북한에 들어간 기업과 교환 경기에 응했다<sup>32)</sup>.

2000년 6월 15일 남북간에 이루어진 공동선언에는 남북체육교류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었다. 즉 공동선언문의 제 4항은 다음과 같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615공동선언에 근거하여 2000년 말 시드니올림픽 동시 입장이 성사되었다.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단일팀 구성은 물론 특정 종목의 단일팀 구성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

2000년도의 남북체육교류 사업은 주로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것에 국한되었다. 현대아산의 체육시설 건설사업과 우인방 커뮤니케이션의 금강산랜리스사업<sup>33)</sup>이 그 것이다. 금강산랜리는 통일염원 6.15자동차질주경기대회로 호칭되기도 한다. 남북 총 경기구간 120km 중에서 북측경기 구간은 장전향, 고성군 순학리, 해금강 일대 63km이다(김종 2001, 이준택, 2001 재인용). 삼성전자는 2000년 7월 28일 평양현지공장 설립을 앞두고 평양체육관에 전광판을 기증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통일탁구대회’를 치루는데 북한이 합의했다(월간탁구, 2000년 9월호).

그러나 북한은 2000년부터 지속된 2002년 FIFA한일월드컵대회의 남북 분산개최와 관련된 남북간 협의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2001년 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게 될 제46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 단일팀 구성제외에도 북한은 응하지 않았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체육교류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합의된 이후에도 북한은 2002년 초까지 체육교류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 2000년 남북체육교류의 노력은 크게 2개 주요대회에 북한의 참가를 두고 전개되었다. 하나는 2002 한일월드컵의 개최시 북한이 함께 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 북한

---

34) 현대는 북한과 합작 사업으로 평양에 실내종합체육관을 건설하여 1999년 9월 기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동 실내체육관의 기공식을 전후로 남북 농구경기대회가 진행되었다. 위치는 평양 보통강과 유경호텔의 사이이며 9,000여평의 부지에 12,335석 규모의 실내 체육관을 건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기간은 2년이며 건설비용은 총 5,750만 달러로서 그중 현대가 3,420만달러 북한이 2,330만달러를 부담한다. 현대의 체육관 건설사업은 현지에 최대 40명 정도의 남측 기술인력 파견이 전제되어 있다.

35) 남한 기업인 ‘우인방 커뮤니케이션’은 대회 개최비용으로 북측의 사업파트너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민족화해협의회’측에 현금 50만 달러와 중형 승용차 4대, 랜리용 경주차 2대, 타이어 3천본 등 현물 50만 달러를 사업대가로 지불했다. 이와 더불어 금호타이어도 작년 4천3백80여 개(약 40만불상당)에 이어 북한에 승용차 및 화물차용 타이어 3천3백여 개(약 30만 달러 상당)를 무상지원 했다(김종 2001, 전병득, 2001재인용).

의 참가 및 공공입장 등을 성사시키는 것이다. 2002월드컵의 경우는 분산개최와 단일팀 구성이 목표로 논의되었다. 남한 축구협회 회장은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과 함께 방북해서 현안 사항을 협상해나갔으나 결국 무산되었다.

월드컵 분산개최의 무산은 장웅 IOC위원장이 밝힌 대로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문제 때문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 평가이다. FIFA가 요구하는 경기장 시설의 기준이나 외국인 숙박시설의 대대적 확보가 어려운 점도 포함되어 있다, 더 나아가서 북한 체제의 정치적 판단도 배경에 존재하였다.

2002년 부산아시아안게임에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하고 더불어 응원단까지 파견시켜 공동입장을 했으며, 같은 해 남북태권도 시범단 교류가 있었고 이후에도 태권도 이질성 극복을 위한 민간 교류에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2월 일본 아오모리에서 열린 동계아시아안게임에 남북한 공동입장을 했고, 8월에는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에서도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였고 공동입장에 응했다.

## 2) 국제체육교류 전략

### (1) 국제체육교류

일반적으로 국제 체육교류는 각국의 보편적 체육정책의 한 축이다. 국가의 지향에 따라서 체육교류를 보다 중시하는가 아닌가와 국제 체육교류를 대내적으로 활용하는데 대외적인 외교의 수단으로 활용하는가는 전략의 문제이다.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수년간 국제 무대에 나타나지 않았으나 최근 여러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1999년 이후 북한이 국제체육 교류에 보다 활발히 나서고 있음은 앞의 자료에서 확인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국제체육교류 활동은 아직은 활발한 스포츠의 교류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음은 북한 당국의 행태를 통해서 북한의 국제체육 교류의 목표와 전략을 추정한 것이다. 북한이 국제체육 교류를 추진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체육정책의 양대 목표로서 김정일 위원장의 등장 이후 지속적으로 전문체육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려는 목표를 내세웠다. 북한이 국제 무대에 나오기 어려웠던 고난과 행군의 시대를 보낸 후 다시 국제 무대에 나오게 된 것은 정상적인 일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전문체육 기술 수준의 발전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가는 결국 세계 체육의 무대에서 다른 나라 선수들과의 경쟁에 의해서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의 국제체육 교류의 목표는 세계가 북한을 국제사회가 일원이자 정상적인 국가로 이해하고 수용해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체육은 매우 정치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정치적 신념과 무관하게 국제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나 종목별 국제연맹(IF)이 인정하는 각국 올림픽위원회(NOC)와 종목별 협회(예를 들면 조선배구연맹 등)(NGB)를 북한도 갖고 있고 NOC와 NGB의 대표성을 내세우면서 북한은 국제적인 외교의 장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

은 최근 국제대회 소식이 TV라는 매체를 통해서 수백억 명의 각국 국민들에게 알려지며 이것이 갖는 효과가 엄청나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00년 이후 북한은 핵 위기로 표현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여러 국가들로 부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북한은 세계적인 스포츠체계의 구성원으로서 국제사회 구성원임을 일차적으로 입증하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북한은 이라크전쟁 발발과 미국의 북한 불량국가 발언으로 상징되는 강경한 대북정책 속에서 대내적 결속과 동시에 국제 사회로부터의 고립을 탈피하는 카드로 체육교류를 활용하려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국제체육 경기 대회 뿐만아니라,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한 선수의 약물남용을 방지하려는 반도핑국제회의에 참여(2002년 6월 15일자 주간동향 일지)한 것은 북한이 국제체육외교의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북한은 국제체육교류를 국제대회의 개최와 선수 파견에서 더 나아가 국제 체육체계를 활용해서 북한의 외교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인 바 있다. 2001년 국제무도경기위원회<sup>34)</sup> 제1차 총회가 5.23~24 평양에서 개막된 것도 국제체육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몸짓으로 보인다. 동 대회에서는 2003년 북한에서 제1회 국제무도경기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홍희 총재의 사망으로 2003년 동 대회추진에 복병이 생겼다. 북한은 국제체육 교류의 성과를 대내적으로 통합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활용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2002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에 따르면 '전체 인민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 세우고 우리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튼튼히 꾸려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동시에 3대 호소 및 3대 제언<sup>35)</sup>을 공표한 바 있다. 일심단결을 위해서는 매개체로서 영웅에 가까운 인물이 필요하고 세계대회에서 우수한 선수가 대리적 역할을 부여받게된 것이다. 정성옥선수가 세계육상경기대회의 여자마라톤 종목에서 우승을 한 것이 영웅적 성취로 해석되었다. 북한 외부의 수많은 국가의 대표(선수)와 싸워서 이겼다는 점을 집단주의를 고취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선전한 결과는 대대적으로 홍보되고<sup>36)</sup> 주민들이 함께 우승 메달을

---

36) 국제무도위원회는 위원장은 국제태권도연맹 최홍희 총재, 부위원장은 장웅 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이며 경기위원회 본부를 북한에 두고있다.

35) 북한은 2002년 신년 정부·정당·단체 합동회의에서 “우리 민족끼리 단합을 도모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가기 위한 당면대책”을 토의하고 「3대 호소와 3대 제의」를 제시하였다(1.22 중·평방, TV) 3대 호소란 ① 6.15 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이행 ② 남북관계를 전진시키고, 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 ③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의 장애되는 요인을 제거하며 3대 제의란 ① 금년을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② 6.15일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날」 ③ 5월~8월간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운동기간이다.

37) 예를 들면 2001년 12월 중국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13차 아시아여자축구선수권대회의

보고 영웅적 선전을 되새김하는 전시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체육성과 전시회'를 열어서 국제대회에 참가해서 획득한 우승컵과 메달 등 1200개를 대중에게 과시하는 것이 그것이다(2001년 5월 20일 중앙통신: 주간동향에서 재인용).

넷째 북한의 국제체육교류 정책에서는 체제 위협적 요소가 적은 체육부문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흡수해내려는 의도도 확인된다. 북한은 2000년 이후 국제스포츠에서 이미 주요 흐름이 된 스포츠마케팅을 받아들이는 조짐을 보여주었다. 즉 북한은 세계스포츠가 비즈니스로서 성장해가고 있다는 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잘 알려진바 대로 FILA가 제시한 북한 선수단에 대한 스포츠스폰서십에 일정기간 동안 관심을 보였다. 또한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리기사에서는 수백만 장의 관람권 판매와 220개 국가가 시드니올림픽 경기를 함께 시청한다는 사실을 소개한 바 있다(조선중앙연감 2001년).

스포츠경기에서 광고효과와 이를 기대하는 기업의 후원(스폰서)이 국제 체육의 장에서 자연스럽듯이 북한이 주관하는 국제경기대회에서 기업광고가 발견된 것은 2001년 제10회 <백두산상>국제피겨축전에서 부터였다. 당시 평양 빙상관에는 '필라(FILA)' 광고판이 있었다. 이후 제14회 <만경대상>국제마라톤대회의 광고를 3.27자 '파이낸셜 타임즈'에 게재한 것은 스포츠의 마케팅이라 할 만 한 것으로 관심을 모았다.

2003년에 개최되었던 아시아여자축구선수권대회의 녹화중계에서 조선 중앙TV가 일본과의 준결승경기(3:0)가 벌어진 경기장에 걸린 광고판(Maxell, Konica, EPSON 등)을 그대로 방영되었다.(통일부, 주간동향 649호)

이상에서 북한이 2000년 이후 국제체육교류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정리해 보았다. 북한은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음은 가시적으로 드러난 대내적 조치의 내용을 살펴본 것이다.

첫째는 일단 체육선수의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서 육성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고있다. 북한은 현재 경기력 수준이 낮은 상태이며 세계 수준에 올라가기까지는 주로 아시아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해갈 것이다<sup>37)</sup>. 장기적으로는 세계 수준의 선수를 길러내기 위해 유망한 종목에 우수선수 자원을 배정하여 우선적으로 육성을 해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육성종목이 무엇이 될 것인가는 아직은 뚜렷하지 않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육상, 탁구, 유도 종목에 투자한 것을 저비용 종목이어서 육성하려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유망종목의 선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북한이 육성 종목으로 이미 언급한 주요 종목(마라톤과 축구), 전통적인 강세 종목( 유도, 탁구, 역도, 레슬링 및 권투 등), 남한에서 세계를 제패한 종목(양궁, 스케이트, 핸드볼, 배구 등)에서 선수를 선발하여 훈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우승은 천리마( 2002년 3호 82쪽-83쪽)에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38) 2002부산아시아게임의 북한선수단 규모를 보아 대부분 유망선수가 파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회에서 북한은 종합 9위에 머물렀다. 아시아에서 종합 9위의 성적으로는 세계 수준에 도전하기 어렵다.

둘째 동시에 체육인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해서 훈련여건을 개선시키고 이미 우승을 한 선수나 지도자 등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훈련 여건 개선은 2000년 이후 체육단의 보장부문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으로 나타났다. 선수를 위한 고기 및 과일주스 공장을 신설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정성욱 선수에 대한 획기적인 포상을 비롯하여 아시아 여자축구선수권대회 우승자나 지도원에 대한 대대적인 포상을 한 바있다.

셋째 북한은 국제체육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뒤쳐졌다고 판단한 국제체육정보, 스포츠과학 지식을 입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2000년 이후 두드러진 변화라 할 수 있다. 해외에서 진행된 국제 경기를 중계하는 것이나 국제적인 스포츠과학 정보를 빠르게 수입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체육도서관 설치하는 것, 그리고 스포츠과학적 지식을 경기 수준 향상에 적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체육기자재의 과학화를 위해서 체육기자재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체육부문을 국제화시키는 교육 사업에도 관심을 보였다. 육상감독을 위한 국제올림픽연대성 강습이 시행된 바 있다. 또한 국제공용어 사용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가운데 체육부문에서 이를 선도적으로 추구해야한다는 점을 노동신문을 통해서 밝힌 바 있다<sup>38)</sup>. .

## (2) 남북체육교류

북한이 추구하는 남북체육 교류의 목표와 전략은 국제체육 교류의 목표와 전략과 중첩된다. 먼저 국제체육교류의 목표와 일치하는 점은 북한이 남북 체육교류를 내세우되 주로 국제체육교류의 장에서 교류를 우선시 한다는 점이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선수단의 공동입장이 있었고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과 2003년 일본 아오모리 동계아시안게임,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에서 공동입장과 공동응원이 이뤄졌다. 2002년 아시안게임에서 북한선수단과 응원단의 행동은 1998년 방콕아시안 게임과 비교해볼 때 크게 변했다. 부산이나 대구에서 북한선수단은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남한 선수나 국민들에 대한 대응에서도 유연해진 점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북한은 올림픽위원회 위원장간 접촉이나 종목 체육별 훈련 및 경기 중에서 정치적 행동을 피하고 체육행사에 걸맞게 행동하려는 노력을 보였다<sup>39)</sup>. 이상의 체육교류는 남북 교류로 볼 수 있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국제체육교류이기도 하다.

국제대회에서의 공동 입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국제 체육교류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북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북한선수의 경기력을 내세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체육교류를 남북교류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1998년까지 남북이 참가한 국제대회는 남북대결의 결과가 누가 우승하는가가 더 큰 관심이었

39) 노동신문 1997년 1월5일자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체육공용어의 수용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강조했다(연합뉴스1999, 6.24)

39)북한은 각종 국제경기대회에 40여회 참석하여 금메달 116개 등 280개의 메달을 획득하였다('02.12.20, 중방보도, 통일부 주간동향 591호).

다.40) 남북정상회담과 615선언이 바탕이 되어 2000년 이후 남북 체육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진 이후 남북은 체육교류를 화해협력의 효과적 수단으로 인지하게 되었다. 통일축구의 경우는 남북간 경기기술 수준의 대결보다는 같이 경기를 치렀다는 점이 중시되고 있고 태권도 시범단 교류도 태권도에서의 이질화를 극복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평가된다41). 북한이 태권도 교류에 전향적인 배경은 남북한이 공히 태권도라는 종목의 종주국으로서 태권도 종목이 발전하는 것이 한민족의 문화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참고문헌 ]

<특수자료>

- 과학백과사전출판사(1981) 조선전사 현대편 22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1981) 조선전사 현대편 24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1981) 조선전사 현대편 31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1981) 조선전사 현대편 32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1981) 조선전사 현대편 33권. 평양  
 김일성 (1946) 체육을 대중화할 데 대하여(체육인대회에서 한 연설)  
 김일성 (1969) 체육을 대중화하여 전체 인민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자. (진국 체육인대회에서 한 연설)  
 김정일 (1979) 주체체육의 화원을 마련하시어,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 (1986) 체육을 대중화하여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하여( 체육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김정일 선집 8권(1984-1986),  
 김정일 (1989) 체육을 발전시킬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김정일 선집 9권(1987-1989)  
 김정일(1989) 집단체조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집단체조 창작가들과 한 담화). 김정일 선집 9권(1987-1989)  
 김정일(1998) 김정일선집 8권.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내각결정 (1960)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훈체육인 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  
 내각결정(1958) 체육 및 스포츠보급과 체육간부 양성 사업을 개선할 데 관하여

40) 방콕 아시안게임의 남북 공동응원을 통한 화해 움직임도 있었지만 언론도 7년만의 남북대결의 승패를 위주로 다뤘다. 북한은 인공기, 남한은 태극기로 응원했다. 북한선수(여자축구)의 김정일 찬양노래으로 남북 공동응원은 무색해졌다(조선일보 1998.12.07일자).

41) 북한이 태권도이질화 극복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국제대회에서 남한이 주도하는 세계태권도연맹의 태권도 규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 태권도 통합노력이 북한 태권도의 입지 향상을 가져오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리철범(199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규격 제 9권, 평양, 국가규격제정연구소  
외국문출판사(1984) 김일성경기장. 평양  
조선중앙통신사(1999, 2000, 2001, 2002) 조선중앙연감.

< 국내외 문헌 >

통일부 홈페이지 주간북한 동향

통일부(2000) 북한개요

국토통일원 정책기획실 (1972) 남북한체육교류방안(안). 서울

김건구(1996) 북한체육에 관한 연구:학교, 사회, 국방체육을 중심으로. 공주대 석사학위  
논문.

김순교(1986) 남북한 체육현황비교연구. 서울:국토통일원

대한올림픽위원회(1992) 남북체육교류 자료집

박영옥, 이명천, 이한규, 성문정, 송제호(2001) 남북한 체육환경 분석 및 교류확대방안, 국  
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이용효(2001) 남북한 학술정보 교류 방안 : 북한의 학술정보 유통현황 및 교류방안을 중  
심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월간탁구(2001) 표지이야기(오사카 남북 탁구단일팀 결성 움직임에서 무산까지). 4월호

월간탁구(1999) 한국탁구 20세기, 잊을 수 없는 10대 사건. 11월호

월간탁구(2000) 기획특집(남북탁구 단일팀 시대 다시 열리나) 6월호

월간탁구(2000) 권두화보(평양 3박 4일, 삼성생명 남녀탁구단 북한방문기) 9월호

아태지역연구원(2001),남북한 통합의 이론과 실제, 경희대학교 아태지역연구원.

안민석, 이학래, 송형석, 박영옥, 이용식(1998) 남북한 체육교류활성화방안 연구. 한국체육  
과학연구원

윤대규(2000)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문제,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 2000년  
11월호, 75-87.

윤병익(1987) 북한의 체육. 서울: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이학래, 김동선 편(1995) 북한체육자료집. 서울: 사람과 사람

정동길(2000) 북한체육 스포츠영웅. 서울: 다인미디어

체육부(1987) 동서독 스포츠관계(1949-1961). 서울

최의철(2000)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200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연례정세보고서) 서울

통일부(2000) 북한개요 2000

홍기준(2001) "통일후 남북한 사회통합". 경희대학교 아태지역연구원. 남북한 통합의 이  
론과 실제 9-43쪽.



## [부록]

### 2000년대 활동중인 북한의 체육인

곽역철(유도선수, 1999년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81kg급 금메달리스트, 13차 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

계순희(여자유도선수, 1996애틀랜타올림픽 여자유도 48kg급 금메달리스트, 2001 독일오픈 국제유도대회 우승 57kg급 우승, 2001년 세계유도선수권대회 52kg급 우승)

김명순(여자배구선수 1999년 세계군인체육대회에서 최우수선수에 뽑힘)

김성희(여자유도선수, 1999년 중국 우한에서 개최된 아시아여자역도선수권대회 63kg급에서 은메달 획득, 96년 공화국선수권대회에서 북한 신기록을 세워서 유망선수로 주목 받음. 1999년 당시 평양시체육단 소속)

김순희(여자축구선수, 1999년 여자축구월드컵에 월드스타로 뽑혀서 참가함, 평양시 청소년체육학교 축구팀 출신)

김승엽(체육지도자, 평양시체육단 단장 1999년 당시)

김영길(체육지도자, 압록강국방체육단의 날치기사격종목 책임감독 1999년 당시, 1989 아시아날치기사격선수권 대회 국가종합(대표)팀 감독으로 참가)

김유호(체육행정가, 북한탁구협회 위원장 2001현재)

김정만(체육행정가, 북한축구협회 위원장 2003년 현재, 체육연맹 부처장, 13차 아시아여자축구대회 우승으로 인민체육인 부여)

김창선(체육지도자, 압록강체육단 마라톤지도원, 정성욱선수를 지도하여 인민체육인 됨)

김춘웅(체육과학자, 체육과학원 연구실장, 제14차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기념 스포츠과학 학술대회에 참석)

김현희(여자탁구선수, 2001년 영국오픈 여자복식 1위, 2001년 카타르오픈여자복식 2위, 2001 월드컵여자탁구대회 단식 2위)

류주성(유도 감독, 인민체육인)

리경옥(여자유도선수, 공훈체육인)

리성옥(여자축구심판, 국제심판, 1999년 미국여자축구월드컵 심판참가, 전 북한의 여자축구종합팀 선수출신)

리선호(체육행정가, 북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2002년 당시)

리성희(여자역도선수, 1999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우승, 시드니올림픽 은메달리스트, 58kg급, 인민체육인)

문재성(체육행정가, 체육성 체육기술연맹위원장 1999년 당시)

박명철(체육행정가,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역도산의 사위, 90년 삿포르동계올림픽 선수단장. 98년 방콕아시안게임 선수단장, 국방체육과 매스게임전문가)

배길수(체조선수 은퇴, 1996년 세계체조선수권대회 안마부문 금메달리스트,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은퇴, 노력영웅)

안변국(체육행정가,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 2002년 현재)

오홍룡(체육기술연맹 농구협회 서기장, 1999년 당시)

윤성범(체육행정가, 1999년 당시 체육성 부상, 18회 아시아여자농구선수권대회 북한선수 단장)

이경옥(여자유도선수, 14차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48kg급 우승, 2001 독일오포국제유도대회 3위)

이동규(체육과학자, 체육과학연구소 축구연구실 실장, 축구경기대회방송해설위원 1999년 당시)

이동호(체육행정가, 체육성 부상 1999년 당시)

이 종식(체육행정가, 국가체육위원회 부처장 1999년 당시)

이현실(여자핸드볼선수, 2000년 올림픽 참가, 1998년 아시아여자핸드볼경기대회 은메달리스트)

임용수(역도 선수, 2001년 제32회 아시아역도 선수권대회 동메달, 2002년에는 부산아시안게임]에서는 은메달, 세계남녀역도선수권대회 금메달 획득)

장 웅(체육행정가, IOC위원, 북한올림픽위원회 서기장)

장정남(체육행정가, 대학생체육협회 부위원장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남북협상 실무단원 2003년)

정성옥(여자마라톤선수, 1999년 7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마라톤 우승자, 공화국영웅, 인민체육인, 최고인민회의 위원)

정인철(체육행정가,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 2002년 당시)

조상남(체육행정가,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2002년 당시)

채라우( 체육행정가, 북한탁구협회 위원장 2001년 당시)

최병주(체육과학자, 체육과학원 부원장 1999년 당시)

황봉영(체육행정가,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2002년 당시, 조선무도연맹 위원장)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보도 특성과  
대응론 연구

2003. 12

연구책임자 : 유 동 열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



# 북한의 언론매체의 대남보도특성과 대응론 연구

## 〈 요약 〉

1. 최근 북한은 방송, 신문, 통신 등 언론매체를 통한 대남선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평양방송 등 대남전용방송뿐만 아니라, 일본에 개설한 조선중앙통신의 인터넷홈페이지(www.kcna.co.jp)를 통해 북한 로동신문과 중앙통신의 보도내용을 즉시 전파하며 대남선전선동에 가세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99년부터 위성TV방송을 송출하여 우리국민들에게 무차별적인 대남선동을 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의 대남방송, 위성TV,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해 북한의 직접적인 선전선동의 영향권 하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 보도논조와 성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TV, 로동신문 및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언론매체의 편성체제와 대남관련 보도양상과 성향을 분석하고, 북한의 대남 관련 선전선동 논리에 대한 대응론을 제시함으로써, 대북대응역량의 제고를 기하고자 하였다.

2. 북한의 언론매체는 한국의 자유민주언론 매체와는 달리 수령과 당 및 북한정권의 방침 및 정책노선을 선전·선동하는 수단이라는 독특한 성격과 기능을 갖고 있다. 북한의 언론매체중 대남관련 보도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선전선동부」와 통일전선부에서 전담하고 있다. 북한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대남방송을 행하는 목적은 북한정권의 목표인 '전한반도의 주체사상화와 공산화통일 완수'을 위한 유리한 혁명정세를 남한내부에 조성하려는 것이다.

3.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보도 성향을 크게 ① 김대중정부 출범이후부터 6.15공동선언 이전 (1998.2- 2000.6) ② 6.15공동선언 이후부터 노무현정부 출범 이전 (2000.6- 2003.2) ③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부터 현재(2003.2- 현재) 까지로 구분하여 분석해보면,

첫째 제1기(김대중정부 출범이후부터 6.15선언 이전)에는 일부 시기에 따라 정도

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적대적이고 공세적'인 성향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성향은 북한의 대남적대정책노선에서 연유된다.

둘째, 제2기('6.15 남북공동선언이후부터 노무현정부 출범이전까지)에는 6.15 남북공동선언 직후에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보도 논조는 이전의 적대적 공세적 성향에서 '유화적 호혜적 성향'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2001년도에 들어 '6.15공동선언'의 이행-실천과 관련한 남북당국간의 대화가 전면적으로 소강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특히 지난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2001.11.9-14, 금강산)이 아무런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결렬되자 그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가운데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의 대남비방이 재개되었다. 이 시기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논조는 대남유화-대남적대성향이 중첩된 양상을 보여주었다.

셋째, 제3기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2003.2-현재)의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보도 논조도 비교적 유화적이나 여전히 대남강경논조를 병행 보도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북한은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노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방증상은 공식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이 6.15 공동선언 이후 김대중대통령에게 보여준 우호적 시각을 노무현대통령에게도 지속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한국정부를 '남조선당국', '남조선 집권층'이라 지칭하며 특정사안을 문제삼아 여전히 비방증상을 지속시키고 있다. 또한 변함없이 북한의 대남선동 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6.15공동선언의 이행, 실천이라는 명분 아래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분쇄, 북미불가침조약 체결, 주한미군 철수, 반미반전, 국보법 철폐, 주적론 폐지, 한총련-범민련 합법화, 반통일우익세력 척결, 외세공세 배격-민족공조 실현" 등 상투적인 대남선동공세를 전개하며 국내 친북좌파권의 투쟁을 독려하고 있다.

김대중정부 출범이후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방송, 통신,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대남보도의 양상 및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이후 초기에는 이전의 적대적인 대남보도 논조를 지양하고, 유화적인 대남논조를 유지했으나 여전히 대남선동 공세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한반도의 주체사상화와 공산화혁명 달성'을 위한 대남혁명여건 조성이라는 언론매체를 통한 대남선동보도의 목적이 변화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둘째, 북한이 대남보도의 기초를 유지하며 남북관계의 상황변화에 따라 대남비방의 수위와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째,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 대남방송의 단일 핵심 주제는 '6.15 공동선언의 이행 및 실천'으로 집약된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을 이행 실천한다는 명분하에 대남방송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며,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동노선인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지지 확산, 보수우익세력 척결" 및 자주-민족대단결의 주장 등이 대부분 '6.15 선언 이행'의 범주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넷째,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관련 보도의 주제와 내용은 각 시기별로 비중을 달리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그 주제가 정형화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는 ① 한국정부에 대한 비방중상 ② 북한정권의 대남노선인 자주·민주·통일에 입각한 반미자주화투쟁, 반파쇼민주화투쟁, 조국통일투쟁: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해체, 통일인사 석방,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적론 철회, 외세공조 배격과 민족공조 실현, 보수우익반통일세력 척결 등 ③ 북한의 위장된 평화통일노선 선전: 조국통일 3대헌장(자주·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 3원칙,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과 김정일의 '민족대단결 5대방침'(일명 4.18서한) ④ 전쟁발발 위협공세 ⑤ 통일전선차원의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 선동 ⑥김일성-김정일, 주체사상 및 북한사회주의체제 미화찬양, 선군노선 및 강성대국 건설 찬양 등이다.

다섯째, 북한이 6.15공동선언 이후 언론매체를 통해 대남관련 보도를 국내 방송을 인용하며 신속히 보도하는 형식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여섯째, 북한이 대남선전선동 공세의 수단을 대남방송에만 의존하지 않고, 1998년 이후 북한의 대남방송 내용을 조선중앙통신(KCNA), 구국전선(한민전의 기관지), 범민련 등의 인터넷사이트 등 사이버공간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곱째, 북한은 그간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을 통해 하달하던 간첩지령방송인 난수표방송인(A3통신)을 2000년 11월 이후 중단한 대신, 편지낭독 형식의 변형된 간첩지령방송을 대남방송을 통해 여전히 지속시키고 있는 점이다.

여덟째, 북한이 국내 친북좌익권을 체계적으로 의식화시키기 위해 방송하는 '김일성방송대학 강좌가 평양방송 등을 통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홉째, 북한은 언론매체를 통한 대남선동보도시 국내 친북좌익권과 연대하여 공동성명서, 결의문 발표 등 남북한 연대를 통한 선전선동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열째,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은 남북한에서 개최된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등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실황을 중계하거나 보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4.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선동보도에 대한 대응기조를 제시해보면, 첫째,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관련 선동보도에 대한 철저한 자료수집 및 보관이 요구되며, 둘째, 북한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대남관련 사안을 신속히 적절히 분석하는 배분메카니즘의 확보가 요구되고 셋째, 북한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대남선동사안에 대해 분야별, 내용별 대응논리 강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넷째, 북한이 언론매체를 통해 대남관련 보도를 발표했을시, 관련부서에서는 사전준비된 대응논리를 발표하여 북한의 대남선동의 확산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실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의 대남선동노선중 북한핵개발문제, 주한미군 철수문제, 국가보안법 철폐문제, 한총련 합법화 문제, 민족공조, 통일인사 양심수석방주장, 미국 핵전쟁 분쇄 주장 등에 대한 대응논리를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5. 향후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선동노선의 향방은 북한 김정일정권의 속성 상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남전략전술관에 의해 좌우될 것인바, 간략하게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상을 전망 해보고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보동성향의 방향을 전망하였다.

향후 전술적 차원에서 볼때, 북한 김정일정권의 대남정책노선은 크게 세가지 유형, ① 대남강경노선으로 회귀 ② 대남유화노선 지속 ③ 대남유화-강경노선 배합구사 등으로 요약된다. 이중 북한은 남북간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노무현정부 임기내에는 '대남강경-온건노선 배합전술'을 취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른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선동공세를 전망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선동체계는 북한정권 내부의 돌발적 변수가 없는 한, 현재와 같이 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와 통일전선부에서 지도전담하는 대남선동체계의 패러다임(Paradigm)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선동공세는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 그 강도와 수위를 조절하며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개선될 시에



는 북한의 대남비방공세의 강도가 줄어들 것이며, 남북관계가 악화될시 대남비방선동의 강도가 증가하는 등 상황변화에 따른 대남선동논조의 전술적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대남선동노선의 기초에는 큰폭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북한은 현 남북관계의 상황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는 대남선동공세의 강도를 현수준에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북한으로서는 당면문제가 되어 있는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선, 앞서 지적했듯이 한국의 노무현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핵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북한은 장기적으로 북한이 설정한 '우리세대내 통일실현'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혁명여건 조성에 주력해야 하기 때문에 대남선동의 강도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넷째, 2004년에도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선동의 핵심 주제는 '6.15 공동선언의 이행 및 실천'이라는 기치 하에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 반미투쟁 대중화, 주적론 철폐, 한총련-범민련 합법화, 국정원 등 대공수사기관 해체, 보수우익 반통일세력 척결, 연방제통일노선 강화" 등을 집중 선동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 내부선전 사안으로는 김정일의 미화찬양과 함께 김정일의 선군정치노선과 강성대국론을 집중 선동할 것이다.

다섯째, 북한은 기존 대남언론매체와 함께, 인터넷망을 통한 이른바 사이버(Cyber) 선전선동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선동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측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선동공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상위개념인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대한 정확한 실상파악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선동의 강도를 희석시키기 위한 카드로, 현재 북한정권의 3대 약점이라 할 수 있는 북한핵문제, 인권문제, 경제문제 중 북한핵문제와 경제지원 문제를 연계시켜야 한다. 특히 대북협상팀은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보장과 경제지원 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통일부의 북한 언론매체의 청취·시청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물론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 유관부서의 자료공조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북한 대남방송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 평가하는 모니터기능의 역량강화가 요망된다. 이를 위해 전문청취·분석요원의 확보, 북한대남방송 청취 영역 확대, 인터넷을 통한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을 대처하기 위한 별도 북한 인터넷검색반을 신설해야 한다.

네째, 북한의 대남방송을 통한 선동공세를 청취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북한의 대남선동주장을 반박하는 대응논리의 전개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대남선동노선에 대해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것 외에 철저히 사안별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북한주장의 부당성을 홍보하고, 선량한 국민들이 학생들이 북한이나 좌익권의 선전공세에 말려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날로 다양화, 정교화되는 북한의 대남선동매체, 즉 대남방송인 평양방송, 조선중앙방송을 대남방송화한 구국의 소리방송, 위성TV방송 및 인터넷통신 등의 제 메카니즘을 근원적으로 차단시키는 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최근 집중 시도하고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대남정보확산책을 차단시켜야 한다.

여섯째, 우리정부는 북한이 언론매체를 통해 구사하는 대남선동공작에 대응하여 대북심리적 차원에서 대북방송 등을 통한 대북선전선동 공세 즉 '역(逆) 전략'을 수립실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끝으로, 남북방송교류나 또는 남북통합에 대비하여,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선동체계 뿐만 아니라 북한 언론매체의 구조와 운영실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 목 차 〉

요 약 문 .....	317
1. 서 론 .....	325
1.1 연구목적 .....	325
1.2 연구범위 및 방법 .....	326
1.3 연구한계 및 파급효과 .....	327
2. 북한 언론매체의 기능과 현황 .....	329
2.1 북한 언론매체의 기능과 역할 .....	329
2.2 북한 언론매체의 체계와 현황 .....	330
2.3 북한 대남방송의 체계와 현황 .....	336
3.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보도 특성 .....	345
3.1 북한 대남보도의 주요 내용과 성향 .....	345
3.2 북한 대남보도의 양상 및 특징 .....	364
4. 북한의 대남선동보도의 대응론 .....	369
4.1 북한 대남선동보도에 대한 대응기조 .....	369
4.2 북한 주요 대남선동노선에 대한 사안별 대응 .....	370
5. 결 론 .....	386
5.1 향후 전망 .....	386
5.2 정책제언 .....	388
※참고문헌 .....	391



# 1. 서 론

## 1.1 연구목적

최근 북한은 방송, 신문, 통신 등 언론매체를 통한 대남선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평양방송 등 대남전용방송뿐만 아니라, 일본에 개설한 조선중앙통신의 인터넷홈페이지(www.kcna.co.jp)를 통해 북한 노동신문과 중앙통신의 보도내용을 즉시 전파하며 대남선전선동에 가세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99년부터 위성TV방송을 송출하고 있는데<sup>1)</sup>, 문제는 우리나라도 이의 가청권 하에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 위성TV방송은 국내에선 허가된 기관 이외에도 시청할 수 없도록 실정법상 수신이 금지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일반국민들의 북한위성TV 시청을 제한할 기술적 방법이 강구되어 있지 않아 북한위성TV의 선전에 노출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의 대남방송, 위성TV,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해 북한의 직접적인 선전선동의 영향권 하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 보도논조와 성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물인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화해분위기에 발맞추어 대남선동의 강도를 조절하며 대남비방공세의 수위를 낮추어 왔으나,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2001. 11.9-14)이 결렬된 이후 그 책임을 우리정부측에 전가하며 적대적인 대남비방공세를 재개하여, 현재까지 대남선동선전을 지속시키고 있다.

북한의 대남 언론매체를 통해 한국정부의 시책을 사사건건 비난하며,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애국인사 석방, 한총련-범민련 이적규정 철회와 합법화, 국정원 해체,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전쟁책동 분쇄, 민족공조, 주적론 철회, 연방제통일 지지확산” 투쟁을 선동하는가하면, 더나가 북한체제의 우월성과 김정일노선을 미화찬양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공세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일상화된 것

---

1) 북한의 위성TV방송 내용은 1999년 10월 10일 북한의 관영 TV매체인 조선중앙텔레비전의 편성내용을 그대로 송출하고 있다.

이지만, 최근에는 핵문제와 관련하여 노골적으로 전쟁위협까지 경고하는 등 대남위협공세를 극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첫째, 북한이 '국가보안법 철폐'등 위와 같은 대남선동노선을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핵심과제로 설정하며 이를 남북관계개선의 전제조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정부의 의욕적인 평화번영정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북한의 대남선동노선이 한총련, 범민련 남측본부 등 국내 친북좌익권에 의해 주된 투쟁과제로 설정되고 있으며, 더나가 재야운동권과 일반 시민단체들에게 여과없이 수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북한의 대남선전공세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방치할 때 북한의 대남선동노선이 정당시 되고 왜곡된 친북여론을 조성시켜, 결국 대한민국 자유민주노선의 중대한 갈등과 위협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TV, 로동신문 및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언론매체의 편성체제와 대남관련 보도양상과 성향을 분석하고, 북한의 대남관련 선전선동 논리에 대한 대응론을 제시함으로써, 대북대응역량의 제고를 기하고자 한다.

##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보고서는 1998년 2월 김대중출범 이후부터 남북관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된 6.15 공동선언을 거쳐 현 노무현정부에 이르기까지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보도성향과 주요 논조를 분석하여, 이의 대응론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연구범위는 ①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방송체제와 현황 ② 1998년 2월 김대중정부 출범이후 부터 현재까지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보도 추이와 성향 ③ 북한의 주요 대남선동노선에 대한 대응론 제시로 아래와 같이 한정한다.

첫째, 제2장에서는 북한 언론매체의 체제와 현황을 통해, 방송, 통신, 신문 등 북한 언론매체의 독특한 기능과 역할을 파악보고, 북한 언론매체의 조직 및 운영체제의 특수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제3장에서는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보도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대남보도 논

조를 시기별로 3대분 하여 그 논조와 성향을 분석하였다. 즉 제1기 김대중정부 출범 이후부터 6.15 공동선언 발표 이전(1998. 2 - 2000.6) 까지, 제2기는 6.15 공동선언 이후부터 노무현정부 출범 이전(2000.6 - 2003.2)까지, 제3기는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2003.2- 현재) 등이다. 이를 토대로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보도의 양상 및 특징을 도출하였다.

셋째, 제4장에서는 북한 언론매체의 주요 대남선동노선에 대해 사안별로 이의 허구성과 대응논리를 제시하여, 향후 대북정책 수립시 활용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향후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보도 논조를 전망하고, 대북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측면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의 연구방법은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선동체제 및 대남관련 보도와 관련되는 ▲북한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평양방송, 구국의 소리방송 및 조선중앙통신 녹화 및 녹취자료 ▲정부 및 관계 연구기관의 공개 및 비공개 관련자료 ▲북한당국의 자료 등의 분석을 통한 문헌(자료)연구방법(Documentary Method)을 주로 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북한의 대남선동 양태를 분석하는 행태적 접근방법(Behavioral Approach)을 병행했다.

### 1.3. 연구한계 및 파급효과

본 보고서의 연구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폐쇄특성상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선동체제의 정확한 조직 및 운용체계를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었으며 둘째, 대남보도 논조분석의 대상기간인 1998년 2월부터 -현재까지 북한 언론매체별 전체 보도내용을 입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제한이 있었으며 셋째, 입수된 자료를 분석하는데도 그 시기와 자료의 방대함으로 인해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대상기간 내의 분야별, 사안별 통계의 추이분석은 진행되지 못했음을 밝힌다.

이러한 연구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선동체제의 특수성 파악 둘째, 대남관련 논조의 최근 양상과 주요 성향 파악 셋째, 북한 대남선동의 허구성과 관련되는 대응론 제시로 북한의 영향공작 희석화 및 국내 친북논조의 억제, 넷째 이를 통해 ① 향후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관련 보도논조의 예측 ② 남북당국자회담 및 각종 남북교류시 대북 대응역량 제고 ③ 북한 언론매체와의 방송교류 및 남북통합시 언론통합의 기초자료로 활용 등이다.



## 2. 북한 언론매체의 기능과 현황

### 2.1 북한 언론매체의 기능과 역할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보도 특성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언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의 언론매체는 한국의 자유민주언론 매체와는 달리 수령과 당 및 북한정권의 방침 및 정책노선을 선전·선동하는 수단이라는 독특한 성격과 기능을 갖고 있다. 북한에서 언론이란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방침을 해설선전하고 옹호관철하며 프롤레타리아독재를 가일층 강화하고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2)</sup>

북한에서 언론매체의 보도지침은 김정일이 1985년 조선로동당 창건 40주년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발행한 《출판 보도사업에 대한 당 방침 해설》에 집약되어 있다고 할수 있다.<sup>3)</sup> 여기서 김정일은 그 첫번째 보도지침으로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에 대한 위대한 선전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방송은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혁명을 위한 위력있는 선전 도구”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북한 언론매체는 결국 북한정권의 목표인 ‘온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달성하기 위해 전인민을 대상으로 사회주의-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교양을 실시하는 선전·선동·조직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① 인민대중들을 당의 유일사상(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 ② 김일성-김정일의 교시와 방침 관철 ③ 강성대국 건설 등 사회주의 건설투쟁에 복무 ④ 남조선혁명의 지원독려 ⑤ 국제 사회주의혁명의 연대성 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북한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은 사회주의 혁명건설에 부합되는 것일 수 밖에 없다. 이런 사유로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67조에 ‘언론의 자유’가 규정<sup>4)</sup>되어 있다 해도 자유국가의 언론과 같은 언론의 자유를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북한 언론매체의 내용은 자유민주국가의 언론매체들과는 달리 김일성과 김정일의

2) 통일부, 2000 북한개요, 서울: 통일부, 1999, 519면,

3) 이의 자세한 내용은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3-1993, (서울: 북한문제연구소, 1994), 708-709면 참조.

4) ‘김일성헌법’으로 불리우는 북한헌법 제67조에는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업적 찬양, 당 정책 및 사회주의 우월성 선전, 주민 생산활동 고취, 남조선혁명 선동 등에 치우쳐 있고, 순수 오락, 교양프로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특히 북한언론에서는 북한정권이나 정책노선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이 전혀 보도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남한 및 서방세계에 대한 보도내용은 대부분 부정적이고 배타적인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북한방송매체도 위와 같은 북한의 언론정책에 철저히 부응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1970년 10월 14일 발표한 아래의 '방송절' 제정령에 잘 나타나 있다.

“방송은 조선로동당의 위력한 선전수단의 하나로서 전체인민들을 당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불러일으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의 선전역량의 주력부대의 하나인 방송부분 일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공화국 복반의 정치·경제·군사적 위력을 튼튼히 다지며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성원하며 우리혁명의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방송절 제정령 中)

2003년 3월 4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된 '조선중앙텔레비전방송 창설 40돌 기념보고회'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을 보내 “조선중앙텔레비전방송이 당의 현명한 영도밑에 주체혁명 위업의 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한 길에서 우리 당의 위력한 선전자, 교양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온 긍지높은 역사가 수놓아져” 있으며 또한 “텔레비전방송 일꾼들은 당과 수령의 위대성 선전,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선전을 힘있게 벌여왔으며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선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거창한 투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선전을 줄기차게 벌여 혁명과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였다”고 격려한 바 있다. 여기서도 북한 언론매체의 기능과 역할을 재확인할 수 있다.

## 2.2 북한 언론매체의 현황

북한의 언론매체가 현재와 같은 체계를 갖춘 것은 이른바 김일성의 유일사상체제가 확립된 1967년 5월의 조선로동당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 이후이다. 현재 북한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의 체계는 당과 내각의 이원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들어, 방송의 경우 내각 직속의 「조선중앙방송위원회」가 표면상으로 방송사업 전반을

지도·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선전선동부」에서 모든 방송업무를 지도·조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언론의 최고 지도조직은 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라 말할 수 있다. 북한언론 매체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 2.2.1 방송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당 선전선동부의 지시를 받아 모든 방송내용 일체를 지도·운영하면서 검열을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방송내용은 당의 지도·감독에 따라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검열을 거친 것이며 방송국은 검열된 내용만을 기술적으로 방송하는 것이다. 내각의 「체신성」은 방송국의 시설·기재의 관리 및 기술적 업무를 담당·운영하고 있다.<sup>5)</sup>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국내 보도부, 당정책 혁명전통 교양부, 대외방송 편집국, TV방송 편집국, 군사편집부 등의 부서로 나뉘어 진다. 대외방송 편집국은 다시 대외보도부·대남보도부, 그리고 대남 문예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송위원회 산하에는 지역(시·도·군)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그 하부기관인 유선 방송 중계소가 있다.

현재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은 2000년 8월께 당 선전선동부장으로 승격된 정하철 위원장의 후임으로 중앙방송위원회 부위원장과 텔레비전총국장을 거친 차승수가 맡고 있다. 특히 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직을 거친 인물들은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의 각별한 신임을 받아 승진을 하는 자리로 알려져 있을 만큼 요직으로 인식되고 있다. 김정일은 평소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나의 방송입니다”라고 말하며 각별한 관심을 표시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북한의 방송매체는 ▶ TV로는 조선중앙텔레비전(TV)방송, 만수대TV방송, 교육문화TV ▶ 라디오방송으로는 대내방송인 조선중앙방송과 원산, 개성 등 11개의 지방방송이 있으며 ▶ 대남방송매체인 평양방송, 평양FM방송, 구국의 소리방송 ▶ 국제방송매체인 러시아어, 영어, 프랑스어, 에스파니아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등 어문별 외국방송 등으로 나뉘어진다. 이외 북한은 현재 10개의 유선방송국, 200개의 군(郡)·구역방송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 조선중앙텔레비전방송

1963년 3월 3일 평양TV방송국으로 개국한 북한의 대표적 TV방송으로 1970년 4월

---

5) 체신성은 하급조직으로는 시·도 체신국이 있고 그 아래에는 군 체신소, 체신분소가 있다.

15일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고, 1974년 4월 15일 김일성의 62회 생일을 기하여 권러 방송을 시작(흑백 방송도 겸하고 있음)했으며, 사옥은 평양특별시 모란봉구역 전승동에 위치하고 있다. 이 방송은 “김일성의 항일혁명 전통을 이어받고 주체사상과 주체적 출판보도 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온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주체사상의 전면적 승리달성에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 있다.<sup>6)</sup>

방영 시간은 주 47시간 30분인데 평일에는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6시간을,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오후 1시와 오후 3시~11시 30분 등 11시간 30분을 방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편성은, 계몽·선전영화 35.6%, 뉴스 10%, 단막극(드라마) 13%, 아동시간 5.2%, 음악 9%, 스포츠 21.1%, 대담·안내·영어 교육프로 5.6%(평일 경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양·사리원·해주·원산·함흥 등 14개소에 설치된 송신소를 통해 북한 전역에 방영되고 있는데 평양 모란봉에 있는 송신소의 경우 탑 높이가 1백m, 송신 출력은 25kW이다. 한국의 NTSC방식이 아닌 PAL방식으로 송출한다. 조선중앙TV 방송은 오락성보다는 사상 교양 선전성을 중시하는 프로 제작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토요일에는 외국을 소개하는 <국제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송되며, 수요일 오후 4~6시에는 북한주재 외교관을 위해 영화를 상영한다.

## (2) 조선중앙방송

북한의 가장 대표적인 방송으로 1945년 10월 14일 개국한 평양 방송국을 모체로 출발했으며 1967년 12월 제1 중앙방송(대내)과 제2 중앙방송(대남 및 대외)으로 분리했다가 1972년 11월 10일 제1 중앙방송은 조선중앙방송으로, 제 2중앙방송은 평양방송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중앙방송의 사옥은 평양특별시 모란봉구역 전승동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총 15개 채널(중파 9, 단파 6)로 하루 22시간씩 방송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구성은 김일성·김정일 위상화 관련물 34.2%, 주민노역 생산독려 프로 28.8%, 주체사상 선전프로 17.4%, 대남모략 및 한국민의 반정부투쟁 선동프로 12.0%, 오락프로 7.6%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교육문화TV방송

1997년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을 기해 신설한 방송으로 평양일원을 가시청권으로 하

---

6) [http://www.nis.go.kr/kr/include/branch.jsp?menu\\_id=M](http://www.nis.go.kr/kr/include/branch.jsp?menu_id=M)(국가정보원 인터넷 홈페이지)

고 있다. 주요 방송내용은 교육, 과학지식과 일반상식, 사회문화생활, 국내외 체육경기, 예술공연, 영화 등이다.

#### (4) 만수대TV방송

1983년 12월 1일 개국한 평양 시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프로 전문방송. PAL방식으로 토·일요일에만 오전 9시~오후 1시, 오후 4시~10시 등 10시간 동안 예술 공연과 영화, 스포츠 등을 주로 방영하고 있다. 편성 비율은 영화 47%, 스포츠 34%, 뉴스 15%, 음악 4%인데 러시아 영화와 중국의 TV드라마 등 연간 2백여 편의 외화도 상영하고 있다.

<도표 1> 북한 언론매체(방송, 신문, 통신) 현황

구 분	현 황		비 고
TV 방송국	조 선 중 앙 TV	만 수 대 TV	※ 신문현황(16개지) • 중앙지 - 로동신문, 민주조선, 청년전위  • 영자지 - THE PYONGYANG TIMES  • 지방지 - 평양신문, 남포신문, 개성신문, 평북일보, 평남일보, 함북일보, 함남일보, 강원일보, 자강일보, 량강일보
라디오 방송국	대내 방송	조선중앙방송(대내외용)	
	대남 방송	평양방송 구국의소리방송(대남선전·선동용) 평양 FM방송(대남청소년 심리전용)	
	지방 방송	해주방송 사리원방송 개성방송 원산방송 강계방송 해산방송 남포방송 신의주방송 함흥방송 청진방송 평성방송	
통신사	조선중앙통신사		

### 2.2.2 통신

북한은 유일하게 국영통신사로 「조선중앙통신사」(KCNA)를 운영하고 있다. 1946

년 12월 5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직속으로 「북조선통신사」를 설립하였고, 이어 1948년 10월 12일 내각의 직속기관으로 조직체계를 바꾸고 현재 명칭으로 개칭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평양시 모란봉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노동당 및 정부의 입장을 대내외에 선전하는 것이 임무이며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중국의 신화사 등 46개 통신사와 보도분야 협조협정을 체결하고 러시아어, 영어, 불어, 서반아어 등 4개국어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사는 일간으로 조선중앙통신, 사진통신, 영문통신, 러시아어통신, 프랑스어통신, 서반아어통신 등을 내보내며 조선중앙연감을 발행하고 있다.

일본에 개설되어 있는 조선중앙통신사의 인터넷사이트(<http://www.kcna.co.jp>)에는 “조선중앙통신사는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신기관이다. 조선중앙통신사는 공화국과 국제정세에 관한 자료를 신문, 방송들에 제공하는 통일적 보도자료 제공자로서의 기능과 대중을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에로 불러 일으키는 선전자, 조직자적기능, 국제무대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입장을 내외에 천명하는 외교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 2.2.3 신문

현재 북한신문은 ①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 ② 내각(북한정부) 기관지인 「민주조선」, ③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기관지인 「청년전위」 등 3개의 중앙일간지가 있으며 도별로 노동당위원회가 발행하는 지방 일간지가 있다.<sup>7)</sup>

이외에 해외홍보용 주간지인 ‘The Pyong Yang Times’와 내각의 각 성에서 발간하는 ‘교통신문’, ‘건설신문’, ‘교원신문’ 기관지들이 있으며 공장·기업소 발행의 공공신문과 각 대학발행의 ‘대학신문’ 등의 하급신문이 있다. 북한에서 발간되는 도일보는 평양신문(1957.6.1), 평남일보(1950.12.12), 평북일보(1945.11.27), 함남일보(1945.11.15), 함북일보(1945.10.1), 자강일보(1949.3.11), 량강일보(1955.1.1), 강원일보(1945.12.28), 황남일보(1945.9.6), 황북일보(1945.9.6), 개성신문(1952. 3.26) 등 11개가 있다.

### (1) 로동신문

7) [http://www.nis.go.kr/kr/include/branch.jsp?menu\\_id=M03030000](http://www.nis.go.kr/kr/include/branch.jsp?menu_id=M03030000), 통일부, 2000 북한개요, 520-523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 가장 대표적인 신문이다. 1945년 11월 북조선공산당 기관지인 「정로」라는 제호로 출발했으며, 1946년 9월 1일 신민당 기관지인 「전진」을 흡수하여 「로동신문」으로 발간되었다.

당의 노선과 정책을 해설하고, 사회와 인간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며, 노동당의 조직강화와 유일사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한다. 연중무휴 조간체제로 발행되며 겹지 4면과 속지 2면 등 6면으로 발행한다. 최고책임자로 책임주필이 있고 그 아래에 3-5명의 부주필이 있으며, 편집형태는 전면 가로쓰기로 한글전용이며 사건사고와 광고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통상 로동신문 5면은 남한관련 기사를 수록하고 있다.

## (2) 민주조선

북한 내각 즉 정부기관지로 1945년 8월 평남인민위원회 기관지인 「평양일보」로 출발하여 1946년 6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기관지인 「민주조선」으로 창간되었다. 월요일을 제외하고 일간으로 발행된다.

기본사명은 "인민정권기관 일군들과 국가경제기관 일군들을 수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당정책 관철에 힘있게 조직동원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 위업을 적극 이바지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책임주필 아래에 2-3명의 부주필이 있고 통상 4면으로 제작되고 특별한 날의 경우에는 6면으로 증면된다.

## (3) 청년전위

청년조직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기관지로서 1946년 11월 1일 「민주청년」으로 발행되다 1964년 5월 17일 「로동청년」으로 개칭하였으며, 1996년 1월 '조선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이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명칭이 바뀌자 1월 19일 「청년전위」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 신문은 청소년들에게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선전하고 그 완수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도록 고무 추동할 것, 청소년들을 당의 후비대로 교양할 것, 청소년들을 김부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정신을 지니도록 교양할 것, 청소년들에게 공산주의 교양을 주입시킬 것 등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 2.2 북한의 대남방송 체계와 현황

### 2.2.1 북한 대남방송의 개념과 목적

북한의 대남방송(對南放送)이란 북한이 남한국민을 대상으로 송출하는 전담방송을 지칭한다. 대남방송은 남한국민들의 감정, 여론, 태도, 행동 등을 북한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전개하는 선전선동수단이며 일종의 영향공작(Influential Operation)<sup>8)</sup>의 수단이다.

북한이 대남방송을 행하는 목적은 북한정권의 목표인 '전한반도의 주체사상화와 공산화통일 완수'을 위한 유리한 혁명정세를 남한내부에 조성하려는 것이다. 즉 북한은 대남방송을 통해 1964년 2월 27일 조선로동당 제4차 8기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전조선혁명을 위한 3대(북한,남한,국제) 혁명역량 강화노선'중 두 번째인 남한 사회주의혁명 역량의 강화를 기하여, 이른바 남조선혁명 달성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김정일이 1985년 조선로동당 창건 40주년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출판사에서 발행한 《출판 보도사업에 대한 당 방침 해설》이라는 보도지침에서 "방송은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혁명을 위한 위력있는 선전 도구"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서도 확인된다.

북한은 지속적인 대남방송을 통한 선전선동으로 위와 같은 핵심목적 외에도 아래와 같이 5가지 중점방향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sup>9)</sup>

첫째, 남한 대중의 혁명적 의식화를 전개하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 사회내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지식인, 군인 등 각계 각층의 대중을 대상으로 미국과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 증오심, 투쟁심을 유발시켜 대중적 기반을 구축하고 혁명적 의식화를 실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둘째, 남한 사회의 반미 자주화 및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북한은 반미 자주화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선전, 선동하여 우리 사회 내에서의 반미, 반

---

8) 영향공작이란 구 소련의 KGB가 냉전시대에 미국 및 유럽을 대상으로 전개하던 공작의 일환으로, 서방세계 국민들의 여론, 감정, 행동 등을 소련에 유리하게 작용토록 하는 심리전 공작이다. 북한은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한국정부와 국민 및 심지어 국제사회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영향공작을 정교하게 구사하고 있다. 영향공작의 강점은 대상자들의 감성을 자극하여 자연스럽게 의식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이다. 최소한 친북의식은 아니지만 반복적대의식을 버리게 하면 그것 또한 큰 효과이다. 유동열, "극에 달한 북한의 문화영향공작", 민족정론 2000년 1월호(서울: 자유민주민족회의, 2000)

9) 국방부, 국방백서 1996-1997(서울: 국방부,1996), 56-57면



정부 투쟁이 곧 적화통일과 연계되도록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

셋째, 위장평화공세를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사회를 분열시켜 공산화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며, 북한을 평화적 주체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위장평화 공세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넷째, 남한 사회의 내부분열 조장과 체제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체제 약화를 위해 사회혼란을 조성하고 여론을 악화시켜 국민과 정부 간은 물론 지도층과 군 내부의 대립 및 와해를 위한 정치 및 사상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다섯째, "남한" 혁명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 국민을 이용하여 혁명투쟁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선전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모략 및 선전, 선동을 전개하고 있다.

## 2.2.2 북한의 대남방송 운영체제

북한의 대남방송은 형식적으로는 내각의 중앙방송위원회 산하 「대남방송위원회」가 관할하나, 실제로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와 「통일전선부」에서 주관한다. 당 선전선동부에서는 대남방송에 대한 기본방침만 지도하고, 실질적인 대남방송의 지도·운영은 당 통일전선부에서 직접 관장한다.

통일전선부는 조선방송위원회 소속의 「대남 방송위원회」를 직접 통제하며 이를 관장하는데, 현재 북한의 대남방송은 대남방송위원회 산하 평양방송, 평양 FM 방송, 대남 흑색 방송인 구국의 소리방송(일명 민민전방송) 등이 있다. 이외 북한은 1999년 10월 10일 당창건 54돌을 맞이하여 '위성방송'을 송출하고 있는데, 이의 내용은 조선중앙TV방송을 송출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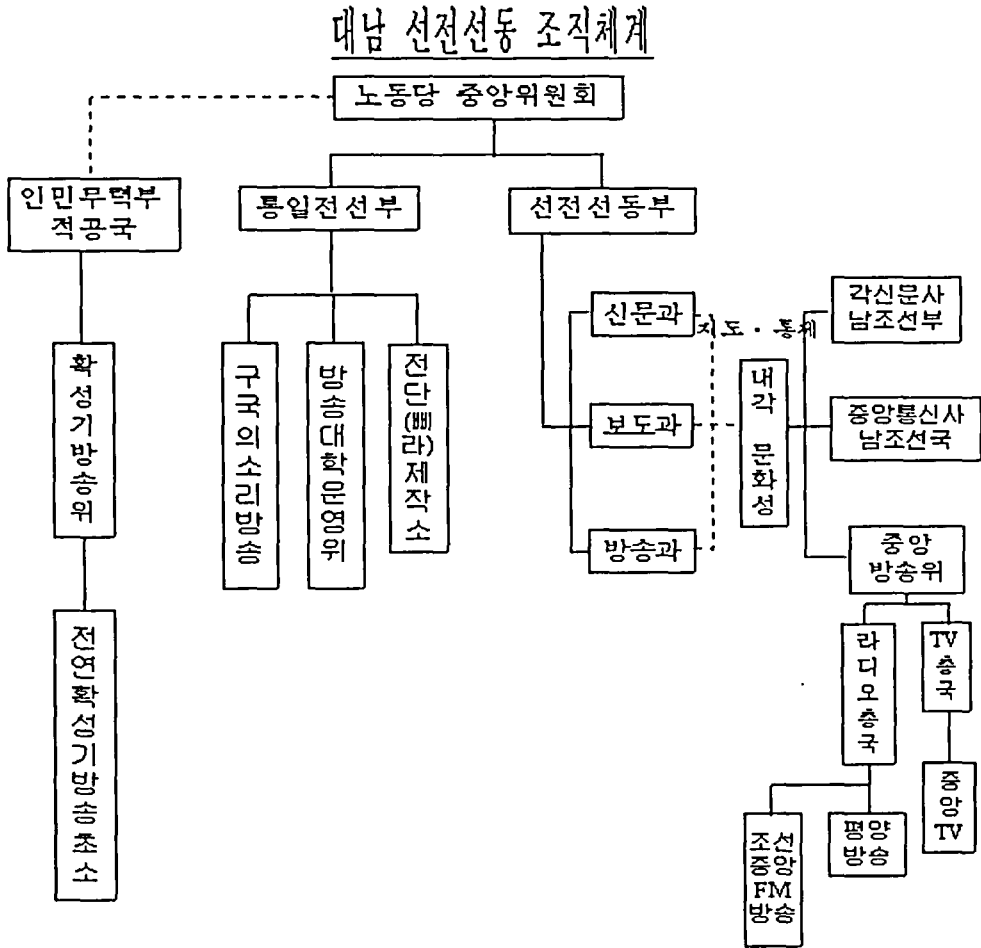
통일전선부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소속의 통일전선공작을 전담하는 대남공작부서<sup>10)</sup>로 1977년 김정일의 직접 지시에 따라 신설되었는데, 주임무는 ① 남북대화 주관 ② 조총련 등 해외교포 공작사업 ③ 대남심리전 및 통일전선공작 주관 ④ 국내 좌익권 지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북한은 대남심리전 차원에서 통일전선부에서 대남방송위원회를 직접 통제하며 대남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 전방 확성기 방송은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지도 감독을 받아 인민무력부 총정 치국 적군 와해 공작부에서 담당하며, 전단 작전은 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제하 310

10) 북한에는 대외연락부(구 사회문화부), 당 35호실(구 조사부), 통일전선부, 작전부, 인민무력부 정찰국, 국가안전보위부 등 대남공작을 전담하는 6개 공작부서가 있다. 유동열, 북한의 대남전략, 경찰수사간부연수소 보안수사지휘과정교재(2003), 396면.

호 연락소와 인민무력부 기구대대에서 실시하고 있다.

<도표 2> 북한의 대남선동체계



### 2.2.3 북한의 대남방송 현황

현재 북한은 대남방송으로 평양방송, 평양 FM 방송과 대남 흑색 방송인 구국의 소리방송(일명 민민전방송) 및 위성방송(조선중앙TV 송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평양방송

평양방송은 1967년 조선중앙방송에서 분리, 제2중앙방송(대외·대남방송 전용)으로 출발하였으며, 1972년 11월10일 오전 5시를 기해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하였다.

현재 중파 5채널, 단파 3채널로 새벽 6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30분까지 매일 23시간 30분 방송하고 있는데, 방송내용은 북한체제의 우월성 선전과 한국사회상 비난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즉,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관련 27%, 주민노역·생산독려 12.9%, 주체사상선전 13.3%, 대남모략 및 남한주민의 반정부투쟁 산동 40%, 음악·오락프로 6.2%정도이다.

기본방송의 포맷은 조선중앙방송과 비슷하지만 ‘김일성방송통신대학강좌’라는 사상교육용 고정프로와 ‘재일동포에게 보내는 방송’, ‘남조선 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방송’, ‘남조선 국군장병들에게 보내는 방송’ 등 특수한 내용의 방송프로가 고정적으로 편성돼 있으며, 이외에 대외 방송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러시아어 등으로 내보내고 있다. 뉴스보도는 주로 조선중앙통신이나 로동신문 등 관영매체의 보도와 사설, 논평 등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다.

## (2) 평양FM방송

1989년 1월1일 첫 전파를 발송한 남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남심리전방송으로 남한의 중부권까지를 가청권에 두고 있다. 이 방송이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남한의 청소년들에게 김일성부자의 우상화와 남조선혁명의식을 주입시키기 위해 음악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결같이 “그곳에 있을 때는 FM방송이란 말을 들은 적이 없고, FM방송 수신기를 본 적도 없으며 이곳에 와서야 비로소 이같은 방송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증언하는데서 뒷받침되고 있다.

현재 주파수 92.5와 105.2MHz로 방송시간은 평일에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평일 13시간, 공휴일에는 24시간 종일 방송된다. 프로그램 편성은 혁명가곡 40%, 고전명곡 40%, 민요 및 가곡 10%, 문예물 10%정도이다. 이를 좀더 세분화해보면 혁명가곡 중에는 북한곡 55%·독일곡 15%·러시아곡 10%정도가 편성되어 있으며, 고전명곡으로는 베토벤·브람스·비발디·모차르트·멘델스존의 작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문예물로는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투쟁을 찬양하는 내용과 남한과 미국정부를 비난하는 연속극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3) 개성TV

개성TV는 개성(開城)에 위치한 대남전용 TV 방송이다. 1971년 4월 15일에 개국한 방송으로 북한의 다른 TV방송국들이 택하고 있는 PAL방식과는 달리 한국과 같은 NTSC방식이다.<sup>11)</sup> 1991년 10월 10일부터 컬러 방송을 시작하였으며 평일은 오후 5

시~10시까지 5시간을,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오전 9시~12시 및 오후 3시~10시 등 10시간씩 각각 방영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1997년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을 기해 대남선전방송인 개성TV를 개편하여, 조선중앙TV방송을 받아 대남용으로 그대로 방송하였다. 이어 북한은 1999년 10월 10일 당창건 54돌을 맞이하여 대남위성방송을 송출하면서 이를 중단하고 있다.

#### (4) 구국의 소리방송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한국민족민주전선(약칭; 한민전, 일명 민민전)의 칠보산연락소(평양 흥부동 소재:구 계관연락소)에서 운영하는 대남흑색방송을 말한다. 일명 민민전방송이라고 한다.<sup>12)</sup>

이 방송의 전신은 1967년 3월 15일 평안남도 순안에서 개통한 '남조선해방 민족연맹방송' 인데 통일혁명당(1969.8.25)이 결성되자, 동 방송을 1970년 6월 1일 통혁명 중앙위원회가 운영하는 '통일혁명당 목소리방송' 으로 개칭한바 있다. 그 후 1985년 7월 27일 통일혁명당이 한민전으로 통합되자, 1985년 8월 8일자로 다시 '구국의 소리방송' 으로 개칭하였다.

북한은 그 동안 동 방송이 마치 한국 내에서 송출하는 지하방송인양 위장하기 위해 "여기는 서울입니다" 라는 멘트와 서울표준말을 사용하고 있다. 동 방송의 방송요원들은 대부분 남한출신 월북자나 남치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1969년 12월 강릉에서 납북된 KAL 여승무원인 성경희, 정경숙 등도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 방송은 개국시 중단파 2개 채널로 하루 2시간씩 방송했으나, 현재는 평양, 해주, 원산 등의 송신시설을 이용하여 중파 1개 채널(1053KHZ), 단파 6개 채널(3480, 4400, 4450, 4557, 4120, 6010KHZ)을 통해 하루 16시간씩 방송(05시-10시, 12시-16시, 19시-02시)해왔는데, 12시간만을 송출해왔다. 1973년부터는 영어방송도 송출하고 있다. 물론 이 방송은 주파수와 콜사인이 국제무선통신국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방송이다.

구국의 소리 방송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적극 투쟁한다'는 기본임무 아래 △한국정부 타도 △민족민주정권 수립 △한국내 민주정치 실현 △자주적 민족경제건설 △민족교육의 발전 △민족문화의 발전 △국민생활 안정 등 이른바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의 10대 강령을 행동강령으로 삼고 있다.

11) 북한의 TV는 우리와는 달리 유럽스타일의 주사선 6백25개의 PAL 방식으로 방송되는 조선중앙TV방송, 대남용으로 우리와 같은 주사선 5백25개의 NTSC방식의 개성TV방송, 그리고 대내용으로 국내의 영화 및 예술공연 전용채널인 PAL방식의 등 3채널이 있다.

12) 북한의 대남흑색방송인 구국의 소리방송(일명 한민전방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동렬, 한국좌익운동의 역사와 현실, 299-305면 참조.

특히 동 방송은 한국에서 중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성명·담화·기자회견·대남호소문 등을 상습적으로 발표해 각종 유언비어를 조작, 유포하고 한국민의 국론분열과 반정부투쟁을 집중적으로 선동해오고 있다. 동 방송을 통해 이른바 '주사파'로 불리우는 국내 친북좌익권을 이념적으로 지도하고 있는데, 매년, 매시기, 매사안마다 국내 좌익권에게 투쟁방향을 하달하고 있고, 운동강좌 등을 통해 북한의 주체사상과 남조선혁명론을 학습시키며 대남선동공세에 여념이 없다. 한편 국내 친북좌익권은 조직내에 전문적인 북한방송청취팀(BC팀)을 운영하며 동 방송을 녹취하여 '인터넷 구국의 소리' 등의 지하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2003년 8월 1일자로 대남흑색방송인 '구국의 소리송방송' 송출을 잠정중단하였으나, 2003년 8월 15일부터 동 주파수를 통해 북한관영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도표 3> 조선중앙TV 방송순서

03. 11. 27 (목)

- 17 : 10 보도
- : 20 오늘호 중앙신문 개관
- : 36 아동방송시간 아동연화
- 소년 장수 제11부 - 승전고 올리는 속에 -
- 록화실황 전국학생소년들의 독창, 독주, 독무 경연중에서(1)
- 18 : 22 과학영화
- 박막형 태양 빛 전지와 이용
- : 39 조선기록영화
- 빛나는 삶의 품 20
- 19 : 38 련속참관기
- 홍남의 노동계급과 함께 계시여
- 홍남 비료 혁명사적관 (1)
- 20 : 00 보      도
- : 40 텔레비죤연속극
- 대지여 젊어지라 제2부

21 : 32	시사해설
: 40	혁명전통교양의 만년재보를 마련한 위대한 정도 련속좌담회 -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대기념비들
: 56	방문기 태양의 품에서 삶을 빛내이는 사람들 비전향장기수 김중중
: 15	오늘의 보도중에서

**<도표 4> 조선중앙방송 순서**

총 22시간 30분간 방송

05 : 00	일반 방송 (음악 방송)
06 : 00	보도와 날씨
06 : 20	일반 방송 (음악 방송)
07 : 00	보도와 날씨
07 : 15	일반 방송 (음악 방송)
08 : 00	일반 방송 (김일성, 김정일 위대성 선전방송 및 음악방송)
09 : 00	일반 방송 (음악 방송)
10 : 00	보도와 날씨
11 : 00	일반 방송 (음악 방송)
11 : 55	방송순서안내
12 : 00	보도와 날씨
12 : 30	일반 방송 (음악 방송)
14 : 00	사회주의 선전선동 방송
15 : 00	보도와 날씨
16 : 00	일반 방송 (음악 방송)
17 : 00	보도와 날씨
18 : 00	대남 및 대내 평론방송
19 : 00	일반 방송 (음악 방송)
19 : 20	방송극 (사회주의 선전선동 방송)
20 : 00	보도와 날씨
20 : 15	대남 및 대내 평론방송
20 : 35	혁명일화(김일성, 김정일 위대성 선전방송 및 음악방송)
21 : 00	종합보도와 날씨
21 : 25	시사논단 논평
22 : 00	보도와 날씨
22 : 30	장편실화소설 (김일성, 김정일 위대성 선전방송)
23:00-03:30	일반 방송 (음악 방송)

<도표 5> 평양방송 순서

총 23시간 30분간 방송

06 : 00	일반 방송 (김일성, 김정일 노작방송)
07 : 00	보도와 날씨
07 : 30	대남 및 대내 평론방송
07 : 50	대 담
08 : 00	보도와 날씨
08 : 35	실 담
08 : 50	반 향
09 : 00	일반 방송 (음악 방송)
09 : 45	대남 및 대내 평론방송
10 : 00	보도와 날씨
10 : 25	실 담
11 : 00	일반방송 (음악방송)
11 : 50	대남 및 대내 평론방송
12 : 00	보도와 날씨
12 : 25	일반방송 (김일성, 김정일 노작 방송)
13 : 00	남조선 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방송
13 : 25	연 단
13 : 50	노동신문 논평
14 : 00	일반 방송 (음악 방송)
14 : 50	대남 및 대내 평론방송
15 : 00	보 도
15 : 15	일반방송(김일성, 김정일 위대성 선전방송 및 음악방송)
16 : 00	일반 방송 (음악 방송)
17 : 00	보도와 날씨
17 : 20	일반 방송 (방송극)
18 : 00	일반방송(김일성, 김정일 위대성 선전방송 및 음악방송)
18 : 30	일반 방송 (사회주의 우월성 선전방송)
19 : 00	일반 방송 (혁명가극 음악방송)
19 : 30	재일동포들에게 보내는 방송
20 : 00	보도와 날씨
20 : 30	남조선 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방송
20 : 50	일반 방송 (음악 방송)

21 : 00	보도와 날씨
21 : 40	대남 및 대내 평론방송
22 : 00	종합보도와 날씨
22 : 25	일반방송 (사회주의 우월성 선전 방송)
23 : 00	김일성 방송대학 강의방송
24 : 00	일반 방송 (음악 방송)
01 : 00	일반방송(사회주의 우월성 선전방송)
01 : 25	일반방송(김일성, 김정일 위대성 선전방송 및 음악방송)
02 : 00	김일성 방송대학 강의방송
04:00-05:30	일반 방송 (음악 방송)



### 3.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보도의 특성

#### 3.1 북한의 대남보도 주요 내용과 성향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보도 성향을 크게 ① 김대중정부 출범이후부터 6.15공동선언 이전 (1998.2- 2000.6) ② 6.15공동선언 이후부터 노무현정부 출범 이전 (2000.6 - 2003.2) ③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부터 현재(2003.2- 현재) 까지로 구분하여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 3.1.1 김대중정부 출범이후부터 6.15선언 이전(1998.2 - 2000.6)

이 시기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보도 논조는 시기에 따라 일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적대적이고 공세적'인 성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향은 북한의 대남적대정책노선에서 연유된다.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보도성향은 조선로동당의 대남정책노선의 방향과 강도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이 시기 북한은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인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를 철저히 배제한채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를 활성화하는 이른바 당민(당국-민간) 분리전술을 구사하며, 공세적인 대남적대정책을 전개한 시기였다.<sup>13)</sup> 실제 이시기에 북한잠수정 동해안침투사건(1998), 여수해안 북한 반잠수정 침투사건(1998), 민족민주혁명당 간첩단사건(1999), 연평교전사건(1999) 등의 공세적 투쟁을 자행하였다.

이 시기에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보도의 주요 내용과 논조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김대중대통령과 한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방중상 및 모략을 강화하였다. 심지어 북한은 한국정부를 비방하면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조작, 날조하는가 하면, 명백한 기정사실 마저도 그럴 듯한 논리를 섞어 왜곡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보도의 단골메뉴이자 상투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김대중정부를 친미파쇼정권, 사대매국정권, 반통일정권 등으로 중상모략하

13) 유동열, 북한의 대남전략, 402-411면

고 현정부의 대북정책(햇볕론, 정경분리정책), IMF관련 경제정책, 노동, 교육, 문화정책 등 제 시책을 왜곡비방하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대통령 실명을 직접 거명하며 악의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대남공세를 취하였으며,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인 햇볕론을 ‘반북대결론’ 등으로 매도하였다. 이는 한국정부의 정통성을 훼손시키고 정부와 국민사이를 이간질하여 정권기반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였다.

### ● 김대중정부 비방중상

김대중정부에 대한 북한의 초기 시각이 어떠했는지는 1998년 6월 14일 평양방송 논평 ‘그놈이 그놈이다’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북한은 한국대통령을 ‘친미 사대매국노’, ‘전쟁광신자’, ‘호전깡패’ 심지어 ‘미친개’라고 지칭하며, 타도할 것을 선동하고 있다.

“쑥대밭에서 숙대가 나오기 마련이라고 식민지 파쇼체제의 바통을 이어 받는 남조선 현 집권자 역시 선행독재자들과 다를바 없는 친미사대 매국노, 전쟁광신자, 반북대결분자입니다...중략... 결국 현집권자도 역대 남조선 괴뢰들과 똑같은 사대매국역적이고 나라의 통일이 아니라 미제의 침략정책의 돌격대로, 북침전쟁 도발에로 내닫는 극악한 호전깡패임을 다시금 똑똑히 드러내 놓았습니다. ... 남조선에서 정권이나 교체되고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그 어떤 기대도 가질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 미친개는 제때 때려잡아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등지고 외세의 옷자락에 매달려 살길을 찾는 극악한 사대매국노, 전쟁 미치광이인 현집권자가 동조에게 더 큰 화를 입히기 전에 타도해 버려야 합니다“

이외에도 북한은 김대중 대통령을 ‘역적’·‘인간으로서 초보적인 도덕도 갖추지 못한 저능아, 인간추물 중의 추물’(1998.7.26자, 평양방송), ‘극악한 분열미치광이·정치매춘부 및 너절한 시정배’(1998.9.14, 중앙방송) 등과 같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정도의 원색적 용어를 사용하여 비방-중상한바 있다.<sup>14)</sup>

1년뒤 북한의 김대중정부에 대한 시각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로동신문 1999년 2월 24일자에 보도된 ‘국민통치배의 1년간의 죄악을 결산함’ (당일 평양방송, 조선중앙방송 보도) 이란 아래의 논평기사에서 “국민통치배들이 집권 1년 기간에 한 것이란 외세의존과 사대매국 행위로 남조선을 미증유의 정치 경제적 혼란과 위기 속에 몰아넣고 인민들에 대한 파쇼 칼부림과 반북대결 전쟁책동을 끊임없이 벌여

14) 북한의 김대중정부에 대한 대표적 비방 사례는 ‘국민의 정부 감투를 쓴 파쇼독재정권’(평양방송, 1998.5.28), ‘국민의 정부 그실체’(구국의 소리방송, 1998. 8.26일자 논평), ‘반역자의 가증스런 넋두리’(로동신문, 1999.1.4), ‘식민지 노복의 반통일 넋두리’(로동신문, 1999.8.17) 등이 있다.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고 전쟁위험을 증대시킨 것뿐”이라고 혹평한 바 있다.

“지난 1년간 남조선 통치배들이 민족 앞에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은 무엇보다도 극악한 친미, 친일 사대매국 행위로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해치고 남조선을 현 세기에 가장 참혹한 자주의 폐허지대로 만든 것이다. 이미 지난해 통일된 후에도 미군이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는 망발을 늘어놓아 친미 사대매국노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올해도 미군이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과 안정을 위해 통일 이후에도 남조선에 주둔해야 한다고 떠벌리며 미군의 남조선 영구장점을 거둬 애걸해 나갔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이 괴뢰 통치배들을 가장 극악한 민족반역의 무리, 제2의 을사오적으로 낙인하면서 친미, 친일 역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반괴뢰 반정부 투쟁에 결연히 떨쳐나서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남조선 파쇼도당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나선 통일애국 인사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함으로써 저들이야말로 애국을 범죄시키고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부정하는 극악무도한 반역의 무리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였다...”

### ● 햇볕정책 비방중상

북한은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인 햇볕정책도 수시로 비난해 왔다. 북한 언론들은 포용정책을 “외세와 작당하여 북의 사상과 제도를 질식하고 미제의 식민통치를 공화국에까지 연장하겠다는 반공화국 반통일 대결선전” (노동신문 논평, 1998. 9. 7 평방), “포용정책이 가져다 줄 것이란 오로지 민족재부의 끝없는 소모로 이어지는 대결과 자비없는 전쟁과 비극적인 영구분열뿐이다. 포용정책은 마땅히 규탄되고 매장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신문 논평, 1999. 6. 4, 평방) 등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북한 노동신문 1998년 8월 7일자 논평 ‘햇볕론은 뒤집어 놓은 반북대결론’은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북한의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sup>15)</sup>

“햇볕론은 논의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요설에 불과하며 북남관계 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가로막고 상대방을 해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반북대결적이고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저들의 정체를 통일의 너울로 위장하고 말 재간을 피워 땅바닥에 나떨어진 인기나 올려보려고 펴놓은 한낱 말장사 보따리일뿐이다 ... 결국 햇볕론은 역대독재자들의 사대매국, 반민족 반통일정책의 계속이며 뒤집어 놓은 반공화국 반통일대결선언이다... 오물통에서는 악취밖에 풍길것이 없다 ... 햇볕론 따위의 궤변을 당장 걷어 치워야 마땅하다”

15) 이외 햇볕정책에 대한 북한의 비방사례로는 ‘대북화해정책을 발가본다’(1998.7.24 노동신문 논평), ‘남조선당국의 대북정책을 다시 한번 논함’(평양방송, 1998.9.29), ‘포용정책은 햇볕정책의 변종’(평양방송, 1999.3.17) 등이 있다.

둘째, 북한은 이 시기 북한정권의 대남노선인 자주,민주,통일에 입각한 반미자주화투쟁, 반파쇼민주화투쟁, 조국통일투쟁을 집중 선동하였다. 예를 들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구 안기부) 해체, 통일인사 석방, 콘크리트장벽 철거, 출소공산주의자 송환, 평화협정 체결 등이 그것이다.

이는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노선을 공론화시켜 자연스럽게 국론분열을 노리며 한국정부를 압박하려는 것이다. 또한 핵문제와 관련한 일련의 대응조치와 한미 군사연습을 북침준비 책동으로 몰락 날조하여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편, 시장개방,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과 관련하여 반미감정을 확산시키는 반미반핵투쟁을 지속적으로 선동한바 있다.

### ● 미군철수 및 평화협정 선동

이는 북한 조선중앙방송 1998년 11월 20일자 '미군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은 시대의 엄숙한 요구'라는 논평에 잘 나타나 있다.<sup>16)</sup>

“ 지금 조선반도 정세는 조미사이의 평화협정이 시급이 체결되고, 남조선에서 미군침략군이 무조건 즉시 철거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중략...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화근은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계속되는 적대시정책과 남조선 강점 미제침략군이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조미 사이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야 말로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인 것이다“

### ● 국가보안법 철폐

북한의 국가보안법 철폐 선동은 평양방송 1999년 1월 11일자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은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라는 논평에 잘 요약되어 있다.<sup>17)</sup>

“오늘 나라의 통일을 위한 겨레의 힘찬 앞길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커다란 장애가 가로 놓여 있습니다 ... 이법은 통일을 이룰수 없게 하는 반통일악법입니다. 오늘 국가보안법은 그것이 추구하는 극악한 목적과 악랄성, 범죄로 가득한 행적으로 해서 우리민족은 물론 세계 진보적 인민들 속에서 유례없는 악법으로 낙인되고 규탄배격당하고 있습니다.... 남조선통치배들이 세계적인 규탄과 배격의 대상이 된 국가보안법에 계속 매달려 그 무엇을 이루어 보려 한다면 그것은 저들의 반민주, 반통일적인 정체

16) 이외 미군철수 주장에 대한 대표적 사례는 '미국의 한국강점은 정당화될수 없다'(구국의 소리 방송, 1998.9.20 논평),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야 한다'(로동신문, 1998.1.17 논평), 북한의무성 대변인 담화(1999.9.8) 등이 있다.

17)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선동사례는 '보안법 철폐는 민심의 요구'(1998.9.2 로동신문), '국가보안법 철폐 시급하다'(구국의 소리방송, 1998.10.18 논평), 등이 있다.

를 더욱 낱낱이 드러내고 파멸만 앞 당길 뿐입니다. 자주와 민주,인권을 귀중히 여기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국가보안법 폐기를 위한 투쟁에 떨쳐 나서야 할것입니다”

셋째, 북한의 위장된 평화통일노선을 선전하고 있다. 북한의 통일노선을 집약했다는 소위 조국통일 3대헌장(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 3원칙,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과 김정일의 ‘민족대단결 5대방침’(일명 4.18서한)<sup>18)</sup>을 집중 선전하며, 김일성의 통일유훈을 관철시키자고 연방제 통일공세를 강화하고 있다.<sup>19)</sup>

“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겨레는 경애한 장군님께서 새롭게 천명해 주신 민족대단결의 5대방침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할 드 높은 결의에 넘쳐 있습니다... 조국통일을 빨리 실현할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는 것이다 지적하였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시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통일 3대헌장으로 정립해주신 연방제통일방안은 조국통일을 위한 최선의 방도입니다”(평양방송 논평, 연방제방식은 최선의 조국통일방도, 1998.7.14)

넷째, 한총련과 범민련 남측본부 등 국내 좌익권이나 재야권의 투쟁을 고무하기 위한 선동공작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IMF사태에 관련한 정리해고 등 대량 실업사태와 관련하여 반정부투쟁을 선동하며,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및 민노총, 전국연합 등의 재야권과의 연대투쟁을 고무하고 있다.<sup>20)</sup> 또한 북한은 우리의 군복무 환경을 왜곡 비방하고 복무 염증 유발 및 사기 저하를 위한 비방 선전을 강화한바 있다.

### ● 한총련 옹호 및 투쟁선동

북한의 한총련 옹호 및 투쟁 선동사례는 로동신문 1999년 1월 29일자 ‘파멸을 촉진하는 칼부림’이라는 논평을 들 수 있다.

“한총련은 남조선에서 자주·민주 통일을 강령으로 내세우고 투쟁하고 있는 애국

18)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동렬, “대남전략관점에서 본 김정일의 민족대단결 5대 방침”, 북한 98년 6월호(서울: 북한연구소,1998) 22-30면 참조.

19) ‘민족대단결 5대방침은 조국통일의 초석’(조선중앙방송, 1998.7.5),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불변의 통일원칙’(로동신문, 1999.7.4) 등

20) 이에 대한 대표적 사례는 ‘로동운동을 주축으로 각계각층의 대중운동이 연대공동전선을 형성하여 위력을 과시하자’(로동신문 1998.6.10),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청년학생들의 투쟁은 가로막을수 없다’(로동신문 1998.6.15) 등이 있다.

단체이다. 남조선인민들은 통일의 선봉대인 불패의 애국대오 한총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를 강조하는 현통치배들은 열렬한 한총련을 말살하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 괴뢰들의 한총련 탄압책동은 이진 독재자들의 그것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괴뢰통치배들은 한총련을 탄압 말살해보려는 어리석은 기도를 버리고 칼부림을 그만 두어야 하며 애국학생들을 당장 석방해야 한다”

### ● 노동투쟁 선동

“남조선 노동자들이 봄철에 접어들면서 노동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사실상 국민의 정부는 노동자들의 적이었다 ...현정권은 ... 철두철미 반노동자적이고 반인민적인 시책만 펼쳤다 ... 국민통치배들이야 말로 노동자들이야 죽던말건 상관없이 오히려 부귀영화만을 추구하는 반노동자집단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고발해 준다 ...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당하느니 보다 일어나 싸워 삶의 권리를 쟁취하여야 한다“(로동신문, 논평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된다 1999.3.9)

다섯째, 한반도의 전쟁위협공세를 강화하였다. 북한은 1998년 9월 29일 ‘남조선 당국의 대북정책을 다시 한번 논함’이라는 로동신문 및 평양방송의 논평을 통해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있어서 대화는 가짜이고 전쟁이야말로 진짜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똑똑히 알고 있다. 우리의 군사중시정책은 바로 이러한 침략책동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중략... 전쟁이나 평화냐? 남조선당국은 어느 하나를 명백히 선택하여야 한다”고 강변하며, 전쟁발발 가능성을 우리당국에게 전가하며 위협한바 있다. 특히 ‘조선의 공격정신’을 내세우며 전쟁불사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실정이다.<sup>21)</sup>

여섯째, 김정일을 미화찬양하고,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 및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를 선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주 내용은 김정일의 지도력 및 국방위원장 추대 찬양, 붉은기사상 및 주체사상 선전, 북한 사회상 선전, 강성대국 건설 찬양 등으로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고취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선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동구 공산권 몰락후 체제위기에 직면하자 북한체제의 우월성과 주체사상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김부자 업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김정일의 지도력을 부각시키고, 김정일에 대한 충성 선전을 통하여 우리 사회 내에 북한 추종세력을 부식(扶植)하는 한편, 이를 북한 체제의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21)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성명(원수들의 침략전쟁에는 혁명전쟁으로 대답할 것이다, 1998.8.19), 조선의 공격정신(조선중앙방송 정론, 1998.8.23)

특히 ‘평양방송’의 경우 이시기 매일 오전 6시부터 그 익일 5시 30분까지 하루 23시간 30분씩 북한체제의 우월성과 한국사회상 비난과 관련된 내용을 주종으로 하여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이밖에도 북한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방송이나 시각매개물, 삐라 살포 등의 방법을 통해 반미-반정부투쟁의 선동과 북측 세습체제의 우상화 선전을 해왔다.

일곱째, 북한은 이시기 발생한 북한잠수정의 동해안침투사건(1998.6), 북한간첩의 동해침투(1998.7), 독일주재 외교관의 망명사건(1999.1) 등에 대해 이를 한국정부의 반복대결소동으로 몰아치며, 사건은폐 및 흑색비방을 행하는 보도를 내보내며 있다.

북한이 직접 남파시킨 간첩의 시신과 장비가 나왔는데, 이를 부인하며 모략극, 반복대결극이라며 강변하는가 하면, 독일주재 북한 외교관이 가족과 함께 자의로 미국에 망명한 사실을 놓고 납치라고 주장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남조선 괴뢰들은 지난 12일 남조선 강원도 묵호해안에서 그 무슨 무장간첩의 시체 1구와 침투용 추진기 1대를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을 우리의 무장간첩으로 단정하고 또 다시 대대적인 반복대결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남조선괴뢰들이 떠드는 무장간첩침투니 뭐니 하는 것은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따라서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 반복대결소동은 ...남조선 극우강경 보수세력이 대세를 반복대결로 돌리기 위해 계획적으로 꾸며낸 서툰 모략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게 된다”(조평통 대변인 기자회견, 1998.7.14 조선중앙통신)

“최근 납치와 테러, 모략의 총본산인 남조선 괴뢰 안기부가 또 다시 반복모략극을 악랄하게 꾸미고 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13일 도이칠란드 베를린에서는 미국의 공모하에 남조선 괴뢰 안기부에 의하여 우리의 이권대표부 서기관과 그의 부인이 백주에 납치 당하는 엄중한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 ... 이는 우리공화국의 높은 존엄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행위이다 ... 남조선괴뢰들은 ... 공화국 외교관이 납치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망명하였다고 마치 인정하기라도 하는 보도를 한 듯이 사실을 꾸며내는 추태를 부렸다. 이것은 괴뢰들의 날조품이며 모략극이다...”(평양방송 논평, 납치배의 낚두리, 1999.1.30)

### 3.1.2 6.15선언 이후-노무현정부 출범 이전(2000.6 - 2003.2)

2000년 6월 13-15일간 분단사상 최초의 남북정상회담과 이의 결과물인 6.15 남북공동선언은 북한이 대남강경노선에서 대남유화노선으로 일대 전환을 가져온 시발점이었다. 이 시기 북한은 6.15 공동선언으로 조성된 화해분위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합법적 영역에서의 공작에 주력하며 합법-비합법 전술 배합 구사하였다. 실제 북한

은 잦은 서해상 NLL월선, 북한상선 남해 영해통과사건, 서해교전사건(2002.6), 북한 핵개발 재개(2002) 등을 야기시키며, 대남강경-온건전술을 구사한바 있다.<sup>22)</sup>

6.15 남북공동선언 직후에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보도 논조는 이전의 적대적 공세적 성향에서 '유화적 호혜적 성향'으로 전환되었다. 즉 6.15공동선언이 채택된 이후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서로 약속이나 한 듯 과거의 다분히 악의적이고 모해적인 차원의 대남 비방-중상의 행태에서 벗어나 대남관련 보도의 경우 각급 보도내용을 인용하여 간략하게 '사실보도'에 치중하는 중립적 성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2001년도에 들어 '6.15공동선언'의 이행-실천과 관련한 남북당국간의 대화가 전면적으로 소강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특히 지난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2001.11.9-14, 금강산)이 아무런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결렬되자 그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가운데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의 대남비방이 재개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논조는 대남유화-대남적대성향이 중첩된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시기 대남보도논조와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김대중대통령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비방중상을 전면중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직접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여 악성 비방중상을 행해왔던 '6.15공동선언' 이전의 대남방송논조와는 다른 보도행태로 남북정상회담에서 조성된 남북화해분위기에 조응하여 현대통령에 대해 배려해주는 것이라 평가된다.<sup>23)</sup> 그러나 아래 사례에서 보듯이 간헐적으로 직접 김대중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대남비방을 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실명을 거론한 대남비방은 거의 사라졌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당국자가 주한미군을 이땅에서 전쟁을 막고 동북아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존재로 미국을 이땅의 경제회생을 도와준 최대특혜 대상국이라고 역설한 것은 온전한 사고력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남북공동선언에 직접 서명한 김대중 당국자가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그 무슨 북의 남침과 주한미군 존속을 운운하면서 이전의 냉전논리를 다시 펴고 있는 것입니다. 현당국자의 이같은 언동은 매우 심상치 않은 것으로써 그의

22) 유동열, 북한정권 55년 어떻게 변했는가: 대남전략전술, 북한 2003년 9월호(서울: 북한연구소, 2003), 92면

23) 북한은 이전에 남한 대통령에 대해 '괴뢰 통치배', '파쇼도당' 이라고 호칭해 왔으며, 심지어 '민족 반역자', '사대매국노' 등으로 매도하면서 걸핏하면 '정권타도 투쟁' 을 부채질해 왔다. 심지어 남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1999년 6월 10일에도 평양방송은 “괴뢰 통치배들의 매국배족적이며 반인민적인 악정으로 말미암아 남조선 사회는 헤어날 수 없는 살인범죄의 나락으로 더욱더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면서 “이 썩어빠진 사회를 뒤집어엎어야만 남조선 인민들이 인간다운 생활,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의지를 의심케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구국의 소리방송, 2000.6.30일자 시사해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이 해외에 개설한 친북인터넷사이트인 「민족통신」(www.minjok.com)의 게시판을 통해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라는 위장단체 명의로 국내 친북좌파권에 투쟁지령을 하달하고 있는데, 이 지령문중 현정부에 대한 시각이 북한의 공식매체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김대중정권에 대한 입장문제이다. 현정권은 국가보안법 철폐에 반대하며 안기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격상시키고 범민련과 한총련을 아직도 이적단체로 규정하며 민중생존권운동을 여전히 가혹하게 탄압하는 명백한 반민주파쇼정권이다. 이런 정권의 본질이 6.15 선언으로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현대 운동대오의 일각에서 6.15선언 이후 현정권에 대한 환상을 가지며 우경적 견해를 제기하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중략... 김대중정권의 반민주파쇼적 성격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조건에서 6.15선언 합의만으로 현정권과의 투쟁을 일시하거나 나가서 중단한다면 이는 명백한 우경투항주의인 것이다... 6.15 선언으로 반미반정부투쟁의 과녁이 바뀔수 없으며 오히려 6.15선언이 주한미군과 국가보안법,국가정보원의 존립근거를 허물어 벌임으로써 대중적인 반미반정부투쟁을 촉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혀 변혁과 통일을 앞당기자, 2000.9.19, 민족통신 게재)

이상에서 북한은 공식매체(로동신문,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를 통해선 김대통령을 직접 비방을 자제하고 있지만, 비공식 간접매체를 통해 여전히 비방중상을 행하고 정권타도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는 북한당국이 김대중 정부에 대한 인식에는 전략적으로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북한 언론매체는 대남관련의 방송매체중 대남비방 전담프로를 전면 중지하면서 대남유화분위기에 편승하였다. 실제 라디오방송매체의 경우 1999년 5-6월경부터 정례적으로 편성-보도해 왔던 ‘라디오단평’이나 ‘문답’-‘만필’ 등 대남비방프로그램을 6.15 공동선언 직후 전면적으로 폐지하여 한국측으로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나 자극을 사지 않으려는 신중한 입장과 자세를 보여 왔던 점을 특성 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월북군인들을 유인하기 위해 그동안 운영해 왔던 ‘국군장병들에게 보내는 방송’과 ‘남조선청년학생 여러분’이라는 고정프로도 과감하게 폐지하는 용단을 보여 왔고, 2000년 11월부터는 대남간첩지령방송인 이른바 ‘난수표방송’(A3방송)마저도 중단함으로써 그들이 ‘6.15공동선언’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기도 하였다.<sup>24)</sup>

세제, 6.15 공동선언 이후에도 대한민국 정부시책이나 특정인사에 대한 대남비방은 일부 강도가 낮아졌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남조선집권측’, ‘남조선당국자’ 등의 우회적 표현을 사용하며 대남비방을 지속하고 있다.

“남조선 당국의 군비증강과 전력강화책동을 단호히 규탄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화해와 협력, 평화의 뒤에서 감행하고 있는 남조선당국의 군비증강과 전력강화책동을 북남공동선언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으로 용납못할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행위로 인정하면서 이를 단호히 규탄한다...중략... 남조선당국은 앞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이요, 평화구축이요 하고 떠들고 뒤에서는 군비증강책동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공동선언을 실천할 의사가 없으며 여전히 외세와 야합하여 대화 상대방을 침략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쟁책동에 매달린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에 상응한 자위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서는 남조선당국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북한 조평통 대변인 성명,2000.10.6)

“...한국은 미국에 철저히 예속된 아무런 자주성도 없는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 속국입니다...한국의 이른바 정권이라는게 얼마나 독자성이 없는 꼭두각시 정권인가 하는 것은 상전이 벌인 핵소동의 돌격대가 되어서 동족을 압살하기 위한 대결과 전쟁의 길로 줄달음 친것만 봐도 잘 알수가 있겠습니다....”(구국의 소리방송, 2000년 10월 6일자 연속좌담: 한국은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 1회 中)

또한, 북한은 2001년 11월초부터 ‘8.15민족통일대축전’ 참가자 구속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직총」 - 「여맹」 등 각종 단체의 대변인 명의의 비난성명이나 담화를 연이어 발표하는 가운데 직접 비난의 양태까지 내보이고 있다. 즉 바로 이 때부터 북한의 각급 방송매체들은 ‘국가보안법 철폐나 통일애국인사 석방문제’ 등을 주요 소재로 하여 우리 당국을 직접 거명하면서 ‘군부독재자들’이나 ‘파쇼당국’과 같은 부정적 용어를 동원하면서 ‘6.15공동선언’ 채택이전의 비난논조로 회귀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남조선당국은 북남대화의 근본목적과 어긋나게 공공연히 대결을 추구하고 있다”(11.28, 평양방송)이나 “남조선당국이 사멸해 가는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축전참가자들을 사법처리했다”(11.21, 중앙방송) 등인데, 이는

24) 이와 함께 북한은 휴전선 155마일 100여 곳에 설치된 확산기의 대남체제 비판 및 비방방송을 정상회담 직후부터 일제히 중단했다. 나아가 휴전선 일대의 원색적인 비난 구호가 적힌 간판도 교체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기간 중 국방위원회를 비상소집, 휴전선의 대남방송을 비롯 각종 선전매체를 통한 대남비방 방송을 중지하라고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남북관계가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그들 내부에서 선전선동부문이 대폭 강화된 데서 비롯된다.

또한 북한은 우리 정부의 '테러전쟁'과 관련한 미국과의 공조움직임 및 군대와 경찰에 대한 경계강화조치(2001. 10.8자) 등 군사동향에 대해서도 비난의 소재로 삼아 원용하는 가운데 한동안 거론치 않던 '콘크리트장벽 해체'(2001. 12.11, 평양방송)를 들고 나오며 대남비방을 강화했다.

네째, 북한은 대남비방의 횡수와 강도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감소했으나, 6.15 공동선언의 이행실천이란 기치 아래 종래의 반미자주화투쟁, 반파쇼민주화투쟁, 조국통일통일투쟁 등 대남선동노선을 여전히 지속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주 내용은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통일인사 양심심 전원석방,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대중적인 반외세자주화, 반피뢰 민주화투쟁을 벌여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파쇼통치를 청산하고 남조선사회를 자주화 민주화하여야 한다"(북한 신년공동사설, 2001.1.1 중앙방송, 평양방송)

"이땅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철폐, 해체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나선다.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 공동선언의 채택으로 구시대의 악명높은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설자리를 잃고 그 존재명분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땅에서는 의연히 국보법에 의한 파쇼전횡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청년학생들은 남북화해와 단합의 압초, 조국통일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도 높게 전개하여야 한다"(구국의 소리방송, '청년학생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자, 2001.2.10)

이 시기 한가지 특이점은 북한은 대남선동에 있어 반파쇼민주화투쟁을 약간 감소시킨 반면, 상대적으로 반미자주화투쟁과 반일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반미투쟁의 선두에 선 한총련'(2000. 9.4, 평양방송) 등의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민족자주'나 '민족통일전선의 형성' 등을 앞세우면서 반미자주 등 대미비난에 역점을 두는 특성을 보여 왔다.

이러한 가운데 대남 및 해외관련 소식의 보도비중이나 횡수를 다소 증가시키는 가운데 종전처럼 비방-중상일변도의 획일적인 보도행태를 벗어나 이들과의 교류-협력의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도하는 등 변화모습도 보여주었다. 그러나 남북간의 관계가 다시 소강상태에 직면한 2001년 하반기부터 간헐적으로 제1야당인

‘한나라당’을 표적으로 하는 비난방송 및 우리 내부의 각종 군사훈련 및 주한미군 등과 관련한 사안을 중심으로 한 비난 및 선동을 재개하였다.

또한 청년학생들의 국가보안법 철폐 및 주한미군 철수 등 반미투쟁을 선동하는 움직임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대표적 사례로는 ‘청년학생들은 반미투쟁의 선봉대’(2001. 10.22, 평양방송)-‘남한에서 인권문제가 해결되려면 미군철수가 이루어져야 한다’(2001. 10.17, 평양방송)-‘민족의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반통일 분자들’(2001. 10.5, 중앙방송)-‘총포소동이 대화를 그르치고 있다’(2001. 10.31, 조선중앙TV) 등이 있다. 특히 ‘2001년민족통일대축전’ 등과 관련한 우리측의 사법처리 움직임 등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검찰당국’(10.18, 평양방송)을 주체로 하여, 이를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용납못할 행위”로 비방하였다.

이밖에도 북한은 “남한내 군부와 보수우익세력이 북한에 대한 주적론을 고집하며서 남북간 대결을 고취시키고 있다”(2001. 12.5, 평양방송)고 비난하는가 하면, “남조선당국이 취한 비상조치와 군사훈련 때문에 남북관계가 엄중한 상태에 빠졌다”(2001. 12.11, 평양방송)고 주장하면서 “남조선을 비롯한 내외동포들이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에 반대하는 전민족적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다섯째, 북한은 6.15 공동선언을 거론하며, 연방제의 정당성을 선전하며, 연방제통일의 지지관철을 집중 선동한바 있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 제2항에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이를 지향하여 통일문제에 접근”하겠다고 명시했음에도, 이를 남북한이 연방제통일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장차 높은단계 연방제로 나가는데 합의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정권차원에서 제기하고 있다.

이는 6.15 공동선언의 ‘연합-연방 절충정신’을 부정시하고 일방적으로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정당화하고 선전하는 행위로 북한당국의 진의를 의심케 하는 사례이다.

또한 이 시기 중 북한의 각급 방송매체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이나 ‘조국통일3대원칙-전민족대단결 10대방침 -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등과 같은 ‘조국통일3대헌장’이나 ‘자주-평화-민족대단결’ 등 조국통일3대원칙과 관련된 통일공세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낮은단계의 연방제통일방도와 연합제안의 공통성을 살려 하나의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현실적이며 실천적인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갈 것이다...이것은 우리민족이 55년간의 통일운동 과정에서 이룩한 귀중한 성과이며 연방제 통일로 나가는 역사적인 이정표로 된다... 우리는 북과 남, 해외에서 통일논의를 활발히 벌여 온 민족의 의사를 모아 나감으로써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통일국가를 건설할 것이다”(북남 공동선언 지지환영 및 실천을 위한 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연합대회 결의문 2항, 2000. 8. 15,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북과 남은 서로의 차이점을 뒤로 미루고 민족적 공통성에 기초한 연방제방식의 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2001년 1월 1일 신년공동사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연방제통일방안은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조국통일 3대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방제통일방안은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다. 연방제통일방안은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 통일문제의 성격과 구체적인 현실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이 방안은 한 나라안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할수 있다는 독창적인 사상과 현실적가능성에 기초하고 있다 ...중략...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 따라 연방제통일방안을 실현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조선중앙통신 2000.10.12, 로동신문 2000.10.9 '연방제통일방안은 가장 정당한 현실적인 통일방안)

여섯째, 북한은 이 시기 대남비난을 약화시킨채 북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미화찬양하는김정일 우상화선전과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였다.

특히 김정일의 영도에 의해 6.15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고 주장하며, 김정일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모시고 통일하자고 집중 선동하였다. 북한의 라디오방송매체는 '남조선인민들의 반향'이나 '남녘겨레들의 목소리' 등의 고정 프로그램을 통해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 내지 '김정일 흠모'관련 보도를 이 시기중 거의 매일 3-5건씩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또한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TV' 같은 대내전용방송을 통해서도 '세계 각국 진보적 인사들의 반향' 내지 "친북해외인사"들의 방북담 등을 제목으로 하면서 북한의 사회주의체제가 다른 어떤 것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하고 우수한 체제"라는 보도를 하였는가 하면 "김정일이 조국통일의 주체 내지 구성"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음을 강력히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우리에게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계

신다...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에 따라 615 공동선언 관철투쟁에 떨쳐나선 우리민중의 의지를 꺾을 힘은 이세상에 없다”(구국의 소리방송, 2001.6.10)

“북남공동선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열화와 같은 충성심의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을 개척하시고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실현하는것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의지와 령도는 민족자주의 기치높이 민족공동으로 투쟁하고 승리를 이룩해 가는 새 시대를 안아 왔다. 온 민족은 세기가 교체되는 력사적시기에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통찰하시고 북남공동선언을 채택하시여 민족자주통일의 새 력사를 개척하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다함 없는 감사를 드리고 있다”(로동신문 시설, 2001.6.15, 조선중앙통신)

일곱째, 북한은 6.15 공동선언의 의미와 이의 이행을 강조하는 보도를 집중 보도 하였다. 북한 평양방송은 2001년 3월 27일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은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는 문제’ 라는 프로그램에서 “민족의 생사존망과 관련되어 있는 조국통일 문제는 그 주인인 우리 민족만이 다룰 권리가 있고 해결할 수 있다” 고 밝혔으며, 로동신문(2001. 3. 29)은 “온 겨레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조국통일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 있다” 고 주장한다. 북한 언론들의 논지는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족의 단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덟째, 이 시기 ‘조선중앙TV’와 같은 텔레비존방송에서는 종전과 달리 “부드럽고도 자연스러운 보도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화면에 등장하는 아나운서나 출연진들의 복장이나 헤어스타일도 다양화-현대화하여 그들 사회가 새롭게 변하고 있음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아홉째, 북한은 2001년 11월 제6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결렬된 이후, 이전과는 달리 대남관련 보도에 있어 다시 대남강경기조로 전환했다. 6차 장관급회담이 끝난 직후 북측은 대표단 성명 및 회담결과 보도(2001. 11.14, 중앙-평양방송 및 중앙TV) 등을 통해 “이번 회담이 결실없이 끝남으로써 쌍방사이의 합의사항들의 이행이 어렵게 되고 북남관계가 악화되게 될 새로운 위협이 조성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남측의 무성의와 남측수석대표의 전횡과 불순한 태도에 있음”을 강변하며 회담결렬 책임을 한국측에 전가하였다.

이후에도 북한은 노동신문 논평 ‘책임은 남측에 있다’(11.17, 평양방송) 및 노동

신문 글 ‘대결을 고취시키지 말아야 한다’(11.21)-‘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악랄한 탄압’(11.22, 중앙방송) 등을 통해 이 회담의 결렬책임이 우리측에 있음을 전가하면서, 우리측이 통일-노동운동을 탄압하면서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추종하고 있다는 비난 논조를 계속하고 보도한바 있다. 특히 「조평통」 서기국의 보도(2001. 11.25, 중앙-평양방송)를 통해서도 이 회담결렬의 주요 원인으로 우리측 수석대표인 “홍순영 통일부장관이 불순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반복하면서 대남비방선동 공세를 강화한바 있다.

### 3.1.3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2003.2-현재)

북한은 새로 출범한 노무현정부에 대해 기본적으로 6.15 공동선언 이후 김대중정부에게 보여준 우호적 대남인식을 노무현정부에도 지속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노무현정부가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여 ‘평화번영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또한 현정부가 우호적인 대북시각을 표방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북한은 이 시기 6.15 공동선언 이후 구사해온 ‘대남은전-대남강경의 배합전술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강경노선의 사례는 잦은 서해상 NLL침범, 휴전선내 북한의 아군초소에 대한 총격, 핵문제와 관련한 강경 행보 등을 들수 있다.

이의 연장선에서 이시기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보도 논조도 비교적 유화적이거나 여전히 대남강경논조를 병행 보도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노무현정부에 대한 북한의 이중적인 대남비방 태도이다. 북한은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노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방중상은 공식 언론매체를 통해서 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이 6.15 공동선언 이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여준 우호적 시각을 노무현대통령에게도 지속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한국정부를 ‘남조선당국’, ‘남조선 집권층’이라 지칭하며 특정사안을 문제삼아 여전히 비방중상을 지속시키고 있다. 이는 언뜻보면 북한당국이 노무현대통령 개인과 한국정부를 분리하여 대하고 있는 것 보이나, 기본적으로 한국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남조선당국이 민족공조로 외세의 침략위험을 받고 있는 동족을 도와 나서지는

못할망정 외세를 편들면서 정세를 전쟁전야의 위기사태로까지 몰아 가고 있는것은 동족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저주 받을 민족반역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의 반공화국 침략책동에 공조해 나섬으로써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발전에 엄청난 장애를 조성한 책임에서 벗어 날수 없다...미제가 핵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끝끝내 외면하고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린다면 우리는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선군의 위력으로 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안길것이며 전쟁도발자들은 무주고혼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우리의 경고를 똑바로 새겨 듣고 위험한 군사적도발소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로동신문, 2003년 3월 24일자 논평, ‘남조선 초경계태세는 사대매국적 망동’ 중)

최근 남조선 군당국이 반민족적 반통일적 주적론을 또다시 들고 나와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 올해 초 남조선 국방부는 주적 불변론을 들고 나오면서 남조선 인민들의 만족공조 지향에 역행하여 당치도 않게 ... 주적개념을 유지하겠다고 공언해 나섰습니다 ... 제반 사실은 남조선당국이 한나라당과 같은 반민족적 세력과 작당하여 주적론을 철회할 의사가 없으며 북남관계를 대결로 몰아 가려는 범죄적 기도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평양방송, 2003.8.3 논평 ‘주적규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中)

둘째, 변함없는 북한의 대남선동 공세이다. 북한은 6·15공동선언의 이행,실천이라는 명분 아래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분쇄, 북미불가침조약 체결, 주한미군 철수, 반미반전, 국보법 철폐, 주적론 폐지, 한총련-범민련 합법화, 반통일우익세력 척결, 외세공세 배격-민족공조 실현” 등 상투적인 대남선동공세를 전개하며 국내 친북좌파권의 투쟁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대남전용방송인 <평양방송>의 김일성대학 강좌등을 통해 남조혁명을 선동하는 혁명학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 ● 국가보안법 철폐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파쇼악법으로 겨레의 지탄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국가남조선의 《보안법》이 조작된지 장장 55년이 된다... 《보안법》은 남조선인민들의 애국적이며 민주주의적인 활동을 탄압하고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파쇼적이며 반통일적인 악법이다.오늘 우리 민족은 민족끼리 화해하고 협력해나가는 민족공조시대,자주통일시대에 살고있다... 동족사이의 반목과 대결의 산물인 《보안법》은 이제 낡은 시대의 유물로 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남조선에서는 《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 파쇼몽둥이에 의해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통일애국투쟁이 탄압당하는 사태가 빚어지고있다. 오늘도 《한총련》 등 통일운동단체가 《리적단체》의 울가미를 벗지 못한채 《보안법》의 칼도마우에 올라있고 통일민주세력이 계속 《보안법》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동족을 《적》으로 규정한 악법을 그대로 두고 《화해》와 《협력, 교류》를 떠드는것은 민족에 대한 우롱으로, 기만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더우기 그 무슨 《개혁》과 《민주》를 표방하는 《정권》이 아직도 파쇼독재의 유물을



지레대로 삼아 권력을 유지하려한다면 본질상 그 《정권》의 성격이 과거의 파쇼독재와 다른것이 무엇이겠는가... 온 민족은 전 민족적인 과감한 투쟁으로 《보안법》을 당장 철폐시켜 민족안에서 파쇼악법의 존재를 영영 끝장내야 할것이다”(‘납고 반동적인 <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2003.12.1)

### ● 한총련 합법화

또한 북한이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구국의 소리방송(일명 민민전방송) 등을 동원하여, 매번 한총련의 활동을 정당화하며 독려하고 한총련의 합법화를 주장하면서 각종 투쟁을 선동하고 있는 것은 한총련과 북한과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북한은 2003년 4월 25일 <로동신문> 논설 “한총련의 위업은 정당하다”를 통해 한총련 결성 10주년을 축하하고 한총련 활동을 정당시하며 고무한 바 있다.

“한총련은 결성된 첫말부터 오늘까지 자주,민주,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왔다. 그 나날에 남조선의 사회적 진보와 조국통일운동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중략... 한총련의 자랑찬 투쟁로정은 남조선인민들의 애국투쟁사에서 자울수 없는 자욱을 남겼다 ...중략...오늘 한총련 앞에는 조직을 더욱 강화하고 반미반전투쟁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전환을 이룩해야할 중대한 과제가 나서고 있다....중략... 한총련은 조직의 합법화를 실행하고 미제의 핵도발책동을 저지 파탄시키며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어나가고 있다 ...중략... 한총련의 위업은 정당하며 그것은 온민족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북한 로동신문, 2003년 4월 2일자 논설, 한총련의 위업은 정당하다)

### ● 주한미군 철수 등 반미투쟁

“오늘 우리민중은 한반도에서 민족멸살을 자초할 북침핵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미제침략군에 대한 치솟는 분격을 안고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 50주년을 맞고 있다....예속적이고 굴욕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철폐하고 가증스러운 양키침략군을 몰아내는 것은 우리민중의 한결같은 의지이고 확고한 결의이다 미국은 ... 시대착오적인 대북핵전쟁책동을 걷어치우고 살인병기들과 침략군을 지체없이 철수해야 한다”(구국의 소리방송, 2003.9.30)

셋째, 북한은 통일방안을 집약한 조국통일 3대헌장 즉 ‘조국통일3대원칙,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지지관철을 주장하며 연방제 통일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이시기 주된 대남선동공세의 내용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마련해 주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조국통일의 위대한 3대헌장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장 세련되고 탁월한 령도로

조국통일위업을 승리로 이끌어 오시었다”(노동신문, 2003.4.4 논설, 조선중앙통신)

넷째, 북한핵문제와 관련한 대미선동을 강화하며, 이에 대항한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있지도 않는 핵문제를 제기하며 북한을 고립 압살시키려고 핵전쟁책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미국의 핵전쟁책동 분쇄”를 주장하고 이의 해결책으로 “북미불가침조약 체결 및 민족공조 강화, 우리민족끼리”를 연일 선동하고 있다. 여기의 민족공조와 우리민족끼리 주장은 통일전선차원의 주장이다.

“오늘 미제는 우리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핵공갈 책동을 그 어느대보다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습니다. 미제집권세력은 우리공화국을 제멋대로 핵위협국으로 규정하고 함부로 헐뜯고 있으며 우리에게 군사적 압력을 가하겠다고 으러매고 있습니다 ...중략... 미제의 반공화국 핵공갈책동은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우리군대와 인민은 절대로 미제의 핵공갈에 위압되거나 굴복하지 않을것입니다. 미제는 승산없는 반공화국 핵공갈책동을 당장 걸어 치워야 합니다”(조선중앙방송, 노골화되는 미제의 핵공갈책동, 2003.9.8)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주체의 선군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불패의 당이며 선군정치방식으로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는 부강조국건설의 향도적력량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조선민족의 자주통일열기를 불 태워 준 고무적기치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민족사의 흐름을 반미자주통일어로 확고히 전환시킨 힘있는 추동력이다. 우리 민족이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위한 투쟁과정에 경이적인 사변들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철의 애국의지와 탁월한 정치실력의 빛나는 결실이다. 온 겨레가 민족의 운명과 전도를 걸고 6.15공동선언을 변함없이 관철해 나갈 때 우리의 통일위업은 자기 발전의 합법칙적로정을 따라 전진할 수 있다. 전체 조선민족은 결사의 각오밑에 미국의 핵전쟁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서야 한다”(노동신문, 2003.6.15 사설, 자주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자)

다섯째, 김정일을 미화찬양하고,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 및 북한사회주의체제를 선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주 내용은 김정일의 지도력 및 국방위원장 추대찬양, 주체사상 선전, 북한 사회상 선전, 선군정치노선 및 강성대국 건설 찬양 등으로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고취하려는 것이다.

### ● 김일성부자 미화찬양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는 천리해안의 예지와 비범한 선견지명으로 혁명승리의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신 탁월한 사상리론가, 전략가의 력사이며 무비의

담력과 의지로 부닥치는 난관을 맞받아 뚫고 오신 강철의 령장, 제일배짱가의 력사이며 인민과 혼연일체가 되어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해 오신 걸출한 인민적수령의 력사이다. 특출한 정치실력과 뛰어난 령도적풍모를 지니시고 동서고금 그 어느 위인에게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불멸의 력사를 창조하신 것으로 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인류의 영원한 태양으로 끝 없는 칭송을 받고 계신다...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공화국의 튼성번영과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 나아가자”(조선중앙통신, 2003.4.15)

### ● 선군노선 선전

“선군정치방식은 우리 당이 처음으로 내놓은 사회주의정치방식이며 제국주의가 있는 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인 정치방식이다.국방건설도,경제건설도,문화건설도,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도 선군정치방식으로 해결해나가는 여기에 우리 당령도의 현명성이 있고 근본특징이 있다. 우리 당의 독창적인 선군정치방식에 의하여 인민군대가 주력군이 되고 군대와 인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변혁을 이룩해나가는 창조와 건설의 새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독창적인 선군정치방식이 있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가 있는 한 강성대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는 반드시 점령될 것이며 우리 조국은 영원히 튼성번영할 것이다”(조선중앙통신, 20003.10.10).

### ● 북한체제의 우월성 찬양

“저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평양산원에 20여일간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정말 얼마나 고마운 제도인가 우리당의 인간사랑의 화원에서 활짝 피어난 우리시대의 인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중략... 정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이며 장군님의 품속은 우리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도 사는 삶의 요람 어머니 품입니다”(평양방송,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입니다, 2003.8.2)

끝으로, 북한은 대남언론매체를 통해 변함없는 사회주의 승리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물론 북한은 ‘온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명시한 조선로동당 규약을 아직까지 수정하지 않은 채 견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 각종 담화문과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식 사회주의 승리의 필연성과 주체혁명 위업 완성’을 통한 강성대국의 건설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며 공산주의혁명 승리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이 변하지 않은채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해 준다.

### ● 공산주의 혁명 노선 승리 표명

“위대한 선군의 길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무궁번영할 조국의 미래를 확신성 있

게 내다보고 있다. 전체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선군정치의 조국에서 살며 혁명하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 따라 공화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조국통일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중략...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투쟁목표이며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한 의지이다”(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2003.9.9 노동신문 사설)

### 3.2 북한 대남보도의 양상 및 특징

김대중정부 출범이후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방송, 통신,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대남보도의 양상 및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이후 초기에는 이전의 적대적인 대남보도 논조를 지양하고, 유화적인 대남논조를 유지했으나 2001년 11월 6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결렬된 이후 다시 적대적인 대남논조로 전환하는 등 현재까지 적대-유화성향이 배합된 보도성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한반도의 주체사상화와 공산화혁명 달성’을 위한 대남혁명여건 조성이라는 언론매체를 통한 대남선동보도의 목적이 6.15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둘째, 북한이 대남보도의 기조를 유지하며 남북관계의 상황변화에 따라 대남비방의 수위와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채택을 기점으로 하여 종전의 일방적이고 상투적인 비방 일변도의 대남관련 보도논조에서 벗어나, 비교적 ‘사실보도’ 위주의 보도성향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2001년도에 들어 6.15공동선언의 이행-실천과 관련한 남북당국간의 대화가 교착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특히 2001년 제6차 남북장관급 회담(2001.11.9-14, 금강산)이 아무런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결렬되자 그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가운데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의 대남비방을 예년수준으로 재개하였다.

그러나 2002년 4월 3일 임동원특사의 방북으로 재개선된 남북관계가 6월 29일 북한해군의 선제공격으로 인한 서해교전사태로 다시 악화되었다가, 동년 8월 제7차 장관급 회담의 서울개최로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으나 최근 북한의 핵개발문제로 향후 진로를 예상하기 어두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남북관계가 ‘적대-유화-냉각-유화노선’을 거듭하는 상황<sup>25)</sup>에 따라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보도 논조도

강경-온건을 거듭하면서 그 강도와 수준이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째,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보도의 핵심 주제는 '6.15 공동선언의 이행 및 실천'으로 집약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을 이행 실천한다는 명분 하에 대남선동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며,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동노선인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지지 확산, 보수우익세력 척결" 등의 주장이 대부분 '6.15 선언 이행'의 기치 하에 전개되고 있다.

넷째,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관련 보도의 주제와 내용은 각 시기별로 비중을 달리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그 주제가 정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① 한국정부에 대한 비방중상 ② 북한정권의 대남노선인 자주, 민주, 통일에 입각한 반미자주화투쟁, 반파쇼민주화투쟁, 조국통일투쟁: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해체, 통일인사 석방,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적론 철회, 외세공조 배격과 민족공조 실현, 보수우익반통일세력 척결 등 ③ 북한의 위장된 평화통일노선 선전: 조국통일 3대헌장(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 3원칙,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과 김정일의 '민족대단결 5대방침'(일명 4.18서한) ④ 전쟁발발 위협공세 ⑤ 통일전선차원의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 선동 ⑥ 김일성-김정일, 주체사상 및 북한사회주의체제 미화찬양, 선군노선 및 강성대국 건설 찬양 등이다.

다섯째, 북한이 6.15공동선언 이후 언론매체를 통해 대남관련 보도를 국내 방송을 인용하며 신속히 보도하는 형식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즉 북한은 한국관련 사안을 보도할시 직접 KBS, MBC, SBS, 기독교방송, 연합뉴스 등 우리 내부와 AP통신 등 해외 언론매체들의 보도내용을 인용하여 매우 신속하게 보도하는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남북한사이에 이루어진 회담의 경우, 종래에는 한동안 시차를 두어 그들 체제유지 및 대내홍보에 도움이 되는 것만을 선별하여 간략히 보도해 왔으나,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등 기간중 이루어진 각급 남북회담의 경우 회담의 진행상황을 라디오 및 TV 등 방송매체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고도 자세하게 보도하는 변화모습을 보여주었다.

실제 사례를 들면,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의 경우 북한 립동옥 「조평통」 부위원장의 방송통지문(2001.9.2, 평양방송 및 중앙TV) 내용을 전문 그대로 보도하였는가 하

---

25) 유동열, "김대중정부출범 이후 북한의 대남전략 평가", 군사논단(서울: 한국군사학회, 2002).

면, 이후 전개된 과정 및 회담개최사실을 과거와 달리 비교적 신속하고도 소상하게 보도하였다.

여섯째, 북한이 대남선전선동 공세의 수단을 대남방송에만 의존하지 않고, 1998년 이후 북한의 대남방송 내용을 조선중앙통신(KCNA), 구국전선(한민전의 기관지), 범민련 등의 인터넷사이트 등 사이버공간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고 있다는 점이다.<sup>26)</sup>

북한은 기존의 대남선동수단인 ▷방송매체: 평양방송, 구국의 소리방송 등 ▷기구를 이용한 전단지, 살포 ▷전방지역 확성기방송 ▷국내 인사들에 대한 편지 전달 공세 등 외에도,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대남선동공세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sup>27)</sup> 현재 북한은 일본, 독일, 캐나다 등에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조선중앙통신(KCNA) 홈페이지 외에 '구국전선'(한민전 홈페이지) 등 해외친북단체 명의로 자체 홈페이지를 20여개 망 구축해 놓고 대남선동선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는 컴퓨터와 모뎀만 있으면 누구나 자유롭게 친북 홈페이지에 접속,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고 다운(down)받을 수 있다는 점과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념해야 한다.

일곱째, 북한은 그간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을 통해 하달하던 간첩지령방송인 난수표방송인(A3통신)을 2000년 11월 이후 중단한 대신, 편지낭독 형식의 변형된 간첩지령방송을 대남방송을 통해 여전히 지속시키고 있는 점이다.<sup>28)</sup>

---

26) 특히 국내 친북좌익권에서는 이를 받아 북한 「구국의 소리방송」 녹취록인 '인터넷 구국의 소리' 등의 명의로 국내 재야단체 인터넷 자료게시판에 무차별적으로 정기게재하며 북한의 대남 방송문을 전파하고 있다.

27) 북한 및 좌익권의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선동 실상에 대해서는 유동열, "적화된 인터넷매체를 고발한다" 한국발전리뷰 2003년 6월호(서울: 한국발전연구원, 2003.112-118쪽, 유동열, "국가안보전선의 사각지대, 인터넷과 PC통신", 자유공론 1997년 7월호(서울: 자유공론사, 1997) 87-94쪽 참조.

28) 북한은 난수표방송을 중단한 대신 타 방식의 간첩통신을 계속 행하고 있어, 대남간첩공작을 정교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북한이 ▷ 변형된 A3지령(편지낭독 형식) 하달 ▷ 기존 무전기의 통신 주파수대가 아닌, 타 주파수로 통신 ▷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간첩통신 ▷ 합법적 남북교류를 통한 지령수수 등인데, 6.15 공동선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남공작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도표 6> 해외친북 인터넷사이트 현황

### ■ 일 본

- 구국전선(한민전 기관지): [www.ndfsk.dyndns.org](http://www.ndfsk.dyndns.org)
- 민족시보(한통련 기관지): [www.korea-htr.com](http://www.korea-htr.com)
- 범민련(공동사무국): [www.big.or.jp](http://www.big.or.jp)
- 조선중앙통신: [www.knca.co.jp](http://www.knca.co.jp)
- 조총련: [www.chongryon.com](http://www.chongryon.com)
- 조선신보(조총련 기관지): [www.korea-np.co.jp](http://www.korea-np.co.jp)
- 현해탄소식: [www.2marinet.or.jp](http://www.2marinet.or.jp)
- 평통협(조국평화통일협회): [www.jpth.net](http://www.jpth.net)
- 조선의 노래: [www.dprkoreamusic.com](http://www.dprkoreamusic.com)
- KYN: [www.kyn.ne.jp](http://www.kyn.ne.jp)
- 코리아북센터: [www.krbook.net](http://www.krbook.net)
- 백두넷: [www.baekdoonet.has.it](http://www.baekdoonet.has.it)

### ■ 미국

- 재미한국청년연합 : [www.ykuusa.org](http://www.ykuusa.org)
- 금강산국제그룹: [www.dpr-korea.com](http://www.dpr-korea.com)
- 민족통신: [www.minjok.com](http://www.minjok.com)
- 진보코리아21 (미국 자주연합 [www.chaju.org](http://www.chaju.org))
- 미주동포전국협회: [www.naka.org](http://www.naka.org)
- 재미동포전국연합회: [www.kancc.org](http://www.kancc.org)

### ■ 기타

- 조선인포뱅크(중국): [www.dprkorea.com](http://www.dprkorea.com)
- 자주성(호주): [www.geocities.com](http://www.geocities.com)
- 우리민족끼리(중국): [www.uriminzokkiri.com](http://www.uriminzokkiri.com)

여덟째, 북한이 국내 친북좌익권을 체계적으로 의식화시키기 위해 방송하는 ‘김일성방송대학 강좌’<sup>29)</sup>가 평양방송 등을 통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일성대학 방송강좌의 내용이 김일성혁명역사, 김정일혁명역사, 김일성로작 해설, 김정일로작 해설, 주체사상강좌,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은 북한이 6.15공동선언 이후에도 대남적화혁명전략을 지속적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해준다.

아홉째, 북한은 언론매체를 통한 대남선동보도시 국내 친북좌익권과 연대하여 공동성명서, 결의문 발표 등 남북한 연대를 통한 선전선동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나 범청학련(조국통일범청년학생연합)을 내세워 범민련 남측본부나 한총련과 같은 친북좌익권들과 공동명명의 성명서, 결의문 등을 발표하는 형식 이외에도, 6.15 공동선언 이후에는 합법적인 남북교류를 활용하여 각 분야별 행사 후에 공동결의문 등을 발표하며 북한의 대남노선을 선전하고 정당화하는 대남공세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sup>30)</sup> 이러한 방식은 대남성명을 북한단독으로 발표하는 경우보다 국내외에 선전내용의 신뢰성과 호소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sup>31)</sup>

열째,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은 남북한에서 개최된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등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실황을 중계하거나 보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의 사례는 2002년 남북통일축구, 부사아시안게임, 한일월드컵과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평양모란봉 노래자랑 등을 조선중앙TV를 통해 녹화 중계하였다. 이는 부분적이지만 변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29) 김일성방송대학은 대외적으로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이나 일반 주민에게 대학교육을 실시하는 방신통신대학이라 소개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평양방송 등 대남방송을 통해 김일성부자의 이상화나 주체사상, 남조선혁명론 등에 대한 강의록을 전문으로 방송하는 대외, 대남선전교육기관이다. 이 대학은 1962년 2월 「맑스레닌주의방송대학」으로 설립되었다가, 1973년 4월 김일성의 61회 생일기념으로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되었다. 1999년 2월 18일 제37기 졸업식을 한 것으로 평양방송(1999. 2.28일자)에 보도된바 있다. 현재 김일성방송대학 학장은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이 대학은 원래 대남사업부서에서 관장하였으나 1985년경 중앙방송위원회 직속으로 이관되었다가, 1988년경 다시 통일전선부로 원복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송시간은 주로 오전5시-6시30분, 오후5시-6시30분이다. 평양방송의 김일성방송대학 37기 졸업식 보도에 의하면, 김일성노작 100강의, 김정일 노작 230, 김일성혁명역사 140, 김정일혁명역사 260, 김일성혁명사상(주체사상) 300 강의 등 기본 5개 과목과 특강 등 총 1,200회 강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0) 범민련과 범청학련, 한총련의 활동과 실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동열, 한국좌익운동의 역사와 현실(서울: 다나, 1996), 100-141쪽 참조.

31) 유동열, “북한 및 좌익권의 대남선동과 대응론”, 공안연구(서울: 공안문제연구소, 2003), 140-141면



## 4. 북한 대남선동보도의 대응론

### 4.1 북한 대남보도에 대한 대응기조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선동보도에 대한 대응기조를 제시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관련 선동보도에 대한 철저한 자료수집 및 보관이 요구된다. 최소한 북한의 5대 언론매체 즉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등에 대해서는 일자별, 내용별, 기능별로 분류된 통합적인 자료수집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북한의 대남선동공세에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것이 본 보고서 연구의 주된 한계였다.

둘째, 북한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대남관련 사안을 신속히 적절히 분석하는 배분 매카니즘의 확보가 요구된다. 보도된 내용을 사안별로 중요도 별로 분류하여 신속하게 그 내용과 의미를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1차 모니터요원이 보도내용의 경중을 가려 그 분야 전문가그룹에게 전달배분하는 체계가 계열화되어야 한다.

북한이 보도한 주요사안이 실시간으로 대북정책의 최고결정가 그룹에게 분석, 보고되는 체계야말로, 대북정책 수립 및 대북대응역량을 즉응화하고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인 것이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모의실험(시뮬레이션)도 필요하다.

셋째, 북한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대남선동사안에 대해 분야별, 내용별 대응논리 강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이미 정례화되어 있는 북한의 대남선동 노선에 대한 각 사안별 대응논리를 전문가그룹의 도움을 받아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수시로 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제기할 제반 대남공세 사항을 미리 예측하는 이에 대응하는 사전대비가 중요하다.

넷째, 북한이 언론매체를 통해 대남관련 보도를 발표했을시, 관련부서에서는 사전 준비된 대응논리를 발표하여 북한의 대남선동의 확산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실행되어야 한다. 실천하지 않는 자료는 죽은 자료일 뿐이다. 이것이 북한이 무차별적으로 행하는 대남선동공세에 대해 이의 영향력을 최소화하여 대응하는 기본지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언론매체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대남선동의 핵심사안을 선별하여 대응론을 구축해 보면 다음과 같다.

## 4.2 북한 대남선동노선에 대한 주요 사안별 대응론

### 4.2.1 북한핵개발

북한은 핵개발 재개문제와 관련하여 핵무기는 미국 등과 같은 강대국만 보유하고, 북한과 같은 약소국이 개발하면 안되는가 하면서 이른바 핵자주권을 주장하고 그들의 핵개발과 핵보유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의 허구성을 지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사회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전관리협정, NPT(핵확산금지조약), CTBT(전면 핵실험금지조약) 등의 협약을 맺고 핵무기 확산을 막고 있는 것은 핵전쟁의 폐해와 재앙을 막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여 인류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인 것이지 약소국의 핵보유를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특히 북한은 이를 준수하겠다고 자진해서 IAEA, NPT 등에 가입, 서명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개발을 재개하는 것은 북한이 가입, 서명한 핵관련 국제협약 즉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1991.12.31 서명), NPT(1985.12.12 가입), IAEA의 핵안전협정(1992.1.30 서명),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문(1994.10.21 서명)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지 핵자주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둘째,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총 9개국으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그러나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강대국이 아니며, 일본이나 독일 등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국제사회에서 국가자존을 유지하지 못하고 약소국이라 대접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핵무기를 개발하고, 관리하는데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어 (20t급 원자폭탄 제조 20억달러 소요), 국민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북한의 경제역량이나 심각한 식량난을 고려할 때, 구태어 현상태에서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면서 이를 보유해야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북한은 핵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경제회생으로 돌려 심각한 식량난 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핵자주권을 들먹이며 북한의 핵개발을 찬성하는 시각은 매우 무책임한 인식임을 지적한다.

네째,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통일이 되면 우리것이 되며 우리민족이 강대국이

되는데 왜 북한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는가? 라는 주장은 매우 위험한 논리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통일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염원하는 자유민주통일이 아니라 적화통일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자기 주민들의 2끼 밥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굶주리게 하면서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통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의 목적인 적화통일을 위한 것임을 상기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후 통일을 찬성하는 것은 결국 적화통일을 하자는 주장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신봉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적화통일을 정당화하는 이적행위를 행하는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해야하는 당위성은 북한의 핵개발 저의가 ① 대남적화혁명의 군사적 우위수단 확보(적화통일용) ② 북한정권의 사회주의 강성대국 선전 및 억압적 사회주의독재체제 유지(체제유지 및 공갈협박용) 등 반민족성과 반민주성으로 집약되기 때문이다.

여섯째, 북한 핵시설에 대한 안전성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1986년 4월 구 소련(우크라이나공화국)의 체르노빌 핵발전소 방사능폭발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당시 현장에서 30여명이 즉사하고 이후 방사능 휴유증으로 무려 7000여명 사망했으며, 이후 70여만명 원자병 등으로 고통을 받으며 핵재앙을 경험한바 있다. 바로 북한의 영변핵기지의 안전상태가 체르노빌 수준으로, 만약 북한 핵시설의 안전상태가 잘못되어 폭발되거나 방사능이 유출된다면 우리민족은 엄청난 재앙과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핵시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하에서 전문그룹의 핵안전관리사찰을 지속적으로 받아 점검해야 방사능 누출 등 민족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는 북한의 행태는 민족재앙도 불사하겠다는 반민족적 반문명적 행태인 것이다.

일곱째, 우리정부와 국제사회는 1994년 제네바합의를 통해 북한이 핵개발을 중지하는 조건으로 KEDO를 구성하여 약 46억달러가 소요되는 경수로 발전소 2기 건설을 약간 일정이 지연되고 있지만 추진중에 있다. 특히 우리는 국내의 어려운 경제난에 불구하고 경수로발전소 건설비용중 70%에 달하는 32억 2000만 달러(약 4조원)를 우리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며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재개하면 한반도 및 국제사회를 긴장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국제협약 위반인 것이다.

여덟째, 북한의 핵보유는 또한 즉각 일본의 핵무장 등 군사재무장 명분을 제공하

여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평화의 위협요소로 부각되는 것이다. 동북아를 핵전쟁의 위협으로 몰아 넣어 국제평화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부각되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당국이 북한의 핵과 선군노선이 북한 뿐만 아니라 남한민족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 강변하며 외세에 대항한 민족공조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낙관적 시각이 광범위 유포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인 것이다. 우리는 북한핵개발 문제의 위험성과 반민족성, 반평화-반문명성을 냉철히 인식하고 대처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 4.2.2 주한미군 철수

북한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민족자주권을 확보하고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한에서 먼저 식민지 무장력인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배경은 한국사회가 자주독립국가가가 아니라 미국(제국주의로 규정)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식민지국가라고 규정하는 그릇된 대남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근본적인 이유 즉 저의는 남한혁명의 가장 큰 장애물인 '세계최강의 미군'(북한은 미군과의 전쟁에서 도저히 승산이 없음을 인지)을 남한 땅에서 철수시켜 군사적 공백상태를 유도하고 이를 이용하여 무력으로 적화통일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남한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여기의 민족해방이란 바로 외세인 미제를 축출하고 남한민족을 해방시킨다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도하는 것이다. 이에 입각하여 북한은 대남투쟁의 3대 목표중 반미자주화투쟁을 남한혁명의 선결투쟁과제로 설정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선동하고 있다.<sup>32)</sup>

주한미군 철수론의 부당성을 지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미군의 남한 강점을 내세우며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볼 때 남한 땅에 미군을 불러들인 것은 우리가 아닌 바로 북한이었음을 지적한다. 해방직후인 1945년 9월 6일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1949년 6월 29일 군사고문단을 제외하고 전면 철수를 완료한 바 있다. 북한은 이러한 군사적 공백을 틈타 1950년 6. 25불법 남침을 자행함으로써 다시 미군을 이땅에 불러들였던 것이다. 미군의 재진주를 만든 장본인인 북한이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나 사과도 없이 주한미군의

32)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동렬, 북한의 대남전략, 376-384쪽, 한국좌익운동의 역사와 현실(서울: 다나, 1996), 277-285쪽 참조.

철수를 주장하는 논리는 부당하다고 하겠다.

둘째, 우리정부가 북한의 대남적화야욕으로부터 우리체제를 보호,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잠정적으로 주둔시킨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주권에 대한 침해인 것이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쟁방지의 핵심 억지력(deterrence)으로 우리국군의 힘으로 완벽한 자주국방력을 확보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주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한국과 미국이 합법적인 주권행사로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1953)에 근거하여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제3자인 북한이 이에 개입하여 주한미군 철수 운운 하는 것은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행위인 것이다.

셋째, 북한이 '제2경제'를 독립운영하며 실질적으로 전체 GNP의 50%이상을 군사비에 투자하여 대남우위의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그것도 무력적 화혁명의 의지를 포기하고 있지 않는 현실에서, 한국군의 전력을 보완할 주한미군의 주둔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넷째,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작전지휘권이 미국에 예속되어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했다는 주장은 억지논리이다. 한국군의 통수권은 분명히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평시 작전권도 1994년 12월 한국군에게 이양된바 있다. 다만 전시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아닌 '한미연합사령부'에 부여한 상태이다. 따라서 북한의 전쟁위협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한미 공동방위기구인 '한미연합사'에 귀속된 전시작전통제권을 놓고 미국에 군사적으로 예속되어 있다는 논리는 부당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북한이 진정으로 주한미군을 이땅에서 철수시키려면 먼저 그들이 대남무력적화혁명을 완전히 포기하여 한반도에 평화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며, 정규병력인 117만의 인민군부터 감축해야 할 것이다.

#### 4.2.3 국가보안법 철폐

북한은 국가보안법이 민주애국인사를 탄압하여 독재정권유지에 도구로 악용하고 있는 반민주악법이며 북한을 적(敵)으로 규정하여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反통일악법이라 규정하고 이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선행하는 실제 이유는 남한사회주의혁명을 규제, 제한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함으로써 마음놓고 친북이적활동과 사회주의투쟁을 전개하여 남한혁명을 보다 용이하게 달성하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철폐의 부당성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국가보안법은 우리선혈들이 피땀흘려 가꾸어 온 자유민주체제를 북한 등 체제전복세력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반국가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북한 및 좌익세력들의 반국가활동을 막으려는 국가보안법은 체제수호법으로 존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 형법과의 형평성과 상호주의로 볼 때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 형법에는 북한체제에 반대하는 소위 반혁명분자를 엄단하기 위한 반국가범죄(제44조-제55조)가 명시되어 있는데, 총 12개 조항의 반혁명죄는 우리의 국가보안법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가혹한 극형(대부분 사형과 전재산 몰수 등)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반문명적인 법이다. 이러한 북한 형법의 개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채 국가보안법만을 철폐하라는 것은 상호주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세째, 세계각국의 안보관련 입법례를 보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존속은 정당하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다수 국가에서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 형법 외에 별도로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특별법을 채택하고 있는바, 특히 우리와 같이 남북이 분단되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제수호법인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실제 미국은 연방헌법의 간첩죄(792조, 799조), 정부전복죄(2381-2391조) 외에 전복활동규제법(Act of control of Subversive Activities), 공산주의자 규제법(Act of Communist Control), 국내안전법(Homeland Security Act)<sup>33)</sup>일본은 파괴활동방지법, 대만은 국가안전법, 통일독일의 헌법보호법, 단체법 등을 시행하고 있다.

네째, 북한이 남한혁명의 제도적 반혁명역량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 간첩활동과 사회주의활동을 펼쳐 남한혁명을 성사를 용이하게 하려는 술책을 알면서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수 없는 것이다.

다섯째, 1990년대 이후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대남공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의 존속은 꼭 필요하다. 95년 충남부여 출몰 김동식 간첩사건, 96년 국적위장 간수 간첩사건, 강릉잠수함 침투사건, 97년 최정남 부부간첩사건, 98년 동해침투 북한잠수정사건, 여수해안침투 반잠수정격침사건, 99년 서해교전사태,

---

33) 국내안전법은 2002년 9.11테러를 계기로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매우 강력한 제재수단을 확보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민족민주혁명당 간첩사건, 2002년 서해교전 사태 등에서 보듯이 북한의 대남간첩공작은 나날히 정교화되고 있는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존속이 필수적이다.

여섯째, 국가보안법은 간첩, 친북용공주의세력, 반국가사범 등 극히 일부에만 적용되는 법으로, 선량한 대다수 국민들은 이법에 의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며, 불편하지도 않다. 일부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이 극소수에 불과하고 실제 이법의 효용성이 의문시되는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형법상 살인죄가 존재하나 실제 살인사건이 별로 발생되고 있지 않고 국민들의 준법 의식이 높아졌으니 유명무실한 조항을 삭제해야한다는 주장과 다름없는 위험한 논리이다. 우리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낙하산의 보조(예비) 낙하산과 같은 최후의 체제 안전장치임을 재강조 한다.

일곱째, 북한이나 좌익권의 선동공세처럼 ‘서슬퍼런 호랑이 법’이라는 국가보안법이 아직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학가에 주체사상이 범람하고 친북용공, 폭력투쟁이 난무하는데, 이법마저 없다면 우리사회의 혼란과 체제위협은 불보듯 뻔한 것이다. 그나마 국가보안법이라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및 좌익권의 공세에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국가보안법은 결코 건전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 아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제37조 2항에서 유보조항을 두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통치 이념이자 기본구조인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사상과 양심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지구상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의 국체를 위협하거나 전복하려는 사상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사상을 갖지 않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은 자기 사상이나 양심의 자유를 전혀 침해받지 않는 것이다. 국내의 친북 좌익세력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양심수로 보고 있으나, 이들은 본연의 의미의 양심수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반국가사범에 불과하다. 만약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이념을 부정하고 북한에 동조하여 반국가활동을 전개한 자들이 자신의 활동을 정치적 양심과 신념에 근거한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양심수라고 우기면, 살

인죄나 흉악범죄를 저질러 범죄자들이 그들의 행위를 양심과 신념에 의해서 행한 행위라고 강변하며 자기도 양심수라고 칭한다면 과연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되묻고 싶다.

친북 좌익세력들이 진정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존중한다면 국가보안법 철폐나 존재하지도 않는 양심수 석방을 외칠 것이 아니라, 북한 김정일이 행하는 전대미문의 철권독재통치 하에서 기본권조차 행사 못하고 신음하는 북한 주민의 양심과 사상을 보장하라고 북한 정권에 비판의 화살을 돌려야 할 것이다.

아홉째,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남한과 북한이 화해협력의 장으로 나와 대화하는 남북관계의 변화상을 고려할 때, 북한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간주하는 국가보안법은 존립근거를 상실했으며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6.15 공동선언으로 남북간의 관계가 일부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서해교전사태, 의도적인 NLL침범, 여전한 대남선동공세 및 유화-교착-강경-유화국면을 거듭하는 남북당국자회담 등의 행태에서 보듯이 북한이 대남적화혁명전략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이 대남적화혁명전략노선의 본질적인 변화가 수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전술적인 유화조치에 현혹되어 국가보안법의 무용론, 철폐론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인 것이다.

최근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다음의 '대법원의 판결문'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데, 판결문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비록 남북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 결과로써 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하더라도 ... 중략... 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이 여전히 우리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지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5.15 판결, 2003.1.24 선고 2002도 2306 판결 등)

열째, 국가보안법은 범목적상 남북이 평화통일을 이룬후에도 존속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의 제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국가, 단체 및 세력을 규제하는데 있



기 때문이다. 남북이 통일되어 북한의 대남위협이 제거 되었다 할지라도 국내외적으로 존재하는 체제위협에 세력에 대해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 4.2.4 국정원 등 대공수사기관 해체

북한은 대공수사기관인 국정원, 기무사, 경찰 보안수사대가 파쇼정권의 유지를 위해 애국인사를 탄압하고 용공조작을 일삼는 반민주 폭압기관으로 전략했다며 이들 기관의 해체를 선동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소위 남한혁명의 걸림돌(북한은 반혁명역량이라 칭함)인 대공수사기관을 무력화시켜 손발을 묶어놓고, 마음껏 공산활동을 전개하여 남한혁명을 용이하게 하려는 전술적 술책인 것이다.

국정원 등 대공수사기관 해체의 부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정원 등 대공수사기관은 북한 및 반국가단체의 적화혁명 및 국가전복행위중 간첩 등 비정규 침투역량을 제어하는 기능을 가진 기관이며, 이외 대테러 방지, 산업정보 수집 분석 및 경제안보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체제수호의 최일선 기관인 대공수사기관은 그 기능상 당연히 존속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세계각국은 국가안보의 위협요소로부터 자국을 지키기 위해 여러종류의 정보수사기관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오래된 국제관례인 것이다. 미국의 CIA(중앙정보국), FBI(연방수사국), 국내안전부(DHS), 독일의 BFVS(헌법보호청), BND(연방정보국), BKA(연방범죄수사국), 영국의 M16(비밀정보국), 국가범죄정보국(NCIS), 국가범죄수사대(NCS), 프랑스의 DST(국토감시국), RG(통합정보국), DGSE(해외치안총국), 러시아의 FSB(국가보안국), 일본의 내각조사실, 중국의 국가안전부, 공안부 등이 그것이다.

셋째, 북한은 국정원 등을 폭압기관, 무소불위의 권력남용기관이라고 매도하고 있으나 국정원 등 대공수사기관의 활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국회안에 '정보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정보수사기관의 활동을 감시감독하고 있는 등 자체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면 북한에는 국가안전보위부라는 무소불위의 비밀경찰조직이 존재하여 국가보위 업무보다도 김정일정권 수호에 치중하는 반문명적인 폭압기구로 존속하고 있다. 북한은 국정원 등 대공수사기관의 해체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민족성 말살에 앞장서는 '국가안전보위부'부터 해체해야 할 것이다.

네째, 북한은 최근 정교하게 대남간첩공작을 전개하고 있으며 수많은 간첩들과 친북동조세력들이 국내에서 암약하고 있는 현실에서 체제수호기관인 국정원 등 대공수사기관을 해체하라는 주장은 결국 간첩활동 등 반국가활동을 용인하여 국가안보를 무장해제시키자는 주장과 일맥 상통한 견해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 4.2.5 한총련 합법화

북한은 한총련을 ‘애국애족세력’ ‘남한혁명의 발파공’, ‘남한혁명의 선봉대’ 등으로 치켜세우며 연일 대남선동매체를 통해 “한총련 사수,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한총련 합법화”투쟁을 선동해오고 있다. 특히 북한은 남북당국자 회담시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공공연히 요구해왔으며, 이를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화한 적도 있다.

이렇게 북한이 한총련의 합법화를 지원, 선동하는 저의는 남한혁명의 핵심적 행동세력인 한총련 역량을 보전하여 궁극적으로 남한사회주의혁명 역량의 강화를 기하고 적화통일의 여건을 앞당겨 조성하려는 것 인바, 한총련의 합법화는 결국 북한의 대남전략에 말려들어 이를 도와주는 역기능을 야기시키는 것이다.

현재 광범하게 논의되고 있는 한총련의 합법화 논의는 아래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sup>34)</sup>

첫째, 한총련의 합법화는 현행 법논리상 모순을 표출시킨다. 한총련은 이미 1998년(제5기 한총련 판결)부터 매기수 마다 각급 법원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은바 있는데, 한총련의 총노선이나 친북이적 활동에 본질적인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총련을 합법화한다는 것은 기존의 사법적 판단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위법사항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한총련의 합법화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한총련과 같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 남측본부」(대판 92도1244), 「범청학련 남측본부」(대판 93도1730) 등의 단체도 법 형평상 합법화 해주어야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결국 이의 파장은 실질적으로 국가보안법의 무력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셋째, 한총련의 합법화는 아직 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지만 한총련과 유사한 친북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 등과 또한 한총련과 노선은

34) 유동열, “제11기 한총련의 조직실체와 대응책”, 공안연구 제78집(서울: 공안문제연구소, 2003), 48-51쪽

달리 하지만 학생운동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PD계열의 학생운동단체들의 국가보안법 적용을 어렵게 한다. 실제 법적용 형평상 이들 단체들의 합법화 요구와 저항에 대응할 법논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한총련의 합법화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려는 국가보안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하여 우리사회의 친북좌경화와 반국가활동의 제어기능을 무력화시켜, 법정의 실현에 역행하는 효과를 야기시킨다.

다섯째, 한총련의 합법화는 한총련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한총련 합법화논거'의 허구성을 도의시하고, 한총련의 행해온 그간의 반국가 이적활동을 정당화해주는 것은 결과를 초래한다.

여섯째, 체제부정적이며 친북이적활동을 일관되게 전개해온 한총련을 합법화 했을시 그 결과 예상되는 정치,사회적 파장은 ①'제2의 한총련'과 같은 좌익조직의 출현을 가속화시켜 친북, 좌익세력의 발호 가능성 및 사회혼란 가중 ② 국가보안법의 실질적 무력화 및 철폐요구 비등 ③ 학생 및 일반 국민들의 법경시 풍조 만연 ④ 제1야당 등 보수정치권의 반발과 정치적 갈등 증폭 ⑤ 보수우익단체들의 저항 및 좌-우 갈등 증폭 ⑥ 북한의 대남노선의 정당성 입증 ⑦ 미국 등 국제사회의 새 정부의 시책 회의 등으로, 이러한 파장은 결국 새정부의 시책에 대한 '사상성 문제'를 제기시켜 결국 정치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상의 문제점과 앞서 지적한 한총련의 친북이적노선과 활동행태를 볼때, 현시점에서 한총련의 합법화는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한총련이 합법화되려면 한총련의 본질적인 노선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총련 합법화를 위해선 ① 한총련의 강령,규약 및 활동노선 등 이적성 부분 삭제 ② 한총련의 반국가 친북이적 활동 중단 ③한총련의 민주적 운영으로 일반학생의 지지확보 등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일시적인 전술적 변화상이 아닌 본질적인 전략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차체에 한총련을 스스로 해체하고 새로운 학생운동체 결성을 유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 4.2.6 통일인사 및 양심수 석방

북한은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하고 반국가활동을 전개하는 한총련이나 범민련 남측본부와 같은 친북좌익세력들과 검거간첩들인 비전향 좌익장기수를 '통일애국인사' 또는 '양심수'로 미화하며 이들의 전면석방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한국정부가 파쇼정권유지를 위해 통일애국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많은 민주 인사들을 공안기관들이 고문, 조작하여 국가보안법 사범을 양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들을 옹호하는 저의는 첫째, 이의 관철여부에 관계없이 양심수 문제를 국내외적으로 공론화시켜 우리정부를 국제사회의 압력에 시달리게 하고 더 나아가 석방논쟁을 불러 일으켜 국론분열 등을 조장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둘째, 이들의 석방이 관철되었을 때 우리체제 내에 친북용공분자들이 대거 방면되어 공안 수사기관을 위축시키고 더나가 이들이 다시 좌익이적활동에 뛰어들어 남한혁명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 결국 친북적이고 반국가적인 이들 세력을 고무선동함으로써 남한혁명역량을 보호·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의 부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주장하는 '양심수'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수감중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는 일반적인 양심수의 개념과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양심수란 일반적으로 사상, 신념만의 이유로 투옥구금되어 있는 자를 지칭하는 것인데,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의 정의에 따르면 "폭력을 사용하거나 옹호하지 않음에도 신념, 피부색, 성별, 인종적 기원, 언어, 종교를 이유로 구금된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 양심수라고 지칭하는 세력은 위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수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폭력혁명을 통해 국가전복이나 친북이적활동을 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을 '양심수'로 규정하고 석방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둘째,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양심수라는 사람들의 면모를 보면 여기에는 남한혁명을 위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남파된 간첩, 북한에 포섭돼 반국가활동을 한 간첩, 사회주의혁명을 하겠다고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투쟁해온 혁명가 등으로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이들의 불법이적 활동을 정당화하고 부추키는 역작용을 야기시킬 것이다.

셋째, 국가보안법 사범들을 양심수라 규정하여 대거 석방한다면, 죄질이 경미한 형사범이나 흉악범 등 타 죄수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 국가를 전복하려는 공안사범들도 석방되는 마당에 일반 형사범들이 자신들도 신념에 의해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강변하며 자신의 죄를 진실로 반성했다고 석방을 요구할 때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켜 행형제도의 일대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넷째, 국가보안법 사범이 대거 석방되었을 때의 역기능이다. 이를 살펴보면 ▲이

들을 추적하여 검거한 공안수사요원들의 사기저하와 일시적인 업무 무력증이 예상되며 ▲공안사범을 ‘민주화투사’로 미화하는 오도된 풍토가 조성될 것이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채 지하활동중인 좌익사범들의 투쟁 및 향후 의식화되어 투쟁에 종사할 많은 예비사범들을 고무시키는 결과를 야기시킬 것이고 ▲과거 전례로 보아 석방된 국가보안법 사범의 50% 이상이 다시 좌익투쟁전선에 종사할 것인바, 이들의 석방은 상당한 사상적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들사범에 대한 무분별한 석방, 사면, 복권은 북한주장을 정당화해주는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김대중부와 노무현정부는 출범 이후 위와 같은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국민화합차원에서 대대적인 공안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단행한 바 있다. 이렇게 한국정부가 전향적으로 공안사범을 심지어 간첩해위자까지 대부분 석방한 마당에 북한이 아직도 소위 통일애국인사들의 석방을 선동하는 것은 이성을 상실한 행위라고 밖에 볼수 없다.

끝으로, 북한은 우리정부에게 통일인사(실제로는 반통일인사임)의 석방을 외치기 전에 반혁명죄라는 전대미문의 올가미를 씌워 강제 특별독재수용소에 구금하고 있는 20만여명에 해당되는 선량한 주민들과 남북어북 등 납치인사, 국군포로들부터 석방해야 할 것이며 그후 우리에게 인권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 실제 통일을 저해하는 가장 큰 반통일세력은 우리정부가 아닌 바로 북한 공산집단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 4.2.7. 미국의 핵전쟁책동 분쇄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대북적대정책과 대북압살정책을 구사하며 핵전쟁책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연일 주장하며,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중지와 대북핵전쟁책동 분쇄”를 연일 선동하고 있다.

북한이 한반도 긴장고조의 책임을 미국과 한국에 돌리는 저의는 그들의 핵개발로 야기된 한반도 긴장고조 책임을 외부요인에 떠넘기며 국제사회의 대북압력을 모면하려는 시도이며, 우리내부에 반미의식을 고취하려는 의도이다.

이의 부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이 대북강경정책을 구사하는 근본원인은 북한이나 국내 친북좌익권의 주장처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가입 서명한 핵문제에 관한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핵개발을 재개한데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은 북한이 스스로 서명가입한 ①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1991.12.31 서명) ② 국제핵확산금지조약(NPT, 1985.12.12가입) ③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1992.1.30 서명) ④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문(1994.10.21 서명)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북한이 핵문제에 관한 국제협약을 성실히 준수하고 국제평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에 진력한다면, 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압박을 행하겠는가?

둘째, 이미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성실하게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평화의 노력을 보인다면, 대대적인 경제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고 이렇게 북한이 자초한 한반도의 긴장 및 갈등고조 상황을 놓고 북한을 비판하기는 커녕, 도리어 옹호하며 미국과 우리정부가 잘못하여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도래하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북한핵문제로 불거진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문제 야기자인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것이 순서인 것이다.

#### 4.2.8. 북미 평화협정 체결

북한은 1974년 3월 25일 '미의회에 보내는 최고인민회의 편지'에서 최초로 조(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한 이래 이를 간헐적으로 주장해왔으나, 1994년 4월 28일 북한 외교부성명에서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후부터는 이를 현재까지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다.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논리는 현재의 정전협정(휴전협정)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보장책으로는 미흡하다며 '한반도의 전쟁위협 방지와 항구적인 평화보장 및 통일실현'을 위해 휴전협정의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평화협정 체결을 구실삼아 미국과 접근하여 '한-미'관계를 이간질시키고, 협정체결 후 평화의 논리를 내세워 남한에 주둔하는 외국군인 주한미군(북한은 주한미군을 남한혁명의 최고 장애물로 설정) 철수를 실현시켜 남한의 군사적 공백을 틈타, 무력으로 적화통일 하겠다는 간교한 책략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공세의 부당성은 아래와 같다. 첫째,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는 주장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이에 앞서 북한은 남북이 이미 합의한바 있는 문제해결의 기본지침인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공동선언’의 이행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대남적화혁명야욕을 먼저 포기해야 할 것이다. 설령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해도 북한이 진정으로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는 한 이협정은 휴지조각에 불과할 것이다. 실제 북한은 1972년 체결한 ‘7.4공동성명’과 1992년 조인한 ‘남북기본합의서’를 무용지물화한 바 있다.

둘째, 북한은 평화협정의 체결을 주장하며 이의 당사자로 휴전협정의 당사자라는 미국과 북한을 들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문제의 한 당사자인 대한민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우리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협정은 이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원한다면 ‘북-미’가 아닌 한반도문제의 당사자인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평화협정의 상대로 한국이 아닌 미국을 지목하고 있는 실제 이유는 휴전협정의 당사자문제 이외에도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사회이므로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상전인 미국하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이른바 한국정부배제노선이 깔려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평화협정체결 이전에 남북간 신뢰회복과 협정이행에 관한 확고한 담보장치를 마련하여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의 일환으로 악용할 수 없게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도 이의 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4.2.9 민족공조

북한은 6.15 공동선언 이후 ‘외세(한미) 공조 배격 및 민족공조 실현’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대북압살정책을 구사하며 새로운 핵전쟁을 책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의 해결책중 하나로 ‘민족공조의 실현’을 내세우고 있다.

북한이 민족공조를 강조하는 이유는 첫째, 단기적으로는 최근 북한핵개발 문제로 조성된 미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핵프로그램 해체 압력과 전쟁위기를 남북한의 공조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며 둘째, 북한정권의 목적인 ‘전한반도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이라는 대남적화혁명전략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북한 민족공조론의 부당성은 아래의 민족과 관련된 북한의 의도에서 명확히 알 수 있다. 첫째, 북한의 민족공조론은 북한이 대남혁명노선중 가장 중요시하는 ‘통

일전선전술'의 일환임을 지적한다. 북한이 대남심리전과 대남통일전선 차원에서 가장 즐겨 사용하는 용어중의 하나가 바로 '민족'이다.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범민족대회, 민족해방, 전민족통일협상회의, 대민족회의, 조선민족제일주의, 민족공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다양하게 '민족'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족이란 동일한 지역, 언어, 생활양식, 문화와 역사를 갖는 인간의 집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민족이라 하면 남북한 전체주민(해외동포 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지칭하는 민족이란 이런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계급적 개념인 대남적화혁명의 용어임을 유념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의 개념을 부정한다. 그 이유는 전세계 공산혁명을 위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민족주의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에 어긋나게 자기 민족의 이익을 위한다는 구실하에 타민족과의 반목을 조성하는 반동사상"이라 규정하고 있다.(북한 정치사전. 1981) 따라서 북한이 말하는 민족이란 남북한 모든 계층이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프롤레타리아계급(무산자계급)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둘째, 북한이 대남면에서 민족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민족이란 이름하에 남한내 친북세력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민중을 규합하여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그들의 힘을 이용하여 현정권을 타도하고 남한혁명을 성사시키기 위함이다. 북한은 남한혁명전선을 '민족 대 반민족세력'구도로 분리하여 국내 친북좌익세력들만을 전략적 민족주의세력으로 인정하고, 현정권에 반대하는 각계각층 민중들은 전술적 민족주의세력으로 분류하여 혁명에 활용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자유민주수호세력들은 모두 반민족주의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북한은 남한혁명전략중 1단계 인민민주주의혁명 단계에서는 사대매국세력(한국정권 지칭), 반동관료, 매판자본가, 지주, 반통일보수세력(자유민주진영 즉 우익세력을 지칭) 등을 반민족분자들로 분류하고 이들만 타도하지만(나머지 각계각층 민중은 민족대단결이란 기치 하에 혁명의 보조역량으로 활용), 2단계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는 프롤레타리아계급 외에는 모두 개조대상 및 고립화대상으로 타도대상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결국 혁명이 완성되면 남한국민의 60-70%는 반민족분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북한의 주장대로 '민족대단결과 민족공조'하에 통일이 된다면, 결국 남한내 좌익세력 및 노동자계급 외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반민족분자로 개조대상이거



나 타도대상으로 분류되어 제거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매년 8월15일을 전후해서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을 외치며 연방제통일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재야운동권 인사들은 결국 북한식으로 통일하여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을 반민족분자이니 타도해야 된다고 투쟁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민족을 앞세우며 북한노선에 동조하여 통일운동을 벌이는 자칭 '민족주의세력'이야 말로 북한 김정일정권과 함께 민족통일을 방해하는 '반민족세력'임을 자각해야 된다.

## 5. 결론

### 5.1 향후 전망

향후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선동논조의 향방은 북한 김정일정권의 속성 상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남전략전술관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먼저 간략하게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상을 전망 해보고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보동성향의 방향을 전망한다.

#### 5.1.1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전망

향후 북한의 대남전략은 주체사상에 기반한 김정일정권이 견제하는 한 그 속성상 적화통일의 목표가 달성될때까지는 결코 변할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정부의 지속적인 평화번영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 대남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는 어려울 것이며, 다만 전술적 차원에서 다양한 대남유화적 변화를 구사할 것이다.<sup>35)</sup>

향후 전술적 차원에서 볼 때, 북한 김정일정권의 대남정책노선은 크게 세가지 유형, ① 대남강경노선으로 회귀 ② 대남유화노선 지속 ③ 대남유화-강경노선 배합구사 등으로 요약된다. 이중 북한은 남북간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노무현정부 임기내에는 '대남강경-온건노선 배합전술'을 취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근거는 첫째, 노무현정부가 대북정책의 기조로 햇볕정책을 발전시킨 평화번영정책을 계속 전개할 것이며 또한 북한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 북한의 핵문제가 국제사회에 공론화된 상황에서 미국과의 한판승부(?)를 앞두고 이른바 '민족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현정부와의 적절한 수준에서의 관계 유지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6.15 공동선언 이후 보여준 대남유화노선을 철회하지 않고 유보하며, 국내의 정세를 관망하면서 대남강경-유화의 수준을 결정하고 현정부의 대북정책 구도를 시험하며 노무현정부를 압박하여 북한의 실리를 추구하려는 대남유화-강경 배합전술을 추구할 것이다.

#### 5.1.2 북한의 대남보도체계와 성향 전망

---

35) 유동열, 북한정권55년 어떻게 변했는가: 대남전략전술, 95면.

첫째,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선동체계는 북한정권 내부의 돌발적 변수가 없는 한, 현재와 같이 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와 통일전선부에서 지도전담하는 대남선동체계의 패러다임(Paradigm)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김용순 전 대남사업비서의 사망으로 대남사업비서와 통일전선부장 직책이 공석중이나 동 부서를 부부장 체제로 직무대행하기 때문에 실무적 차원에서 대남선동체계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의 정하철 당 선전비서라인도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유지될 것이다.

둘째,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선동공세는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 그 강도와 수위를 조절하며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개선될 시에는 북한의 대남비방공세의 강도가 줄어들 것이며, 남북관계가 악화될시 대남비방선동의 강도가 증가하는 등 상황변화에 따른 대남선동논조의 전술적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대남선동노선의 기초에는 큰폭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북한은 현 남북관계의 상황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는 대남선동공세의 강도를 현수준에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북한으로서는 당면문제가 되어 있는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선, 앞서 지적했듯이 한국의 노무현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는 2004년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핵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북한은 장기적으로 북한이 설정한 '우리세대내 통일실현'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혁명여건 조성에 주력해야 하기 때문에 대남선동의 강도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즉 가까운 시일 내에 혁명의 교두보를 우리내부에 구축,강화해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남한혁명의 주력군으로 설정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및 진보적 지식인 외에도 보조역량인 각계각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북한의 대남노선을 정당화하게 하고 친북여론을 조성시켜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선동공세는 더욱 정교하게 가속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넷째, 2004년에도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선동의 핵심 주제는 '6.15 공동선언의 이행 및 실천'이라는 기치 하에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 반미투쟁 대중화, 주적론 철폐, 한총련-범민련 합법화, 국정원 등 대공수사기관 해체, 보수우익

반통일세력 척결, 연방제통일노선 강화” 등을 집중 선동할 것이다. 이와 함께 통일 전선차원의 '우리민족끼리'기치를 집약화할 것이다.

특히 북한핵개발의 정당성과 국제사회의 영향력 행사를 배제시키기 위해,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적대정책, 핵전쟁책동책동 분쇄, 주한미군기지 이전, 한미행정협정 폐기 등 반미투쟁을 선동하여 중국적으로 적화통일의 주된 걸림돌인 '주한미군 철수투쟁'으로 집약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한 내부선전 사안으로는 김정일의 미화찬양과 함께 김정일의 선군 정치노선과 강성대국론을 집중 선동할 것이다. 특히 선군정치노선은 김정일의 통치 노선으로 북한에서 집중 부각시키고 있는 사안이다. 이의 연장선에서 김일성부자의 위대성 선전 및 통일영수 분위기 조성,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과 우리식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할 것이다.

다섯째, 북한은 기존 대남언론매체와 함께, 인터넷망을 통한 이른바 사이버 (Cyber) 선전선동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이버의 속성인 대상의 광범위성, 검색의 편이성, 신속성, 쌍방향 통신성, 보안성 외에도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수가 2,500만명을 상회하고 있고, 인터넷 가입률 및 접속률이 세계1위라는 점을 감안하여, 북한이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대남선전선동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5.2 정책제언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선동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측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선동공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상위개념인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대한 정확한 실상파악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북한이 전술적으로 구사하는 대남유화방송 등에 놀아나 북한당국의 진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선동의 강도를 희석시키기 위한 카드로, 현재 북한정권의 3대 약점이라 할수 있는 북한핵문제, 인권문제, 경제문제 중 북한핵문제와 경제지원 문제를 연계시켜야 한다. 특히 대북협상팀은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보장과 경제지원 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우리정부는 북한이 구사하는 대남선동공세의 강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통일부의 북한 언론매체의 청취,시청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물론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 유관부서의 자료공조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북한 대남방송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 평가하는 모니터기능의 역량강화가 요망된다.

이를 위해 전문청취·분석요원의 확보, 북한대남방송 청취 영역 확대, 인터넷을 통한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을 대처하기 위한 별도 북한 인터넷검색반을 신설해야 한다.

현재 북한방송 청취체제를 개편하여 종합반, 조선중앙방송반, 평양방송반, 구국의 소리방송반, 조선중앙TV 및 위성방송반, 조선중앙통신반, 인터넷 검색반(사이버검색반), 기술지원반, 대응반, 종합분석반 등으로 계열화, 전문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관련 보도성향을 사안별, 빈도별, 시기별, 기능별로 분류하는 종합분석반의 신설을 꼭 필요하다. 또한 북한방송의 청취 분석요원을 정예화하고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북한정보분석의 속성상 최우수 북한전문인력으로 보완해야 하며 전문인력을 유인하기 위한 별도의 사기양양책이 필요하다.<sup>36)</sup>

네째, 북한의 대남방송을 통한 선동공세를 청취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북한의 대남선동주장을 반박하는 대응논리의 전개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대남선동노선에 대해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것 외에 철저히 사안별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북한주장의 부당성을 홍보하고, 선량한 국민들이 학생들이 북한이나 좌익권의 선전공세에 말려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대남선동의 다양한 유형을 사안별로 추출하여 정교한 대응론을 개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는 남북대화나 협상시 유용한 대응반박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날로 다양화, 정교화되는 북한의 대남선동매체, 즉 대남방송인 평양방송, 조선중앙방송을 대남방송화한 구국의 소리방송, 위성TV방송 및 인터넷통신 등의 제 메카니즘을 근원적으로 차단시키는 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최근 집중 시도하고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대남정보확산책을 차단시켜야 한다.

---

36) 북한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등 각 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우선적으로 통일전선부, 35호실, 대외연락부 등 대남사업부서에 집중배치하고 있음.

여섯째, 우리정부는 북한이 언론매체를 통해 구사하는 대남선동공작에 대응하여 대북심리적 차원에서 대북방송 등을 통한 대북선전선동 공세 즉 ‘역(逆) 전략’을 수립실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북한이 대남유화노선으로 나올 경우, 이에 대응하여 저강도(Soft)의 대북방송을, 북한이 대남적대정책으로 일관할시, 이에 대응하여 압박전략이라는 고강도(Hard)의 대북공세를 구사해야 한다. 특히 대북공세시, 우리의 전략이 딱혀 들어가지 않을 시에는 잠정적으로 일정기간 북한의 반응을 무시하거나 방관하는 전술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거나 즉각적 대응을 하게 되면 도리어 북한의 대남전술에 말려들 우려가 있고 국론분열을 야기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남북방송교류나 또는 남북통합에 대비하여, 북한 언론매체의 대남선동체계 뿐만 아니라 북한 언론매체의 구조와 운영실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영재 이승현, “남북한 신정부의 대북대남정책”(국가안보정책연구소-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주최세미나, 1999)
- 국방부, 국방백서 1997-2000.
- 김도현, “북한언론의 실상”, 통일문제연구(대구: 영남대 통일문제연구소, 1990)
- 김두환, “6.15선언 1주년과 언론 -북한언론 남한보도의 변화”. 『관훈저널』 (2001년 여름호)
- 김영주, “북한체제와 언론”, 동북아연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6).
- 김창순, 북한의 전략전술, 김창순북한연구전집 9권 (서울: 북한연구소, 1999)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서울: 북한연구소, 1982)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2-1992 (서울: 북한연구소, 1993)
- 북한연구소, 북한대사전 (서울: 북한연구소, 1998)
- 유동열, “김대중정부 출범이후 북한의 대남전략 평가”, 군사논단 2002년 겨울호 (서울: 한국군사학회, 2002)
- 유동열, “김정일 서울담방과 관련한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경찰청 내부보고서 (2001)
- 유동열, “북한 김정일정권의 대남전략전술분석”, 공안론총 11집(서울: 공안문제연구소, 1999)
- 유동열,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분석”, 공안연구 통권51호(서울: 공안문제연구소, 1998)
- 유동열, “극렬화되는 북한의 대남선동공세에 대한 대응”, 국방저널 1998년 11월호(국방부, 1998)
- 유동열, 북한의 대남전략, 경찰수사보안연구소 보안수사지휘과정 교재(2003)
- 유동열, “북한 및 좌익권의 선전선동과 대응론”. 『공안연구』 (2003.10). 서울: 공안문제연구소
- 유동열, 북한정권 55년 어떻게 변했는가?: 대남전략전술, 북한 2003년 9월호(서울: 북한연구소, 2003), 92면
- 이우승, “남북관계와 언론보도”, 통일안보논총 제4호,(서울: 한국통일안보학회, 2002)
- 장수련, “북한의 대남전략”, 민주통일론(서울: 통일연수원, 1991)
- 통일부, 대북정책추진방향(1999)
- 통일부, 통일백서 1998-2001
-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이해(2001)

- 통일부. 『북한개요 2000』 (서울: 통일부,2000)
-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2002)
- 국가정보원, 북한방송문 (1988-2003년)
- <http://www.nis.go.kr> (국가정보원)
-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 <http://www.kcna.co.jp> (조선중앙통신)
- <http://www.ndfsk.dynds.org> (구국전선, 한민전)